

발 간 등 록 번 호



■ 정책보고서 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이삼식·이지혜·김세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공저)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발간사 <<

21세기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슈들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현상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 위기, 경제성장 둔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차원의 추진체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 이어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익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제공해 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와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평가 대상	4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5
제4절 평가 절차	6
제5절 평가결과 활용	7
제2장 실적 평가(기초평가)	9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11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57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81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8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	902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12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32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052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102
제4장 국민, 전문가 및 언론 평가	92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7
제2절 전문가 평가	2
제3절 언론 평가	31

제5장 국제비교 평가	3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33
제2절 고령사회 분야 국제비교	83
제3절 성장동력 분야 국제비교	73
제6장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333
제1절 총괄	35
제2절 저출산 분야	3
제3절 고령사회 분야	9
제4절 성장동력 분야	8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발전방안	373
제1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안	53
제2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안	793
제3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립 방안	404
제8장 결론	41
참고문헌	47
부록	429
부록 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조사표	914
부록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표	924

표 목차

〈표 1- 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4
〈표 2- 1〉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실적	3..... 1
〈표 2-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추진실적	4..... 1
〈표 2- 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추진실적	6..... 1
〈표 2- 4〉	유연근로제 확산 추진실적	8..... 1
〈표 2- 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추진실적	0..... 2
〈표 2- 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실적	2..... 2
〈표 2- 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추진실적	4..... 2
〈표 2- 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추진실적	6..... 2
〈표 2- 9〉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9..... 2
〈표 2- 1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0..... 3
〈표 2- 11〉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추진실적	1..... 3
〈표 2- 1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추진실적	3..... 3
〈표 2- 13〉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지원 건수('13년말 기준)	3..... 3
〈표 2- 14〉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추진실적	4..... 3
〈표 2- 15〉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6..... 3
〈표 2- 16〉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6..... 3
〈표 2- 17〉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9..... 3
〈표 2- 18〉	양육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0..... 4
〈표 2- 19〉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추진실적	2..... 4
〈표 2- 20〉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추진실적	3..... 4
〈표 2- 21〉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실적	4..... 4
〈표 2- 2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6..... 4
〈표 2- 2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9..... 4
〈표 2- 2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1..... 5
〈표 2- 25〉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추진실적	2..... 5
〈표 2- 26〉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실적	4..... 5
〈표 2- 27〉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6..... 5
〈표 2- 2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추진실적	7..... 5
〈표 2- 29〉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추진실적	8..... 5

〈표 2- 30〉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추진실적	9	5
〈표 2- 31〉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추진실적	0	6
〈표 2- 32〉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추진실적	2	6
〈표 2- 33〉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추진실적	4	6
〈표 2- 34〉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추진실적	6	6
〈표 2- 35〉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7	6
〈표 2- 36〉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추진실적	9	6
〈표 2- 37〉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추진실적	3	7
〈표 2- 38〉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4	7
〈표 2- 39〉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추진실적	5	7
〈표 2- 40〉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9	7
〈표 2- 41〉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1	8
〈표 2- 42〉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4	8
〈표 2- 43〉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추진실적	1	9
〈표 2- 44〉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실적	3	9
〈표 2- 45〉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추진실적	4	9
〈표 2- 4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6	9
〈표 2- 47〉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추진실적	9	9
〈표 2- 48〉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4	0 1
〈표 2- 49〉 노후설계 기반조성 추진실적	5	0 1
〈표 2- 50〉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추진실적	7	0 1
〈표 2- 51〉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추진실적	0	1 1
〈표 2- 52〉 일자리 사업 체계화 추진실적	0	1 1
〈표 2- 53〉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2	1 1
〈표 2- 54〉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추진실적	3	1 1
〈표 2- 55〉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추진실적	4	1 1
〈표 2- 56〉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7	1 1
〈표 2- 5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8	1 1
〈표 2- 5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실적	0	2 1
〈표 2- 5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2	2 1
〈표 2- 60〉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4	2 1

<표 2- 6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7	2	1
<표 2- 62>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추진실적	9	2	1
<표 2- 63>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2	3	1
<표 2- 64>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4	3	1
<표 2- 65>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6	3	1
<표 2- 66>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7	3	1
<표 2- 67>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추진실적	8	3	1
<표 2- 68>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2	4	1
<표 2- 69>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실적	5	4	1
<표 2- 70>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추진실적	7	4	1
<표 2- 7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9	4	1
<표 2- 7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2	5	1
<표 2- 73>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4	5	1
<표 2- 74>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8	5	1
<표 2- 75>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2	6	1
<표 2- 76>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추진실적	4	6	1
<표 2- 77>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6	6	1
<표 2- 78>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9	6	1
<표 2- 79>	주택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0	7	1
<표 2- 80>	금융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2	7	1
<표 2- 81>	미래 재정위험대비 재정건정성 유지 추진실적	3	7	1
<표 2- 8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실적	5	7	1
<표 2- 8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실적	6	7	1
<표 2- 8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추진실적	8	7	1
<표 2- 85>	국내 수요기반 확충 추진실적	0	8	1
<표 2- 86>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	0	8	1
<표 2- 87>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 추진실적	1	8	1
<표 2- 8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2	8	1
<표 2- 89>	2013년도 저출산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4	8	1
<표 2- 90>	2013년도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5	8	1
<표 2- 91>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8	8	1

<표 2- 92>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0·9· 1
<표 2- 93>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3·9· 1
<표 2- 94>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4·9· 1
<표 2- 95>	저출산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6·9· 1
<표 2- 96>	고령사회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8·9· 1
<표 2- 97>	성장동력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0·0· 2
<표 2- 9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0·0· 2
<표 2- 99>	2013년 저출산 분야 예산집행실적	2·0· 2
<표 2-100>	2013년 고령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3·0· 2
<표 2-101>	2013년 성장동력 분야 예산집행실적	4·0· 2
<표 2-102>	2013년도 저출산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5·0· 2
<표 2-103>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6·0· 2
<표 2-104>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7·0· 2
<표 3- 1>	저출산 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3·1· 2
<표 3- 2>	저출산 분야: 결혼, 출산 및 양육 부담경감 부문(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8·1· 2
<표 3- 3>	저출산 분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7·2· 2
<표 3- 4>	고령사회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3·3· 2
<표 3- 5>	고령사회 분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9·3· 2
<표 3- 6>	고령사회 분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6·4· 2
<표 3- 7>	성장동력 분야: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제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5·7· 2
<표 3- 8>	성장동력 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2·8· 2
<표 3- 9>	성장동력 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9·5· 2
<표 3- 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에 대한 '15년 목표 달성 가능성 진단 결과	2·6· 2
<표 3- 11>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2·6· 2
<표 3- 12>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4·6· 2
<표 3- 13>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7·6· 2
<표 4- 1>	저출산 분야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 2
<표 4- 2>	고령사회 분야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2
<표 4- 3>	미혼남녀(25~34세)의 일·가정양립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도	2·7· 2
<표 4- 4>	기혼남녀(20~49세)의 일·가정양립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도	3·7· 2
<표 4- 5>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변화에 대한 체감도	4·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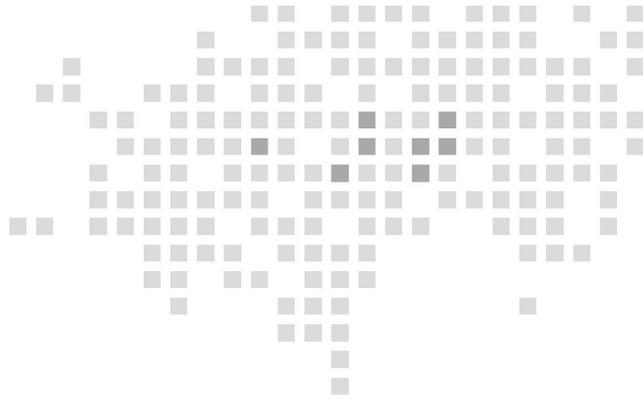
<표 4- 6>	기혼남녀(20~49세)의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변화에 대한 체감도	8	7	2
<표 4- 7>	기혼남녀(20~49세)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변화에 대한 체감도	9	7	2
<표 4- 8>	고령자(50~69세)의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변화에 대한 체감도	2	8	2
<표 4- 9>	고령자(50~69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변화에 관한 체감도	5	8	2
<표 4- 10>	고령자(50~69세)의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변화에 관한 체감도	6	8	2
<표 4- 11>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가치관 변화 정도	7	8	2
<표 4- 12>	저출산 분야 정책 체감도가 결혼가치관 변화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8	8	2
<표 4- 13>	기혼남녀(20~40대)의 희망자녀수 변화 정도	8	8	2
<표 4- 14>	저출산 분야 정책 체감도가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9	8	2
<표 4- 15>	고령자(50~69세)의 노후 삶의 질 향상 정도	0	9	2
<표 4- 16>	정책 체감도가 노후 삶의 질 향상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1	9	2
<표 4- 17>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 및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6	9	2
<표 4- 18>	기혼남녀(20~40대)의 저출산 분야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7	9	2
<표 4- 19>	중·고령자(50~69세)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8	9	2
<표 4- 20>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0	0	3
<표 4- 21>	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2	0	3
<표 4- 22>	성장동력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3	0	3
<표 5- 1>	저출산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3	1	3
<표 5- 2>	연간근로시간 국제비교	4	1	3
<표 5- 3>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국제비교	5	1	3
<표 5- 4>	GDP대비 보육·교육비 공적지출(2011) 국제비교	6	1	3
<표 5- 5>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국제비교	7	1	3
<표 5- 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국제비교	8	1	3
<표 5- 7>	고령사회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9	1	3
<표 5- 8>	중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 비교	0	2	3
<표 5- 9>	고령자 고용률(65세 이상) 추이 국제 비교	1	2	3
<표 5- 10>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국제 비교(2012년 기준)	1	2	3
<표 5- 11>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2	2	3
<표 5- 12>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	3	2	3
<표 5- 13>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국제 비교	4	2	3
<표 5- 14>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국제 비교	5	2	3

〈표 5- 15〉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국제비교	6·2·3
〈표 5- 16〉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7·2·3
〈표 5- 17〉	여성고용률 국제 비교	8·2·3
〈표 5- 18〉	국가별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 현황 (2012)	9·2·3
〈표 5- 19〉	사고성 사망만인율 국제 비교	9·2·3
〈표 5- 20〉	국가별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	10·3·3
〈표 5- 21〉	국가별 GDP 대비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비중	11·3·3
〈표 6- 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및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	3
〈표 6- 2〉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가정양립(중영역) 평가 종합	7·3·3
〈표 6- 3〉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평가 종합	1·4·3
〈표 6- 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평가 종합	3
〈표 6- 5〉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평가 종합	3
〈표 6- 6〉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평가 종합	5·3·3
〈표 6- 7〉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평가 종합	10·6·3
〈표 6- 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평가 종합	3
〈표 6- 9〉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평가 종합	3
〈표 6- 10〉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평가 종합	10·7·3
〈표 7- 1〉	저출산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10·8·3
〈표 7- 2〉	고령사회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7·8·3
〈표 7- 3〉	성장동력 분야 정책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1·9·3
〈표 7- 4〉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3·9·3
〈표 7- 5〉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5·9·3
〈표 7- 6〉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7·9·3
〈표 7- 7〉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 심사표(양식안)	10·10·4
〈표 7- 8〉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방법 및 배점	2·10·4
〈표 7- 9〉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치 방법별 장·단점	6·10·4
〈표 7- 10〉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의 형태별 장·단점	7·10·4
〈표 7- 11〉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치방법 종합(안)	8·10·4

그림 목차

[그림 1- 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틀)	6
[그림 2-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1
[그림 2-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7
[그림 2-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5
[그림 2- 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7
[그림 2- 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8
[그림 2- 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3
[그림 2- 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3
[그림 2- 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6
[그림 2- 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7
[그림 3- 1]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1
[그림 3-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1
[그림 3- 3]	유연근로제 확산 핵심성과지표: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1
[그림 3-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	1
[그림 3- 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1
[그림 3- 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2
[그림 3- 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핵심성과지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2
[그림 3- 8]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핵심성과지표: 임신·분만 취약 지역수	2
[그림 3- 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핵심성과지표: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2
[그림 3-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보육·교육비 지원율(%)	2
[그림 3-11]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핵심성과지표: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2
[그림 3-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	2
[그림 3-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2
[그림 3-1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방과후돌봄서비스 수혜율(%)	2
[그림 3-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2
[그림 3-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핵심성과지표: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2
[그림 3-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핵심성과지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3
[그림 3-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3
[그림 3-19]	고령자 고용연장 핵심성과지표: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	3
[그림 3-2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핵심성과지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4

[그림 3-2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핵심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률(%)	5	3	2
[그림 3-22]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핵심성과지표: 퇴직연금 가입률(%)	6	3	2
[그림 3-23]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3	3	2
[그림 3-24]	노후설계 기반 조성 핵심성과지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7	3	2
[그림 3-25]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수(건)	0	4	2
[그림 3-26]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공적소득보장률(%)	1	4	2
[그림 3-2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명)	1	4	2
[그림 3-2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2	4	2
[그림 3-2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2	4	2
[그림 3-3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명)	4	4	2
[그림 3-3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핵심성과지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3	4	2
[그림 3-3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핵심성과지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4	4	2
[그림 3-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명당)	4	4	2
[그림 3-3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4	4	2
[그림 3-35]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소)	9	4	2
[그림 3-36]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2	5	2
[그림 3-3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핵심성과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5	5	2
[그림 3-38]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핵심성과지표: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			
	(E-1~ 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4	5	2
[그림 3-39]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핵심성과지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5	5	2
[그림 3-4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5	5	2
[그림 3-4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6	5	2
[그림 3-42]	금융분야 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8	5	2
[그림 3-4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핵심성과지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2	5	2
[그림 3-4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핵심성과지표: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6	5	2
[그림 3-45]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핵심성과지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6	5	2
[그림 3-46]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13년도 기준)	4	6	2
[그림 3-47]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 달성도(2013년도 기준)	6	6	2
[그림 3-48]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 달성도(2013년도 기준)	8	6	2
[그림 4- 1]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 및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체감도	2	9	2
[그림 4- 2]	기혼남녀(20~40대)의 저출산 분야 정책체감도	4	9	2
[그림 4- 3]	고령자(50~69세)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체감도	5	9	2



제1장 서론

-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제2절 평가 대상
-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 제4절 평가 절차
- 제5절 평가결과 활용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완수한 바 있음
 - 2010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1년부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실시
 - 2006년에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과 평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지표 마련
 - 2009년에 성과지표 간명화 및 지수화 작업 실시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2006~2010)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가 실시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가 실시
 - 2011년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마련
 - 시행계획 상 과제를 기본과제와 핵심과제(45개)로 구분
 - 기본과제의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는 해당 부처(부서)에서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 직접 설정
 -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그 목표치(제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1~2015년의 연도별)는 전문가에 의해 설정되고 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
 - 2012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차년도(2011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

과평가 실시

- 2013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차년도(2012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3차년도(2013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함
 -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상 총 245개 과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성과평가 실시

제2절 평가 대상

□ 2013년도 시행계획 상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대상 평가

- 중앙정부(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3대 분야(저출산 분야 95과제, 고령사회 분야 92과제, 성장동력 분야 58과제) 245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이미 사업이 종료 또는 완료, 성과지표가 없는 19개 과제를 제외한 226과제가 평가대상이 됨 (예산평가의 경우 245개 과제 중 기 종료 또는 완료 과제 14개만을 제외한 231과제가 평가대상이 됨)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본 성과평가의 대상에서는 제외

〈표 1-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구분	시행계획 상 총 과제수	평가대상 과제수	기 종료(완료) / 성과지표 없는 과제
전체	245	226	14 / 5
저출산 분야	95	84	7 / 4
고령사회 분야	92	86	5 / 1
성장동력 분야	58	56	2 / 0

제3절 평가 내용 및 방법

- 실적 평가와 효과성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실적 평가(output evaluation)
 - 시행계획 상 과제 평가
 -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별로 해당부처에서 설정한 성과지표 및 그 목표치에 근거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책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 평가(기술적 분석)
 - 2012년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2012~2013년 성과에 대한 시계열적 접근
 - 기본계획 상 핵심과제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설정된 핵심과제(45과제)의 달성도를 각각의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연차별 및 2015년도(제2차 기본계획 종료연도) 목표치에 대비하여 평가
- 효과성 평가(outcome evaluation)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혼·출산·양육과 고령사회대비 관련 국민행태(의식·실천) 및 사회환경(노후 준비 등) 변화 정도 평가
 - 국민인식조사 및 심층인터뷰 실시를 통해 정책과 국민행태 및 사회환경 변화 간의 연계성 분석
 - 각 분야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 기자의 사실을 분석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 평가결과 종합분석
 - 실적평가(과제별 평가와 핵심과제 평가)와 효과성 평가를 연계하여 분석
 - 국제비교분석
 - 주요 OECD국가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수준) 비교 분석
 -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 도출
-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성과평가 개선 방안 도출
 - 성과지표 수정·보완

- 정책 변화속도, 과거 목표치 달성도 등을 고려한 성과지표 목표치 현실화(수정·보완) 등
- 지자체 평가모형 방안 제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그림 1-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틀)



제4절 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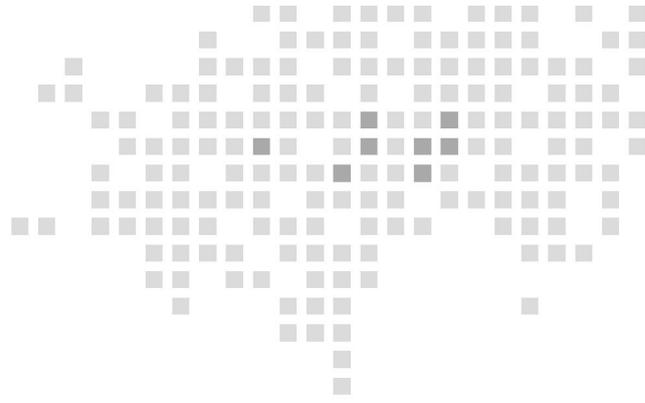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총 7단계로 구분·실시
 - 1단계: 평가지침 통보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일정, 평가방법, 성과지표 등을 수록한 지침을 해당 부처에 통보
 - 2단계: 추진실적 제출
 - 각 부처에서 2013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사업목적,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목표달성률, 예산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3단계: 추진실적 검토
 - 성과평가 연구기관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을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문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
- 4단계: 추진실적 평가
 - 성과평가 연구기관에서 수정·보완이 완료된 추진실적(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을 분석·평가
- 5단계: 핵심과제 성과지표 평가
 - 영역별 핵심성과지표의 값을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을 통해 수집하여 평가
- 6단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평가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7단계: 성과평가 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토록 함
- 이들 7개 단계 중 1~2단계와 6~7단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각 정책 내지 사업들을 시행한 중앙부처들이 관장하며, 본 연구에서는 3~5단계를 수행함

제5절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국회 보고를 통해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정부는 시행계획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국회에 보고
- 평가결과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하여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예산배분 효율화, 정책 간 연계 강화 등에 활용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평가 결과를 향후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
- 기타 활용

-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체계 개선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등에 이용



제2장 실적 평가(기초평가)

-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2

실적 평가(기초평가) <<

제1절 저출산 분야 실적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상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목표로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중영역은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의 3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구성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

[1] 육아휴직제도 개선(세부영역)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 기회 확대 및 경력단절 방지 도모
 -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로 변경
 - 육아휴직제도가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성과)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71.5%로 당초목표(72.2%)의 99.0% 달성
 - 총 5,997억원(육아휴직급여 69,616명 대상 4,202억원, 출산전후휴가급여 90,507명 대상 2,351억원)을 지원하여 예산(6,554억원)의 100% 집행

□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1-2) 【완료 과제】

- (목표)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40% 정률제로 전환되는 것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경감을 60%로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성과) '11년 '보험료 경감고시(보험료 경감을 50%→60% 상향조정)'를 '12년부터 실시함으로써 과제 완료(비예산사업)
 - '13년에도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정책홍보 실시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 강화(1-3)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 촉진을 통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 (성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3,722명을 대상으로(당초 목표 3,500명의 106.3%) 92억원(당초예산의 98.9%) 지원
 - 이외에도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 수준 인상(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20→월 30만원,

‘14년 시행)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포함한 모성보호 홍보자료 배포

〈표 2-1〉 육아휴직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육아휴직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육아휴직사용후1년 이상고용유지율 ¹⁾	72.2	71.5	99.0	72	70.0	97.2	6,554	6,554	100.0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1-2)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50%~60% 경감적용	완료과제			100%	100%	100.0	-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계 개발(1-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인원	3,500명	3,722명	106.3	2,700명	3,052명	113.0	93	92	98.9

주: 1) 1년이상 고용유지 근로자수/육아휴직급여 수급근로자수)×10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세부영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1-4) 【완료 과제】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를 부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실효성 제고 도모

○ (성과) 2011년에 이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여 과제 완료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여건 조성(1-5)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도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근로시간 단축비용에 따라 최대 1년 지급

* 예) 주 40시간→주 30시간 단축시 육아휴직급여액 ×10/40

○ (성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이 0.81%(출산전후휴가자 대비)로 당초목표 (0.7%) 초과달성

- 736명에게 1,567백만원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액을 지급하여 예산 전액 집행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1-6)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 대신, 휴가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및 고용·소득안정 보장에 기여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통해 수요변동에 탄력적 대응 도모

- 근로기준법 개정(제57조)을 통해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거 마련

- (성과) 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12.3월~’13.4월) 운영으로 공익위원 권고안 도출(‘13.4.5), ‘노사정 일자리 협약’(5.30)에 장시간근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산업현장 부담 최소화 방안에 관한 노사 실무협의 진행(7~9월초), 정기국회 전 상임위 여야 의원실 방문하여 정부안에 대한 설명·설득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비예산사업)

<부진사유>

- ▶ (문제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 대한 노사,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당초 목표로 하였던 관련 법안 통과 지연
- ▶ (개선방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 지속 논의

<표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1-4)	-	완료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여건 조성(1-5)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¹⁾	0.7	0.81	115.7	0.2	0.5	250.0	16	16	100.0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1-6)	근로기준법 개정 ²⁾	개정안 국회통과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0	국회 제출	국회 제출	100	비예산		

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수/출산전후휴가자수*100

2) '12년 성과지표는 개정안 국회 제출

[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세부영역)

□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1-7) 【완료 과제】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 초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시 산전후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 중 응급상황 등에 대처

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 출산후 45일은 연속사용토록 함

○ (성과) 2011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로 과제 기 완료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1-8) 【완료 과제】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 시 5일까지(추가기간 무급) 사용케 하여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 도모

○ (성과) 2011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로 과제 기 완료

□ 가족돌봄휴직제 활성화(1-9) 【완료 과제】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가족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간호휴직(무급)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일정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 (성과) 2011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로 과제 기 완료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10)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제등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활성화를 통해 모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지원요건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 후 계약기간 연장할 경우 지원금 지급 추진

○ (성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지원 인원수가 286명으로 당초목표(355명)의 80.6% 달성(당초예산 9억원 전액 집행)

- 이외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요건 완화

• 근로계약 기간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종료된 근로자를 근로계약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지원

- 여성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 상반기, 하반기 총 913개소에 대해 감독 실시

<부진사유>

- ▶ (문제점) 정규직 중심의 기업문화로 인하여 임신·육아기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아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지원 인원수가 당초목표치에 미흡
- ▶ (개선방향)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휴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출생 15개월 이내 자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재고용하는 경우까지 지원할 계획('14.10월)이며,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상향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14.10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15.7월 시행)임

<표 2-3>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1-7)	-	완료과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1-8)	-	완료과제								
가족간호휴직제 활성화(1-9)	-	완료과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1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지원 인원 수 ¹⁾	20% 증가 (355명)	286명 지원 (3.4% 감소)	80.6	지도 점검	지도점검 실시	100	9	9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1] 유연근로제 확산(세부영역)

□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1-11)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5개 분야 7개 유형의 유연근무제 도입 등)하고자 함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기관의 노력 제고 및 홍보·교육 강화
- (성과)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14.8%로 당초목표(5%)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유연근무제 관련 정부업무평가 지표 강화('13.2월)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유연근무제(12일 이상) 10%, 원격근무제(1일 이상) 3%
- 중앙·지자체 공무원 8,807명 대상유연근무제 이용만족도 및 적합직무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 평균 51.3점
- 유연근무제 적합직무 선정기준 마련, 전 부처 발굴 조사 추진
- 유연근무제 6개 근무유형, 101개 적합직무 발굴·선정 결과 통보

□ 시간제 근무 활성화(1-12)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육아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기존 공무원들의 시간제근무 활용 확대 및 시간제근무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제도개선 추진
- (성과) 시간제근무 운영성과 만족도가 78.8%로 당초목표(70%)를 초과달성(비예산 사업)
 -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시행
 -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0~35시간에서 주 15~25시간으로 조정(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13.5월말 기준 시간선택제 근무제 활용인원 3,692명

□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확산·지원(1-13)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시간제 근로 확산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조성
 -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해 여성(육아 등)·고령자(은퇴)·청년(학업) 등의 수요에 부합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
 - 이를 위해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인건비 일부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성과) 일가정 양립형 시간제 근로 확산·지원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사업장이 49.4% 증가하여 당초 목표(20% 증가)를 초과달성(당초예산 106억

원 중 46.2%만 집행)

- 새로운 직무개발, 장시간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건비 지원
 - 8차에 거친 공모결과 952개소 5,738명 승인, 328개소 1,294명 지원
-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컨설팅 실시 (54개소 컨설팅)

〈표 2-4〉 유연근로제 확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1-11)	유연근무제 이용률 (대상인원 대비) ¹⁾	5%	14.8%	296.0	5	12	240	비예산		
시간제근무 활성화 (1-12)	시간제근무 운영성과 만족도 ²⁾	70%	78.8%	112.6	5	29.8	596.0	비예산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확산·지원(1-13)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사업장 ³⁾	20% 증가	49.4% 증가	247.0	100	104	104.0	106	49	46.2

주: 1) 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수/대상인원×100
 2) '12년 성과지표는 시간제근무 이용자 증가율
 3) '12년 성과지표는 컨설팅 실시사업장수

[2]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세부영역)

-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1-14)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한 근로형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도입 여건 조성
 -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 여건 조성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개선
 - 유연한 근무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성과) 간담회·워크숍을 3회 개최하여 당초목표(3회) 달성 및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장 수가 186개소로 당초 목표(210개소)의 88.6% 달성(비예산사업)
 - 민간 기업 10개 그룹이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1만개 일자리 창출·매칭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노력 추진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SNS토론회 개최
- 노사정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위원회 운영,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방안 토론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일자리 포럼 개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및 스마트워크 확대 방안 토론

□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1-15)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IT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을 통해 일과 삶의 조화 및 업무 생산성 향상(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 하도록 목표 제시)
 -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2015년까지 50개)
 - 기관별 체험근무자 추가 모집, 간부 공무원 체험근무 등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및 수요 확보
 -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제도 개선
 -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등에 교육과정 개설
- (성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이 61.9%로 당초목표(55%) 초과달성 및 이용자 만족도가 85.1점으로 당초목표(85점) 초과달성(당초예산 37억원 전액 집행)
 -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근·출장 수요에 대응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제고 추진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기관 지속 확대
 - '11년 38개 → '12년 81개 → '13년 137개 기관(중앙 36, 지자체 28, 공공기관 73)
 - 스마트워크센터 체험교육 및 제도개선 등 이용 활성화

□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1-16)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연근무제 개념과 필요성을 홍보하여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 확보
 - 가족친화포럼, 우수사례집 활용 등 홍보 추진
 - 민간기업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성과)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1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당초목표(50개 기업)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가족친화포럼」 운영을 통한 기업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민간 중심 유연근무제, 가족친화경영 등 확산 유도
 - 유연근무제 개념 및 유형별 운영사례 등을 수록한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연근무제」 매뉴얼 제작·배포

〈표 2-5〉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1-14)	간담회·워크숍 개최 실적	3회 개최	3회	100.0	3회	3회	100.0	비예산		
	컨설팅 지원 사업장 수	210 개소	186 개소	88.6	-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1-15)	이용자 만족도(점)	85점	85.1	100.1	80	83.6	104.5	37	37	100.0
	스마트워크센터이용률(%)	55%	61.9	112.5	50	51.6	103.2			
유연근무제 국민공감대 확산 위한 홍보 등 추진 (1-16)	컨설팅 기업수	50	134	268.0	40	44	110.0	비예산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세부영역)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1-17-①)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직장가정의 양립을 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맞춤 서비스 제공
 - 재정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무상 및 용자지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지원
 - 보육수요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 대하여 공동 직장어린이집 및 산

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지원

- 직장보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실시
- (성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수가 80개소로 당초목표(60개소) 초과달성, 용자지원 사업장이 11개소로 당초목표(6개소) 초과 달성, 인건비 지원 사업장이 299개소로 당초목표(282개소) 초과 달성,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장수가 75개소로 당초목표(69개소) 초과달성(당초예산 641억원 100% 집행)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1-17-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강제 방안 도입(1-1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경감하여 일하는 여성이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 공표 등 의무 이행 부과로 직장 어린이집 조기 설치 유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합리화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어린이집 놀이터 놀이기구 설치기준 완화
 - 사업장별(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민간사업장) 접근방식 다양화
 - 사업장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한 세부원인 분석 및 각급기관 의무이행 독려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을 제고를 위한 의무 이행 강제방안 도입
- (성과)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설치를 독려(1회)하고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12.9.30 기준)를 토대로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13.1.30)
 -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으로서 미이행 사업장인 161개소에 대해 명단 공표 및 6개월 이상 홈페이지 게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설치 독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협조 요청' 공문(장관 서한문) 발송('13.4.2)

〈표 2-6〉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1-17-①)	설치지원 사업장수	60	80	133.3	52	62	119.2	641	641	100.0
	융자지원 사업장수	6	11	183.3	6	4	66.7			
	인건비지원 사업장수	282	299	106.0	285	246	86.3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지원 사업장수	69	75	108.7	73	56	76.7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1-17-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무이행 강제방안 도입(1-18)	놀이기구 설치기준 완화	-			놀이기구 설치기준 완화	제한규정 완화	150	비예산		
	실태조사 결과 미이행 사업장 설치 독려 ¹⁾	실사독려 (1회)	실사독려 공문서	100.0	1회	1회	100	비예산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²⁾	명단 공표	관보, 홈페이지 게시물	100.0	시행령 개정	시행에 필요한사항 규정마련	100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실태조사 실시

2) '12년 성과지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세부방안 마련

[2]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세부영역)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 마련(1-19)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이 자사의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필요 정보제공 및 자문 등 지원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촉진

- 기업의 규모·업종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인증기준 개선
- 가족친화 인증제에 대한 홍보강화 및 인식 개선

○ (성과) 가족친화 포럼을 8회 개최하여 당초목표(4회) 초과달성 및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12회 개최하여 당초목표(12회) 달성(비예산사업)

- 기업 및 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포럼’ 활동 강화 및 활성화
- 가족친화경영 지원 및 인증제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등

□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1-20)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및 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친화제도 도입·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 중기청·조달청 입찰 가산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및 확대 추진
 -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우수사례 홍보, 가족친화 인증표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이미지 개선 지원
- (성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규로 45건 추가 지원하여 당초목표(10건)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수요조사 실시('12년 말)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의 지속 발굴로 ('12년 말) 34개 사업→('13년 말) 79개 사업으로 확대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1-21)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 및 인증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시적·안정적 사업추진 체계 마련
 - 인증기관 등 사업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 마련
 - 교육→컨설팅→인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사업효과 제고 및 상시적 기업지원
 - 맞춤형 변화관리 컨설팅 및 자문형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실행가능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지원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기업의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법적근거 마련
 - 관할 구역 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추진
- (성과) 가족친화인증 신청기업수가 총 402개소로 당초목표(160개소) 초과달성(당초예산 6.7억원 전액 집행)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활성화
 - 가족친화 직장교육(5,430명) 및 컨설팅(134개사) 실시
 - 제2회 가족친화경영대상 개최(KBS 생방송), 가족친화우수기업 포상,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 개최, 가족친화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 홍보

- 가족친화인증 브로셔 제작·배포, 지하철 액자형 광고, 중앙경제 인사이트 5월호 기사, 매일경제·프라임경제 연합광고, 인사카페 게시판 및 배너홍보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 추진
- 가족친화인증기업 '12년 253개에서 '13년 522개로 확대(중소기업은 76개→183개)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의 지속 발굴로 '12년 말 34개 사업에서 '13년 말 79개 사업으로 확대

〈표 2-7〉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2			2012			2012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 마련(1-19)	가족친화 포럼 활동	총 4회 개최	8회	200.0	4회 개최	5회 개최	125.0	비예산(과제1-21에 포함)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	12회 개최	12회	100.0	-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1-20)	인센티브 추가 제공	신규 10건 추가	신규 45건	450.0	1건 추가	27건 추가	2,700	비예산(과제1-21에 포함)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활성화(1-21)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인증신청 기업수 160	인증신청 기업수 402	251.3	150 개소	155 개소	103.3			

[3]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세부영역)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1-22-①)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기반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산업재해를 감소 등 추진
 - 6개 청 '근로시간감독기동반'을 통하여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시간 감독 실시
 - 기업의 자발적인 장시간 근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컨설팅, 일자리 함께하기(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금 등 지원
 -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건전한 여가 문화 확산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근로시간 총량 규제의 적용 범위는 보다 두텁게 하고, 근로시간 운용의 탄력성·유연성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 (성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을 2,071 시간으로 단축하여 당초목표(2,065시간)의 99.7% 달성(당초예산 53.5억원 전액 집행)
 - 근로시간제도 개선
 - 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
 - ‘13년 장시간근로개선 컨설팅 188개소 실시(진행 중),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2,026명 승인
 - 근로시간 지도·감독
 - 총 410개소에 대한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 342개소(83.4%) 적발·시정지시
 - 신규채용(520여명), 교대제 개편, 연장근로 없는 날 운영 등 개선계획 수립이행을 통해 법 위반 시정 완료 또는 시정 중
 -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컨설팅, 지도·감독 등을 통해 우수 개선사례를 발굴하여 우수기업 포상 및 사례발표회, 기획기사 연재, 매뉴얼(업종·규모별 유형화)·사례집 제작·배포 등으로 확산
 - 신문기고, TV다큐, 라디오 광고 등의 범국민 홍보 전략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유도
 - 노사정위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를 발족(‘13.11월),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자동차업종의 근로시간 개선방안 협의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1-22-②)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가족 사랑의 날 활성화 촉진
 - 가족 사랑의 날 우수사례 공모전 등 실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지원
 - (성과) 가족사랑의 날 대국민 인지도가 35.7%로 당초목표(35%) 초과달성(비예산 사업)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온라인 가족사랑 캠페인 추진
-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SNS(페이스북, 트위터) 홍보(매주 1회 이상)
- “가족송” 및 홍보 UCC 배포(~’13.12월)
- 가족친화 우수기업 포상 및 일·가정 양립 실천대회 실시
-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업무협약

□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 - 초과근무 관리강화(1-23)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초과근무 관리 강화를 통한 가족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근무시간 중 집중적으로 일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확산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 초과근무 관리실태 점검 및 초과근무 관리 강화 대책(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14.8월 우선실시)’ 등 초과근무 관리강화방안 검토(~12월)
 - 초과근무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각 부서의 업무계획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부서별 사용가능한 초과근무 총량 부여·관리
 - ‘14.8월부터 5개기관 시범 실시, ‘15년 전 부처 실시 계획

〈표 2-8〉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노동부)(1-22-①)	연간근로시간 ¹⁾	2,065 시간	2,071 시간	99.7	근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근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100	53.5	53.5	100.0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여가부)(1-22-②)	가족사랑의 날 대국민 인지도(여성가족부 주요정책인지도 조사) ²⁾	35%	35.7 %	102.0	1,500 가족	1,740 가족	143.8	비예산(과제1-21에 포함)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 - 초과근무 관리강화(1-23)	성과지표 없음	-			-			비예산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1-24)	성과지표 없음	-			-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개정안 국회 제출 유무

2) ‘12년 성과지표는 가족사랑의날 참여 가족, 기업의 수

□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1-24)

○ 안전행정부에서는 저출산 관련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일조하고자 함

- 지자체 합동평가 시 저출산·고령화 지표 평가 강화

○ (성과) 저출산 고령화 관련 6개 평가시책 14개 평가지표, 34개 세부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실시

-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 및 포상 실시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구성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1]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세부영역)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1-25)

○ (목표)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주거비용 경감 및 출산을 제고

-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신혼부부에게 혜택 부여(소득요건 및 무주택요건 완화 등)

○ (성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관련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소득요건 및 무주택요건 완화 등)을 개정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대출조건 조정

• (변경 전) 부부합산 연소득 (상여금 포함) 4천 만원 이하, 신혼부부 5천 만원 이하, 4.3%(20년)

• (변경 후) 부부합산 연소득 (상여금포함)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5천5백만원 이하, 4.0%(20년)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 및 대출조건 조정

• (변경 전) 부부합산 연소득 (상여금포함) 4천5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 만 35세 이상 대출 가능 / 3.5%(2년)

• (변경 후) 부부합산 연소득 (상여금포함)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5백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 만 30세 이상 대출 가능 / 3.5%(2년)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 한도 및 대출조건 조정

• (변경 전) 부부합산 연소득 (상여금포함) 4천5백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5백만원 이하 / 4.0%(20년) / 대출한도 1억원

• (변경 후) 부부합산(신혼부부 포함) 연소득 (상여금포함) 6천만원 이하 / 2.8%~3.6% (만기 및 소득수준 고려) / 대출한도 2억원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1-26)

○ (목표)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하여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시행

-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성과) '12.3, LH 내부 관련 규정 개정 후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우선입주 지속 시행(비예산사업)

〈표 2-9〉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1-25)	국민주택기금 업무 매뉴얼 개정	100%	100%(4.10, 6.12, 9.11 개정)	100.0	100%	100%	100%	100.0	비예산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1-26)	신혼부부 우선입주 시행 여부 ¹⁾	100%	100%	100.0	100%	100%	100%	100.0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규정 개정 여부

[2]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세부영역)

□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1-27) 【완료 과제】

○ (목표) 국방부에서는 종전에는 입대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대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 (성과) 2011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완료

□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28)

○ (목표) 교육부에서는 기혼자 학생의 가정생활을 위한 대응기반 조성을 위해 국립대학 기숙사 내 기혼자 숙소 확대

- 국립대학 BTL 기숙사 확충과 병행하여 기혼자 숙소 확대 추진(대학별 기숙사 총 수용규모의 5% 수준으로 확보)

○ (성과) 4개 대학에 대한 기숙사 고시 완료, 협약체결, 착공 계획 대비 착공 실적이 17개교로 당초 목표 100% 달성(비예산사업)

- 4개 대학 고시 완료, 협상 진행 중 3개교, 사업설명회 준비 1개교

• '14. 7월 기준 : 실시협약 체결 및 공사착공(3개교), 협상 진행 중(1개교)

-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1-29)
 - (목표)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기혼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 저소득층 기혼자에 대하여 정부지원 장학금 지원 시 우대
 - (성과) 저소득층 기혼자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시 우대하도록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표 2-1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2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1-27)	-	완료과제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28)	시설사업계획 고시	100%	100% (4개교)	100.0	100%	100%	100	비예산	
	계획 대비 고시 실적 ¹⁾	100%	100% (4개교)	100.0	100%	100%	100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1-29)	협약 체결, 착공 계획 대비 착공 실적 ²⁾	100%	100% (17개교)	100.0	0%	0%	0	비예산	
	반영된 사업 수/반영 대상 사업 수	2개	2개	100.0	2개	2개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시설사업계획 고시

2) '12년 성과지표는 실시협약 체결

[3]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세부영역)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1-30-①) 【종료 과제】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결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결혼친화 중심의 국민 인식개선을 통해 결혼·출산율 제고에 기여
 - 만남의 준비 - 결혼 준비 - 결혼 - 결혼 후 가정생활 등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한 단계별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제공
 - ※ 결혼누리 사이트 폐쇄로 인한 사업 종료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1-30-②)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성공적인 결혼으로의 유도과 결혼초기적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가족해체 예방 및 가족의 안정성 도모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준비 및 남성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일·가정 양립과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비·신혼기 부부 및 남성 대상 교육 실시
- (성과)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준비 교육교실 이용자수가 24,175명으로 당초목표(29,400명)의 82.2%만 달성
- 남성대상 교육교실 이용자수는 59,084명으로 당초목표(55,000명) 초과달성(비예산사업)

〈표 2-11〉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복가부)(1-30-①)	-	중요과제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여가부)(1-30-②)	결혼준비교실 이용자수	29,400명	24,175명	82.2	28,000명	28,022명	100.1	비예산(과제1-31에 포함)		
	남성대상교실 이용자수	55,000명	59,084명	107.4	50,000명	59,655명	119.3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1-31)	센터 이용자수 ¹⁾	1,526,000명	1,834,447명	120.2	405,000명	588,078명	145.2	178.9	178.9	100.0
	센터 개소수	149개소	151개소	101.3	148개소	148개소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프로그램 참여인원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1-31)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및 가족유형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도모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 예비·신혼기부부 및 남성대상 교육,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놀토가족돌봄, 지역사회연계사업 등 추진
- (성과)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당초목표(149개소) 초과달성(당초예산 178.9억원 전액 집행)

- 가족상담·교육·문화·돌봄 등 지원서비스를 183.4만명이 이용하여 당초목표(152.6만명) 초과달성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

[1]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세부영역)

□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1-32)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 해소
 - 분만취약지 유형에 따른 산부인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산부인과 외래 운영을 통해 분만, 산전진찰 등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산모 응급 이송 체계 구축
- (성과) '13년 취약지 분만산부인과는 9개소로 당초목표(9개소) 달성(당초예산 79억원 중 84.4%만 집행)
 - 분만산부인과 확대(4개소) 설치·운영 및 기존 사업기관(7개소) 운영비 지원
 - 취약지 분만산부인과는 외래 산부인과 운영, 24시간 분만,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11년 3개소→'12년 5개소→'13년 9개소)
 - 외래산부인과는 산전진찰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수행('12년 2개소→'13년 2개소)

□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1-33)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센터를 지정·확충하여 지역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접근성 제고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운영하는 기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병원당 10개 병상 추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
- (성과) 신생아집중치료실 50병상을 추가 확충하여 당초목표(50병상) 달성(당초예산 108억원 중 99.1% 집행)

- 기존 18개소(180병상) 확충 병상 및 어린이병원 4개소(40병상)에 대한 운영비 지원

〈표 2-12〉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보건 의료인프라 지원강화(1-32)	해당연도 분만 산부인과 누적 설치 개소	9개소	9개소	100.0	5개소	5개소	100.0	79	66.68	84.4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1-33)	실제 설치병상수	50병상	50병상	100.0	50병상	50병상	100.0	108	107	99.1

[2]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세부영역)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강화(1-34)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게 고액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 시술) 시술비 지원
- (성과) 체외수정 시술 지원건수가 34,264건으로 당초목표(34,000건) 초과달성(당초예산 745억원 전액집행)

〈표 2-13〉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지원 건수('13년말 기준)

구분	시술 지원건수	임신율	출산건수	출생아수 (출생연도 기준)
체외수정	34,264건	33.2%	8,116건	10,365명
인공수정	30,320건	13.7%	3,586건	3,981명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3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산모의 산전 진찰(초음파검사 등) 및 분만 등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
 - 산모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보험 부가급여 형태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 관련 진료(급여·비급여 포함) 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으로 임신당 50만원, 1일 6만원
- (성과) 1일 사용한도(6만원) 폐지 및 이용기관 확대 관련 고시 개정으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출산 전·후 진료 및 유산 등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산모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한 1일 사용한도(6만원) 폐지
 - 산부인과 및 조산원 이외에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이용으로 한방 병원까지 이용기관 확대

〈표 2-14〉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1-34)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건수 ¹⁾	34,000 건	34,264 건	100.8	31%	29.8%	96.1	745	745	100.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35)	1일 사용한도 폐지 및 이용기관 확대 (관련 고시 개정) ²⁾	관련고시 개정	관련고시 개정완료	100	법령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개정	100	비예산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36)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율 ³⁾	90%	98.3%	109.2	80%	97.2%	121.5	2,209	2,100	95.1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건수 대비 임신건수
 2) '12년 성과지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50만원으로 확대(관련법령 개정)
 3) {(비용 상환신청건수/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전산등록건수)×100}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36)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으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
 - 만12세 이하 어린이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의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 지원 백신(11종): B형간염, BCG(피내용),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 Tdap, Hib('13년 3월부터)
 - 지원비용: 백신비 + 예방접종 시행비용 지원(5천원 본인부담)
 - (성과) 민간의료기관 대상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율이 98.3%로 당초목표(90%) 초과달성(당초예산 2,209억원의 95.1% 집행)

<추진상 애로점>

- ▶ 2012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확대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5천원 이하로 낮아졌으나 일부 지역은 지방비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무료접종 시행.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본인부담금 5천원을 지원하지 못하는 지자체 주민들의 불평등 해소 필요
- ▶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폐렴구균, A형간염 등 기타예방접종비용이 여전히 높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지원 필요

[3]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세부영역)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37)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 임신 중 감기약, 피임약 등 약물 복용 시 부작용 여부 및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무료상담 제공
- (성과) 안전한 약물사용관련 무료상담 실적이 8,157건으로 당초목표(8,500건)의 96.0% 달성(당초예산 2.6억원 전액 집행)
 - 안전한 약물사용 관련 무료 상담, 약물 상담사례 DB 구축(5,548건)·운영
 - 지역중심 행사·교육 추진, 홍보 확대로 지역상담센터 활성화
 - 전문 의료인 대상 「임산부 약물상담 전문가 과정」 5, 6기 추진
 - 임신부의 기형유발물질노출 예방지침 개발·배포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강좌(10회), 의료인을 위한 마더세이프 심포지움 개최
 - 프로그램에 관한 대국민 교육(블로그 및 매체 홍보) 실시
 - 마더세이프 DB개발 및 구축

□ 영유아 건강관리(1-3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생아기 조기검진으로 선천성장애 여부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사망과 영구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성장발달 도모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자의 특수조제분유, 특수식이 등 지원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난청조기 진단 및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사

업 추진

- (성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장애 예방률을 98.3%로 유지하여 당초목표(98.2%) 초과달성(당초예산 476억원 전액 집행)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4천명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56천명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42천명, 취약전 아동실명예방 사업 4.5억 지출

〈표 2-15〉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37)	마더세이프 클리닉 및 콜센터 상담누적건수	8,500건	8,157건	96.0	7,500건	8,325건	110.0	2.6	2.6	100.0
영유아 건강관리 (1-38)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장애 예방률 ¹⁾	98.2	98.3	100.1	98.2	98.2	100.0	476.21	476.21	100.0

주: 1)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없는 pku 환아수/전체 pku 환아수 X 100)

[4]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세부영역)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강화(1-39)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2주(12일) 원칙, 쌍생아 3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여성 4주
- (성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이 13.5%로 당초목표(14%)의 96.4% 달성(당초예산 387억원 전액집행)

〈표 2-16〉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1-39)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연간수혜자수/연간출생아수 X 100(%))	14%	13.5%	96.4	13.3%	12.7%	95.7	387	387	100.0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1]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세부영역)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맞벌이가구, 다문화가족 자녀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1-40, 1-42, 1-43, 1-44)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장애아, 다문화 가정 영유아
- 지원단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 (성과)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손 계층 지원을 통하여 보육료 지원 만족도가 62.9%로 당초목표(55%)를 초과달성

- '12년 3월 만0~2세 및 만5세 전 계층, 만3~4세 소득하위 70% → '13년 3월 만0~5세 전 계층

- 기본계획에서는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를 '10년 소득하위 50%이하에서 '11년 70%이하로 목표 설정
-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보육·교육료 지원 강화(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을 '10년 낮은 소득 25% 차감 → '11년 부부합산소득 25% 차감으로 완화)

- 지방의 예산 미편성 등으로 지방의 보육 예산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보육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

-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의 보육 예산 부담 완화 지원

- 지방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 확보 등을 위하여 추경 편성을 전제로 중앙정부에서 지방비(목적예비비 3,607억원, 특별교부세 2,000억원) 지원
- 지방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고자 '14년부터 국고보조율 15%p 인상

□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1-41-①)

○ (목표)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누리과정 전면 실시를 '12년 3월 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

- (교육과정) 만 3~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 도입
- (지원대상)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
- (지원단가) 만 3~4세 모두 '13년부터 만 5세와 동일하게 지원
 - 만 5세: ('12) 전계층, 20만원 → ('13)22만원 → ('14)24만원 → ('15)27만원 → ('16)30만원
 - 만 3~4세: ('12) 소득하위 70%,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 ('13)~('16) 전 계층, 만 5세와 같음
- (재원부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
- 만 5세는 '12년부터 모두 부담, 만 3~4세는 '13~'14년까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함께 부담하고, '15년에는 만 3~5세 모두 부담
- (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유아교육·보육비 2조 6,495억원을 지원하여 당초목표(2조 4,964억원)를 초과달성(당초예산 전액 집행)
 - '13.3월부터 3~5세 누리과정 전면 실시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에게 공통 교육과정 적용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12년 5세 전 계층 월 20만원, 3~4세 소득하위 70% 각 19.7만원, 17.7만원 → '13년 3~5세 전 계층 월 22만원
 -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유아의 교육받을 기회 확대
 - 취원대상아 1,408,498명 중 1,288,684명 취원('12년 88.6% → '13년 91.5%)
-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3~4세 확대 시행(1-41-②)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취학 직전 만3~5세 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및 표준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육아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과정 제공
 - (성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공통 교육과정 적용 및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보육료 지원(당초예산 전액 집행)
 - 3~5세 누리과정 이용 아동('13년말 605,381명) 비율이 89.5%로 당초목표 87.0% 초과달성(OECD 평균 80.6%)

- * '12년 5세 전 계층 월 20만원, 3~4세 소득하위 70% 각 19.7만원, 17.7만원 → '13년 3~5세 전 계층 월 22만원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연수 및 교육을 통한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누리과정 연수 교육 교사수가 96,448명으로 당초목표(89,872명) 초과 달성

〈표 2-17〉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1-40,1-42, 1-43, 1-44)	보육료 지원 만족도 ¹⁾	55%	62.9%	114.4	88%	90%	102.3	54,665	54,665	100.0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 (교육부)(1-41-①)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24,964 억원	26,495 억원	106.1	11,084 억원	10,818 억원	97.6	26,495.3	26,495.3	100.0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3-4세 확대 시행 (복지부)(1-41-②)	3~5세 누리과정 연수 교사 수 ²⁾	89,872 명	96,448 명	107.3	17,000 명	25,102 명	147.7	7,968	7,968	100.0
	3~5세 누리과정 이용 아동 비율 ²⁾	87.0%	89.5%	102.9	92%	92.6%	100.7			

주: 1) '12년 성과지표는 보육료 전액지원 아동비율(전액지원아동수/전체이용아동수×100)

2) '12년 성과지표는 5세임

[2] 양육수당 지원 확대(세부영역)

□ 양육수당 지원 확대(1-4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 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도모
 - 지원대상: 취학전 영유아가구 아동(소득수준 무관, 소계층 지원)
 - 지원액: 12개월 미만 월20만원, 24개월 미만 월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 36개월~취학전 만5세이하 10만원
- (성과) 양육수당 수혜율이 93.7%로 당초목표(85.0%) 초과 달성(당초예산 전액집행)
 - 전계층 무상보육 시행('13년 3월)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취학전 84 개월 미만 106만명)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지원

〈표 2-18〉 양육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양육수당 지원 확대 (1-45)	양육수당 수혜율 ¹⁾	85%	93.7%	110.2	84%	80.3%	95.6	16,519	16,519	100.0

주: 1) '12년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차상위계층)×100

'13년: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어린이집 미이용 아동)×100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세부영역)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46)

- (목표) 교육부에서는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교육 환경 조성 도모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을 통해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0~'27년)
 - '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27년 이후)
- (성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을 통해 둘째아 이상 고등학생 390천명에게 4,348억원 지원
 - 기초수급자(복지부), 농어업인 자녀(농림부), 차상위 계층(교육청), 한부모 자녀(교육청+시·도), 특성화고(교육부) 등
 - (국정과제 31)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라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므로, 본 과제 종결 필요(둘째아와 상관없이 전 학생 학비 지원 추진)

□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1-47)

- (목표) 교육부에서는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완화 도모
 -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정부지원 장학금 지원 시 우대
-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시 해당학생 우대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2013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II유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학생 선발 시 다자녀

가구 학생을 우대하도록 권고

□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1-48)

- (목표) 다자녀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출생자 기준으로 셋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 퇴직 후 재고용 추진(희망자에 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및 재고용 시 임금피크제 적용)
- (성과) 2013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완료, 국가 재정부담, 높은 청년실업과 부정적 국민여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4년 이후 실시
 - 제2차 기본계획에서 2013년까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점, 국가 재정부담, 높은 청년실업률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3년 이후 실시로 설정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49)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이동과 생업활동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큰 자동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18세미만 다자녀를 3명이상 둔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단, 승용차의 경우에는는 최대 140만원까지만 면제)
- (성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 연장('12년→'15년)으로 '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감면 시행(비예산사업)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은 일몰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은 일몰기간이 이미 연장조치('12년→'15년) 중으로, 다자녀가구 지원 감면에 대한 별도의 추진계획(연장, 축소, 확대 등)에 대한 검토는 일몰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5년에 다시 검토할 예정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1-50)

- (목표)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자녀가구에게는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게 1회에 한하여 주택을 특별공급(공급기

회 확대)

-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 부여(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 지속)
- (성과) 국민주택기금 업무메뉴얼 개정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13.5.31, 주택공급규칙 개정)
 - 민영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기본계획에서는 3% → 5% 목표)
 - 현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 민영주택(10%), 공공주택(10%)
 -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 부여
 - 주택전세·구입자금 대출시 금리우대 유지(0.5%)(기본계획 4.7% → 4.2%)
 - (구입자금) 4.3% → 4.0%(4.10) → 2.8~3.6%(9.11) / 우대금리 미반영
 - (전세자금) 3.5% → 3.3%(6.12) / 우대금리 미반영

〈표 2-19〉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46)	둘째아 이상 학비 지원 인원/ 전체 고교생	성과지표 없음			17%	21%	123.5	4,348	4,348	100.0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1-47)	반영된 계획 수/ 대상 계획 수	2개	2개	100.0	1개	1개	100.0	비예산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1-48)	추진계획 없음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49)	성과지표 없음	-						비예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1-50)	국민주택기금 업무메뉴얼 개정	100%	100%	100.0	100%	100%	100	비예산		

[4]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세부영역)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1-51)

- (목표) 교육부에서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실현 필요

-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 신규 사교육 유발 우려(NEAT,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 ‘공교육 강화 - 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가 교육현장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 각계의 공감대 확산
 - 사교육 시장 동향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및 정책성과 홍보
- (성과)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발표를 통해 당초목표 달성(당초예산 309억원 전액 집행)
- ‘13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 및 사교육 관련 통계 분석
 - 총 사교육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0년부터 3년 연속 감소 추세 유지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추진(법안 제정안 발의, 4.30.)
 -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정책토론회 개최
 - 불법·탈법 운영 학원 지도·점검
 -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발표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참여율 ’12년 71.9% → ’13년 72.2%
 - 학생 만족도 ’12년 75.8점 → ’13년 78.7점, 학부모 만족도 ’12년 75.4점 → ’13년 78.1점
 - EBS 차세대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수능강의 운영 내실화, EBS 수능 연계교재 품질 제고 강화 등)

〈표 2-20〉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1-51)	조사결과 분석 및 발표	1회	1회	100.0	1회	1회	100.0	309 ¹⁾	309 ¹⁾	100.0

주: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산 30억원은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1-68)” 과제와 중복되므로 제외한 금액임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1]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세부영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2)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인프라 확보 및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도모
- (성과) 국공립어린이집 97개소(신축 75, 장애아전담 1, 공동주택 리모델링 21) 설치로 당초목표(96개소) 달성(당초예산 316억원의 94.3% 집행)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1-53)

-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창업농·후계인력 등 젊은 세대가 육아 걱정 없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에 보육서비스 제공
 - 보건소, 마을회관 등 농어촌지역에 유희시설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및 이동식 놀이차량 지원
- (성과)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보육시설) 3개소, 이동식 놀이버스 3개소 등 6개소 지원으로 당초목표(10개소)의 60%만 달성
 - 예산도 11억원이 소요되어 당초예산(66억원)의 16.7% 집행

<부진사유>

- ▶ (문제점) 지자체 농정부서로 사업 이관 후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준비, 영유아수 감소, 위탁운영 주체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 저조
- ▶ (개선방향) 지자체 관심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표 2-21>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설수	96개소	97개소	101.0	31개소	34개소	109.7	316	298	94.3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1-53)	농어촌 소규모어린이집 및 이동 놀이버스 지원 개소수	10	6	60.0	10개소	7개소	70.0	66	11	16.7

[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세부영역)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1-54)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이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부모에게 어린이집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권 향상 도모
 - 어린이집의 품질을 진단하는 평가인증 지표로 자체 점검 개선한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
- (성과) 평가인증율이 98.1%로 당초목표(90.0%) 초과달성(당초예산 67억원 전액 집행)
 - 11,000개소 신규인증, 6,400개소 재인증 참여
 - ‘05년~’13년간 36,128개소 인증통과(전년대비 6,813개소 증가)
 - 설치·운영 기준 위반 어린이집 참여 제한 확대 및 위법이력 어린이집 감점제 적용, 관찰일 미고지 등 운영체계 개선으로 평가 내실화
 - 확인점검(spot check) 확대 실시 및 점검결과에 따른 실질적 조치 도입으로 인증 시설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 부모의 시설선택권 보장 및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 동기 부여 등을 위해 평가인증 결과 공표 추진
 - 「영유아보육법」(‘11.8.4) 및 시행규칙(‘13.8.5) 개정으로 근거법령 마련
 - (개정내용) 평가인증 여부 및 점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 결과공개 포털 open(‘13.9.6)으로 인증어린이집 세부 평가결과 조회 가능
 -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평가인증 결과알리미(info.childcare.go.kr)
 -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표가 반영된 평가인증 지표 개선안 마련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5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품질 개선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조성 도모
 - 평가인증 수준, 시설환경, 보육교사 수준 등을 평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지원
 - 우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정,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

준의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단계적인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성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1,492개소('13년 700여개소 신규 선정)로 확충하여 이용가능 아동 수(공공형 어린이집 정원)가 8.5만명에 달해 당초목표(7만명) 초과달성(당초예산 619억원 전액 집행)

- 사후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재무회계컨설팅 전체, 운영컨설팅 200개소)

□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1-56)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을 통하여 보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 도모

- (성과) 원장·보육교사 정기 보수교육을 65,667명(직무교육 13,307명, 특별직무 38,713명, 승급 13,647명)에게 지원하여 당초목표(52,000명) 초과달성(당초예산 16억원 전액 집행)

- 교육내용으로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 운영 등 6개 영역

- 지자체에서 수기 관리하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통합적 관리·운영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표 2-2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1-54)	평가인증율(평가인증통과시설/전체어린이집)	90%	98.1%	109.0	81.1%	90.7%	111.8	67	67	100.0
	어린이집 선택 시 평가인증 고려율(%)	-			63%	75.1%	119.2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55)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가능 아동 수(공공형 어린이집 정원 현황) ¹⁾	7만명	8.5만명	121.4	91점	92.31점	101.4	619	619	100.0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1-56)	시도별 보수교육 인원 및 온라인 보수교육 인원	52,000명	65,667명	126.3	52,000명	68,014명	130.8	16	16	100.0
사립유치원 평가내실화(1-57)	2주기(12년 2년차, '13년 3년차)내 유치원 평가실시율	36.8%	38.2%	103.8	30%	36.1%	120.3	42	42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선정 공공형 어린이집 평균 평가인증 점수

□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1-57)

- (목표)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의 교육력 및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도모

- 교육과정 내실화, 방과후과정 운영 등 지원을 위한 운영관리시스템 개선
-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확대
- (성과) 2주기(3년차) 유치원 전체 8,293개원 중 3,167개원(38.2%)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당초목표(36.8%) 초과달성(당초예산 42억원 전액집행)
 - 1~3년차 누적 시 8,293개원(99.2%) 실시

[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세부영역)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내실화(1-5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저녁 늦게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맞벌이부부 등의 보육부담 경감, 취업부모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양육부담 경감,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성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9,258개소로 당초 목표(8,700개소) 초과달성(당초예산 1,027억원 전액 집행)
 -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처우개선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
 - 민간어린이집 월급형 지원단가 : ('12년) 월100만원→ ('13년) 월120만원
 - 국공립·민간 수당형 지원단가 : ('12년) 월30만원→ ('13년) 월40만원
 - 어린이집의 이용수요 예측합리적 반 편성 및 부모의 이용책임 제고를 위해 '사전 이용신청제' 도입·시행('13.2월)

□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1-59)

- (목적) 교육부에서는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지원
 - 방과후과정 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 (성과)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이 99%로 당초목표(99%) 달성(당초예산 435억원

전액집행)

- 엄마표 온종일 돌봄교실 교육부 선정 306개원, 시도교육청 자체 선정 530개원(총 836개원)으로 확대
-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301억원(7,724명) 지원
- 방과후 과정반 시설환경개선비 104억원(4,183개원) 지원

□ 실수요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1-60)

- (목적) 보건복지부에서는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시설양육서비스 강화
 - 저소득,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계층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조치 강화
- (성과) 입소우선순위 지침 반영으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당초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대기기간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결정하였으나, 입소대기 신청순서에 따라 통일적으로 입소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

□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1)

- (목적)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실제 보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보육과정을 마련하여 보육료지원, 보육프로그램 등 개선 방안 검토
 -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별도로 보육과정(이용시간) 개념을 도입하여 12시간 “종일형” 및 8시간 “단축형”으로 편성
 - 어린이집 이용 유아(만3~5세) 대상 단축형보육료 단가를 종일형의 80%수준으로 설정하고 단축형 선택 아동의 보육료 차액만큼 어린이집 지원
 - 단축형 선택아동 중 보육료지원 아동이 불가피하게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10시간 한도에서 보육료 지원
- (성과) 시간차등형 보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당초목표 달성 (당초예산 76억원의 7.6%만 집행)
 -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적 활동에 의해 긴급 또는 일시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비정기적, 비정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8 시도 15시군구 5,401건, 18,681시간 이용, 부모 만족도 59.3%)

〈표 2-23〉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집행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내실화(1-58)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어린이집 수 합계 ¹⁾	8,700개소	9,258개소	106.4	50,000명	47,045명	94.1	1,027	1,027	100.0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1-59)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 전체유치원×100	99%	99%	100.0	99.5%	98.1%	98.6	435	435	100.0
저소득층, 맞벌이 입소 우선순위 부여(1-60)	실수요자 계층을 위한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 수립 ²⁾	입소우선순위 개선방안 마련 및 지침 반영	지침 반영	100.0	완료	완료	100	비예산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1)	시범사업 실시	시범 사업 실시	시범 사업 실시	100.0	시범 사업 실시	시범 사업 실시	100	76	5.8	7.6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1-62)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80	72	90.0	70개소	60개소	85.7	10.92	10.92	100.0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이용자수 ³⁾	80,000명	164,589명	205.7	40,680명	66,433명	163.3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시간연장형 보육이용아동수
 2) '12년 성과지표는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수립
 3) '12년 성과지표는 공동육아나눔터 전체 이용자수

□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1-62)

- (목적)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사회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양육친화적 가족문화 조성, 가족 커뮤니티와 품앗이 등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자조 능력 (Self-Help) 향상 도모
 -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품앗이’ 그룹을 구성하여 자녀 돌봄에 대한 품 나눔과 이웃간 연계 활성화
 - 지역사회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자녀의 안전한 놀이 활동 공간 제공
- (성과) 27개 시·군·구에 공동육아나눔터 72개소 설치로 당초목표(80개소)의 90% 달성, 이용자수는 164,589명으로 당초목표(80,00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10.92억원 전액집행)
 - 가족품앗이 그룹수 361개
 - 관악구 등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 리모델링
 - 여성가족부-삼성생명 업무협약 체결('12.9,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 지원)

- 아파트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여성가족부-삼성물산 업무협약 체결('13.11)
- 15사단(강원도 철원군) 군부대 관사 내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 여성가족부-롯데그룹 간 업무협약 체결('13.12, 군 관사 내 설치)

[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세부영역)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63)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취업부모 자녀(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를 통해 시설보육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도모
 - 아이돌보미가 취업부모의 자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비용을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 지원
 - (시간제 돌봄) 초등학교(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교) 동행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돌봄) 시설 보육이 어려운 만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위생안전관리 등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양성으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성과)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건수가 291만건으로 당초목표(200만건) 초과달성,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가 90점으로 당초목표(87.5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1,092억 원 중 87.4%만 집행)
 - 시간제 돌봄 '12년 41,599가구 → '13년 47,700가구
 - 영아종일제 돌봄 '12년 2,348가구 → '13년 3,693가구(연령 12개월 이하 → 24개월 이하로 확대)
 - 아이돌보미 활동수(일자리 창출) '12년 11,589명 → '13년 16,393명
 -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한 설문 및 시범운영 실시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등 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등 포함

〈표 2-2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1-63)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	200만건	291만건	145.5	200만건	257만건	128.5	1.09	954.	87.4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87.5점	90점	102.9	82점	89.3점	108.9	2.09	98	

[5]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세부영역)

□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1-64)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영아)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모든 취업부모 대상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
 - 민간베이비시터 교육 및 자격관리 DB 구축 등을 통한 민간분야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 질 관리
 -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자격 및 관리에 대한 근거법률 제·개정 관리
- (성과) 민간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을 869명 대상으로 실시하여 당초목표(500명) 초과달성
 -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취약계층 서비스 우선 제공을 위한 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3.11.29. 시행)
 -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한 설문 및 시범운영 실시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정 등 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 민간 분야의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민간베이비시터 양성교육 실시 및 교육이력관리프로그램 개발(DB)
 - 영유아 위주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실제 민간서비스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베이비시터 교육교재 개정

〈표 2-25〉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1-64)	민간베이비시터 교육인원 ¹⁾	500명	869명	173.8	하위법령 마련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달성	비예산(과제 1-63에 포함)		

주: 1) '12년 성과지표는 하위법령 마련

[6]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세부영역)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1-6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상담·급식·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시설 특성에 맞는 지원 다양화 및 운영역량 강화
- (성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만족도가 85.6점으로 당초목표(84.5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2,499억원 전액 집행)
 - 지역아동센터 재정지원 확대
 - 종사자 교육, 컨설팅 지원, 평가 체계 강화 (종사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및 의무교육 실시, 종사자 교육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완료)
 - 멘토양성과정 운영
 - 신규 시설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컨설팅, 현장실습 등
 -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 신규 센터는 시설환경, 프로그램 등 기본역량 평가, 기존 센터는 개별 아동에 대한 서비스 효과 중심의 심화 평가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1-66)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의 맞벌이·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식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공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

- (성과) 8,200명이 이용하여 당초목표(8천명) 초과달성, 청소년 만족도는 83.9점으로 당초목표(83.9점) 달성, 학부모 만족도는 84.2점으로 당초목표(83.5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329억원 전액 집행)
 - 취약계층 청소년(8.2천여명) 대상 전국 200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 방과후아카데미 컨설팅 및 평가 등을 통한 운영 질 제고
 - 방과후아카데미 상근종사자 전문 역량배양 실시(특성화 전문연수 4회)
- 초등 중일 돌봄교실 확대(1-67)
 - (목표) 교육부에서는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돌봄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저출산 문제 완화 도모
 - (성과) 초등 돌봄교실을 7,439교실로 확대 운영하여 당초목표(7,400교실) 초과달성(당초예산 2,643억원 전액집행)
 - (초등돌봄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실수요에 맞게 방과후부터 오후 5~6시까지 운영(7,439실, 159,737명 참여)
 - (엄마품온중일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아침(06:30)부터 야간(22:00)까지 돌봄 지원
 - 1,927실 38,738명 참여(8월까지 실적)
 - 방학 중에도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돌봄 수요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지속 운영
 -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5,538개교, 7,178교실(130,326명 참가)
 -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1-68)
 - (목표) 교육부에서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정착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확대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도모
 - 교과 및 특기적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성과) 교과프로그램과 특기적성프로그램을 57만개 운영하여 당초목표(60만개)의 95.0% 달성(당초예산 30억원 전액 집행)

-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12년 71.9% → '13년 72.2%
- 만족도 학생 '12년 75.8점 → '13년 78.7점, 학부모 75.4점 → 78.1점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9)

-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우고, 소통·공감 능력 향상 및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 전국 초·중·고교에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소외·취약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 재량활동, 교과연계수업시간활동, 국악·관현악, 미술교실 등 1인1예능활동 지원
- (성과) 수혜자 만족도가 89.2점으로 당초목표(80점)초과달성(당초예산 686억원 전액 집행)
 - 학교 예술강사 지원 : 전국 7,254개교(수혜자 220만명), 예술강사 4,485명 파견
 - 지원학교 : 전체 초·중·고(11,599개교) 대비 62.5%(7,254개교)
 - 수혜학생률 : 초·중·고교생(677만명) 대비 32.5%(220만명)

〈표 2-26〉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1-65)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	84.5	85.6	101.3	82.9	84.3	101.7	2,499	2,499	100.0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1-66)	청소년만족도(효과만족도 조사)	83.9	83.9	100.0	83.8	83.8	100.0	329	329	100.0
	학부모만족도(효과만족도 조사)	83.5	84.2	100.8	83.5	83.6	100.1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 수	8,000명	8,200명	102.5	8,000명	8,200명	102.5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1-67)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수(실)	7,400실	7,439실	100.5	7,000개	7,086개	101.2	2,643	2,643	100.0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1-68)	교과프로그램수+특기적성프로그램수	60만개	57만개	95.0	55만개	60만개	109.1	30	30	100.0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9)	수혜자 만족도 ((\sum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 X 20) / 전체응답자)	80점	89.2점	111.5	78점	90.6점	116.2	686	686	100.0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1-70)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수 ¹⁾	14,000명	19,196명	137.1	교육과정 1식교육 200명	교육과정 1식교육 250명	125.0	비예산(과제 1-63에 포함)		

주: 1) '12년 성과지표는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실시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1-70)

- (목표) 취업부모 등의 초등학교 자녀에게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등·하교 동행, 식사간식, 학습지도 등) 제공,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비용 차등 지원
- (성과) 초등학교 방과후 시간제 돌봄 이용 아동수가 19,196명으로 당초목표(14,000명) 초과달성
 - 지원시간 ‘12년 연480시간 → ’13년 연720시간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1]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세부영역)

□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1-7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보건·복지·보육(교육) 등 통합서비스 연계 지원
- (성과) 취약아동 중 22%(95천명)가 수혜를 받아 당초목표(17%) 초과달성 (당초예산 594억원 전액집행)
 - 211개 시·군·구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 대상아동은 '12년 60천명 → '13년 95천명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체계 내실화
 - 연구결과,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낮은 연령대의 아동에서 효과가 두드러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표 2-27〉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1-71)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 ¹⁾	17%	22%	129.4	9.0 (40,770명)	14.9 (65,724명)	162.2	594	594	100.0

주: 1)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수 ÷ 취약계층 아동수) × 100(%)

[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세부영역)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보급, 직업체험 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72, 1-74, 1-81-①)
- (목적)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청

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CYS-Net) 운영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 지원

- 청소년 전화·문자 상담, 사이버상담을 통한 심리·정서 상담 제공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동반자를 통해 심리·정서서비스 제공
-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학업복귀 지원

○ (성과) CYS-Net 서비스 지원대상 청소년의 변화 정도가 16.7p로 당초목표(12p) 초과달성(당초예산 451억원 전액집행)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위기청소년 인프라 확대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경제지원 등 유형별 위기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 수혜 청소년 규모 : '12년 149,307명 → '13년 183,328명
 - 수혜 청소년 만족도 : '12년 84.8% → '13년 85.4%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인프라 확대('12년 49개소 → '13년 50개소)
 -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수혜 청소년 증가(9,380명 → 12,400명)
 - 서비스 수혜 청소년 자립준비 수준 향상률 20.8%

〈표 2-2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보급, 직업체험 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72, 1-74, 1-81-①)	CYS-Net 서비스 지원 대상 청소년의 변화정도	12p	16.7p	139.2	변화율 10% 이상	16.6%	166.0			
	CYS-Net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측정	-	-	-	만족도 80% 이상	84.8%	106.0	451	451	100.0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수혜 청소년 수	-	-	-	16,000명	16,840명	105.3			

[3]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세부영역)

□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1-73)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 지원

- 보호기간 중의 자립의지·자립능력·자립기술 등의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 자립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일정기간 주거·취업·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 지원
- (성과) 퇴소아동 중 취업자와 대학진학자의 비율이 76.5%로 당초목표(77%)의 99.4% 달성(당초예산 149.7억원 전액 집행)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립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그 대상을 기존의 시설 아동에서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까지 확대(4만여명)
- 시설·그룹홈·가정위탁 아동 대상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 자립준비캠프(204명), 자립체험관(225명), 자립 사례회의(34회), 바람개비 서포터즈(퇴소선배 43명 추가위촉) 등
- 사회진출 시 필요한 민간자원 연계·지원 등
 - 월세 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억원) 확보
- 디딤씨앗통장 지원아동수 증가('12년 46,703명 → '13.12월 51,670명) 및 총 적립액 증가('12년 1,197억 → '13년 1,514억원)

〈표 2-29〉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1-73)	(취업자+대학진학자)/ 퇴소아동수 X100	77%	76.5%	99.4	74%	76.1%	102.8	149.73	149.73	100.0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1]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세부영역)

□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1-7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정서행동문제 및 인터넷중독 아동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발달검사·발달지체 위험 영유아 중재 서비스, 문제행동 아동 진단 및 조기개입 서

- 비스,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치료, 인터넷 과다사용 및 중독아동 심리검사상담·교육 및 치료서비스 제공
- (성과) 지원대상 아동수가 총 44,296명으로 당초목표(26,232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629억원 중 90.0% 집행)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포괄보조 시범운영
 - 3개 내역사업(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지자체에 사업기획 및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장점검 실시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실시(1-76)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취학 전 아동 인지발달에 대한 조기투자로 국가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하고, 아동기 지적환경 격차를 개선하여 출발기회의 형평성 도모
 - 1:1 맞춤형 독서지도, 도서지급(대여), 독서관련 부모교육 등 방문서비스 제공
 - (성과) 바우처 이용자수가 260천명으로 당초목표(205천명) 초과달성(당초예산 455억원 중 85.3% 집행)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책읽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언어·인지능력 발달 향상 도모(월 이용자수 183천명)

〈표 2-30〉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1-75)	지원대상 아동수	26,232	47,296	180.3	22,721명	44,977명	198.0	629	566	90.0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실시(1-76)	바우처 이용자 수	205천명	260천명	126.8	180천명	228천명	126.7	455	388	85.3

[2]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세부영역)

□ 휴먼네트워크 확대(1-77)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멘토링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역할모델과 인적네

- 트위크를 형성하여 빈곤 등 취약계층의 문제 해결
- 멘토링 수행기관 간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교육 사업, 멘토링 포털 시스템 운영을 통한 멘토링 지원 사업
- (성과) 멘토링시스템 상 협력기관 수가 누적적으로 505개소로 증가하여 당초목표 (300개) 초과달성 (당초예산 10.6억원 전액집행)
- (협력·지원체계 구축) 멘토링 수행기관의 확대와 협력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협력기관 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지원 확대(네트워크 구축 확대 및 정보포털 사이트 활성화)
- (멘토링 전문성 강화) 멘토링 수행기관 코디네이터, ‘멘토-멘티’ 대상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지원을 통한 질적 성장
-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붐 조성) 멘토링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멘토링 수행기관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과 상호격려 및 유대감 형성

〈표 2-31〉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휴먼네트워크 확대(1-77)	멘토링시스템 상 협력기관 수	300개	505개	168.3	-	-	-	-	-	-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멘토-멘티 연계 건수	-	-	-	10,000명	13,574명	135.7	10.6	10.6	100.0
					15,000명	18,524명	123.5			

[3]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세부영역)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1-78)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 및 기능 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 도모
- 방과후 주말 등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중소규모의 청소년시설 지속 확충
- (성과)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자수(연인원)가 45,064천명으로 당초목표(38,000천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965억원 전액집행)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72개소-50,550백만원)

□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1-79)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적인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청소년의 나눔 인성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도모
 -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기 개발, 인성사회성 함양 제고를 위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 사회적 나눔의식 등 청소년 가치관 형성, 인성발달, 사회성 함양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지원
 - 자원봉사 터전 관리, 전문인력 pool 확보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등
- (성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수혜 청소년 수가 572,863명으로 당초목표(285,600명) 초과달성,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인원수는 2,907천명 (당초예산 20억원 전액집행)
 - 청소년동아리 2,000개 지원(1개당 100만원 지원)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1-80)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을 통한 국제적 역량 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 청소년 교류 참가국과의 우호·협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국가 간 약정 및 합의에 의한 청소년 교류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외자원봉사단, 국제회의·행사 파견)
 - 국제행사·회의 개최 및 지원
- (성과) 참가자 만족도가 83.6점으로 당초목표(81.5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39억원 전액 집행)
 - 국가 간 청소년 교류 623명 교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969명 교류
 -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회의·행사 등 파견 42명, 해외자원봉사 457명, 국제행사·회의 개최 및 지원 79,674명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81-②)

- (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 (직장체험)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 (직업체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School to Work) 도모
 - (강소기업 탐방) 청년에게 지방강소기업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지방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
- (성과)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가 87.5점으로 당초목표(91점)의 96.2% 달성(당초 예산 107억원 중 96.3% 집행)
- 155개 대학에서 청년(10,922명)에게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경력 형성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 지원

〈표 2-32〉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 활동인프라 확충(1-78)	청소년시설 청소년이용자수 (연인원)	38,000 천명	45,064 천명	118.6	36,500 천명	42,556 천명	116.6	965	965	100.0
이동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1-79)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수혜 청소년수	285,600명	572,863명	200.6	280,000명	566,619명	202.4	20	20	100.0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인원 ¹⁾	2,750 천명	2,907,459명	105.7	100개	394개	394.0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1-80)	참가자 만족도(점) ²⁾	81.5	83.6	102.6	88점	90.1점	102.4	39	39	100.0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 상담 프로그램 확대(1-81-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7점 척도에 의한 설문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³⁾	91	87.5	96.2	80% 이상	87.8%	109.8	107	103	96.3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터전 신규 확보수
 2) '12년 성과지표는 국제교류 참가자의 글로벌 역량 증진도(3개 영역별 평균점수의 평균)
 3) '12년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매우만족+만족)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

[1]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세부영역)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1-82)
- (목적)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부모대상 아동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아동안전사고 사망 및 발생건수 감소 도모

-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 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 안전사고 예방교육·응급처치 교육 실시, 가정안전꾸러미(전기안전커버 등 안전용품과 부모가 가정안전을 실천 할 수 있는 안전수첩으로 구성) 배포
- (성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수가 32,368명으로 당초목표(31,000명), 예방사업 전후 인식도 점수가 97.7점으로 당초목표(75점) 초과달성(당초예산 10억원 전액집행)
 -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맞춘 5대 의무교육 주제(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와 응급처치교육 콘텐츠 개발
 - 아동 연령별(영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고등용)로 애니메이션 33종, 동영상 6종, 활동지 24종, 안전송 4종 개발
 - 교사용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아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각 8차시, 총 24차시 구축
 -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www.childsafedu.go.kr)를 신규 구축('13.9)하여 아동, 부모, 교사 등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 교사대상 안전교육 연수(3,200명), 아동대상 출장교육 실시(32,368명)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1-83-①)
 - (목적) 안전행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도모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홍보 실시
 - (보행안전지도 사업) 보행안전지도사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등을 직접 알려주고, 학생들을 직접 등하교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 (성과) 교통안전시설 확충(보호구역 696개소 개선)을 위한 국비(380억원 투자) 집행률이 98.5%로 당초목표(95% 이상) 초과달성 (당초예산 760억원의 98.5% 집행)
 -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584개교 운영

〈표 2-33〉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1-82)	안전사고예방교육 참여자수	31,000명	32,368명	104.4	30,000명	32,050명	106.8	10	10	100.0
	예방사업전후 인식도 점수측정 ¹⁾	75	97.7점	130.3	70점	95.5점	136.4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안행부)(1-83-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국비 집행률 ²⁾	95% 이상	98.5%	103.7	95% 이상	100%	105.3	760	748.6	98.5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교육부)(1-83-②)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활동 인원 교육 실시회수	성과지표 없음			2회	2회	100.0	5.5	5.5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안전사고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

2) (국비집행실적/전체국비)×100%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1-83-②)

○ (목적) 교육부에서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통안전망 구축 도모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관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지도 활동비 지원

- 보행안전도우미(Walking School Bus) 시범 운영학교 운영

• 등·하교 시 보행안전도우미가 어린이 직접 인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확대 및 관리 강화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분석 및 컨설팅 연구에 따른 교통안전망 구축 학교(12개) 선정 및 향후 예방 조치 수립 등 관리 강화

○ (성과) 녹색어머니회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으로 4,098개 초교의 511,897명에게 피복비 지원, 녹색어머니회 워크숍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 7개, 실천수기 20개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당초예산 5.5억원 전액집행)

- 안전행정부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으로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지정학교 : '12년 12,749교(88%) → '13년 12,891교(89%)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모든 어린이교육기관 대상 통학차량 운행여부 및 안전실태 점검 실시로 운전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강화
 - 총 45,149개 기관(어린이집 20,768개, 유치원 4,673교, 초등학교 2,123교, 학원 12,560개, 체육시설 5,025개), 신고 50.1%
- 기타 통학차량 안전강화 캠페인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학교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책 추진 등 실시

[2]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세부영역)

□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1-84)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성범죄, 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 도모
 -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 (성과) CCTV 설치율이 107%(4,247개소)로 당초목표(95% 이상) 초과 달성, CCTV의 통합운영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율이 100%(120개)로 당초목표(90% 이상) 초과 달성 (당초예산 1,295억원 전액 집행)

□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1-85)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우편고지 추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하여 관리하고, 공개명령이 선고된 자의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공개
 -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
- (성과) 전용 정보통신망 ‘성범죄자 알림’(www.sexoffender.go.kr) 사이트 연간 접속 건수(365일)가 2,946천명으로 당초목표(2,356천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34억원 중 91.2% 집행)
 - 성범죄자(아동·성인대상 통합)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성범죄자(아동·성인대상 통합) 전출입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과 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11.1월 시행)

-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시스템 개발('13.4~12)
- 정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1-86)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통하여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도모
 - 원스톱지원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설치·운영 고도화 추진
 -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국민 홍보 활동
 - (성과) 통합지원센터 수혜자 수가 27,450명으로 당초목표(23,800명) 초과달성, 이용자의 만족도가 82점으로 당초목표(77점) 초과달성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 확충(통합지원센터 3개소 신규설치, 3개소 확장, 아동청소년 전용 쉼터 2개소)
 -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전문인력 확충(임상, 상담, 간호사 51명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도입 등
 -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체계화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 강사 양성, 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

〈표 2-34〉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청소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1-84)	CCTV 설치율	95% 이상	107%	112.6	95% 이상	100%	105.3	1,295	1,295	100.0
	통합관제센터 구축율	90% 이상	100%	111.1	95% 이상	100%	105.3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1-85)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연간접속건수(365일)	2,356천명	2,946천명	125.0	5,760천명	9,894천명	171.8	34	31	91.2
정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1-86)	통합지원센터 수혜자 수 ¹⁾	23,800명	27,450명	115.3	19,700명	22,573명	114.6	172	172	100.0
	이용자 만족도 ¹⁾	77점	82점	106.5	89점	89.3점	100.3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와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수혜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임

[3]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세부영역)

□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1-87)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학대피해 아동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도모
 -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 치유보호시설 설치 운영 및 재학대 방지 가족힐링프로그램 개발·보급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전용 그룹홈 운영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보호, 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 기능 수행
 - 재학대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가족 치료프로그램 보급 등
- (성과)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가 6,796명으로 당초목표(6,361) 초과달성 (당초예산 11억원 전액집행)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1개소) 운영 지원을 통한 중앙·지역간 업무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추진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 36개소 설치·운영
 -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추진
 -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특례법 제·개정('13.12.31)
 -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아동 사법적 보호절차 마련, 아동학대범죄전력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등

〈표 2-35〉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아동학대 예방 보호 체계 강화(1-87)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일반사례+잠재위험사례) ¹⁾	6,361	6,796	106.8	0.62%	0.67%	108.1	11	11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0~17세 아동수 대비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비율)

[4]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세부영역)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1-88-①)

- (목표)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학교폭력 피해지원 전문기관 설립 추진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지원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지원
- (성과) 예방교육 만족도가 74.6%로 당초 목표(70%) 초과달성, 전국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전문지원기관 수가 7개소로 당초목표(7개소) 달성 (당초예산 85.4억원 전액집행)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 학교폭력예방 표준프로그램(어울림프로그램) 72종 개발
 - 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심화연수(80명)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동영상 제작·보급
 - 행복학교 박람회 및 대한민국 사회안전 박람회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정책관 운영
 -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기관 전국 17개 시도, 31개 기관 지정 완료
 - 학교폭력 가·피해 유형별 맞춤형 선도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진행
 -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종교계 협력 사업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종교단체 협력 진행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아동안전지킴이)(1-88-②)

- (목표) 경찰청에서는 대한경우화·대한노인회 회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공원 등 아동들의 움직임이 많고 아동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순찰함으로써 아동 성폭력·학교폭력·실종·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 및 청소년 비행 선도 등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도모
- (성과) 아동안전지킴이 만족도가 71점으로 당초 목표(70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219.16억원 중 97.7% 집행)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면서 인력과 예산 증액(5,882명, 21,916백만원), 전국 250개 경찰서, 1,552개 지구대, 4,497개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
- 지킴이 전원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 복제 개선, 신분증 발급 등 내실을 도모하고 아동 성폭력 등 전문교육 661회, 직무교육 2,305회 실시
- 범인검거(지원) 및 예방 등 보호 ('13.3~12월)

총계	범인검거·지원					범죄예방·보호					
	계	성폭력범	학교폭력	강, 절도	기타사범	계	성폭예방	폭력예방	실종예방	비행선도	기타
64,730건	578	9	49	11	510	64,152	211	9,032	1,213	17,616	36,080

- 기타 운영규칙 제정, 복무관리 지침, 효율운영을 위한 매뉴얼 마련, 운영실태 전국 현장점검(연 2회),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등 실시
- 인지도 90.7%, 아동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79.9%, 추가확대 필요 74.2% 등

〈표 2-36〉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1-88-①)	예방교육 만족도 ¹⁾	70%	74.6%	106.6	70%	99.4%	142.0	85.4	85.4	100.0
	전국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 전문지원기관 수	7개	7개	100.0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아동안전지킴이) (1-88-②)	아동안전지킴이 만족도 (만족 응답 비율)	70점	71점	101.4	65	76.7	118.0	219.16	214.21	97.7

주: 1) '12년 성과지표는 4시간이상 실시 학교비율

[5]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세부영역)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1-89)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 강화
- (성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율(인터넷 치유학교 참가 후 중독 개선을 측정)이 69%로 당초목표(70%)의 98.6% 달성 (당초예산 42억원 전액집행)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 심야시간대(0시~6시)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
-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결정·고시 및 시행
- PC 온라인 게임 적용,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 등은 2년 후 재평가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위반행위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인터넷 게임사업자의 제도 수용률 96%)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지원 강화
 - 학령전환기 청소년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한 대상 발굴 및 위험수준별 상담·치료 연계
 - 고위험 중독 해소 치유평화 프로그램인 인터넷치유캠프(중고생 대상) 및 가족캠프(초등생 대상) 운영
 -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신규배치를 통한 전문 서비스의 적기 제공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상설 인터넷치유기관) 설립으로 맞춤형 서비스의 상시 제공 추진
 -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진단 최초 실시 및 스마트폰 중독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상담·치료 매뉴얼 개발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대국민 홍보 실시
 - 신문을 통한 기획광고 추진과 함께 홍보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라디오·TV를 통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 실시
-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0-①)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치료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도모
 - (성과) 음주·흡연 청소년 교육 및 치료 지원 건수가 7,733명으로 당초목표(7,50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1.4억원 전액집행)
 -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교육 및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맞춤형 상담·치료·재활 지원을 통한 청소년 유해약물 사회적 관리 강화
 - 상습 음주·흡연청소년 등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실시

-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실시
 - 유해약물 중독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 및 상담·치료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청소년 보호 사회분위기 조성
-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0-②)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통해 담배에 대한 신규 진입을 차단하고 사회적 금연분위기 확산
 -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학교 내 금연분위기 조성
 - 청소년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중요성 홍보
 - (성과)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청소년흡연율이 9.7%로 당초목표(11.2%) 초과달성 (당초예산 97.76억원 전액 집행)
 - 금연선도학교 지정(1,262개소), 금연캠페인 및 금연교육 실시,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통한 금연문화 확산 등
- 음주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1-90-③)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으로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범죄와 가정파괴를 예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도모
 -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주류 판매 및 음주 제한구역 설정, 광고 규제 등 추진
 -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성과)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월간음주율이 16.3%로 당초목표(19.5%) 초과달성 (당초예산 82.76억원 전액 집행)
 - 고위험음주 대학생 대상 '절주힐링캠프' 2회(22명/회) 개최, 절주전문강사 71명 위촉, 총 강의활동 306회(교육인원 총 53,098명)
 - 절주전문웹진 연 4회(3,700여통 mail/1회), 절주홍보 뉴스레터 연 6회(3,770여통 mail/1회) 발송
 - 대상별(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직장인) 절주교육 프로그램 개발(가이드북 4종, 동

영상 4종, 청소년 금주신문 1종)

- 대학 절주동아리(61개) 및 시범운영 절주동아리(51개) 지원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음주문화 조성 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91)

-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안전·영양관리 전문인력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 대한 체계적 위생 및 영양관리 강화
 -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성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서비스 만족도가 86.8%로 당초목표(85%) 초과달성 (당초 예산 134억원 중 70.1% 집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22개소→88개소), 가이드라인 마련·배부 등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1-92)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공공개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 지원
- (성과) 서비스효과율(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수 대비 6개월 이후 SDQ-Kr점수가 호전된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39.6%로 당초목표(31%) 초과달성 (당초예산 50억원 전액집행)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치료·재활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인력이 배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12년 42개소 → '13년 100개소
 - '13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실적

선별검사 및 심층사정평가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연계처리	교육	치료비지원	
					인원	금액
27,698명	206,464명	249,411명	9,683건	1,009,949명	3,637명	928백만원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지원 센터(100개소) 외에 미지원 센터 실적도 포함

〈표 2-37〉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 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1-89)	인터넷 중독 위험군 치유율(인터넷 치유학교 참가 후 중독 개선을 측정)	70	69	98.6	67%	67%	100.0	42	42	100.0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여가부)(1-90-①)	음주·흡연 청소년 교육 및 치료지원 건수 ¹⁾	7,500명	7,733명	103.1	70점	74.7점	106.7	1.4	1.4	100.0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복지부)(1-90-②)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근거로 한 청소년흡연율	11.2	9.7	115.5	11.9%	11.4%	104.4	97.76	97.76	100.0
음주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복지부)(1-90-③)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근거로 한 월간음주율	19.5%	16.3%	119.6	20.5%	19.4%	105.7	82.76	82.76	10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1-9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서비스 만족도(%)(*5점척도 100점으로 환산) ²⁾	85%	86.8%	102.1	10개소	10개소	100.0	134	94	70.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1-92)	서비스효과율(%) ³⁾	31%	39.6%	127.7	20.2	29.2	114.6	50	50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유해약물 치료서비스 수혜자 만족도(점)

2) '12년 성과지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

3) (초기 심층사정평가 당시 SDQ-Kr점수-6개월 이후 SDQ-Kr점수)가 호전된 아동청소년 수/심층사정평가 수행 이후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아동청소년 수×100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

[1]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세부영역)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1-93)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요보호아동, 빈곤아동 중심의 아동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추세에 맞추어 모든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도모

-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 중장기적 관점의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성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회 구성으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아동인권 및 아동복지(건강·안전 분야 포함) 전문가(학계·법조계·NGO 등)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 10명 위촉 및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 2회 개최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및 개최(8회)
-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실시 등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1-94)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보호, 활동, 복지, 자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역량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매5년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수립·추진
 - 「청소년기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동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성과) 범정부 차원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표 2-38〉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1-93)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100.0	기본계획 수립	-	0	비예산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1-94)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100.0	수립여부	수립	100	비예산		

[2]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세부영역)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1-9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실성 있는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정기적(5년마다) 실시
- (성과)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로 당초 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전체 4,007명(일반가구 아동 2,508명, 저소득가구 아동 1,499명)을 대상으로 아동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실시

〈표 2-39〉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1-95)	아동종합실태 조사 실시	실시 여부	실시	100	'13년 예산 확보	'13년 예산 확보	100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예산 확보 여부

제2절 고령사회 분야 실적 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추진방향은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임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주요 정책 대상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었던 반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50세 이상을 포괄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함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영역은 주로 소득보장과 요양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반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임
- 고령사회 분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 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은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4]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구성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1] 고령자 고용연장(세부영역)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근로자에게 소득감액분을 지원하여 장년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도모

- 다양한 유형의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 임금감액분의 일부 지원

- (정년연장형)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
-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 (근로시간단축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또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 (성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수는 전년과 동일하며, 당초 20% 증가율 목표치는 0% 달성 (당초예산이 114억원 중 87.7% 집행)

- 정년제 운용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년 16.3%에서 '13년

- 17.0%로 증가(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55사업장, 9,985백만원 지원)
- 정년 60세와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개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13.12월)
 - (임금감액률) 정년연장형의 경우 20% 이상 → 1년차 10% 이상, 2년차 15%, 3~5년차 20%, 재고용형의 경우 30% 이상 → 20% 이상
-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조정(고시 개정 '14.1월)
 - 지원대상: 감액이후 소득 5,760만원 이하 → 6,870만원 이하
 - 지원수준(정년 연장형): 연간 600만원 → 60세 이상 연장시 840만원, 56~59세로 연장시 720만원

<부진사유>

- ▶ (문제점) 근로자 임금이 매년 상승함에도 지원제한 연소득이 2007년 이후 5,760만 원에서 고정됨에 따라 동 소득액 초과 근로자의 지원이 배제되어 실제 지원인원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에 그침
- ▶ (개선방향) 임금피크제 지원제한 연소득수준 현실화 노력 필요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2-2)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폐지연장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 및 고용 촉진
 - 정년연장지원금으로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에 따라 1~2년 지원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으로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후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재고용기간에 따라 6개월 ~ 1년(500인 이하 제조업은 1~2년) 동안 지원
 - (성과)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인원이 9,814명으로 당초목표(6,93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610억원 중 87.2%만 집행)
 - 정년연장지원금 16,985백만원 지원(663개소, 7,083명)
 -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4,085백만원 지원(1,250개소, 2,731명)

□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2-3)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붐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대책 마련
 -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와 고령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시행
 - 주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년제 개선 검토('12.10.16. 국무회의 통과)
 - 베이비붐세대의 인생 2라운드 정착률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11.12.27, 국무회의 보고)
- (성과) 정부대안 보고서 제출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의무화(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13.5.22 공포)

- ① 60세 이상으로 정년 의무화
 -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16.1.1부터 시행
 - 300인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17.1.1부터 시행
- ②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시 노사에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 ③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 지원
- ④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2-3-1) 【완료 과제】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고령 근로자가 종전 전일제 근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등 점진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성과)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를 담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 제출로 완료(비예산사업)

□ 연령차별 금지 예외인정 및 고령자 명칭변경(2-3-2) 【완료 과제】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고령자 고용을 저해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는 적정하게 조정
 - 장년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모집채용상 연령표기가 가능토록 개선(직업 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 '준고령자(50~54세)와 고령자(55세 이상)' 명칭 및 연령기준은 '장년(50세 이상)'으로 조정(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 (성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국회제출로 완료 (비예산사업)

〈표 2-40〉 고령자 고용연장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수증가율	20%	0%	0	30%	12.6%	42.0	114	100	87.7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2-2)	정년퇴직자 재고용 및 정년연장 인원 증가율	6,930명	9,814명	141.6	15%	21.6%	144.0	610	532	87.2
베이비붐 세대 고용 대책 추진(2-3)	정부대안 보고서	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100.0	-	-	-	비예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도입(2-3-1)	개정안 국회제출	완료과제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 국회 제출	100.0	-		
연령차별 금지 예외 인정 및 고령자 명칭 변경(2-3-2)	(연령차별 금지 예외인정) 개정완료	완료과제			개정 완료	시행 규칙 개정	100.0	-		
	((준)고령자 명칭변경)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 국회 제출	개정안 국회 제출	100.0			

[2]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세부영역)

□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2-4)

○ (목표) 고용노동부는 비자발적 이직자의 퇴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재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진로 모색 지원

- 변화 관리 및 재취업·창업 컨설팅
-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성과) 전직지원 이수자 수가 21,357명으로 당초목표(7,20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140억원 중 99.3% 집행)

- '13년부터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15개소)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6

개소)를 통합하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확대 개편(26개소)

□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2-5)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50세 이상 준고령자의 직업 훈련 참여가 미흡하고, 직업 능력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 고령자 특화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육성하여 준고령자의 취업능력 제고
 - 준고령자의 취업능력향상을 위해 고령자 특화 직업훈련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여부 검토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실직고령자 취업 지원
 -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센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저학력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인개척·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대기업을 퇴직한 중견경력자에게 취업 알선, 상담·자문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성과) 고령자인재은행이 54개소로 당초목표(55개소)의 98.2% 달성, 수료인원대비 취업자 비율이 39.8%로 당초목표(40%)의 99.9% 달성 (당초예산 41억원 전액 집행)
 - 상담-훈련-취업지원을 연계한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수는 줄이고 기관당 과정수를 늘려 전담자 임금을 지원 (‘12년 41개소 82개 과정 → ’13년 21개소 84개 과정)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운영(2-6)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적·통합적 취업 지원서비스를 집중 지원하여 취업 촉진
 - 진단경로 설정→직업훈련(자부담 면제)→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종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취업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저소득층만) 지급 등을 통해 취업 촉진
- (성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종료자 중 취업률이 57.5%로 당초목표(51%) 초과달성 (당초예산 2,002억원 중 96.9% 집행)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확대: '12년 143,489명 → '13년 208,787명

□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2-7)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중고령 여성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중고령 여성의 고용확대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도모
- (성과) 새일센터를 통한 중고령여성특화 직업교육훈련(55과정) 참여 인원이 1,257명으로 당초목표(88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9.2억원 전액집행)

〈표 2-41〉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2-4)	취업자 수 ¹⁾	7,200명	21,357명	296.6	800	765	95.6	140	139	99.3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2-5)	고령자인재은행 수 ²⁾ 수료인원대비 취업자 비율	55개소	54개소	98.2	52개소	51개소	98.1	41	41	100.0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운영(2-6)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종료자 중 취업률	40%	39.8%	99.9	40%	40.6%	101.5	2,002	1,939	96.9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운영(2-7)	중고령여성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 참여인원	880명	1,257명	142.8	575명	1,035명	180.0	9.2	9.2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전직지원 이수자 수

2) '12년 성과지표는 고령자인재은행+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수*

*'13년부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수' 제외

[3]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세부영역)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2-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 확충, 자생력 있는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중·고령자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능동적·예방적 복지 증진 도모
 - 체계적인 품질관리 강화 및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성과) 4개 돌봄분야(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도우미, 장

애인활동지원)에서 84,133명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초목표(46,054명)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보수수준 향상) 돌봄바우처 시간당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수당 확대
- (근로여건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인력관리 안내 마련 및 시행, 4대 돌봄바우처 돌봄서비스 유형 표준안 마련 및 사업지침 반영
-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
-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노인돌봄 3개 사업 총 1,980개소(현장평가 743개, 자체평가 1,237개)에 대하여 품질평가 실시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2-9)

- (목표) 교육부에서는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 각계의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여 질 높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중·고령자 대상 일자리 확충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유치원 교사와 협조하여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중고령자 전문가 활용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 추진
- (성과) 관련 예산액 30억원을 확보하여 당초목표(30억원)달성, 전문인력 3,990명을 확보하여 당초목표(4,006명)의 99.6% 달성 (당초예산 30억원 전액집행)
 - 세대간 지혜나눔 DB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연계하여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2-10)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증가에 따라 고령자(전문인력 포함)의 전문성 및 경력 활용,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 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고령자 신규 채용시 참여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전문 자격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고령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으로 채용 알선 및 지원
- (성과)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일반인력 중 고령자 지원(3,092명) 비율이 26.6%로 당초목표(25%) 초과달성,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전문인력 중 고령

자 지원(80명) 비율이 12.8%로 당초목표(12%) 초과달성 (당초예산 991억원 중 87.7% 집행)

□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채용(2-10-1)

○ (목표)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육이 기업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퇴직인력 등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 교원으로 활용, 산업체 경력자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강사로 초빙, 학생들에게 취업 롤 모델로서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 취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소개·전수하여 산업체의 실질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로 양성

-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우수강사를 배치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 (성과) 산학협력중점교수가 1,811명으로 당초목표(1,500명) 초과달성,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규모가 805명으로 당초목표(65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91.3억원 전액집행)

□ 지역공동체 활성화(마을기업 육성)(2-10-2)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마을단위 공동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2년간 8천만원 이내(1년차 5천만원 + 2년차 3천만원) 지원

○ (성과) 지속가능일자리수의 창출률(총일자리창출수 대비)이 22.6%로 당초목표(20%) 초과달성 (당초예산 340억원 전액집행)

- 1,119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10,117개의 일자리 창출

□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0-3)

○ (목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 베이비붐세대의 귀농귀촌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타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어촌 활력 증진 도모

- 귀농귀촌 초기 창업기반 마련,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 현장실습형 교육 강화,

-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한 베이비붐세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강화
- (성과) 귀농귀촌가구 증가율(최근 5년 평균 귀농귀촌 가구수 대비)이 182%로 당초 목표(130%) 초과달성 (당초예산 277억원 중 56.7% 집행)
-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29개 기관, 36개 과정),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35 시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지원사업(2 시군 추진 중), 제3회 귀농귀촌창업박람회 개최 등

〈표 2-42〉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2-8)	4개 돌봄분야 일자리(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	46,054명	84,133명	182.7%	43,770명	43,619명	99.7%	비예산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2-9)	예산액	30억	30억	100.0%	27억	29억	107.4%	30	30	100.0%
	전문인력	4,006명	3,990명	99.6%	2,935명	3,889명	132.5%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2-10)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일반인력) 중 고령자 비율	25%	26.6%	106.4%	25%	24.7%	98.8%	991	869	87.7%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전문인력) 중 고령자 비율	12%	12.8%	106.6%	15%	11.1%	74.0%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채용(2-10-1)	산학협력중점교수 수 (현황조사)	1,500명	1,811명	120.7%	1,000명	1,425명	142.5%	비예산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규모 (채용현황조사)	650명	805명	123.8%	650명	819명	126.0%	91.3	91.3	100.0%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2-10-2)	지속가능 일자리수 창출물 (총일자리창출수 대비) ¹⁾	20%	22.6%	113.0%	10%	17.4%	174.0%	340	340	100.0%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0-3)	귀농·귀촌 가구증가율 ²⁾	130%	182%	140.0%	130%	182%	140.0%	277	157	56.7%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2-11)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인원 대비 창·취업(창업, 재취업, 창업스쿨 교육) 비율	10%	24.4%	244.0%	20%	26%	130.0%	63.5	63.4	99.8%

주: 1) 지속가능 일자리수=마을기업 일자리수+사회적기업 전환 일자리수

2) [(‘13년 귀농귀촌가구수-최근5년평균 귀농귀촌가구수)/최근5년평균 귀농귀촌가구수]×100

□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2-11)

- (목표) 중소기업청에서는 시니어(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 등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취업 활성화로 경제 활력 제고 도모

- 기업기관 경력 퇴직자를 전문창업 교육기관을 통해 시니어 적합업종별 실습과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실시
 - 전국 주요지역에 창취업 준비를 위한 사무공간,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니어 창·취업 지원의 거점으로 활용
- (성과)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인원 대비 창·취업 성공 시니어 비율이 24.4%로 당초 목표(10%) 초과달성 (당초예산 63.5억원 중 99.8% 집행)

[4]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세부영역)

□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2-12-①) 【종료 과제】

-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R&D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
 - 미취업 석사, 박사, 경력직 (퇴직인력) R&D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
- (성과) 퇴직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과제 종료

□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2-12-②)

-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사기 진작, 평생활용체제 구축, 산·학·연 R&D 활동 지원 등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 도모
 - 과학기술정보분석(첨단정보분석, 맞춤형 정보 분석)
 - 창의적 청소년 과학교육(과학관 큐레이터)(전시주제 심층해설, 과학꿈나무 멘토링)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체제 구축
- (성과) 과학기술 정보분석물 다운로드 수가 32,405건으로 당초목표(24,518건) 초과달성, 과학관 심층해설 이용자 수가 261,448명으로 당초목표(218,410명) 초과달성, 산·학·연 교류 횟수가 658건으로 당초목표(650건) 초과달성 (당초예산 23.9억원 전액집행)

□ (목표)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2-13-①)

-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소년 진로지도 및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종합상담을 강화

- 교사, 사회단체 상담 전문가 출신 등 고령자를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으로 위촉, 청소년 직업진로 지도, 취업애로 중·고령 구직자 종합 상담 등 수행
- (성과) 명예상담원 채용 인원 100명을 48개 고용센터에 배치하여 당초목표(100명 배치) 달성 (당초예산 7.7억원 중 84.4% 집행)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2-13-②)
 - (목표) 교육부에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를 진로코치로 양성 및 활용
 - 학교별로 학부모 위주로 진로코치 선발 및 연수
 - 학생이 희망하는 분야의 진로코치를 연계하여 직업정보 및 직업현장 경험 공유
 - (성과) 총 80,590명을 학부모 커리어코치로 선발하여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단위로 진로코치 양성 및 활용함으로써 당초목표(7,000명 선발) 초과달성 (당초예산 2억원 전액집행)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4)
 - (목표) 중소기업청에서는 행정·유통분야 퇴직인력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지원하여 상인조직육성 및 시장 활성화 자생력 제고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상인회를 보유한 곳
 - (지원조건) 인건비 매칭지원(국비 70 ~ 30%, 지자체 또는 상인회 30 ~ 70%, 상인회 최소 10% 이상)
 - (퇴직인력 요건) pc 활용가능
 - 공공기관 및 금융업 등 행정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곳에서 5년이상 근무
 - 유통업의 기획·총무 및 영업관리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
 - 마케팅(이벤트 및 행사기획 등) 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
 - 유통업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행정실무를 담당
 - (성과) 행정·유통분야 퇴직인력 133명을 상인회에 지원하여 당초목표(150명)의 88.7% 달성 (당초예산 18억원 전액집행)

<부진사유>

- ▶ (문제점) 보수 수준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아 중도포기 인력이 많음
- ▶ (개선방향) 시장 상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마케팅, 유통, 디자인, 자문, 교육 등)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일·퇴직 인력에 의한 시장지원보다는 청년 인력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종합적 지원제도 도입(시장건설팅법인)을 추진하며, 보수수준 현실화 예정

□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2-15)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중소기업 연계 매칭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퇴직 중견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 도모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하거나,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한 경우 인건비 지원
 - 근로자 1명당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시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이상 고용시 648만원 지원(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75% 한도)
 - 기업 당 3명 한도로 지원하되, 지원한도 3명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1명 추가 지원
- (성과)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자 수가 541명으로 당초목표(590명)의 91.7% 달성 (당초예산 74억원 중 50% 집행)
 - 연 6회 사업공모를 통해 1,199개소 2,249명이 신청하고, 이중 984개소 1,736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 '12-13년 선정된 지원대상 중 459개소 541명 지원

□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2-16)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중고령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멘토링의 전문성 제고 도모
 - 사회적 네트워크 향상과 경력개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실시('02~현재)하고 있으나, 온라인의 특성상 대부분 청년여성이 활동하고 있어 업무경험이 있는 중·고령여성의 전문경력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필요
- (성과) 50대 이상 멘토를 62명 지원하여 당초목표(6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0.95억원의 76.8% 집행)

- 특성화 대학·고교 대상 찾아가는 멘토링,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연계한 권역별 멘토링 등 청년여성과의 현장소통 강화 및 심도 있는 경력개발 상담을 통해 멘토링 효과성 제고
 - 다양한 직업분야의 성공한 여성리더인 대표멘토 및 각 분야별 실무멘토와 연계한 전문성 높은 멘토링을 제공하여, 멘토링의 만족도 향상('12년 83.7점 → '13년 86.6점)
- 834쌍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선배여성으로부터 역할모델과 사회적 네트워크 필요성이 큰 청년여성층의 경력개발 지원

□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사회 참여 지원(2-16-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베이비붐세대 대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NPO 기관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은퇴한 중·고령자의 유효수요를 사회참여에 적극 활용
 - 베이비붐세대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비영리 민간분야에서 자원봉사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수요처를 발굴, 전문지식·경험을 지닌 참여자를 모집하여 연계
 - 참여자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교육-연계-사후관리 실시
 -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비지원 및 사업수행 인프라 구축
- (성과)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사회 참여자수 대비 연계자수 비율이 82.1%로 당초 목표(75%) 초과달성 (당초예산 7.9억원 전액집행)
 - 전년대비 모집 및 실습인원, 사회공헌활동 연계인원 실적 향상
 - 선(先) 수요처 발굴을 통한 수요처 개발 확대 및 다양한 수요처의 안정적 확보('13년 123개)
 - 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 전략모델 발굴
 - 노후설계 상담인력, 치매예방 및 검진활동보조, 전문자원봉사 그룹활동, 동화구연 및 인형극 활동, 점자도서의 입력 및 교정활동, 노인복지용구 모니터링
 - 사회공헌활동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으로 높은 교육만족도(4.3점/5점) 및 실습만족도(참여자 4.7점, 실습처 4.5점) 달성

- 베이비붐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소득, 고용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자료 등을 통합 제공하는 포털 구축(www.activebb.kr)

□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16-2)

- (목표) 교육부에서는 베이비붐세대 등 은퇴인력의 전문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세대간 지식·지혜 나눔 실현 그리고 지역과 학교 중심의 교육기부 수요-공급 연계를 통해 교육기부 의사가 있는 기관·단체 등이 쉽게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기업 임직원, 교원, 과학기술인 등 전문직 은퇴자의 방과후학교, 각종 체험활동 및 진로·직업 상담 등 교육기부 활성화

- 교육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등 은퇴인력의 교육기부 참여 인식 증진과 함께 공감대 확산

- 온라인「교육기부 매칭시스템」운영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 중심의 지역 단위 교육기부 추진체제 구축을 통한 수요·공급 매칭

- 중앙 단위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 활용 및 지역별 교육기부 매니저 상시 운영을 통한 은퇴인력의 교육기부 활성화

- (성과) 17개 시도에 지역별 교육기부 추진체제 구축·운영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 (당초예산 49억원 전액집행)

- 교육기부 수요자(수혜자)와 공급자(교육기부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주는 온라인 교육기부 매칭시스템 구축 및 적극적 활용

- 약 6,000여종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및 매칭 (17,000여명 수혜)

□ ODA 등 글로벌 사회공헌(2-16-3)

- (목표) 외교부에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08.4월)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지속 추진

- WFK 봉사단 실질적 통합 지속 추진

- 고령자 및 퇴직자 대상 봉사단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성과) World Friends Korea(WFK) 봉사단을 총 4,397명 파견하여 당초목표 (4,38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1,024억원 전액집행)

- 고령자 및 퇴직자 대상 중장기 자문단·퇴직전문가를 208명 파견하여 목표(240명) 대비 86.7% 달성

□ EDCF 컨설팅 전문인력 활용(2-16-4-①), MDB 자문단 운영(2-16-4-②), KSP 정책자문관 개도국 진출지원(2-16-4-③) **【완료 과제】**

□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관련 시스템 정비(2-16-5)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퇴직공무원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 및 일자리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 일자리 지원 서비스(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연계)
 -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퇴직공무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및 봉사 등 다양한 정보 수집·제공
- 분야별(복지, 경제, 문화 등) 일자리 및 인력풀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수요기관(공직 및 민간기관)에 적합한 퇴직공무원 추천
- 퇴직공무원의 재직 중 근무경험을 활용한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인별 이력 관리 및 일자리 연계 등
- 전직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 포털 가입자간 교류 및 소통 공간인 '시니어 클럽' 운영 등 정보 공유 및 노후설계 지원

○ (성과) 기존 일자리 수집 사이트 대비 추가 수집사이트 확대율이 30%로 당초목표(30%) 달성 (당초예산 2.6억원 전액집행)

- 유관기관 일자리지원 시스템과 정보연계로 분야별 개인맞춤 참여 정보 제공
 - 1365나눔포털(안행부 자원봉사사이트), 워크넷(고용부 취업정보사이트) 등
- 재능보유 퇴직공무원 인력풀 확대
 - 정부인사정보·연금공단·개인등록 등 통합 DB 구성('12년3천명→'13년11천명, 260%증가)
- 시스템 재설계 등 개편을 통한 서비스 개선
 - 상담, 교육, 참여정보, 이력관리 등 시스템을 통한 실적 관리

〈표 2-43〉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 (2-12-①)	협약체결한 지원인력	종료과제			800명	828명	103.5	-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2-12-②)	과학기술 정보분석물 활용 확대: 당해연도 서비스된 분석물 다운로드 수 ¹⁾	24,518건	32,405건	132.2	272.2	273.8	103.5			
	과학관 심층해설 이용자 수 확대: 전시주제 심층해설 이용자 수 ²⁾	218,410명	261,448명	119.7	256.8	244.8	95.3	23.9	23.9	100.0
	산학연 교류 횟수	650건	658건	101.2	-	-	-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노동부) (2-13-①)	명예상담원 채용 인원수	100명	100명	100.0	100명	100명	100.0	7.7	6.5	84.4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 서비스 제공(교육부) (2-13-②)	(커리어코치)전국 선발 인원수	7,000명	80,590명	1151.3	2,000명	6,586명	329.3	2	2	100.0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4)	추진실적/목표치×100	150명	133명	88.7	75명	67명	89.3	18	18	100.0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2-15)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채용자 수	590명	541명	91.7	800명	440명	55.0	74	37	50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2-16)	50대 이상 여성멘토(명)	60명	62명	103.3	60명	68명	113.3	0.95	0.73	76.8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사회 참여 지원(2-16-1)	연계자수/총 참여자수×100	75%	82.1%	109.5	30%	34%	113.3	7.9	7.9	100.0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16-2)	지역별 교육기부 추진체계 운영	17개 시도의 추진체계 운영 활성화	완료	100.0	16개 시도 구 축완료 및 운영 활성화	완료	100	49	49	100.0
ODA 등 글로벌 사회공헌(2-16-3)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파견목표인원	4,380명	4,397명	100.4	4,113명	4,069명	98.9	1024	1024	100.0
EDCF 컨설팅 전문인력 활용(2-16-4-①)	-	완료과제								
MDB 자문단 운영 (2-16-4-②)	-	완료과제								
KSP 정책자문관 개도국 진출지원(2-16-4-③)	-	완료과제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관련 시스템 정비 (2-16-5)	일자리 수집 확대율(추가 사이트수/기존수집사이트 수)×100	30%	30%	100.0	50%	60%	120.0	2.6	2.6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핵심이용자지수(당해연도 핵심이용자수/06년 핵심이용자수×100)

2) '12년 성과지표는 성과물 활용 원고기고 지수(당해연도 원고기고건수/06년 원고기고건수×100)

[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세부영역)

□ 장년(고령자)고용 캠페인(2-17)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장년(중고령자)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연령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

- 고령자고용지원제도(임금피크제 지원금,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홍보
- 장년 고용의 필요성 및 청·장년층 세대간 상생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

○(성과) 고령자 고용강조 주간 운영 기념행사 1회 개최로 당초목표(1회) 달성, 기획 기사 20건 공익광고로 당초목표(5건 이상) 달성, 장년고용지원제도 안내책자 2만부 발간으로 당초목표(책자발간) 달성 (당초예산 5.6억원 중 85.7% 집행)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18)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집채용 분야의 연령차별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함으로써,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의 지속적 개선 및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고용제도 확립

- 모집·채용 관련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및 제도 홍보
- 사전적 예방·홍보 실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성과) 모니터링 7,365건 실시로 당초목표(10,000건)의 73.6% 달성(비예산사업)
- 모니터링 실시 결과, 248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등 조치(경고 134건, 시정지시 114건)

<부진사유>

- ▶(문제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업무량 과다 등으로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건수가 목표치에 미달
- ▶(개선방향) 근로감독관의 적정 업무량을 산출하여 원활한 모니터링 수행 등을 위한 적정 인력규모 확보(인력 충원 등) 노력 필요

〈표 2-44〉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장년(고령자)고용 캠페인(2-17)	고령자고용강조주간 운영	기념식 1회	1회	100.0	기념행사 1회	1회	100.0			
	주요매체(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건수 ¹⁾	주요매체 홍보 5건 이상 추진	기획기사 20건 공익광고 9, 10월	100.0	10회이상	13회	130.0	5.6	4.8	85.7
	장년고용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²⁾	책자발간	2만부 발간	100.0	3회	3회	100.0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2-18)	모니터링 건수	10,000 건	7,365건	73.6	15,000 건	9,764 건	65.1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대국민 언론홍보
 2) '12년 성과지표는 이벤트 실시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1]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세부영역)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2-19)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성 강화
- (성과) 제3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으로 당초목표(계획 수립) 달성 (당초예산 5억원 92.0% 집행)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완료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차관·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13.10) 및 언론 공시('13.12)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2-20)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계기 마련 및 국민의 높은 신뢰달성으로 든든한 전 국민 연금체계 달성

- (성과) 홍보효과도가 74.8점으로 당초목표(75.4점)의 99.2%달성(비예산사업)
 - 국민 신뢰 제고 및 제도에 대한 수용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가입자 2,082만명 돌파('12년 11월 20,820천명)
 -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1:1 노후설계 상담 활성화로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12년 501천명 → '13년 561천명)
 - 중고교 교과서 18종에 노후설계 및 국민연금 내용 수록('11~'13년 총 68종)
 - 「국민연금 바로알기」 캠페인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오해 해소 및 인식 개선 홍보 추진

〈표 2-45〉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2-19)	제3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¹⁾	계획 수립	계획 수립	100.0	계획 수립	계획 수립	100	5	4.6	92.0
	해외대체투자액 / 금융부문 기금투자액) × 100	-			19%	21%	110.5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2-20)	홍보효과도 조사	75.4점	74.8점	99.2	74.5점	74.8점	100.4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재정계산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수립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세부영역)

□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2-2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근로형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적용
 - 타기관의 공적자료 추가 입수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확충
 - 산재보험에 특례적용된 4개 특수직종 종사자의 자료를 입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발굴
- (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 소득신고율(과세자료 보유자 수 대비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수)이 64.8%(과세자료 보유자 중 소득신고자)로 당초목표(62.0%)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국세청 연말정산사업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추진
- 근로복지공단 산재 입·이직자료 입수 완료 및 지속적으로 소득신고 편입

□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2)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도모

-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저소득근로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저소득 영세자영자의 보험료 국고지원 추진
 - 특히, 여성 등 노후준비 취약계층이 다수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 (성과)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수가 79만명으로 당초목표(89만명)의 88.2% 달성 (당초예산 4,209억원 중 83.5% 집행)

- 10인 미만 사업장 548천 개소, 130만원 미만 근로자 1,378천명에게 연간 3,866억원 지원(누적 순계, '13.12월분까지)
- 기존 공적자료가 없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지원으로 국민연금 신규 사업장 가입확대(87,353개소) 추진

<부진사유>

- ▶ (문제점)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 신청자 수는 매월 증가하였으나,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 지원자 수 감소
- ▶ (개선방향) 지원신청 후 3개월 이상 실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이체 납부 독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2-23) 【완료 과제】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수급권 확보 강화

○ (성과) 2011년 12월 법 개정으로 과제완료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2-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3년 최고 35,550 원/ 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790,000원)

○ (성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증가율이 14.6%로 당초목표(10%) 초과달성 (예산현액 1,238억원 전액집행)

- 농어업인 월 평균 290천명에 대해 1,059억원 연금보험료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12년 230천명)

〈표 2-4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특수고용관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2-21)	과세자료 보유자 수 대비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수 비율 ¹⁾	62.0 %	64.8 %	104.5	65.7 %	71.7%	109.1	비예산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2)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수	89만 명	79만 명	88.2	106 만명	91 만명	85.8	4,209	3,515	83.5
기초생활수급자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2-23)	-	완료과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2-24)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증가율 ²⁾	10%	14.6%	146	90%	95.5%	106.1	1,238	1,238	100.0

주: 1) 보유자 및 신고자는 국세청 업종코드 중“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캐디, 건설기계대여업”종사자임

2) '12년 성과지표는 납기내 징수율(고지인원 대비 납기 내 징수인원 비율). '13년 성과지표는 시행계획에는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1인당 지원액 증가율”로 제시되어 있으나, 기존 성과지표 명칭이 현 사업과 연관성이 낮게 표현되어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

[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세부영역)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5)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이행
 - 퇴직연금 교육컨설팅 사업 실시를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가입 촉진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 유도
 - 퇴직연금 도입 유도를 위해 영세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성과) 퇴직연금 가입률(전체사업장 대비)이 14.7%로 당초목표(13.2%) 초과달성, 퇴직연금 교육을 341회 실시하여 당초목표(150회) 초과달성 (당초예산 15.5억원 중 91.6% 집행)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등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12.7.26.)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집중 홍보(TV, 라디오, 온라인, 일간지 등)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교육(26,471명), 컨설팅(103개사) 실시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지도·점검 실시(1,402개 사업장)
 - 퇴직연금 관련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개최(3회), 퇴직연금사업자 실태점검(금감원)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개인연금 활성화(2-26)

- (목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적 개인연금 활성화
 - 금융권별 연금저축에 대한 수수료 및 수익률 공시방식을 통일시키고 금융권별 연금저축상품을 한 곳에서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정비
 - 무배당 연금저축 허용, 장애인 연금저축 개발 등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을 개발·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 (성과) 사업비 체계 개편방안 발표, 위험률 및 통계 발표로 당초목표 달성(비에산사업)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중 설계사 등에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선지급 비중 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등 노후보장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및 계약 부활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2-26-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이 가입한 공사적연금 내역을 일시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 포털 구축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사이트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 연계로 연금 수급액 등 노후준비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고도화
- (성과) 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 중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사람의 비율이 90%로 당초목표(82%)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내연금 사이트'를 통한 노후설계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302만명으로 체계적인 노후설계 지원
 - 2013년도 기준 관련부처(금융위)에서는 사적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 근거,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었음
 - 국민연금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포털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노후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유재중의원 발의, '13.5)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추진상 애로점>

▶ 현재 '내연금' 사이트에는 국민연금 관련 자료는 모두 구축이 되어 있으나, 사적연금 관련 자료는 본인이 납입금만 자발적으로 기입하여 운영중
▶ 사적연금사업자를 관리하는 부처(금융위)에서는 사적연금 관련 정보 제공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공·사적연금에 관한 자료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정보접근 대상, 접근 방법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표 2-47)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5)	(퇴직연금 가입률)	13.2%	14.7%	113.1	10%	13.4%	134.0	15.5	14.2	91.6
	(전체사업장 대비) 교육 실시 횟수	150회	341회	227.3	150회	244회	162.7			
개인연금 활성화 (2-26)	사업비 체계 개편 방안 마련 ¹⁾	개편안 발표	개편안 발표	100.0	개발지침 마련여부	다양한연금 상품개발지침 마련, 관련시스템 구축	100	비예산		
	위험을 및 통계제공 여부	필요통계 제공	필요통계 제공	100.0	-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2-26-1)	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자 중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사람의 비율	82%	90%	109.8	-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관련상품 개발을 위한 개발지침 등 마련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1]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세부영역)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2-27)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국민에게 알기 쉬운 건강정보 및 의료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및 자가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
 - 소비자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 일반 국민의 건강정보 활용을 위한 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성과) 건강정보이용자의 콘텐츠(용이성, 유익성, 구체성) 평가값의 평균이 92점으로 당초목표(80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4.9억원 중 95.9% 집행)
- 노인건강정보 15종 및 보건교육자료 2종을 추가 개발하여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제공
-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분류체계로 개선하여 사용자 만족도 향상
- 외부기관의 양질의 콘텐츠를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연계하여 카테고리별 콘텐츠의 충분성 개선
- 기존 건강정보 콘텐츠의 업데이트 등을 통한 콘텐츠 현행화 및 전문기관(대한의학회)의 재인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콘텐츠 유지 보수
-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2-2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가 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등 도모
-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질환, 검진항목 및 검진주기 개선
-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건강 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결과 상담 및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
- (성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 건강위험군 대상 건강검진 결과 상담 제공
 - 건강검진 결과 활용에 동의한 검진 수검자에 한해 보건소를 통해 상담 등
-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2-29)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지역의 경쟁력 제고, 지역주민의 건강현황 파악, 지역자원 활용 건강 증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생활실천의지 향상 도모
-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건강우선순위 및 국가 건강정책의 방향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 실천(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
-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델개발
 - 건강증진보건소 16개소를 통한 효과적인 표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성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조사를 건강증진사업 인지도, 성과도, 참여도,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실시 (당초예산 1,822억원 전액집행)
 -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포괄보조 방식을 도입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행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 통합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따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보건사업을 설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정보시스템 개편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2-30)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만인 자나 혈압·당뇨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체계
 - (수요자) ‘국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측정 내역서’ 제출
 - (제공기관)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 및 대상자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교육
 - 개인별 영양·운동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
 - u-Health디바이스, 전화, 메일 등을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등록제) 건강생활서비스 도입 초기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춘 건강생활서비스기관 개설자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 (서비스 인력)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
 - (성과) 바우처 수혜자의 만족도가 76점으로 당초목표(75점) 초과달성, 바우처사업 지원 실적이 1,789명으로 당초목표(2,000명)의 89.5% 달성 (비예산사업)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및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등 재검토
-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지속 추진

<추진상 애로점>

▶ 의료민영화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야당·시민단체 등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지속적 반대 입장을 고수

□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2-31)

- (목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인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치료를 제고하고 환자의 건강행태 개선
 - 지역기반 보건교육 활성화(1차 예방),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2차 예방)
- (성과)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율(추정환자수대비)이 82.1%로 당초 목표(70%) 초과달성 (당초예산 177.9억원 중 98.3% 집행)
 - 환자등록률 : 외래실인원 대비 65.6%
 - 의원참여율 : 대상기관 대비 72.2%, 약국참여율 : 대상기관 대비 92.5%
 - 교육 이수자수 : 고혈압 1차 21,639명, 고혈압 2차 16,976명, 당뇨병 1차 14,800명, 당뇨병 2차 12,536명, 영양교실 5,092명

<추진상 애로점>

▶ 의사회 등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족
▶ 유사한 방식의 만성질환관리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통합 만성질환관리 사업 모형 검토 필요

□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2-32-①)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IT 융합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미충족 의료 해소 및 건강수준 제고

- 원격의료, 진료정보교류, 개인건강정보보호 등을 포괄하여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
 - 재외국민 건강증진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u-Health 서비스 활성화
 -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 (성과) 해외 원격의료 실시 건수가 524명으로 당초목표(1,100명) 중 47.6% 달성, 농어촌 원격 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미 실시 (당초예산 51.7억원 중 22.8% 집행)
- 도서지역, 농어촌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부진사유>

- ▶ (문제점) 해외 환자 유치 증가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헬스케어 환경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원격의료 실시를 규정화하고 있지 않아 정부 지원사업 규모 및 민간병원의 서비스 제고 의지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크고, 이용실적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며, '13년 관련예산 미확보로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못함
- ▶ (개선방향) 해외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및 예산 확보로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

- U-health 서비스 기반 확충(2-32-②) **【종료 과제】**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국내외 시장 확산 기반 마련
 - 질환자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추진
 - (성과) 2012년도 사업 종료
-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2-33)
 -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주류·고열량 저영양식품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예방적 건강정책을 통한 국민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담배·주류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 (성과) 건강위해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건강위해요소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13년 상반기 규제심사 준비)
 - 담배·술에 대한 규제강화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 제시 및 국조실 조정결과('13.9월)에 따른 입법절차 추진

〈표 2-48〉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2-27)	건강정보이용자의 콘텐츠(용이성, 유의성, 구체성) 평가값의 평균 ¹⁾	80/100	92/100	115	콘텐츠 300개 개발	300개	100.0	4.9	4.7	95.9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²⁾ (2-28)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³⁾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마련	건강검진제도 개선안 마련	100.0	90%이상	90.6%	100.7	비예산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⁴⁾ (2-29)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성과지표 없음			84.1%	89.3%	106.2	1,822	1,822	100.0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2-30)	마우처 수혜자 대상 만족도(설문조사)	75점	76점	101.3	70점	78.3점	111.9	비예산		
	마우처사업지원실적	2,000명	1,789명	89.5	1,800명	2,521명	140.1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2-31)	65세이상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율(추정환자수대비)	70%	82.1%	117.2	76%이상 유지	82.2%	108.2	177.9	174.8	98.3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복지부)(2-32-①)	해외 원격의료 실시 건수	1,100명	524명	47.6	900명	1,037명	115.2	51.7	11.8	22.8
	농어촌 원격 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⁵⁾	90%	미 실시(13년 관련 예산 미 확보)	0	개정안 국회 통과, 정책토론회 1회, 로드쇼 3회 이상	미개정, 정책토론회 1회, 로드쇼 등 개 최완료	미달성			
	활성화 방안연구 수행	-	-	-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완료	달성			
U-health 서비스 기반 확충(산자부)(2-32-②)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원격진료)대학병원, 개원의 환자중 사업참여 환자수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질환자 원격진료) 대학병원, 개원의 환자중 사업참여 환자수	종료과제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557명	0명	0.0	-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⁶⁾ (2-33)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⁷⁾	국회 제출	공공장소 음주금지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의원 발의 법안 소위 논의	100.0	예비타당성 조사 및 근거 법령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0.0	비예산		

-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소비자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2)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12)→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13)
 3) '12년 성과지표는 국가건강검진기관 대상 평가 참여율
 4) 보건소 중심 통합 건강관리체계 구축('12)→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13)
 5) '12년 성과지표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책토론회, 지역로드쇼 개최
 6) 국립노화연구소 설립('12)→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13)
 7) '12년 성과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근거법령 마련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

[1] 노후설계 기반조성(세부영역)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2-34)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화된 노후설계 프로그램 및 지표 제공으로 노후설계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및 노후준비 국민인식 확산 도모
 - 노후준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여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및 평가 기준으로 활용
- (성과) 적정 노후준비수준 세부 판단기준 추가개발 1개, 노후준비 지원평가지표 1개 개발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지표 개발·조사로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단체계 마련
 - 여가, 대인관계, 건강, 재무영역(총 4개영역)의 현재상태와 노후준비 실천행위 관련 영역 총 51개 지표 개발
 - 노후준비지원 평가지표 개발연구를 통해 기업의 노후준비지원제도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고

〈표 2-49〉 노후설계 기반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2-34)	적정 노후준비수준 세부 판단 기준 추가개발 ¹⁾	1개	1개	100.0	1개	2개	200.0	비예산		
	노후준비 지원 평가지표 개발	1개	1개	100.0	-					

주: 1) '12년 성과지표는 노후준비지표 진단 프로그램 개발

[2]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세부영역)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2-3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후설계 인프라를 확산하여 민간 서비스 영역의 노후설계 분위기 확산 및 체감도 제고 도모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추진 기관 육성, 교육기관 인증, 전문인력 자격 관리를 통하여 노후설계서비스 공급 토대 구축
- 노후설계지원 시범사업 실시를 통하여 노후설계 인프라의 현황 진단 및 민간 서비스 영역에 노후설계 서비스 보급
- (성과)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입법, 고령자 복지 진흥원(가칭) 설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법률안 발의, 지자체 교육 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자 수(1,017명으로 목표 1,000명 초과), 찾아가는 노후 생애관리서비스 이용자 수(21,534명으로 목표 20,000명 초과) 등은 당초목표 달성. 그러나 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이용자 수가 71,371명으로 당초목표(30만명)의 23.8%만 달성 (당초예산 5.5억원 중 90.9% 집행)
 - ‘노후설계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13.5월 유재중 의원 의원입법 형태)
 - 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개편 설립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추진('13.7.16)
 - 1,064명의 노후설계서비스 상담인력 양성, 관공서·노인복지관·노인회 등 427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71,371건의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 노후준비 전문가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10회, 650명), 인생대학, 미니메드스쿨, 골드클럽, 재무관리 등 일반인 대상 노후준비 교육 실시(7회, 367명)
 - 찾아가는 노후설계서비스 상담버스 제작운영, 연간 68회 방문(54개기관)을 통해 21,534명에게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부진사유>

- ▶ (문제점) 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제공 규모의 목표치를 현장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정한데다 예산부족 등으로 목표치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함
- ▶ (개선방향)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목표치 설정 후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교육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2-36)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후설계 수행기관 간 협조 및 연계로 관련 정보 축적 및 실효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도모

- 노후설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노후설계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토
 - 민관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노후설계서비스의 체감도 제고 및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 (성과) 노후준비지표 개발 관련 민관 협의체 4회 개최(목표 연4회), 노후준비지표 민관 합동 컨퍼런스 1회 개최(목표 1회) 등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노후준비기준선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생애주기별 노후설계 연구용역 자문회의 개최, '13년 노후설계서비스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등 논의
 -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합동 간담회) 노후설계지원법 의원발의(안)에 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 주요내용 논의 등

〈표 2-50〉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2-35)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입법 ¹⁾	1개	1개	100.0	연1회	1회	100.0	5.5	5	90.9
	고령자 복지 진흥원(가칭)설립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제출	개정법률안발의	100.0		-				
	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이용자 수	30만명	71,371명	23.8		-				
	지자체 교육 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자 수	1,000명	1,017명	101.7		-				
	찾아가는 노후 생애관리서비스 이용자 수	20,000명	21,534명	107.7		-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2-36)	협의체 운영	연4회	4회	100.0	연4회	9회	225.0	비예산		
	노후설계 컨퍼런스 개최	연1회	1회	100.0	연1회	1회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법개정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은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구성



2-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1]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세부영역)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2-37)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 보충 및 사회 참여기회 보장
 - (공공분야) 참여자 접근성이 높은 사업 뿐 아니라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운영
 - (민간분야) 사업의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
- (성과) 노인일자리 창출 수가 262천개로 당초목표(230천개) 초과달성 (당초예산

4,698억원 전액집행)

- 노인일자리 24만개 확충 및 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제3차 사회보장위원회)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활성화
 - 시니어인턴십 확대 및 취업성공률 제고('12년 23.7% → '13년 39.7%)
- 민간분야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 확대('12년 4,700 → '13년 6,000개)
 -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확대(15개소 → 20개소),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11개소 → 13개소) 등

<추진상 애로점>

▶ 일자리 희망 노인에 비해 공급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보수 및 참여기간이 제한적이어서('04년 이후 월 20만원, 7개월/ '13년 9개월) 만족도 제고에 부정적 영향
 * 약 106만명(노인의 18%)이 일자리를 희망하나 재정지원 일자리는 24만개

□ 노인 일자리 질적 고도화(2-3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 보충 및 사회 참여기회 제공
 -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내용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참여노인 만족도 향상
 - 민간분야 일자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 '노인일자리 서포터즈' 운영으로 경영컨설팅 지원체계 조성
- (성과) 참여노인 만족도(5점 척도)가 3.8점으로 당초목표(4점 이상 유지)의 95.0% 달성(비예산사업)
 - 공공부문 노인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유형별 「직무표준」 개발 및 참여노인 교육 강화
 - 지역사회 안전·돌봄 등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노인적합 일자리 (5,054개) 보급

<표 2-51>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 (2-37)	노인일자리 창출 수 합	230천개	262천개	113.9	220천개	248천개	112.7	4,698	4,698	100.0
노인 일자리 질적 고도화 (2-38)	참여노인 만족도 (5점척도)	4점이상 유지	3.8	95.0	4점 이상 유지	3.8점	95.0	비예산		

주 :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추진사업으로 과제 2-37에 포함

[2] 일자리 사업 체계화(세부영역)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2-39)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 보충 및 사회 참여 기회 보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능 강화 및 조직 확충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구축 확대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성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 통폐합 및 민간분야 일자리 기능 강화로 당초목표 달성(당초예산 93억원 전액집행)
 -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 모니터링단을 총 8,634회 운영하여 현장의 어려움 경청, 근무시기 조정 및 물품 지급 등 개선사항 발굴·조치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1854호)으로 노인 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118개소)을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기반 마련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 완료

〈표 2-52〉 일자리 사업 체계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2-39)	직능직장 및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수	-			10개	27개	270.0	93	93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직 통폐합 및 민간분야 일자리 기능 강화	1회	1회	100.0	1회	1회	100.0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세부영역)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2-40)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도모
 -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12년 9.4만원)을 매월 지급
- (성과) 기초노령연금을 405만명에게 지급하여 당초목표 달성 (당초예산 42,810억 원 전액집행)
 - 65세 이상 노인 405만명 대상 1인당 최대 월 96,800원 지급
 - 소득하위 70% 대상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안」 및 「기초연금법안」 마련

□ 주택연금 활성화(2-41)

- (목표) 금융위원회에서는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동시 보장 도모
 -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주택연금 공급을 증대
- (성과) 주택연금공사법 개정 완료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부부 모두 60세 → 주택소유자 60세)
 - 가입요건으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동일
 - 신상품 개발(중신형에 추가하여 확정기간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5.6% 증가한 5,296명에게 주택연금 공급

〈표 2-53〉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2-40)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5만 명	405만 명	100.0	386 만명	393 만명	101.8	42,810	42,812	100.0
주택연금제도 활 성화(2-41)	주택연금공사법 개정 ¹⁾	법안개 정여부	법안개 정완료	100.0	1,840 억원	2,392 억원	130.0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주택연금 공급실적

[2]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세부영역)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2-42)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재직자노령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연금 신뢰도 향상 도모
 -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현행 연령별(60~64세) 연금액 감액방식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 방식으로 개선
- (성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정부안) 국회법안소위 계류 중으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 및 공표

□ 연기연금 제도 활성화(2-43)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도입된 연기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제도 운용 활성화 도모
 - 신청대상 확대 :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 → 60~64세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산율 인상 : 연기간 1년당 6% → 7.2%
- (성과)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연기연금 제도) 국회 법안 소위 계류 중으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 및 공표

〈표 2-54〉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2-42)	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계류	100.0	국민연금법 개정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법안소위 계류)	100	비예산		
연기연금 제도 활성화(2-43)	국민연금법 개정 ¹⁾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회 법안 소위 계류	100.0	1,927	6,683	346.8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연기연금 신청자 수

[3]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세부영역)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2-44)

-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도모
- (성과) 경영이양 목표면적 달성률(계획면적 대비)이 1,952ha로 당초목표(1,500ha) 초과달성 (당초예산 624억원 99.8% 집행)
 - 고령은퇴농업인(2,186명) 1인당 연간 평균 1,545천원의 소득 보전
 - 전업농 등(1,960명) 1인당 평균 0.96ha의 영농규모 확대
 -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해 농기계 이용효율성 제고 및 노동력 투입시간 감소로 직접생산비 2,891백만원 절감 효과

□ 농지연금제도 활성화(2-45)

-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기능 유지 도모
 -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성과) 농지연금 농가가입률이 17.4%로 당초목표(13.9%) 초과달성 (당초예산 237억원 중 95.8% 집행)

- 연금지급을 통한 고령농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총 2,927건 가입, 452억원 지급)
- 농지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가입만족도는 77%(‘12년 69%)
-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평균 월지급액 약 14% 증가 효과)
 - 담보농지 평가방법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가입자가 선택
 - 채무 이자율 인하(4% → 3%)
 - 농지가격의 2% 가입비 부과 폐지

〈표 2-55〉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목표치	실적	달성률(%)	예산(억원)	집행액(억원)	집행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2-44)	경영이양 목표면적 달성율(경영이양 계획면적대비)	1,500ha	1,952ha	130.1	3,000ha	2,752ha	91.7	624	623	99.8
농지연금 활성화(2-45)	농지연금 농가가입률(%) (당해연도지원농가수)/(총 목표농가수)×100	13.9%	17.4%	125.2	13.9%	14.7%	105.8	237	227	95.8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1]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세부영역)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2-46)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도모
 - 노인성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 75세 이상 노인 부분 틀니 건강보험 적용(비예산사업)
 - ‘13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5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

□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2-46-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제고, 사전 예방적 노인 건강관리로 시설 의존률과 의료비 절감 도모
- (성과) 노인건강관리종합계획 수립으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70세 이상 노인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개선으로 허약노인 및 인지기능 약화 노인 발굴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자립적 재가생활 연장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 장기요양상태 직전의 허약노인에 대해 방문형 또는 공동이용 프로그램 제공(장기요양 보험 또는 건강보험 활용)
 - 만성질환노인에게는 노인 다빈도질환을 중심으로 치료관리 정보 제공
 - 노인가구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인식 강화 및 지원제도 마련
 - 노인 건강정책 제도 기반 정책 마련
 - 노인건강마일리지제도 모형 개발, 누적운동시간 등에 따른 점수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체계 마련 등

□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2-46-2)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손의료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 증가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요인·과잉진료 억제
 -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을 통해 보험계약 해지 후에 보험가입이 어려운 고령자 의료비 보장
- (성과) 전체 실손가입자 중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율이 8.5%로 당초목표(10%)의 85.0% 달성 (비예산사업)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및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 소비자가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보다 쉽게 가입·안내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 다양화(방카, 온라인 채널 등)

<부진사유>

- ▶ (문제점)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별도 세제 혜택을 전제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제외됨
- ▶ (개선방향)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이외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2-47)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개입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중증화·만성화를 사전 예방 하고, 자살예방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 도모
 -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 대상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노인 우울증 및 자살 위험군 등에 대한 선별 강화 및 사후관리
- (성과) 전년대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이 29.1%로 당초 목표(20%) 초과달성 (당초예산 70억원 전액집행)
 -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13.12)
 -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체계 구축 의무화 (안 제11조제1항)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신설 (안 제11조제2항)
 -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노인 등 자살 고위험군 관리 서비스 제공
 - '12년 자살사망자수는 전년대비 1,746명(11.0%) 감소한 14,160명

□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제공(2-4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치(틀니)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틀니)를 보급관리하고, 노인구강 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스케일링 기술을 통하여 구강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의치(틀니) 지원 및 사후관리, 불소도포·스케일링 지원 등
- (성과) 구강보건사업 만족도가 93.2점으로 당초목표(84점) 초과달성(당초예산 278

억원 전액집행)

- 의치(틀니)를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16.5천명에
 계 지원

〈표 2-56〉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2-46)	75세이상 노인부분틀니 보험적용 시행 여부	100%	100%	100.0	100%	100%	100	비예산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2-46-1)	노인건강관리종합계획 수립	수립 완료	수립 완료	100.0	-			비예산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2-46-2)	전체 실손가입자 중 표준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가입 비율	10%	8.5%	85.0	-			비예산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¹⁾ (2-47)	전년대비 정신건강 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 ²⁾	20%	29.1%	145.5	32건	87건	271.9	70	70	100.0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제공(2-48)	구강보건사업 만족도	84	93.2	110.9	84	92.2	109.8	278	278	100.0

주: 1)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12)→정신건강문제 조기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13)

2) '12년 성과지표는 건강정보 생산 수

[2]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세부영역)

-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인식 개선(2-49,50,5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노인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의 질 제고 도모
 - 치매 예방 및 체계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사례관리 실시
 - 치매전문교육실시 등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 및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성과) 지역사회 치매조기 검진률(만60세 이상 인구대비)이 18.2%로 당초목표(11.0%)를 초과달성 (당초예산 580억원 중 92.1% 집행)

- 치매검진 개선안을 마련하고,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노인운동 활성화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 강화
 - 치매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장애 검사항목 개선(안) 마련
- 약제비 지급 개선 및 치매거점병원 확대로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 치매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약제비 지급 대상 소득기준 완화(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100% 이하) 및 약제비 지급방식 개선
 - 문제행동 완화치료 등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거점병원 모델 개발(대상기관 '12년 7개소 → '13년 29개소)
- 직역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 및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등 치매전문인력 교육 개선안 마련
- 중앙에서 지역까지 표준화된 치매관리 정책을 전달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매 치료서비스 및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확대
 - '12년 4개소(권역치매센터) → '13년 11개소(광역치매센터로 변경)
- 치매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치매상담 콜센터” 개소 및 운영
-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치매 특화된 노노케어 시범사업(인천강원 등 치매환자 200여명 참여) 실시
- 치매환자 가족에게 유용한 정보(상황별 간병지침 등) 제공, 온라인 상담 및 가족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치매정보 365 홈페이지’ 구축
- 어르신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지기능 자가검사 앱 ‘치매체크’ 보급

〈표 2-5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인식개선 ¹⁾ (2-49,50,51)	지역사회 치매조기 검진률 (만60세 이상 인구 대비)	11.0%	18.2%	165.4	9.8%	17.2%	175.5	580	534	92.1

주: 1)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12)→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인식개선('13)

[3]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세부영역)

□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2-52)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의료, 건강서비스 및 주거지원 안전보장 등을 선제적 지원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 도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촉탁의 등 건강관리 종사자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
 - 장기요양 재가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맞춤형 실시
- (성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당초목표 달성 (당초예산 4.6억원 전액집행)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실시
 - (사업내용) 장기요양 재가노인의 다양한 욕구수준에 적합한 지역중심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가용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사업실적) 전국 8개소, 대상자수 10,128명(중복 포함), 사례관리 대상자수 2,770명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2-53)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으로 요양서비스 수준 향상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경쟁유도를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도모, 결과 공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 도모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 재가센터관리책임자 교육방안 수립
 -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평가하여 우수 평가기관 공단 홈페이지 상시 게재 및 인센티브 제공
- (성과) 재가센터관리책임자 양성교육 과정 마련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 장기요양 (입소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1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및 평가 실시
 - (평가 대회) '12년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 평가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 지급
 -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고시 제정('13.12)

〈표 2-5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2-52)	(요양-의료서비스간 적극적 연계)보호자-축탁의 전달체계 마련	-	-	-	보호자-축탁의 전달체계 지침 마련	보호자-축탁의 전달체계지침 (요양시설간 강관리가이드라인)마련	100	4.6	4.6	100.0
	지역사회 자원연계 실적 ¹⁾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례관리 실적	100.0	자원연계 사업지침 마련	자원연계 사업지침 마련	100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53)	(재가센터관리책임자 양성교육) 교육과정 마련 ²⁾	100%	100%	100.0	100%	100%	100	비예산		
	장기요양(입소시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³⁾	장기요양(입소시설) 평가방법 고시 개정	고시 개정	100.0	90%	91.1%	101.2			
장기요양 보험 수급 질서 확립 (2-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법개정	법개정	100.0	법률개정 완료	개정법안 국회 제출('12.9.)	100	비예산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완료	시스템 구축 완료	100.0	-	-	-			
장기요양 보험대상자 확대(2-5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율 (급여이용자 수/장기요양인정자 수×100)	90%	90.2%	100.2	90%	90%	100.0	5,412	5,404	99.9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재가급여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자원연계사업 지침마련

2) '12년 성과지표는 (재가센터관리책임자 양성교육 과정 마련) 교육과정 및 고시제정

3) '12년 성과지표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평가기관수/전체제가기관수

□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2-54)

○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법규 준수 유도,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급여비용 청구의 적법·타당성 제고를 통한 장기요양보험의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

- 불법 유인·알선행위 처벌, 지정취소자의 편법운영 방지, 과징금 처분 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건전한 시장질서 준수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수행방법, 절차 등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on-line 교육 실시

○ (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 개정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완료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3.8.13)
 -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추진(규제심사)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현지조사(연중)
 - 1,414개소(기획조사 602, 수시조사 472, 특별현지조사 340)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5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경증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사각지대 해소 도모
 - 실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3등급 인정기준 완화 추진(국고 117억원 소요)
- (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율이 90.2%로 당초목표(90%) 초과달성 (당초예산 5,412억원 중 99.9% 집행)
 - 대상자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13. 7. 1. 시행)

[4]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세부영역)

□ 노인 운동 활성화(2-56)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에게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을 통하여 신체기능 저하 방지 및 노인성 질환 예방 도모
 - 노인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초점을 둔 생활운동, 건강교육 등 노인건강프로그램 보급 확대
- (성과) 노인건강교실 강습실시 횟수가 234,387회로 당초목표(230,699회)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2-57)

-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노인층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각종 노인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문화 정착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영위 도모
 -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경로시설 등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방문하

여 노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서비스 제공

- 2013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 (성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율이 99.2%로 당초목표(100%)의 99.2% 달성 및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1회 개최하여 당초목표 달성 (당초예산 218억원 전액 집행)

〈표 2-5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 운동 활성화(2-56)	노인건강교실 강습실시 횟수 ¹⁾	230,699 회	234,387 회	101.6	223,980 회	227,475 회	101.6	해당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2-57)	지도자 배치율 (배치인원/정원)×100	100%	99.2%	99.2	100%	100%	100.0	218	218	100.0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대회 개최수	1회	1회	100.0	1회	1회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노인건강운동교실 실시횟수

[5] 의료비 지출 적정화(세부영역)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2-5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보장 추진
 -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를 통한 수입 확충과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및 약가구조 개편 등 지출 구조 합리화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성과) 적립금비율(총급여비 대비)이 20.4%로 당초목표(2%)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13년말 당기수지 흑자 3조 6,446억원, 누적수지 8조 2,203억원 달성
 - 수입기반 확대 및 재정누수 방지
 -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소득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고액장기채납자 명단 공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요양기관 정기조사 실시(770개소, 145억원)
 - 지불제도 개선을 통한 환자부담 감소 및 적정진료 유도

- 7개 질병군(맹장,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수술) 포괄수
가제 종합병원 이상급 확대 시행('13.7)
- '12.7월 포괄수가제 병·의원급 당면적용 → '13.7월 종합병원 이상급으로 확대
- 약가제도 개선
 - 리베이트 관련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외래처방인센티브 質 평가지표 도입 및 약품비 절감 노력없이 환자구성 변화로
인한 총약품비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청구액이 큰 대형 품목 위주로
협상대상을 선정

□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확대(2-58-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말기암환자의 체계적 관리 및 암성통증 관리 등 적절한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도모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평가, 서비스 표준화, 정보시스템 운영 등)
- (성과) 시도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가 868개로 당초목표(900개)의 96.4% 달성 (당
초예산 2.7억원 전액집행)
 - 완화의료전문기관 운영 지원(53개소, 기관당 평균 5,000만원)
 - 적정수가 개발을 통한 의료비 절감 도모를 위해 수가 시범사업 실시
 - 완화의료전문기관 사업설명회 개최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
- 종합병원 중심의 완화의료 병상 확대 및 완화의료팀(PCT: Palliative Care
Team)제 도입,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를 법제화하여 말기암환자들의 완화의료
이용 장소 확대 등

〈표 2-60〉 의료비 지출 적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2-58)	(당해연도 적립금/당해 연도 총급여비) ≥ 2%	2%	20.4%	1,020	적립금 비율2% 이상유지	12.2 %	610.0	비예산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2-58-1)	시도지정 완화의료 병상 수	900개	868개	96.4	-			2.7	2.7	100.0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소영역)

[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세부영역)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2-59)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베이비붐세대 자원봉사 확대 방안 마련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베이비붐세대 ‘드림 봉사단’ 구성·운영
 -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봉사단체 지원 및 봉사자단체 발굴 포상 및 시도별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한 활성화
- (성과) 베이비붐 봉사단 참가자 수가 80명으로 당초목표(80명) 달성, 자원봉사 포상자 수가 276명으로 당초목표(200여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1억원 중 90.0% 집행)
 - 베이비부머 봉사단 발대식 개최
 - 4개팀(안전관리, 취업멘토, 문화예술, 전문분야), 80명으로 구성
 - 봉사활동 총 26회 실시(안전관리 8회, 취업멘토 6회, 문화예술 7회, 전문분야 5회)
 - 우수 자원봉사자·단체 발굴 포상

— <추진상 애로점> —

- ▶ 서울·경기 중심으로 활동, 수요처 부족에 따른 봉사 한계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2-60-①, 2-6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여 자아실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노인들이 본인의 경륜 및 전문성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보살핌의 대상에서' 나눔의 주체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 '부양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 신노인상 구현

○ (성과) 노인자원봉사클럽 1,594개 구성을 통해 당초목표(1,400개) 초과달성, 전문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을 38개 개발하여 당초목표(50개) 76.0% 달성 (당초예산 42억원 전액 집행)

- 노인자원봉사클럽 구성 및 활동

- 1,297개 클럽 운영비 지원 및 34천여명이 자원봉사활동 수행
- 노인자원봉사클럽 코치 3,519명 및 노인자원봉사자 22천여명 교육 실시

-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노인복지관 자원봉사단(210개), 노인복지관협회 리더센터(16개), 전문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38개) 등 운영 지원

□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2-60-②)

○ (목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계 고경력 인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경륜, 경험, 지식을 사회에 환원 도모

-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자긍심 고취

- 고령자 과학기술인 봉사자 역량 확충

- 은퇴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관련 재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워크숍 등

○ (성과) 과학이야기 특강, 과학관 봉사, 녹색생활과학 보급 등 참가 횟수가 1,485회로 당초목표(1,115회) 초과달성 (당초예산 3억원 전액 집행)

-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자원봉사 체제 구축으로 과학 특강, 과학관 해설 봉사 등 7개의 사업을 통해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홍보

□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2-62-①)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자 자원봉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와 우수사례 전파 등 기제 마련 도모
 - 노인자원봉사자 실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연계 추진
 - 새누리시스템(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VMS시스템(한국사회복지협의회)간 시스템 연계 추진
 -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직 퇴직 노인단체 발굴
- (성과) 전문직퇴직노인단체 DB구축 조직화 단체수가 100개로 당초목표(100개) 달성 (비예산사업)
 - 대한노인회 자원봉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클럽 및 회원관리시스템(DB) 구축 운영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자원봉사 지원

□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 구축(2-62-②) 【완료 과제】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행안부 나눔포털과 복지부 VMS(사회복지시스템)으로 분산된 자원봉사 등록회원의 온라인 실적을 시스템에서 일괄 통합기능 지원, 실적 통합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확보
 - 행안부 나눔포털에 가입한 회원이 자신의 실적을 복지부 VMS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실적 제공
 - 보건복지부 제공 자원봉사실적 반영 기능 운영
- (성과) 교육부 NEIS 시스템과 나눔포털 연계 방식 합의
 - 행안부 나눔포털과 복지부 VMS 시스템간 자원봉사 실적연계 상시 운영
 - '13년 시스템간 자원봉사 실적연계 운영 실적

구분	나눔포털→VMS		VMS→나눔포털	
	제공인원	제공실적	제공인원	제공실적
계	183,730명	743,567건	426,467명	4,145,523건

〈표 2-61〉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2-59)	베이비붐 봉사단 참가자 수 ¹⁾	80여명	80명	100.0	'11센터 등록자의 12%	'12센터 등록자의 9.9%	82.5	1	0.9	90.0
	자원봉사 포상자 수	200여명	276명	138.0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2-60-①, 61)	노인자원봉사 클럽 수	1,400개	1,594개	113.9	1,000개	1,352개	135.2	42	42	100.0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수	50개	38개	76.0	30개	32개	106.7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2-60-②)	과학이야기특강, 과학관 봉사, 과학나눔봉사 등 참가횟수 ²⁾	1,115회	1,485회	133.2	1,225회	1,298회	106.0	3	3	100.0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복지부)(2-62-①)	(전문직퇴직노인단체 DB 조직화)DB구축 조직화 단체수(개)	100개	100개	100.0	5개	6개	120.0	비예산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안행부)(2-62-②)	교육부 NEIS 시스템과 나눔포털 연계 방식 합의	완료과제			교육부와 시스템 연계방식 합의	시스템연계 일부지역 사범서비스 개통	달성	-		

주: 1) '12년 성과지표는 (60세이상 포털시스템 등록 자원봉사자/포털시스템 등록 전체 자원봉사자)×100

2) '12년 성과지표는 과학이야기특강, 과학관봉사, 녹색생활과학보급 등 참가횟수

[2]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세부영역)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63)

-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전문 예술강사와 함께 문화예술을 체험, 학습, 향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자기 존재감을 회복 및 개인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사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
 - 노인 복지관 대상 5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신규 2개 분야 - 미술, 사진) 예술강사 파견
- (성과) 전국 169개 노인 복지관 대상 5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미술, 사진) 예술강사 120명 파견을 통해 6,396명이 수혜를 받아 당초목표(4,500명) 초과달성 (당

초예산 20억원 전액 집행)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분권교부세)(2-64)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신축비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관에 대한 노인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 시·군·구별 노인복지관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성과) 노인복지관 13개소 신축 지원으로 당초목표(13개소) 달성 (당초예산 46.2억원 전액 집행)
 -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 : 281('12년) → 300('13년)

<추진상 애로점>

▶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크고, 미설치 지역의 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이므로 분권교부세 지원규모를 늘릴 필요

□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지원(2-65)

-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공연·전시 등 관람 및 도서·음반 등 구입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 고령층 등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 (성과) 연간 문화바우처 이용자수가 163만명으로 당초목표(160만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495억원 중 93.9% 집행)
 - 문화이용권과 함께 별개로 운영되어 온 여행이용권(한국관광공사 주관), 스포츠 관람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정 및 통합 시범 운영
 - 문화이용권 이용률 제고로 수혜자 확대 및 고령·농산어촌 대상자의 찾아가는 기획사업 추진을 통한 참여율 확대

- 사업 수혜대상자(332만명) 중 163만명 사업 혜택(49%)
 - 노인층 참여율 확대('12년 14% → '13년 19%)
 - 사업 참여자 만족도 지속적 향상('12년 84점 → '13년 85.7점)
-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책임 강화와 역할 확대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지역가맹점 발굴 및 관리 등 사업 효율화 도모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2-66)

- (목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활동 확대, 세대 간 소통강화 등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신바람 놀이 문화 프로그램, 권역별 어르신 문화축제 등 운영
- (성과)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449개 개발하여 당초목표(365개) 초과 달성 및 프로그램 수혜자수가 13,833명으로 당초목표(12,000명) 초과달성 (당초 예산 41억원 전액집행)
 - 449개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수혜자 1.3만명 참여 활동, 지역주민 등 57만명 수혜
 - 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88점, 매우 만족하는 수준)

〈표 2-62〉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문화부)(2-63)	수혜자 수	4,500명	6,396명	142.1	3,500명	4,040명	115.4	20	20	100.0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분권교부세)(2-64)	노인복지관 신축지원	13개소	13개소	100.0	13개소	13개소	100.0	46.2	46.2	100.0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지원(2-65)	연간 문화바우처 이용자	160만명	163만명	101.9	160만명	161만명	100.6	495	465	93.9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2-66)	프로그램 수	365개	449개	123.0	229개	341개	148.9	41	41	100.0
	수혜자 수	12,000명	13,833명	115.3	6,900명	11,804명	171.1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은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의 2개의 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6]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구성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소영역)

[1]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세부영역)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67)

- (목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 주거 지원을 통하여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등 선제적 대응 도모
 - 주거약자용 주택의 신규 건설,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주택 개조 비용을 장기·저리로 용자 지원
- (성과)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당초목표 달성 (당초예산 26억원 전액 집행)
 - 주거약자 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 용자) 지원 매뉴얼 마련
 - 호·가구당 260만원 한도, 연 2.0%,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2-68)

- (목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 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구비한 주거약자용 장기공공 임대주택(국민·영구 임대)을 공급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12.8.23)을 통하여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 마련
 - 장기공공임대(국민·영구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이상(지방 3%)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 (성과)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비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수도권 5%, 지방 3%로 공급하여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수도권 8.6%, 지방 5.6% 공급
 - (수도권) 장기공공임대주택 13,640세대 중 1,179세대 공급
 - (지방) 장기공공임대주택 12,861세대 중 732세대 공급

□ 고령 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2-69)

-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독거노인·고령 농어업인 등 농어촌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새로운 농어촌 주거모델을 개발·보급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공동생활 주택 조성(4개소, 12억원)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시·군 자율 편성사업으로 공동생활 조성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독려
 -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생활 주택 조성
 - 농어촌 고령자 유형(농업·비농업)을 고려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3종 개발·보급
- (성과)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4개소 공동생활주택 공정율이 55%로 당초목표(50%) 초과달성 (당초예산 4.7억원 전액 집행)
 - 공동생활홈 조성(2.4억원/개소)을 통한 고령 농어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표 2-63〉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67)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 세부지침 마련 ¹⁾	100%	100%	100.0	100%	100%	100	26	26	100.0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2-68)	목표치(5%,3%)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100 ²⁾	수도권 5%,지방 3%공급	수도권 5%,지방 3%공급 완료	100.0	수도권 5%,지방 3%공급	수도권 5%,지방 3%공급 완료	100.0	비예산		
고령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 ³⁾ (2-69)	4개소 공동생활주택 공정을 ⁴⁾	50%	55%	110.0	70점	74.7점	106.7	4.7	4.7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여부

2) '12년 성과지표는 목표치(5%,3%)≤고령자용 임대주택 /전체 임대주택×100

3)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12)→고령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13)

4) '12년 성과지표는 수혜노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2]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세부영역)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2-70)

- (목표) 국토교통부에서는 농어촌도시외곽 지역의 이동권 보장·대중교통 수혜형평성 확보 및 재정부담 감소 등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
 -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한정면허 종류를 신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마목)
 - 농어촌 버스 차량규모 완화(소형승합차, '12.8.2 개정) 및 한정면허 근거 마련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행 가능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 (성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2-71-①)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과 녹색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모
 - 자동차 중심의 도시환경을 사람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으로 개선

- 보차도 분리, 단절보도 연결, 보도 불법시설 정비 등
- (성과) 보행환경 개선실적(계획 대비)이 10개소로 당초목표(10개소) 달성(당초예산 618억원 전액집행)
-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2-71-②)
 - (목표) 안전행정부에서는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 노인복지시설 중 주거의료여가 복지시설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주변도로 중 일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 노인 통행량이 많은 자연·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도로에 대하여도 노인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노인배려문화 정착
 - (성과) 지자체 협조, 노인 보호구역 60개소 추가 지정('13년 신규과제로 성과지표 없음)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기법을 도입한 개선사업 42개소 완료

<추진상 애로점>

▶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신규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 예정보다 저조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확대를 위한 국비지원이 필요

-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2-72)
 - (목표) 경찰청에서는 고령화 심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야광지팡이·야광조끼 등 교통안전용품 배포
 - 노인배려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 전개
 - (성과) 고령자 교육인원이 201만명으로 당초목표(200만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26억원 중 88.5% 집행)
 - 노인정·경로당·노인대학 등 방문, 고령자 201만명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야광조끼 41,956점, 야광지팡이 24,210점 및 야광모자 헬멧 16,485점 등 교통안전용품 배포

- 전년 동기 대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7% 감소(1,864 → 1,833명)

〈표 2-64〉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2-70)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지속 추진 ¹⁾	10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100.0	엘리베이터 109대 에스컬레이터 42대	엘리베이터 109대 에스컬레이터 42대	100.0	비예산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충률(저상버스)	-			827대	821대	99.3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2-71-①)	보행환경 개선실적 /계획×100 ²⁾	10개소	10개소	100.0	25	28.9	115.6	618	618	100.0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2-71-②)	성과지표 없음	-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2-72)	고령자 교육인원 (실적보고)	200만	201만	100.0	200만	203만	101.5	26	23	88.5

주: 1) '12년 성과지표는 도시철도 승강설비 목표대비 설치 실적

2) '12년 성과지표는 보행환경 개선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율('10년 사업지역에 대한 '09년 대비 '11년 교통사고 감소건수/'09년 교통사고건수×100)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소영역)

[1]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세부영역)

□ 독거노인 보호 강화(2-73-①)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소득주거건강사회적 접촉 수준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확인 및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 B자에 대한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성과) 수혜 노인이 266천명으로 당초목표(240천명) 초과달성 (당초예산1,904억 원 전액 집행)
 - 서비스 제공인력(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7,998명이 독거노인 266천명 보호·지원
 -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시행
-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 강화(2-73-②)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 및 손자녀의 학습 부진, 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성과) 조손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94점으로 당초목표(90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56억원 전액 집행)
 - 사업기관수 30개소
 - 심리정서 지원 1,194명, 학습정서 지원 7,925명, 생활가사 지원 919가구, 가족 문화 지원 749명, 주거환경 개선 지원 103건 등
- 농어촌 가사도우미(2-74)
 -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연 최대 12일 가사도우미 활동비(10천원/일)의 70% 국고 지원, 30% 농협 부담
 - (성과)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만족도가 91.0%로 당초목표(91%) 달성 (당초예산 8.4억원 전액 집행)
 - 농어촌 고령취약 10천 농어가에 가사도우미 지원(840백만원)을 통해 생활 안정 도모 추진
 - 가사도우미 경로당 지원일수 확대(12일 → 24일)

〈표 2-65〉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독거노인 보호 강화 (2-73-①)	수혜노인 수(사업실적 보고)	240천명	266천명	110.8	210천명	237천명	112.9	1,904	1,904	100.0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 강화(2-73-②)	조손가족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90점	94점	104.4	85점	90점	105.9	56	56	100.0
농어촌 가사도우미 (2-74)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가사도우미) 고객만족도	91%	91%	100.0	92%	90%	97.8	8.4	8.4	100.0

[2] 학대노인의 보호강화(세부영역)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2-75)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에게 전문상담,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노인권의 보호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일시적 보호서비스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노인학대관련 인프라 확충
- (성과) 노인학대 전체 신고건수 대비 종결 비율이 90.5%로 당초목표(86%) 초과달성, 응급사례 학대 피해 노인 수 대비 우울감 감소 노인 비율이 98.0%로 당초목표(85.0%) 초과달성 (당초예산 55.2억원 전액 집행)
 - 신고의무자 관련 중앙기관 9개 단체와 MOU 체결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사례발굴 기반 마련
 - 신고의무자 및 시설종사자의 노인학대 인식 제고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와 기 구축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24개소)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사업 홍보 및 교육을 집중 추진
 - 노인학대 예방 홍보

〈표 2-66〉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2-75)	노인학대 종결실적/연간 전체 신고건수×100	86%	90.5%	105.2	84.0%	86.7%	103.2	55.2	55.2	100.0
	우울감 감소노인 수/응급사례 학대피해노인수×100	85%	98.0%	115.3	72.0%	96.3%	133.8			

[3]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세부영역)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 여건마련(2-76)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사회의 세대간 통합을 이루고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가족해체, 노인 학대, 노인상대범죄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 추진
 - 어버이날 기념행사, 효의 달 운영 및 효행자 발굴 포상 실시
 -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효행장려 활동 등 홍보
- (성과) 어버이날 효행자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가 155명 수여로 당초목표(173명)의 89.6% 달성 (비예산사업)

<부진사유>

- ▶ (문제점)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자 포상에 대한 신청자 수 부족
- ▶ (개선방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강화 필요

□ 노인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2-77) 【종료 과제】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부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노부모의 부양 장려
 -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일부 공급
 -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양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확대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대한 경로 우대 공제

- 일정기간 효행을 한 자에 대하여 지자체별 효행수당 지급 확대 권장 어버이날 기념 행사, 효의 달 운영 및 효행자 발굴 포상 실시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7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및 권익 향상 도모
 -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포상하여 노인복지 증진 도모
- (성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 14개에 대해 포상 실시로 당초목표(16개 프로그램)의 87.5% 달성 (비예산사업)

<부진사유>

- ▶ (문제점) 정부포상계획 인원 및 프로그램 대비 포상신청자 수 부족
- ▶ (개선방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포상대상 발굴 및 홍보 강화 필요

<표 2-67>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집행률 (%)
효문화정착을 위한 효행 장려 여건마련(2-76)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	173명	155명	89.6	170명	168명	98.8	비예산		
노인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2-77)	-	종료과제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78)	우수 프로그램 포상	16개 프로그램	14개 프로그램	87.5	16개 프로그램 포상	14개 프로그램 포상	87.5	비예산		

제3절 성장동력 분야 실적 평가

- 성장동력정책의 기본목표는 제2차 기본계획 상으로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육성이 주요 전략
-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가 향후 10년 안에 가시화될 전망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등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였으나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총체적 구조 변화를 위한 대응은 미흡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인력·교육주택·금융·재정 등 사회시스템을 고령사회 친화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의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
- 성장동력 분야는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3개의 중영역으로 구성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의 4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7]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구성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세부영역)

□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3-1)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고용차별 개선 및 여성고용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여

- 5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종별 남녀근로자 현황 및 관리자 현황을 분석하여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산업별 23개 부문 평균 여성고용율 및 여성 관리자 비율 산정

- 각 부문 평균치의 60%미만 기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토록 지도

○ (성과)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36.04%로 당초목표(35.65%) 초과달성 (당초예산 7억원 전액 집행)

-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업의 여성고용수준 평가 및 고용평등에 관한 연구, 조사, 교육, 홍보 등 추진

-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양성평등 컨설팅 실시(50개소)
-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여대생 멘토링 제도 운영, 여성관리자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연구 실시 등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

○ (목표) 안전행정부는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결정의 대표성·민주성을 제고하고, 여성이 차별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16년까지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을 13.4%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12~'16)에서 '11년말 현재 9.2%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6년까지 15.1%로 확대

○ (성과)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9.9%로 당초목표(9.8%) 초과 달성 및 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0.7%로 당초목표(11.4%)의

93.9% 달성 (비예산사업)

-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률 제고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상향조정 : '16년 13.4%→'17년 15.0%
 - 과장급 여성 1명이상 임용 확대 : '12년 35개/40개 부처→'13년 41/42개 부처
-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비율 확대 : '12년 4.1%→'13년 4.4%

□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3-3)

- (목표)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여성교원 임용확대를 통한 우수한 여성 자원의 활용 및 대학 내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초·중등학교 여성교원 임용확대를 통한 교직사회의 성대표성 확보, 우수한 여성 자원의 활용 및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국립대학 여성교원 임용목표제 등 양성평등조치계획 운영
 - 관리직 중 여성교원 비율이 현원에 비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추진
- (성과)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체 교장·교감 대비 여성 교장·교감 비율이 27.2%로 당초목표(25.7%) 초과달성,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이 14.1%로 당초목표(13.9%) 초과달성 (당초예산 1억원 전액 집행)
 -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및 지원계획 수립
 - '13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실적 평가 시행
 - '13~'17년 여성 교장·교감 임용목표제 확대 추진계획 수립
 - 시·도교육청별 '13년~'17년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3-4)

- (목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학생 이공계 진로유도 및 공대 여대생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으로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기회 확대
- (성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참여 여학생수가 174,537명으로 당초목표 (150,000명) 초과달성, 지원사업 수혜자의 만족도가 88점으로 당초목표(87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118.71억원 전액 집행)
 -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발굴 및 교육훈련 지원, 연구개발분야 복귀 지원을 통한 여성

과학기술인력 누수방지 및 우수인재 활용 확대

-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284명 교육 및 58명 복귀, 참여 희망기관 31개 및 예비복귀자 Pool 558명
-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 담당관제, 기관혁신지원사업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여성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 활성화 등

〈표 2-68〉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3-1)	(여성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 ×100	35.65	36.04	101.1	35.17	35.24	100.2	7	7	100.0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	(중앙행정기관)(4급이상 여성공무원 수/4급이상 공무원수)×100	9.8%	9.9%	101.0	9.1	9.3	102.2	비예산		
	(자치단체)(5급상당이상 여성공무원 수/5급상당이상 전체공무원 수)×100	11.4%	10.7%	93.9	10.3	9.9	96.1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3-3)	여성교수비율	13.9%	14.1%	101.4	14%	13.7%	97.9	1	1	100.0
	전체 교장교감 대비 여성 교장교감 비율	25.7%	27.2%	105.8	23.7%	24.5%	103.4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3-4)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사업참여여학생수총계	150,000	174,537	116.4	74,000명	172,309명	232.9	118.71	118.71	100.0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수혜자만족도설문조사 (만족 응답수/전체응답수)×100	87	88	101.1	87	86	98.9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3-5)	(양성평등교육)집합교육 수료자인원	9,300	10,056	108.1	9,000명	9,805명	108.9	59.4	58.61	98.7
	(양성평등교육)사이버원격교육 수료자인원	48,700	50,348	103.4	46,000명	46,736명	101.6			

□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3-5)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 및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을 조성
 - 공무원 및 사회 선도층 대상의 성 평등, 가족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실시
 - 일반국민 대상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

- (성과) 양성평등교육 집합교육 수료자수가 10,056명으로 당초목표(9,300명) 초과 달성, 사이버·원격교육 수료자 인원이 50,348명으로 당초목표(48,70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59.4억원의 98.7% 집행)
 - 공무원 및 사회선도층 대상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4개 분야 10,056명)
 - 대국민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양성평등 진흥사업 추진
 - 사이버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넓은 양성평등의식 교육 기회 제공

[2]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세부영역)

□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①)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학 내 여대생 특화 ‘진로개발에서 취업지원까지의’ 체계적 경력개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청년여성의 직업세계 진입 촉진 및 원활한 이행을 위해 취업 시기 이전부터 성인지적 관점의 커리어개발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현실 인식 및 경력단절 대처 역량 강화
- (성과)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85.2점으로 당초목표(85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13.1억원의 99.8% 집행)
 - 센터지원 대학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지역적 확산 계기 마련(지원센터 수 ‘12년 12개소 → ’13년 17개소)
 - 프로그램 지원대학 단가 인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지원단가 10백만원 → 15백만원)
 - 4개 권역별 여성리더 릴레이 특강 및 그룹멘토링 진행, 글로벌 청년여성 포럼 개최
 - 지역사회에 특화된 유망직종 발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②)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이전 단계인 학교단계에서 직업진로, 취업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인력 활용도를 제고
 -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

- 직업체험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School to Work) 도모
- 지방강소기업 등 탐방 기회를 제공해 지방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취업 능력 향상을 도모
- CAP, 올라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성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87.4점으로 당초목표(80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101억원 중 96.0% 집행)
 - 155개 대학에서 청년(2013.12.23일 기준 9,644명)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형성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 지원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여건 개선(3-7)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 여성 특화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등 서비스 인프라 확대
 - (성과) 새일센터 취업률(구직등록인원 대비 취업인원 비율)이 51.4%로 당초목표(58.9%)의 87.3% 달성 (당초예산 396억원 중 99.1% 집행)
 - 새일센터 20개소 추가 지정·운영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
 - 새일센터 직업상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집단상담프로그램 20,739명 참여, 20,362명 수료
 - 직업교육훈련 680개 과정 운영(교육인원 15,145명, 수료인원 14,041명)
 - 새일여성 인턴 6,146명, 결혼이민 여성인턴 674명 지원
 - 사후관리지원서비스 이용인원 : 가사 및 자녀 양육부담 완화 17,489명, 여성친화 일촌협약 체결 4,168건,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291건

<부진사유>

- ▶ (문제점) 과거 고용센터나 새일센터 등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고 취업을 한 경우 중복으로 포함되었으나 워크넷과 e새일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중복 부분이 제외되고, 취업연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용직 등 공공근로를 연계해준 경우가 취업실적에서 제외
- ▶ (개선방향) 시스템 통합 및 기준 엄격 적용에 따른 중복 등 제외부분을 고려한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목표치 설정 필요

〈표 2-69〉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여가부) (3-6-①)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 리커트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만점 환산 ¹⁾	85.0	85.2	100.2	53,000명	53,265명	100.5	13.1	13.08	99.8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노동부) (3-6-②)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조사(7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80% 이상	87.4%	109.3	80% 이상	87.8	109.8	101	97	96.0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3-7)	(새일센터 취업률(%)) (취업인원/구직등록인원)×100	58.9%	51.4%	87.3	48.9%	57.7%	118.0	396	392.3	99.1
이주·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인턴참여실적	583명	674명	115.6	583명	690명	118.4	22.2	22.2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 실적

□ 이주·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취업애로계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고 참여기반을 구축
 - 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 실시
 -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적용 프로그램인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실시
- (성과) 결혼이민여성 인턴 674명을 연계하여 당초목표(583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22.2억원 전액 집행)
 - 결혼이민여성 특화 직업교육훈련 23개 과정 운영, 422명 교육
 - 장애여성 특화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운영, 55명 교육
 - 결혼이민여성 인턴 674명 연계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1]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세부영역)

□ 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3-9)

○ 법무부에서는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대비 차원에서 동포 등의 국내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추진

-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성과) 중국, CIS(구소련)지역 재외동포(F-4) 자격 국내 체류자수가 176,748명으로 당초목표(150,000명)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건전한 동포 육아도우미 제도 도입(7월 도입 후 433,320명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국민일자리 창출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13. 9월)

-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동포에 대해 투자금액(3억→2억) 요건을 완화하여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3-10)

○ (목표) 법무부에서는 글로벌 경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간 해외 우수인재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 추진

○ (성과) 온라인 사증발급추천시스템(Hunet Korea)을 통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건수가 39,855건으로 당초목표(25,000건)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직업 종사자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전자비자' 제도 도입

- 의료관광객, 우수인재의 동반 가족 등으로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275명)
- 성실납세 외국인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 시 가점 부여(27명)
 - 연령·학력·소득·한국어능력 등을 평가하여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때 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외국인에게 가점부여(최대 5점)

〈표 2-70〉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3-9)	중국, CIS(구소련)지역 제외 동포(F-4) 자격 국내 체류자수	150,000명	176,748명	117.8	90,000명	123,431명	137.1	비예산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3-10)	온라인 사증발급·추천시스템(Hunet Korea)을 통한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건수	25,000건	39,855건	159.4	1,064건	27,334건	2,569.0	비예산		

[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세부영역)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강화(3-11)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적정 수준의 비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면서도 노동시장과 조화를 도모하고 직업능력 개발, 체류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력의 빠른 취업 적응 유도
 - 국내 고용시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수급계획 수립
 -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 교육, 한국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상시 고충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상담 및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
- (성과) 2014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으로 당초목표 달성,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 318,599건으로 당초목표(220,000건) 초과달성,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17개 소로 당초목표(3,000개소) 초과달성 (당초예산 63억원 전액 집행)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62천명 외국인력 적기 공급
 - 신속한 고충상담 및 현장 지도 등을 통한 국내 적응 지원

-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해 318,599건 상담 (전화상담 280,089건, 내방상담 20,645건, 3자통화 16,530건, 번역상담 1,143건, 방문상담 192건)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한국문화·생활법률 교육, 쉼터제공, 문화행사 등 체류활동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사업장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해 사업장 변경자(8,592명)의 인식전환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5,826명) 실시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갈등 해소,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리를 위해 교육(사업주 6,949명)을 통한 컨설팅 확대 실시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등의 위반이 없도록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3,017개소)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고용센터(19개소)에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NGO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설치·운영(센터별 연 2회)

□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인력 확보(3-12)

- (목표)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생산성 높은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 통계 인프라 확립
 - 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정비
 -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실태, 관련 업체의 기능자격 등 실태조사 및 분석
- (성과)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허가인원이 3,963명으로 당초목표(3,800명) 초과 달성, 특별한국어시험제 실시 국가가 13개국으로 당초목표(13개국) 달성 (비예산 사업)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제조업 부문의 숙련 외국인력 활용 지원(3,963명)
 - 신규인력 배정방식인 점수제를 전 업종에 확대 적용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법 준수 사업장을 우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유도
 -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인력 선발을 위해 신규도입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공개문제 집에서 출제하던 한국어시험을 비공개문제 출제방식으로 전면 전환
 - 기업의 숙련인력 지원을 위해 자진 귀국자 중 귀국 후 6개월 후부터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도록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국가 확대('12년 9개국 → '13년 13개국)

〈표 2-7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3-11)	외국인력 수급계획 수립 여부	14년외국인력도입계획수립	'14년 외국인력도입계획 수립	100	'12년 외국인력도입계획수립	'12년 및 '13년 외국인력도입계획 수립	100	63	63	100.0
	외국인력상담센터 상담 실적	220,000건	318,599건	144.8	108,000건	308,402건	285.6			
	지도점검 사업장 수	3,000개소	3,017개소	100.6	3,600개소	4,402개소	122.3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인력 확보(3-12)	성실근로자 제입국 고용허가인원 ¹⁾	3,800명	3,963명	104.3	10개국	8개국	80.0	비예산		
	특별한국어시험제 실시 국가 수	13개국	13개국	100.0	5개국	9개국	18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세종학당 설치 국가수

[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세부영역)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3-13-①)

- (목표)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조기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 촉진
 - 전국 20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
 - 방문교육서비스: 부모교육(아동양육 전반), 자녀생활(생활지원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출신국 언어수업)
- (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가 1,684천명으로 당초목표(1,600천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845억원 중 99.6% 집행)
 - 다문화가족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센터 50개소, 센터당 28.5백만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 추가 설치
 -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발달 진단 및 지도를 위해 언어발달지도사 확대 배치('12년 200명→'13년 300명)

- 외환은행나눔재단과 협력하여 언어발달교실 환경개선(총10개소, 8~12월)
- 언어영재교실 운영 확대 일환으로 이중언어강사 확대 배치('12년 121명→'13년 158명)
- 포스코, 대우증권 등 민간과 협력하여 언어영재교실 운영 활성화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3-13-②)

- (목표)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 급증에 따라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으로 학교 적응도 제고
 -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글로벌 선도학교(구 거점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능력 및 기초학력 제고
 - (다문화 인식개선) 예비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지원
- (성과) 글로벌 선도학교 수(예비학교, 연구학교 포함)가 202교로 당초목표(180교) 초과달성, 교원 연수 인원(온라인)이 5,631명으로 당초목표(3,00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30억원 전액 집행)
 -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글로벌 선도학교 운영(150교), 중도 입국 학생의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예비학교 지원 확대('12년 26교→'13년 52교)
 - (다문화인식개선) 교원 대상 다문화 연수를 강화하여 '12년 1,000명→'13년 5,631명 교육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지원체계 구축(3-14)

- (목표)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외국인과 공공기관 민원담당자와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다국어 전화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 상담능력 제고,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매뉴얼 업데이트
- (성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상담 처리건수가 2,350,213건으로 당초목표(3,000,000건)의 78.3% 달성 (당초예산 30.4억원 전액 집행)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인력 증원 추진 및 상담언어 확대
 - 상담인원 73명→93명(20명 증원), 상담언어 18개국어→20개국어(아랍어, 스리랑카어)

- 결혼이민자 대상 맞춤형 상담서비스 실시
- 출입국관리법령 등 각종 법령 개정 및 출입국·체류·국적·난민 등 관련 지침 변경 시 상담원 수시교육 및 매뉴얼 업데이트 실시

<부진사유>

- ▶ (문제점)
 - 1건의 상담을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 경우 실제 응답하지 않더라도 성과지표 산출방식에 모두 포함되어 목표치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었음 (반복시도 건수는 ARS처리건수에 포함됨)
 - 상담사 증원으로 상담연결이 원활해지고 반복 콜을 우선적으로 상담원에 연결해줌으로써 반복 콜 시도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기존 성과지표 산출방식 추진실적 감소
- ▶ (개선방향) 상담원 실제 응답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목표치 및 추진실적을 상담원의 실제 응답건수로 변경 필요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3-15)
 - (목표) 교육부에서는 국제이해교육,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한 한국학생의 세계시민 의식 함양 및 유네스코 이념전과를 위한 ASPnet 학교간 협력활동 확산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외국인이 학교수업에 참여, 자국문화를 소개),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글로벌 세계시민 교육) 등 확대
 - (성과)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 실시대상 학교수가 총 295교로 당초목표(240개교) 초과달성, 유네스코 협동사업 실시대상 학교수가 186교로 당초목표(150교) 초과달성 (당초예산 3.2억원 전액 집행)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 사업
 - 기존학교 관리(166개교), 신규가입 심사·승인(29개교), 미활동 학교 제명·탈퇴(9개교)
 - ASPnet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77개), ASPnet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 등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전국 초·중·고교 295개교 학생 42,000명

〈표 2-72〉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가부) (3-13-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1,600 천명 (연인원)	1,684 천명 (연인원)	105.3	1,540 천명	1,656 천명	107.5	845	842	99.6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부)(3-13-②)	글로벌 선도학교 수(예비 학교, 연구학교 포함) ¹⁾	180교	202교	112.2	120	195	162.5	30	30	100.0
	교원 연수 인원(온라인) ²⁾	3,000명	5,631명	187.7	30	31	103.3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3-14)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상담 처리건수	3,000,000건	2,350,213건	78.3	3,371,349건	2,932,238건	87.0	30.4	30.4	100.0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3-15)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사업 실시대상학교수 ³⁾	240교	295교	122.9	360 개교	435 개교	120.8	3.2	3.2	100.0
	(유네스코 협동사업) 사업 실시대상학교수	150교	186교	124.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다문화거점학교수이며, 글로벌 선도학교를 의미함

2) '12년 성과지표는 다문화강좌 지원학교수

3) '12년 성과지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사업실시대상학교수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1]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세부영역)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3-16-①)

○ (목표)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학생의 학교급별·단계별 진로교육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 및 다양한 심리검사 제공을 통한 학생의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 기회 확대 도모

- 커리어넷을 통한 진로 심리검사(6종) 운영
- 진로결정·직업탐색 지원을 위한 직업진로정보서 개발·보급

○ (성과) 초·중·고학생용 미래의 직업세계 책자 1종 발간으로 당초목표(1건) 달성, 진로 적성검사 이용 실적이 282만건으로 당초목표(250만건) 초과달성 (당초예산 40억원 전액 집행)

- 커리어넷을 통한 진로 심리검사 운영

- 「미래의 직업세계」(학과편) 콘텐츠 업데이트
- 초등학생용 직업만화 책자 개발(3종)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3-16-②)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전직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청년층의 직업경제적 자립 지원과 중장년층의 계속고용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체계의 강화를 도모

- 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정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

○(성과) 직업심리검사 개발 건수 및 직업정보·직업지도 간행물 발간 건수가 10개교 당초목표(6개) 초과달성 (당초예산 46억원 전액 집행)

- 생애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보급 확대
 - 청장년층 및 취약계층 대상 직업심리검사 개발·개정, 검사활용성 제고를 위한 상담자료 및 온라인검사 개발 등(온·오프라인 검사실적 전년 대비 6.47% 증가)
- 세대별 직업진로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고령화에 대비하여 진로지도 콘텐츠 다양화
 - 청년층 대상 취업지원 콘텐츠 개발·개정
-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가 양성
 - 대학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담당교수의 진로지도 연수 실시(60개 대학 100여명)
 - 급증하는 진로지도 수요에 대응하여 고용센터 직원 등 전문가 연수 확대(13,083명 교육)
- 신직업 연구 강화와 직업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정보전달 강화
 - 우선 도입 검토 대상 외국직업 100여개 선별
 - 직업정보 콘텐츠 확대 : '12년 757개 직업 → '13년 783개 직업

□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3-17-①)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장 진입이전 단계인 대학생에 심층 상담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와 노동시장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 도모

- 대학에 직업상담사 및 기업체 근무 경력자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성과) 진로·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비율이 31%로 당초목표(29%) 초과달성, 지원대학 취업률이 58.3%로 당초목표(57.5%) 초과달성 (당초예산 51억원 중 66.7% 집행)
- 113개 대학에서 169명의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표 2-73〉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교육부)(3-16-①)	초중학생용 미래의 직업세계 책자 ¹⁾	1종	1종	100.0	2종	2종	100.0	40	40	100.0
	진로 적성검사 이용 실적	250 만건	282 만건	112.8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 (노동부)(3-16-②)	직업심리검사 개발 건수 및 직업정보·직업지도 간행물 발간 건수	6개	10개	166.7	6건	9건	150.0	46	46	100.0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노동부)(3-17-①)	진로·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비율(프로그램 등 참여자수/ 재학생수*100)	29	31	106.9	25%	29.5%	118.0	51	34	66.7
	지원대학 취업률(지원대학 총 취업률 합계/지원대학수) ²⁾	57.5	58.3	101.4	1.5%p	1.9%p	126.7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사업(교육부)(3-17-②)	전체학생 대비 취업희망자 비율(취업모니터링 조사) ³⁾	65%	68.6%	105.5	350명	478명	136.6	405	405	100.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진로직무매뉴얼 수
 2) '12년 성과지표는 취업지원관 지원 후 취업률 향상정도(취업률/취업지원관 지원전 취업률)
 3) '12년 성과지표는 취업지원관 채용인원

□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사업(3-17-②)

- (목표) 교육부에서는 취업선도학교 지정·운영을 통한 취업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으로 취업중심 특성화고 육성
 -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사업 및 지원인력을 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성과) 전체 학생 대비 취업희망자 비율(취업모니터링 조사)이 68.6%로 당초목표

(65%) 초과달성 (당초예산 405억원 전액 집행)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 제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취업기능 강화 선도학교 440개교 지정·운영
 - 취업지원 인력 473개교 708명 채용지원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세부영역)

□ 실업자 훈련계좌제 확대(3-18)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장년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신속한 재취업·창업 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구직자에 대하여 지원한도(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 훈련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원) 및 훈련 장 려금 지원(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계좌발급 전 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재취업활동(2회), 희망훈련 탐색활동 등 사전 의무 사항 이행 필수
 -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해 훈련 직종별로 훈련비의 25~45%를 훈련생 부담(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D 직종 참여자는 자비부 담 면제)
 -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 80% 이상 수강한 경우 훈련장려금(월 11.6만원 한도) 별 도 지원
- (성과) 계좌발급자 중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참여자의 비율이 91.3%로 당초목표 (68.0%) 초과달성 (당초예산 3,334억원 중 94.7% 집행)
 - 실업자훈련 계좌제 추진실적(신규실업자훈련 790억원, 53,623명; 전직실업자훈 련 2,351억원, 178,556명)

□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19)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훈련 지원을 통한 재직근로자의 능력개 발 기회 확대 도모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지원
 - 다양한 근로자 개인지원방식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학자금 또는 훈련비용을 대부
- (성과) 사업주 능력개발 훈련 참여건수 비율(고용보험피보험자수 대비)이 31.1%로 당초목표(30.0%) 초과달성, 사업주 훈련참여자의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76.3점으로 목표(76점) 초과달성,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 훈련참여자의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85.5점으로 당초목표(80.0점) 초과달성, 근로자학자금 대부 수혜자 만족도가 83.6점으로 당초목표(80.0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4,981억원 중 94.0% 집행)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금 3,337억원(3,294천명)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719억원(263천명)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542억원(212천명)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179억원(51천명)
 -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624억원(16천명)
-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3-20)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제도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장비비, 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비용부담 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고급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참여기회 확대 및 직무능력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 ‘일-학습’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 현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유형별로 70~100%)

- (성과) 직무능력 향상도 평가 결과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84.4%(당초목표 78.6%),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80.8%(당초목표 78.0%),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85.5%(당초목표 79.6%)로 당초목표 초과달성 (당초예산 1,975억 원 중 87.0% 집행)
 -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지원) 168개 운영기관이 32,623개 중소기업의 소속 근로자 등 223,186명에게 맞춤형 훈련 제공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206억원(43천명) 지원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스스로 학습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대상 목표 200개 기업 대비 263개 기업 지원
-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3-21)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 내 숙련기술을 보유한 중·고령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미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강사 양성 등 인프라를 지원하여 체계적 현장훈련 촉진
 - 현장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프로그램, 사내 교·강사양성 등 인프라 지원
 - 우수기술·기능인, HRD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현장교수단’ 도입 및 중소기업 HRD 지원
 - (성과)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의 모듈 개발건수가 2.8건으로 당초목표 (2.7건) 초과달성, 중소기업 HRD 자문 지원 기업 수가 199개로 당초목표(65개) 초과달성 (당초예산 44.25억원 중 96.0% 집행)
 -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지원) 기업 내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증대에 기여
 - (중소기업 HRD 지원)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종사자 수 학과분포 등을 반영한 선정 분야 확대 및 인원 확충(기계 등 10개 분야 151명 선정), 중소기업HRD종합서비스 지원 199개 기업,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412명 등

〈표 2-74〉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3-18)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참여자/계좌발급자 ×100	68.0 %	91.3	134.3	68.0%	86.3%	126.9	3,334	3,158	94.7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3-19)	(사업주능력개발훈련참여건수/고용보험피 보험자수)×100 ¹⁾	30.0 %	31.1	103.7	35.0	31.0	88.6			
	(사업주훈련)훈련참여자의 훈련과정에 대 한 만족도 조사 ²⁾	76.0 점	76.3	100.4	75.5	80.9	107.2			
	(사업주훈련)사업주 및 훈련참여자에 대 한 직무능력 향상 정도 조사	-	-	-	77.6	82.3	106.1	4,981	4,680	94.0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훈련참여자의 훈 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²⁾	80.0 점	85.5	106.9	78.0	82.3	105.5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학자금대 부 수혜자 만족도 ²⁾	80.0 점	83.6	104.5	87.3	86.6	99.2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 (3-2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참여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참여자의 직무 능력향상도에 대한 설문조사 ³⁾	78.6 %	84.4 %	107.4	75.5	78.6	104.1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훈련참 여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참여자의 직무능력향상도에 대한 설문조사 ³⁾	78.0 %	80.8 %	103.6	75.5	80.5	106.6	1,975	1,718	87.0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훈련참여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훈련참여자의 직무능 력향상도에 대한 설문조사 ³⁾	79.6 %	85.5 %	107.4	75.5	86	113.9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3-21)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기업의 모듈 개발건수(모듈개발건수/지원기업수) ¹⁾	2.7건	2.8건	103.7	300 개	305 개	101.7			
	(중소기업 HRD 자문지원) 지원 기업 수	65개	199 개	306.2	30개	97개	323.3	44.25	42.47	96.0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재직자직업훈련건수/고용보험피보험자수)×100
2) 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세부영역)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2)

- (목표) 교육부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재직근로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일-학습 병행 후진학 교육체제 구축으로 시·공간적 제약없는 교육환경 구축 도모
-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고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3년)으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및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확대·시행

- (계약학과·사내대학 활성화 추진) 채용을 조건으로 학과를 개설·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 확대를 위하여 기업부담 교육경비 조정(100%→50%), 산업체가 사업장내에 교육장을 설치·운영하는 사내대학 설치인가 확대
- (성과) 전문·희소계열 특성화학과 구축을 4분야에서 준비하여 당초목표(4분야) 달성 (당초예산 28억원 전액 집행)
 -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운영 70교 4,462명 모집, 전문·희소분야 대표학과 설치 4분야
 - 재직경력 등의 대학 학점 인정
 - 선취업후 재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근무경력의 대학 학점 인정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학업부담 경감 지원(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기능·기술인재를 위한 해외 유학프로그램 추진 계획 수립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
-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3-23)
 - (목표)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성인을 새로운 입학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체제개편을 통해 성인 계속교육 및 재교육 기능을 강화토록 지원함으로써 학습-학력-일의 연계 경로 확립
 - 대학의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체제 개편을 지원
 - 선정된 대학은 3년간 지원하되, 1년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계속지원에 반영
 - (성과) 지원대학별 성인친화형 관련 학과 수가 138개로 당초목표(100개) 초과달성 (당초예산 275.08억원 전액 집행)
 - 직무능력 향상 및 취·창업과 연계되는 성인친화형 대학을 육성하여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산업체 수요기반 실무교육 강화(학위과정 34개교 선정·지원)
 - 재직자·은퇴자 등 다양한 교육 희망 수요를 반영한 자격·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재취업 친화적 교육 제공(비학위과정 13개교, 64과정)
 - 평생학습 중심대학(5개) 참가, 11,000여명 대상 홍보

□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3-24)

- (목표) 교육부에서는 국민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및 체제 구축, 베이비 붐 세대 퇴직자 등 중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 등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정·운영 지원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및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성과)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형식교육 참여자+비형식교육 참여자-동시 참여자 추정치)/(만25세~만64세 성인수)이 40.1%로 당초목표(36.6%) 초과달성 (당초 예산 137.75억원 전액 집행)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운영 지원을 통한 시·도 단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군·구 시책과 연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학습공동체 형성 및 학습형 일자리 확대
 -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 평생학습계좌제 확대(3-25)

- (목표) 교육부에서는 평생학습 결과를 학력·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 기록
 -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 관리·운영
 - (학습과정 평가인정 실시) 평생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질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평생학습계좌제 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인정
 - 누적된 학습결과의 활용 도모
- (성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학습계좌를 개설한 학습자 누적인원이 15,614명으로 당초목표(5,000명) 초과달성,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 평균 접속 건수가 3,971건으로 당초목표(650건) 초과달성 (당초예산 7.3억원 전액 집행)
 - 7차와 8차 학습과정 평가인정 추진(483개 기관, 2,352개 프로그램 등록)
 -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신규 기능 도입(개인별 학습패턴 진단 및 연계 가능 직업정보

기능 구축)

- 제도 확산 및 운영 인지도 제고
 - 산업별 실무협의체 구성,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 사용자 가이드 제작 등
- 유관기관 및 시스템 간 연계 확대(EBS, 중앙교육연수원, 농림수산물정보문화원, 새마을금고, 한국방송대학교 등)
- '13년 평생학습프로그램 평가인정 및 검정고시 과목 면제 사업 등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 강화(3-26)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근로자 직업능력 제고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일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여 교육훈련-자격의 산업현장성을 강화하고 work to school 및 school to work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개발
 - 산업현장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 체계를 구축
 - 일-훈련-자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완료)
- (성과) NCS 254직종 개발로 당초목표(50직종) 초과달성, NCS 활용패키지 254종 개발로 당초목표(40종목) 초과달성,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105종목 정비로 당초 목표(80종목) 초과달성 (당초예산 163.8억원 전액 집행)
 - (NCS 개발) 현장(일)을 정확히 반영한 개발체계를 마련하여 254개 및 활용패키지 개발 완료
 - (자격제도) 이론·학과 중심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및 자격종목을 NCS에 맞게 실무·현장 중심으로 개편
 - 산업현장에 적합한 국가기술자격체계 구축
 - (자격검정 현장전문가비율 확대) 출제기준 마련 및 자격검정 시 현장전문가 비율 70%이상 위촉
 - (자격검정기관의 전문화·다양화) '08년 이전 2개 기관 → '13년 8개 기관

〈표 2-75〉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2)	전문·희소계열 특성화학과 구축 준비 ¹⁾	4분야	4분야	100.0	23교	23교	100.0			
	(사내대학 입학기준 완화)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		-		평생교육법시행령개정	평생교육법개정중	0.0	28	28	10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3-23)	지원대학별 성인친화형 관련 학과 수 합계 ²⁾	100	138	138.0	30,000	40,283	134.3	275.08	275.08	100.0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3-24)	(전국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형식교육 참여자추정치+비형식교육참여자추정치-동시참여자추정치)/(만25세~만64세 한국성인수)×100 ³⁾	36.6	40.1	109.6	12	28	233.3	137.75	137.75	100.0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서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표집설문조사		-		75%	86%	114.7			
평생학습 강좌제 확대 (3-25)	학습계좌 개설 인원수	5,000명	15,614	312.3	3,000명	4,620명	154.0	7.3	7.3	100.0
	학습이력관리시스템 월 평균 접속 수	650	3,971	610.9		-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 강화 (3-26)	NCS 개발 개수	50 직종	254개	508.0	30 직종	31 직종	103.3			
	NCS 활용패키지 개발 개수 ⁴⁾	40 종목	254개	635.0	40개	40개	100.0	163.8	163.8	100.0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정비 종목수	80종목	105종목	131.3	92종목	93종목	101.1			

주: 1) '12년 성과지표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대학교 수
 2) '12년 성과지표는 (평생학습 선도대학·중심대학)지원대학 학위과정에 등록된 성인학습자 수
 3) '12년 성과지표는 평생학습도시 재정지원 도시 수
 4) '12년 성과지표는 Competency Map 작성개수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세부영역)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3-27)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투자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당해 연도에 점검·감독기술지원 사업장 중에서 선정(건설업 제외)

- 클린사업장 인정사업(전체개선)과 산업재해 위험요인 일부 개선사업(일부개선)으로 구분
- 최대 2천만원(일부 개선은 1천만원)까지 소요비용의 50~80% 지원, 고용 증가 시 1천만원까지 지원한도 증액
- (성과) 지원 사업장 재해감소율이 35.6%로 당초목표(27.8%) 초과달성 (당초예산 1,015억원 전액 집행)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통해 재해율이 지원 전보다 평균 30% 감소
-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3-28) **【종료 과제】**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는 산업재해 수준(재해율 0.7%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사 자율적 안전보건체제 구축 등 자율 안전보건실천문화 정착 도모
- (성과) 2012년 사업종료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3-29)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외국인, 고령·여성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안전보건관련 자료 보급을 통한 재해예방에 기여 도모
- 외국인, 고령·여성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지원 및 밀집지역 순회 안전교육 실시
 - 고령·여성근로자 다수 근무사업장에 대한 직능단체 등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재취약계층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사용자 중심의 자료 개발, 보급
- (성과) 취약계층(여성·고령, 외국인) 교육지원 실적이 138,368명으로 당초목표(71,500명) 초과달성 (당초예산 4.1억원 전액 집행)
- 안전보건 교육(외국인근로자 44,074명, 고령·여성근로자 교육 94,294명)
- 자료 개발 보급(외국인근로자 교육 51종, 고령·여성근로자 교육 24종)
-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3-30)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증진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촉진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 중 10인 미만 사업장(특검은 건설일용 근로자 포함)에 대해 소요비용 지원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활동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 (성과)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기업이 17,117개소로 당초목표(7,000개소) 초과달성, 특수검진대상 근로자의 평균 특수검진 지원대상이 75,889명으로 당초목표(70,000명) 초과달성, 건강증진활동 비용이 7.66억원으로 당초목표(7.7억원)의 99.5% 달성 (당초예산 109.43억원의 98.9% 집행)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7,117개소, 55.23억원)
 -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 75,889명, 45.32억원)
 -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415개소, 7.66억원)

〈표 2-76〉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개선(3-27)	지원사업장 재해감소율[(지원전 재해율-지원후 재해율)/지원전 재해율]× 100	27.8%	35.6%	128.1	21.0%	34.2%	162.9	1,015	1,015	100.0
노·사 자율적 산재 예방활동 정착(3-28)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 사업)인정서 발급 사업장수	종료과제			3,000개소	5,404개소	180.1	-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3-29)	취약계층(여성·고령, 외국인) 교육지원 실적	71,500명	138,368명	193.5	57,700명	110,891명	192.2	4.1	4.1	100.0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3-30)	(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측정대상 사업장의 평균 측정비용지원 사업장수	7,000개소	17,117개소	244.5	7,000개소	9,633개소	137.6	109.43	108.21	98.9
	특수검진대상 근로자의 평균 특수검진 비용지원 근로자수	0명	75,889명	108.4	70,000명	75,618명	108.0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7.7억원	7.66억원	99.5	8억원	8.08억원	101.0			

[2]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세부영역)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31)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해 산재 및 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및 조기 사회복귀 촉진
 - 심리 불안 해소와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실시
 - 산재근로자 재활의욕 향상을 위한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 (성과) 주치의 소견, 다차원 심리검사 등의 경로로 사회심리재활 필요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이 63.9%로 당초목표(55%) 초과달성 (당초 예산 28억원 전액 집행)
 -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다차원심리검사 6,790건을 실시하여 심리 불안상태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집중심리상담(250건) 실시
 - 재활의욕 고취 및 사회·고용시장 복귀 지원을 위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스포츠 1,208명
 - 요양중 산재환자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희망찾기프로그램 3,055명
 - 산재장애인 사회적응 능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 373명
 - 성공적 재활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1,512명
 -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가족화합프로그램 운영 296명

□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32)

- (목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조기 사회정착 도모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비용 지원을
 - 원직장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산재장애인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훈련비용(60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및 훈련수당 지원(훈련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의 50~100% 차등 지원)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 (성과) 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 중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직업복귀자 비율이 58.2%로 당초목표(49.6%) 초과달성 (당초예산 188억원 중 92.6% 집행)

- 산재근로자의 고용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비용과 수당을 3,535명에 지원
-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지원을 위해 사업주에게 원직장복귀지원비, 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2,440명에 지원

〈표 2-77〉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31)	주치의 소견, 다차원심리검사 등의 경로로 사회심리재활 필요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한 비율 측정 ¹⁾	55%	63.9	116.2	1,800명	2,002명	111.2	28	28	100.0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32)	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 중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직업복귀자 비율 [(직업복귀자/요양종결한 산재근로자 중 재활서비스 이용자)×100]	49.6	58.2	117.3	48.8	52.6	107.8	188	174	92.6

주: 1) '12년 성과지표는 '내일찾기' 대상자 중 직업복귀자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 개선 등 3개의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구성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1] 교육분야 제도 개선(세부영역)

□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3-33)

○ (목표) 교육부에서는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대학의 경영 악화는 결국 교육부실을 초래하므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경영 부실대학 단계로 체계화하여 구조개혁 추진
- 중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 등을 거쳐 퇴출 조치
- 부실대학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구조조정 관련 법안 마련 노력

•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병주 의원 대표발의('12.7.27)

○ (성과) 대학관계자의 만족도가 82점으로 당초목표(79점) 초과달성 (당초예산 20억 원 전액 집행)

- (신규지정) '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부실대학 4개교 지정
- (이행점검) 경영부실대학('10~'12년)의 구조조정 과제 이행 점검
 - 구조조정 노력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된 대학은 경영부실대학에서 해지('12년 2교, '13년 4교)
- (개선효과) 총 10개교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구조조정과제 도출
- (양적효과) 대학간 통폐합(8교→4교), 입학정원 감축(6,660여명), 학과 개편(280여개 학과), 학생 교육환경 개선 투자(약 2,200억원), 대학재정 확충(약 1,190억원), 학과 특성화 유도 등
- (질적효과) 재학생충원율 96.5%(7% 상승), 전임교원확보율 67.4%(12% 상승), 교육비환원율 135.7%(25% 상승) 등 지원대학의 핵심지표 평균값 상승 등

□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3-34)

○ (목표)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선도모델 창출·확산 및 지식 융합시대의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선진화

-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부교육 선진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 대학 중점 지원
- 교육과정과 교육지원 시스템의 총체적 선진화 병행
 - 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첨단 교육환경 구축 지원
 -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학사조직 혁신, 교육의 질관리 체계 구축, 교수 업적평가 제도 개선

○ (성과) 진학자, 입대자 등 취업 불가능자를 제외하고 ACE 사업 선정대학의 졸업대상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57%로 당초목표(59%)의 96.6% 달성 (당초예산 600억 원 전액 집행)

- '12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육성 사업 우수사례 공모·선정(특성화된 학부교육 프로그램 등 1개 분야, 4개교 선정)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실시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상시 컨설팅 실시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대학사회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자율적 협의체인 'ACE 협의회'에 의한 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학부교육 우수 선도모델 상호교류 및 확산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3-35)

○ (목표) 교육부에서는 학령인구 지속적 감소, 개발사업지역 신설학교로의 학생이동 심화, 농산어촌·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급증 등의 문제를 종합 관리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 강화 도모

- 재정 투·융자심사 강화 등을 통한 학교 신설수요 적정관리
- 학교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학교 이전 촉진
-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 (성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수가 58개교로 당초목표(60개교)의 96.7% 달성, 학교수용시설 중앙재정투자심사 신청건수 대비 적정·조건부 추진 건수 비율이 72.1%로 당초목표(64%) 초과달성 (당초예산 1,863억원 전액 집행)
 -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도심지역 소규모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공청회·홍보자료 제작비 등 2.4억원)
 - 학교급별 통폐합 학교 재정 지원 확대
 - 학교신설 및 통폐합 사업 투자심사를 정기 1회 및 수시 3회로 운영하여 총 197건 (46,468억원) 중 142건 추진(72.1%)

<추진상 애로점>

- ▶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등의 사유로 통폐합 반대
- ▶ 통폐합 대상교에 사립학교가 포함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법인이 학교의 폐교 반대로 지역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차질
- ▶ 학교 통폐합 시 교육공무원(교장·교감)의 정원감축이 발생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추진에 장애로 작용
- ▶ 교육재정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학교 신·증설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3-36)

※ 1-41 (교과부) '3~5세 누리과정' 도입 과제에 포함되어 별도의 시행계획 없음

<표 2-78>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3-33)	대학관계자대상 만족도조사 후 100점만점으로 환산	79점	82점	103.8	76	84.1	110.7	20	20	100.0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3-34)	(ACE 사업 선정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취업자/졸업대상자(진학자, 입대자 등 취업 불가능자 제외)	59%	57%	96.6	60.6%	58.4%	96.4	600	600	100.0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3-35)	(소규모학교 통폐합) 통폐합 학교 수	60개교	58개교	96.7	100교	63교	63.0			
	(학교수용시설 재정투자심사 강화) (중앙 투융자심사 신청건수/적정·조건부 추진건수)×100	64%	72.1%	112.7	64%	76.8%	120.0	1,863	1,863	10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3-36)	-	1-41-1-① '5세 누리과정' 도입과 중복된 과제로 별도의 시행계획 내용 없음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1] 주택분야 제도 개선(세부영역)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3-37)

- (목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화,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및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 도모
- (성과)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으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2차 장기주택종합계획('13~'22) 수립

□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3-38)

- (목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주택수요에 적기에 대처 추진
 - 고령자 및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게 주택을 지원
- (성과) 기 추진 중인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표 2-79〉 주택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3-37)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여부 ¹⁾	수급계획 수립	중장기 주택 수급계획 수립(13.12)	100.0	소형주택 (6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호)	도시형 생활 주택 (10.9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6만호)	181.7 130.0	비예산		
고령층의 주택 수요에 선제적 대응(3-38)	특별(우선)공급 추진 여부	100	100	100.0	100	100	100.0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계획목표대비 달성도

[2] 금융분야 제도 개선(세부영역)

□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수립(3-39)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자산시장 연구 및 대응정책 수립으로 고령화 대응정책의 영역 확장 도모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변화 전망을 예측하여 대응전략 수립

○ (성과)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마련으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퇴직연금 상품(DC, IRP)의 예금자 보호 추진

-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 고령자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지급하는 주택연금 활성화

- 임금피크제를 수반하는 정년연장 및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노케어 활성화

□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3-40)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주요한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기금규모 확대('00년 61조원 → '12.9월 386조원)에 따른 해외 및 대체 투자 증대

등 기금의 투자 다변화 지속추진

-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의 역량 강화

○ (성과) 금융부문 기금투자액 대비 해외대체 투자액 비율이 23.3%로 당초목표(22%)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해외투자 효율화를 위한 외화계좌 개설의 법적 근거 마련

•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계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금고은행 선정(우리은행) 및 외화사이버뱅킹시스템 구축 컨설팅 추진

- 기금운용 역량강화를 위해 '13년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인력을 38명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책임투자팀, 해외인프라팀 등 신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검토(3-41)

○ (목표) 금융위원회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및 공적연금의 보완 등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서 퇴직연금 활성화 도모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DC 및 IRP의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금지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추진

•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가 안정성 및 담보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효과적 자산운용 불가

*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를 금지하여 고수익을 기대하는 가입자 불만 야기

○ (성과)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 방안 발표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율 축소를 위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으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율 축소 (70% →50%)

- 위험자산 투자한도 완화 등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표 2-80〉 금융분야 제도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수립(3-39)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마련	100%	100%	100.0	-			비예산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3-40)	(해외·대체 투자액/금융부문 기금투자액)×100	22%	23.3	105.9	19%	21%	110.5	비예산		
	해외사무소 개소수	-			1개소	1개소	100.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검토(3-41)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 운용규제 완화방안 발표 여부 ¹⁾	방안발표	방안 발표	100.0	개정 완료	개정 완료	100	비예산		
	(불공정거래 방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율 축소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감독규정 개정 완료	100.0	-					

주: '12년 성과지표는 감독규정 개정 여부

2-3. 중장기 재정의 지소가능성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소영역)

[1] 미래 재정위험대비 재정건정성 유지(세부영역)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42)

○ (목표) 기획재정부에서는 미래 재정위험 관리 강화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금·의료 등의 분야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진
- 최신 국제기준('01 GFS 등)에 부합하는 재정통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공표

○ (성과)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마련으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종합 장기재정전망보고서 작성) 분야별 장기재정보고서를 토대로 중앙정부 총세입총지출 등 총량지표를 산출하고 시나리오 전망 분석 등을 실시하여 장기재정 종합보고서(시안) 마련

〈표 2-81〉 미래 재정위험대비 재정건정성 유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42)	장기재정전망보고서 마련 여부	보고서 작성	'13.하반기 보고서 작성 완료	100.0	-			비예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국가채무/GDP		-		33.3	34.8	95.7				
	(개편된통계산출기준에따라 재정통계작성·공표) 재정통계 작성·공표		-		재정통계 작성·공표	보도자료 배포, 기자 브리핑	100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등 3개 소영역으로 구성

[그림 2-9]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구성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

[1]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세부영역)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3-43)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내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평가를 수행, 근거 중심의 제품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친화제품 품질경쟁력 제고 도모
 - 고령친화제품 사용실태에 대한 사용성평가를 통한 제품별 안전성·편의성 증진 기술개선 컨설팅 지원
 - 고령친화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사용성평가 기준 개발 및 보급
- (성과) 3개 품목에 대한 사용성 평가 실시로 당초목표(3품목) 달성 (당초예산 8.5억 원 전액 집행)
 - 고령친화 제품 사용성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결과 보급
 - 감성교감 실버로봇, 이동보조 서비스로봇, 고령자용 청소로봇 3개 품목(3개 제품)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결과 및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 지표 DB구축 및 정보 제공
-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확대(3-44)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공급업체 정책 수요조사 실시
 - 복지용구 사용성 증진 연구 등 고령친화제품 R&D 지원
 - (성과) 고령친화용품 실태조사 2회 실시로 당초목표(1회) 초과달성, 고령친화친화 제품 연구기관 1개소 지원으로 당초목표 달성 (당초예산 10억원 전액 집행)
 - 고령친화요양산업 실태조사 실시
 - 고령친화보건산업 사례조사 실시
 -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R&D사업 연구과제 연차 평가
 - 연구과제 지원(고령친화용품 2과제, 고령친화식품 2과제)

〈표 2-8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3-43)	사용성 평가 실시	3개 품목	3개 품목	100.0	3개 품목	3개 품목	100.0	8.5	8.5	100.0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확대(3-44)	고령친화제품 실태 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1회)	2회	200.0	1회	1회	100.0	10	10	100.0
	고령친화제품 개발 연구(전문)기관 지원	1개 연구(전문)기관 지원	1개 연구(전문)기관 지원	100.0	1개 기관	1개 기관	100.0			

[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세부영역)

□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3-45)

-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 및 고령자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제정·보급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생활안전성 확보 및 고령자 삶의 질 제고
 - 고령친화제품, 고령자 이용시설, 고령자의 편리한 생활영위를 위해 접근성 설계를 활용한 생활제품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
- (성과) 표준 제·개정 종수가 19종으로 당초목표(16종) 초과달성 (당초예산 1억원 전액 집행)
 - KSP8420 미관용 의수 등 국내표준 1종과 KSPISO7176-13 휠체어 등 18종 표준을 포함하여 19종의 관련 표준 확인

□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3-46)

-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고령자·장애인 관련 기술위원회와 국제 표준협력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제품의 경쟁력 향상 도모
 - 고령친화제품 관련 기술위원회인 TC 159(인간공학), TC 173(장애인용 보조기구) 국제표준화 회의참석·의견개진, 국제문건 투표·의견제시 등
 - 동북아국가 표준협력포럼 등 국제간 표준협력 강화
- (성과) 회의참석, 국제문건검토, 전문위원회, 국가간협력 등 총 회수가 54회로 당초 목표(50회)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국제표준화기구(ISO) TC159 및 TC173 등 고령자장애인 복지용품 관련 국제회의 및 접근성 설계 관련 회의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동향 파악 및 아국 의견 개진
- 국내 전문위원회를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 논의 및 국제문서 검토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고령자장애인 관련 국제표준 검토를 위한 국내 전문가 추천
- 동북아 국가 표준협력포럼 등 국제간 표준협력 강화('13.6, 부산)

〈표 2-8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3-45)	표준 제·개정 종수	16종	19종	118.8	12종	16종	133.3	1	1	100.0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3-46)	∑(회의참석+국제문건검토+전문위원회+국가간협력)	50	54	108.0	22	57	259.1	비예산		

[3]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세부영역)

-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3-47)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활성화 및 고령친화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도모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제도 대상 품목 확대 및 지정기준 마련
 - (성과) 제품·서비스 표준 확대수가 2건으로 당초목표(2건) 달성(비예산사업)
 - 확대품목 선정위원회를 통해 2개 확대품목 선정
 - 고령친화우수제품 확대품목 단체표준제정 신청
 - 고령자용 의류, 고령자용 상·하지 운동보조기기 등
-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평가(3-48),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3-49),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선(3-50)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지

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선택기준 마련

- 우수제품(총 21개 품목) 지정제도 운영
-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평가
- (성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1회, 고령친화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 1회, 고령친화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2건,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센티브 개발 3건으로 당초목표 (초과)달성(비예산사업)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원혜택 확대
- 고령친화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산업 전문가양성 교육 실시
- 고령친화서비스 발굴 및 가이드라인 개발

□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등 향노화산업 육성(3-51)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용 화장품 신소재 개발(Anti-aging, 피부 노화 완화 등), 수출 지원, 규제 완화로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약 5.2년)를 단축하기 위해 기업이 투자 실패를 우려하는 신소재·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
 - 유망 중소기업 등의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영
 -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성과) 피부특성 정보 구축 4개국으로 당초목표(3개국) 초과달성 및 화장품 국내외 특허건수 22.9건으로 당초목표(6.4건) 초과달성 (당초예산 149억원 전액집행)
 -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글로벌 진출 인프라 구축
 - 미래 화장품 시장 선도 기술 육성을 통해 제품화 성과 창출 및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획득(국내 특허등록·출원 75건, 국외 특허출원 6건)
 - 맞춤형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산 화장품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마케팅 지원(미국 뉴욕, 말레이시아)
 - 화장품산업 글로벌화 추진전략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표 2-8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우수제품 지정·표시 제도 확대(3-47)	제품·서비스 표준 확대수 ¹⁾	2건	2건	100.0	2	2	100.0	비예산(3-44 과제에 포함)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평가(3-48),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3-49),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 개선(3-50)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²⁾	1회	1회	100.0	1건	1건	100.0	비예산(3-44 과제에 포함)		
	고령친화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	1회	1회	100.0						
	고령친화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2건	2건	100.0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센티브 개발	2건	3건	150.0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등 향노화 산업 육성 (3-51)	피부특성은행 구축 국가수	3	4	133.3	3개국	3개국	100.0	149	149	100.0
	화장품 국내·외 특허건수 ³⁾	6.4	22.9	357.8	15건	16.7건	111.3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우수제품(서비스) 확대품목 기준마련
 2) '12년 성과지표는 고령친화 우수제품 등 지정제도 개선(안) 마련
 3) '12년은 (국내특허 출원건수×0.3)+(국내특허 등록건수×0.7)+(국외특허 출원건수×0.5)+(국외특허 등록건수×2.5), '13년은 (국내특허 출원건수×0.3)+(국내특허 등록건수×0.7)+{(국외특허 출원건수×0.2)+(국외특허 등록건수×0.8)}*3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1] 국내 수요기반 확충(세부영역)

-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3-52),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3-54)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산업계에 제품 홍보의 기회를 부여,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기능 및 사용방법 등 정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고령친화산업 수요기반 확충
 - 고령친화산업 관련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등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홍보 활성화
 -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유공자 발굴 및 포상
 - 고령친화산업 정보은행 운영
 - (성과) 박람회 운영·지원 3건으로 당초목표 달성, 유공자(기업) 발굴 및 표창 11건으로 당초목표(8건) 초과달성, 체험관 설치·운영 5개소로 당초목표 달성 (비예산사업)
 - 2013액티브에이징코리아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고령친화산업박람회연계 우수제품홍보관 운영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 고령친화우수기업·유공자 발굴 및 포상
-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홍보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3-53)

-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전시, 체험, 정보의 종합 제공으로 수요기반 조성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고령자 삶의 질 향상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을 전시·체험하고, 고령친화산업 수요창출을 위한 거점(Hub)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체험관 구축
- (성과) 전시참관객수가 152,448명으로 당초목표(60,000명) 초과달성 (비예산사업)
 -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3개소(광주, 대구, 성남) 구축 및 운영
 - 체험관 참관객수 152,448명, 교육훈련 참여자수 39,699명, 제품 상담건수 2,476건

〈표 2-85〉 국내 수요기반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3-52)	박람회 운영·지원	3건	3건	100.0	2건	2건	100.0	비예산(3-45 과제에 포함)		
	유공자(기업) 발굴 및 표창	8건	11건	137.5	6건	8건	133.3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3-54)	체험관 설치·운영	5개소	5개소	100.0	2개소	2개소	100.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3-53)	체험관 참관객 수	60,000명	152,448명	254.1	72천명	54,323명	75.4			비예산

[2]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세부영역)

-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3-55),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지원(3-56)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 해외시장 정보 조사 및 제공을 통한 고령친

화산업 해외 수출 지원

- 해외진출 정책 수요조사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 (성과) 수출정보 DB 100건 구축 및 해외진출협의체 4회 운영(목표 3회)으로 당초 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 정보 자료수집 및 정보 제공(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 정보 수집 100건)

- 고령친화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협의체」 운영

- 고령친화제품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표 2-86〉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3-55)	수출정보 DB 구축 건수	100건	100건	100.0	100건	100건	100.0	비예산(3-44 과제에 포함)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지원(3-56)	해외진출협의체 운영	3회	4회	133.3	3회	3회	100.0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소영역)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3-57)

○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환자가 아닌 일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및 취향을 고려한 기준·규격 설정

- 고령친화 식품이 개발되어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
 • 고령친화 식품의 유형 분류 및 관리방안 제시

○ (성과)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험법 적용성 검토 1건으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안) 신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험법 검토

□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3-58)

○ (목표)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령친화식품 신규시장 기반 구축

- 고령친화식품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사업에 대한 국내 식품업체의 수요조사

- 고령친화식품 대상 식품유형 검토 및 평가기준 설정
-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마케팅 지원방안 마련
- (성과) 고령친화식품인증기준 1건 작성으로 당초목표 달성(비예산사업)
 - 건강기능식품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기준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건강기능식품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기준 개발’ 정책 포럼 개최
 - ‘건강기능식품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기준 개발’ 연구 수행
 - 고령친화식품 인증제 적용 대상 식품 확대를 위한 협의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 근거 법률 개정을 위한 협의(계속)

〈표 2-87〉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13			2012			2013		
		목표치	실적	달성률 (%)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률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 신설(3-57)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험법 적용성 검토 ¹⁾	1건	1건	100.0	1건	1건	100.0	비예산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3-58)	고령친화식품인증기준	1건	1건	100.0	1건	1건	100.0	비예산		

주: 1) '12년 성과지표는 시험법검토 등 고령친화식품기준·규격(안)신설의 타당성조사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 목표달성도 평가

가. 총괄

- 2013년도 전체 평가대상 과제(226개, 완료 및 성과지표 없는 과제 19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수는 188개로 83.2%를 차지
- 총 212개 과제(93.8%)가 목표의 90% 이상 달성
 - 24개(10.6%) 과제는 목표의 90~100% 미만 달성
- 목표달성도가 50~90% 미만인 과제는 11개(4.9%), 50% 미만으로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3개(1.3%)

〈표 2-8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수, %)

분야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성과지표 없는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2 (0.9)	1 (0.4)	1 (0.4)	10 (4.4)	24 (10.6)	188 (83.2)	226 (100.0)	14/5
저출산 분야	1 (1.2)	-	1 (1.2)	1 (1.2)	11 (13.1)	70 (83.3)	84 (100.0)	7/4
고령사회 분야	1 (1.2)	1 (1.2)	-	7 (8.1)	10 (11.6)	67 (77.9)	86 (100.0)	5/1
성장동력 분야	-	-	-	2 (3.6)	3 (5.4)	51 (91.1)	56 (100.0)	2/0

□ 2013년도 목표 달성도는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의 순으로 나타남

○ 당초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한 과제는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평가대상 56개 과제 중 91.1%, 저출산 분야의 경우 84개 과제 중 83.3%, 고령사회 분야의 경우 86개 과제 중 77.9%로 나타남

- 당초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한 과제의 비율은 성장동력 분야 96.5%, 저출산 분야 96.4%, 고령사회 분야 89.5% 순

○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과제는 저출산 분야 1개(1.2%), 고령사회 분야 2개(2.4%), 성장동력 분야 0개

- 목표달성도가 50~90% 미만인 과제는 저출산 분야 2개(2.4%), 고령사회 분야 7개(8.1%), 성장동력 분야 2개(3.6%)

나. 분야별 목표달성도

(1) 저출산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중영역별로 당초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88.0%,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85.7%,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70.6% 순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100.0%,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97.6%,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88.2% 순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에 1개 과제임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소영역별로는 모든 과제가 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한 영역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에는 없고,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중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중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소영역)’임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중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소영역)”은 40%,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과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은 각각 83.3%가 당초목표의 100% 이상 달성.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중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은 83.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는 75.0%,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은 84.2%가 당초목표의 100% 이상 달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중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는 75%,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은 85.7%,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소영역)”은 90.9%가 당초목표의 100% 이상 달성

〈표 2-89〉 2013년도 저출산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성과지표 없는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저출산 분야	1 (1.2)	-	1 (1.2)	1 (1.2)	11 (13.1)	70 (83.3)	84 (100.0)	7/4 ¹⁾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1 (5.9)	-	-	1 (5.9)	3 (17.6)	12 (70.6)	17 (100.0)	5/2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1 (20.0)	-	-	1 (20.0)	1 (20.0)	2 (40.0)	5 (100.0)	5/0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	-	-	-	1 (16.7)	5 (83.3)	6 (100.0)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	-	-	-	1 (16.7)	5 (83.3)	6 (100.0)	0/2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	1 (2.4)	-	5 (11.9)	36 (85.7)	42 (100.0)	2/2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	-	-	-	1 (16.7)	5 (83.3)	6 (100.0)	1/0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	-	-	2 (25.0)	6 (75.0)	8 (100.0)	-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	-	-	-	9 (100.0)	9 (100.0)	1/2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1 (5.3)	-	2 (10.5)	16 (84.2)	19 (100.0)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	-	-	3 (12.0)	22 (88.0)	25 (100.0)	-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	-	-	1 (25.0)	3 (75.0)	4 (100.0)	-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	-	-	-	1 (14.3)	6 (85.7)	7 (100.0)	-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	-	-	-	1 (9.1)	10 (90.9)	11 (100.0)	-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	-	-	3 (100.0)	3 (100.0)	-

주: 1) 기 종료과제는 6개, 향후 후진 과제로 '13년 추진계획이 없는 과제는 1개, 성과지표가 없는 과제가 4개임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나 성과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100% 이상은 100%로 하여 평균 산출

□ 과제별 목표달성도

○ 저출산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3개(84개 과제 중 3.6%)로 나타남

- 0% 달성 과제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 50~70% 달성 과제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 70~90%미만 달성 과제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 90~100% 미만 달성 과제는 11개로 총 84개 과제 중 13.1%

- <육아휴직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 <직업체험 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해소 지원 강화>

<표 2-90> 2013년도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1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1-6)
1~50%미만	0	
50~70%미만	1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1-53)
70~90%미만	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10)
90~100%미만	11	-육아휴직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1-1)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강화(1-14)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추진(1-22-①, 1-22-②)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1-30-②)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37)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강화(1-39)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1-62)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1-68)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1-73)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1-81-①, 1-81-②)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1-89)
	70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 강화(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여건 조성(1-5)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 확산(1-11) -시간제근무 활성화(1-12)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1-13) -‘스마트 워크’ 도입 및 확산(1-15)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1-16)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1-17-①, 1-17-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1-18)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1-19)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1-20)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100%이상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1-21)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1-25)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1-26)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1-28)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1-29)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1-31)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1-32)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1-33)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1-34)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35)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1-36) -영유아 건강관리(1-38)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맞벌이가구, 다문화가족 자녀보육교육비,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1-40, 1-42, 1-43, 1-44)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1-41-①),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3-4세 확대 시행(1-41-②) -양육수당 지원 확대(1-45) -돌봄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1-47)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1-50)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1-5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5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1-54)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55)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1-56)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1-57)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내실화(1-58)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1-59) -실수요자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1-60)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1-6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1-63)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1-64)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1-6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1-66) -초등 중일돌봄교실 확대(1-67)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9)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1-70)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1-71)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확대(1-72)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보급(1-74)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1-75)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실시(1-76) -휴먼 네트워크 확대(1-77)
100% 이상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1-78)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1-79)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1-80)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1-8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1-83-①, 1-83-②)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1-84)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1-85)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시설의 확충(1-86)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1-87)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1-88-①),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아 동안전지킴이)(1-88-②) -흡연음주 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1-90-①, 1-90-②), 음주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1-90-③)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1-9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1-92)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1-93)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1-94)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1-95)

주: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나 성과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100% 이상은 100%로 하여 평균 산출

(2) 고령사회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고령사회 분야 중영역별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81.8%(27개),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81.8%(9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73.8%(31개) 순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97.0%(32개),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85.7%(36개),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81.8%(9개) 순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의 2개 과제이며, 다른 중영역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1〉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성과지표 없는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고령사회 분야	1 (1.2)	1 (1.2)	-	7 (8.1)	10 (11.6)	67 (77.9)	86 (100.0)	5/1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 (2.4)	1 (2.4)	-	4 (9.5)	5 (11.9)	31 (73.8)	42 (100.0)	4/1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 (4.0)	-	-	2 (8.0)	3 (12.0)	19 (76.0)	25 (100.0)	3/0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	-	1 (12.5)	1 (12.5)	6 (75.0)	8 (100.0)	1/0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1 (16.7)	-	-	1 (16.7)	4 (66.7)	6 (100.0)	0/1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강화	-	-	-	1 (33.3)	-	2 (66.7)	3 (100.0)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	-	1 (3.0)	5 (15.2)	27 (81.8)	33 (100.0)	-
2-1. 일자리 사업 내실화	-	-	-	-	1 (33.3)	2 (66.7)	3 (100.0)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	-	-	-	-	6 (100.0)	6 (100.0)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	1 (6.3)	2 (12.5)	13 (81.3)	16 (100.0)	-
2-4.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기회 제공	-	-	-	-	2 (25.0)	6 (75.0)	8 (100.0)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	2 (18.2)	-	9 (81.8)	11 (100.0)	1/0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	-	-	-	-	6 (100.0)	6 (100.0)	-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	-	-	2 (40.0)	-	3 (60.0)	5 (100.0)	1/0

주: 1)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나 성과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100% 이상은 100%로 하여 평균 산출
2) 종료되거나 지표가 없는 과제는 별도기재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목표의 100% 이상 달성 과제는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76.0%,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75.0%,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66.7%,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 66.7% 순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목표의 100% 이상 달성 과제는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100.0%,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81.3%,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소영역)” 75.0%, “일자리 사업 내실화(소영역)” 66.7% 순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목표의 100% 이상 달성 과제는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 100.0%,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소영역)” 60.0%

□ 과제별 목표달성도

○ 고령사회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9개(86개 과제 중 11.5%)로 나타남

- 0% 달성 과제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 1~50% 달성 과제는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 70~90%미만 달성 과제는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 90~100% 미만 달성 과제는 10개로 총 86개 과제 중 11.5%

-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 지원>,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 인력 확충>,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확대>,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 마련>

〈표 2-92〉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1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1~50%미만	1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2-32-①)
50~70%미만	0	-
70~90%미만	7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4)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18)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2)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2-35)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2-46-2) -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2-76)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78)
90~100%미만	10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2-5)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2-9)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2-15)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2-20)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2-30)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2-38) -노인 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 인력 확충(2-57)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확대(2-58-1)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2-60-①),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2-60-②)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마련(2-61)
100%이상	67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2-2)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2-3)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2-4)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운영(2-6)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2-7)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2-8)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2-10)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2-10-1) -지역공동체 활성화(마을기업 육성)(2-10-2)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2-10-3)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2-11)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2-12-②)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2-13-①, 2-13-②)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2-16)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 사회 참여 지원(2-16-1)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2-16-2) -ODA등 글로벌 사회공헌(2-16-3)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관련 시스템 정비(2-16-5) -장년(고령자)고용캠페인(2-17)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2-19)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2-21)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2-24)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2-25-①)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10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금 활성화(2-26) -공사연금 연계 종합포털 구축(2-26-1)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2-27)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2-28)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2-31)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2-33)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2-34)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2-36)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2-37)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2-39) -기초노령연금 내실화(2-40) -주택연금제도 활성화(2-41)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2-42) -연기연금제도 활성화(2-43)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2-44) -농지연금 활성화(2-45)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2-46)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2-46-1)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제공(2-48)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2-49)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2-50) -치매환자 인식개선(2-51)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2-52)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2-53) -장기요양보험 수급절서 확립(2-54)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2-55) -노인 운동 활성화(2-56)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2-58)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2-59)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2-62-①)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63)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2-64) -문화바우처 지원(2-65)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2-66)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67)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2-68) -고령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2-69)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2-7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2-71-①)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2-72) -독거노인 보호 강화(2-73-①),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의 보호강화(2-73-②) -농어촌 가사도우미(2-74)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2-75)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78)

주: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나 성과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100% 이상은 100%로 하여 평균 산출

(3) 성장동력 분야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중영역별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00%,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90.3%,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중영역)’ 77.8% 순으로 나타남
 -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과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중영역)’,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이 모두 100%로 나타났으며,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은 93.5%로 나타남
 - 목표를 50% 미만으로 달성한 과제는 모든 중영역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목표 달성(100% 이상) 비율이 높은 소영역은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과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가 각각 100%이며, “외국국적동포·외국인력 활용(소영역)” 85.7%,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소영역)” 75% 순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중영역)’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 개선(소영역)”의 과제는 모두 당초목표의 10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소영역)”은 33%만이 당초목표의 100% 이상 달성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동 중영역의 모든 소영역이 당초 목표의 100% 이상 달성

〈표 2-93〉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수, %)

중소영역	목표달성도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성장동력 분야	-	-	-	2 (3.6)	3 (5.4)	51 (91.1)	56 (100.0)	2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	-	2 (6.5)	1 (3.2)	28 (90.3)	31 (100.0)	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	-	-	1 (12.5)	1 (12.5)	6 (75.0)	8 (100.0)	-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	-	-	1 (14.3)	-	6 (85.7)	7 (100.0)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	-	-	-	-	11 (100.0)	11 (100.0)	-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	-	-	-	-	5 (100.0)	5 (100.0)	1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	-	-	2 (22.2)	7 (77.8)	9 (100.0)	1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	-	-	-	2 (66.7)	1 (33.3)	3 (100.0)	1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	-	-	-	5 (100.0)	5 (100.0)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	-	-	-	1 (100.0)	1 (100.0)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	-	-	-	16 (100.0)	16 (100.0)	-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	-	-	-	9 (100.0)	9 (100.0)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	-	-	5 (100.0)	5 (100.0)	-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	-	-	2 (100.0)	2 (100.0)	-

주: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나 성과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100% 이상은 100%로 하여 평균 산출

□ 과제별 목표달성도

○ 성장동력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2개(56개 과제 중 3.6%)로 나타남

- 70~90%미만 달성 과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90~100% 미만 달성 과제는 3개로 총 56개 과제 중 5.4%

-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 개선>,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표 2-94〉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0%	0	-
1~50%미만	0	-
50~70%미만	0	-
70~90%미만	2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3-7)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3-14)
90~100%미만	3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3-2)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 교육개선(3-34)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3-35)
100%이상	51	-공기업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3-1)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 교감 임용 확대(3-3)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3-4)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3-5)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3-6-①, 3-6-②) -이주·장애인 등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3-8) -외국 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3-9)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유치(3-10)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3-11)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인력 확보(3-12)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3-13-①),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3-13-②)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3-15)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정보 제공 확대(3-16-①, 3-16-②)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3-17-①),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사업(3-17-②)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3-18)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3-19)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3-20)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3-21)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3-22)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3-23)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3-24)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3-25) -평생학습과 자격제도간 연계 강화(3-26)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3-27)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3-29)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3-30)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3-31)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3-32)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마련(3-33)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3-37)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3-38)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수립(3-39)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3-4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 검토(3-41)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3-42)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3-43)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관리번호)
100% 이상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확대(3-44)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3-45)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3-46)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확대(3-47)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3-48),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3-49),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선(3-50)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등 향노화산업 육성(3-51)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3-52)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3-53)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3-54)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3-55)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3-56)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규격신설(3-57)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3-58)

주: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나 성과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100% 이상은 100%로 하여 평균 산출

다. 14개 과제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¹⁾ 사유 및 개선방향

□ 저출산 분야(3개 과제)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 (미흡사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 대한 노사,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당초 목표로 하였던 관련 법안 통과 지연
- (개선사항)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 지속 논의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 (미흡사유) 정규직 중심의 기업문화로 인하여 임신·육아기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아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지원 인원수가 당초목표치에 미흡한 실정
- (개선계획) 이와 관련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여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출생 15개월 이내 자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재고용하는 경우까지 지원할 계획('14. 10월)

1)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나 성과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단순 평균치를 산정(100% 이상은 100%로 간주)

- 또한,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상향하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14.10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15.7월 시행)

○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 (미흡사유) 지자체 농정부서로 동 사업 이관 후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준비 미흡, 영유아수 감소, 위탁운영 주체 확보 곤란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당초 목표 달성하지 못함
- (개선계획) 이와 관련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지자체 관심 확대 및 홍보 강화 계획

<표 2-95> 저출산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중영역	과제	성과지표	추진성과		
			목표치	실적	달성률 (%)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1-6)	근로기준법 개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 상임위 계류 중	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1-1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지원 인원 수	20% 증가 (355명)	286명 지원 (3.4% 감소)	80.6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1-53)	농어촌 소규모어린이집 및 이동 놀이버스 지원 개소수	10	6	60.0

□ 고령사회 분야(9개 사업)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 (미흡사유) 근로자 임금이 매년 상승함에도 지원제한 연소득이 2007년 이후 5,760만원에서 고정됨에 따라 동 소득액 초과 근로자의 지원이 배제되어 실제 지원인원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에 그침
- (개선사항) 임금피크제 지원제한 연소득수준을 현실화 노력 필요

○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 강화

- (미흡사유) 퇴직인력의 상인조직에의 참여자가 보수수준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이유로 중도포기가 많은 이유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개선계획) 이와 관련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마케팅, 유통, 디자인, 자문, 교육 등)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일·퇴직 인력에 의한 시장지원보다 청년인력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종합적 지원제도 도입(시장건설팅법인)을 추진

-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 (미흡사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업무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건수가 목표치에 미달
 - (개선사항) 근로감독관의 적정 업무량을 산출하여 원활한 모니터링 수행 등을 위한 적정 인력규모 확보(인력 충원 등) 노력 필요
-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미흡사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지원 신청자 수는 매월 증가하여 '13.11월 기준 93만명이었으나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지원자 수는 감소하여 당초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함
 - 두루누리 사업은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금보험료 지원
 - (개선계획) 연금공단에서는 지원신청 후 3개월 이상 실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이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실지원자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
-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 (미흡사유) 해외 환자 유치 증가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환경은 확대되고 있으나 해외 원격의료 실시를 규정화하고 있지 않아 정부 지원사업 규모 및 민간병원의 서비스 제고 의지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크고, 이용실적 파악도 어려운 실정인데다가 해외 원격의료 실시 건수의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상향조정함
 - 또한, '13년 관련예산 미확보로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함
 - (개선사항) 해외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필요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 (미흡사유) 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제공 규모의 목표치를 현장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설정한데다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목표치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함

- (개선사항)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대상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며, 목표치 설정 후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교육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추진이 중요

〈표 2-96〉 고령사회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중영역	과제	성과지표	추진성과		
			목표치	실적	달성률(%)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2-1)	임금피크제적용근로자수증가율	20%	0%	0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2-14)	추진실적/목표치×100	150명	133명	88.7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2-18)	모니터링 실시(모니터링 건수)	10,000건	7,365건	73.6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22)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수	89만명	79만명	88.2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2-32-①)	해외 원격의료 실시 건수	1,100건	524건	23.8
		농어촌 원격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90%	미실시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2-35)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입법	1개	1개	84.8
		고령자복지진흥원(가칭) 설립	국회제출	개정법률안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제출	개정법률안 발의	
		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이용자 수	30만명	71,371명	
	지자체 교육기반 조성 서비스 이용자 수	1천명	1,017명		
	찾아가는 노후생애관리서비스 이용자 수	2만명	21,534명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2-46-2)	전체 실손가입자 중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가입비율	10%	8.5%	85.0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 장려여건 마련(2-76)	효향자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	173명	155명	89.6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2-78)	우수프로그램 포상	16개 프로그램	14개 프로그램	87.5

○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 (미흡사유)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별도 세제 혜택을 전제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제외됨
-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 보도자료(‘12.12.24)에도 판매 활성화 방안으

- 로써 세제혜택 방안 강구를 제시한 바 있음
- (개선사항)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 이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 (미흡사유)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자 포상에 대한 신청자 수 부족
 - (개선사항)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강화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 (미흡사유) 정부포상계획 인원 및 프로그램 대비 포상신청자 수 부족
 - (개선사항)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포상대상 발굴 및 홍보 강화 필요
 - 성장동력 분야(2개 사업)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 (미흡사유) 과거 고용센터나 새일센터 등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고 취업을 한 경우 중복적으로 포함되었으나 워크넷과 e새일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중복 부분이 제외되고, 취업연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용직 등 공공근로를 연계해준 경우가 취업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목표치에 미흡함
 - (개선사항) 시스템 통합 및 기준 엄격적용에 따른 중복 등 제외부분을 고려한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향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 (미흡사유) 과거 1건의 상담을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 경우 실제 응답하지 않더라도 성과지표 산출방식에 모두 포함(반복시도 건수는 ARS처리건수에 포함)되어 목표치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상담사 증원으로 상담 연결이 원활해지고 반복 콜을 우선적으로 상담원에 연결해줌으로써 반복 콜 시도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기존 성과지표 산출방식의 추진실적도 점점 감소함
 - (개선사항) 과거 반복시도 건수를 고려한 성과지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실제 상담이 이루어진 건수를 기준으로 성과지표 내용 개선 및 이에 따른 목표치 재설정 필요

〈표 2-97〉 성장동력 분야 목표달성도 미흡(90% 미만) 과제

중영역	과제	성과지표	추진성과		
			목표치	실적	달성률 (%)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3-7)	새일센터 취업률(%)	58.9%	51.4%	87.3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3-14)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민원 상담 처리건수	3,000,000건	2,350,213건	78.3

2. 예산 평가

가. 예산집행률

- 전체 평가대상 과제 중 예산사업은 156개, 비예산사업은 75개임
- 예산사업 중 100% 이상 예산을 집행한 과제는 102개로 65.4%를 차지하며, 90% 이상을 집행한 과제는 총 137개 과제로 87.8%를 차지
- 예산집행률이 50~90% 미만인 과제는 15개(9.6%),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제는 4개(2.6%)로 나타남

〈표 2-9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집행률

(단위: 과제수, %)

분야	예산집행률							비예산사업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	4 (2.6)	2 (1.3)	13 (8.3)	35 (22.4)	102 (65.4)	156 (100.0)	75	14
저출산 분야	-	3 (4.8)	-	4 (6.3)	9 (14.3)	47 (74.6)	63 (100.0)	25	7
고령사회 분야	-	1 (1.7)	2 (3.4)	8 (13.6)	16 (27.1)	32 (54.2)	59 (100.0)	28	5
성장동력 분야	-	-	-	1 (2.9)	10 (29.4)	23 (67.6)	34 (100.0)	22	2

주: 1)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2)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 예산집행률(예산사업 기준)은 저출산 분야, 성장동력 분야, 고령사회 분야 순
- 예산집행률이 100% 이상인 과제는 저출산 분야 74.6%, 성장동력 분야 67.6%, 고령사회 분야 54.2% 순
 -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과제는 저출산 분야 88.9%, 고령사회 분야 81.3%, 성장동력 분야 97.0% 등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저출산 분야 3개(3.2%), 고령사회 분야 1개(1.7%)이며, 성장동력 분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저출산 분야

- 예산과제 중 예산전액을 집행(100% 이상)한 과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77.8%,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78.1%,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중영역)’ 68.2% 순
- 소영역별로는 과제 수가 너무 작아 예산집행률 비교 곤란
- 저출산 분야에서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소영역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중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1개 과제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중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2개 과제 등 총 3개 과제임

〈표 2-99〉 2013년 저출산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수, %)

중소영역	예산 (억원) ¹⁾ (%)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저출산 분야	138,380.5 (100.0)	-	3 (4.8)	-	4 (6.3)	9 (14.3)	47 (74.6)	63 (100.0)	25	7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7,516.2 (5.4)	-	1 (11.1)	-	-	1 (11.1)	7 (77.8)	9 (100.0)	10	5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확대개선	6,672 (4.8)	-	-	-	-	1 (25.0)	3 (75.0)	4 (100.0)	1	5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43 (0.1)	-	1 (50.0)	-	-	-	1 (50.0)	2 (100.0)	4	-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701.2 (0.5)	-	-	-	-	-	3 (100.0)	3 (100.0)	5	-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124,444.0 (89.9)	-	2 (6.3)	-	2 (6.3)	3 (9.4)	25 (78.1)	32 (100.0)	12	2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178.9 (0.1)	-	-	-	-	-	1 (100.0)	1 (100.0)	5	1
2-2. 입산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4,006.8 (2.9)	-	-	-	1 (14.3)	2 (28.6)	4 (57.1)	7 (100.0)	1	-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110,304.3 (79.7)	-	-	-	-	-	8 (100.0)	8 (100.0)	3	1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	9,954.0 (7.2)	-	2 (12.5)	-	1 (6.3)	1 (6.3)	12 (75.0)	16 (100.0)	3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6,420.3 (4.6)	-	-	-	2 (9.1)	5 (22.7)	15 (68.2)	22 (100.0)	3	-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1,194.7 (0.9)	-	-	-	-	-	4 (100.0)	4 (100.0)	-	-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2,225.6 (1.6)	-	-	-	1 (14.3)	2 (28.6)	4 (57.1)	7 (100.0)	-	-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3,000.0 (2.2)	-	-	-	1 (9.1)	3 (27.3)	7 (63.6)	11 (100.0)	-	-
3-4.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	-	-	-	-	-	-	3	-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2) 고령사회 분야

□ 중영역별로 예산을 전액 집행(100% 이상)한 과제 비율은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85.7%,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61.9%,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41.9% 순

○ 50% 미만 예산집행 과제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의 1개 과제임

□ 전체 과제 중 81.3%가 90.0% 이상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사업 내실화(소영역)”,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소영역)”의 경우 모든 과제에서 예산을 100%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소영역)”의 1개 (25.0%) 과제임

〈표 2-100〉 2013년 고령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수, %)

중·소영역	예산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종료 등 과제
	(억원)	(%)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고령사회 분야	71,828.2	100.0	-	1 (1.7)	2 (3.4)	8 (13.6)	16 (27.1)	32 (54.2)	59 (100.0)	28	5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3,454.4	18.7	-	1 (3.2)	2 (6.5)	7 (22.6)	8 (25.8)	13 (41.9)	31 (100.0)	12	4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5,924.9	8.2	-	-	2 (9.1)	6 (27.3)	3 (13.6)	11 (50.0)	22 (100.0)	3	3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³⁾	5,467.5	7.6	-	-	-	1 (25.0)	2 (50.0)	1 (25.0)	4 (100.0)	4	1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2,056.5	2.9	-	1 (25.0)	-	-	2 (50.0)	1 (25.0)	4 (100.0)	3	-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 생활 설계강화	5.5	0.0	-	-	-	-	1 (100.0)	-	1 (100.0)	2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55,675.5	77.5	-	-	-	-	8 (38.1)	13 (61.9)	21 (100.0)	12	-
2-1. 일자리 사업 내실화	4,791.0	6.7	-	-	-	-	-	2 (100.0)	2 (100.0)	1	-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43,671.0	60.8	-	-	-	-	2 (66.7)	1 (33.3)	3 (100.0)	3	-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⁴⁾	6,565.3	9.1	-	-	-	-	4 (44.4)	5 (55.6)	9 (100.0)	7	-
2-4. 다양한 사회참여가 문화기회 제공	648.2	0.9	-	-	-	-	2 (28.6)	5 (71.4)	7 (100.0)	1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2,698.3	3.8	-	-	-	1 (14.3)	-	6 (85.7)	7 (100.0)	4	1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674.7	0.9	-	-	-	1 (25.0)	-	3 (75.0)	4 (100.0)	2	-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마련	2,023.6	2.8	-	-	-	-	-	3 (100.0)	3 (100.0)	2	1

주: 1)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2)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3) 공사연금 연계 종합포털 구축(2-26-1)은 연금포털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예산이 미편성되어 집행현황 자체가 없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비예산 사업으로 봄

4)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2-49),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2-50), 치매환자 인식개선(2-51)은 하나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 3개 과제 합 예산인 580억원으로 총액은 계산하였으며, 과제 예산집행률은 각각의 과제로 정리

(3) 성장동력 분야

- 예산을 전액 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비율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59.3%,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중영역)’ 100.0%,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100.0%임
- 소영역별로는 과제가 없거나 너무 적어 예산집행률 비교 곤란
- 대부분 소영역에서 과제들은 확보된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 성장동력 분야에서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소영역은 전혀 없음

〈표 2-101〉 2013년 성장동력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원, 과제수, %)

중·소영역	예산 (억원) ¹⁾ (%)	예산집행률							비예산 사업	기 종료 등 과제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	100% 미만	100% 이상		
성장동력 분야	17,174.6 (100.0)	-	-	-	1	10	23	34	22	2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4,523.1 (84.6)	-	-	-	1	10	16	27	4	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718.4 (4.2)	-	-	-	-	3	4	7	1	-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971.6 (5.7)	-	-	-	-	1	3	4	3	-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11,488.2 (66.9)	-	-	-	1	4	6	11	-	-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1,344.9 (7.8)	-	-	-	-	2	3	5	-	1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2,483.0 (14.5)	-	-	-	-	-	3	3	6	1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483.0 (14.5)	-	-	-	-	-	3	3	-	1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	-	-	-	-	-	-	5	-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	-	-	-	-	-	-	-	-	1	-
3. 고령친화산업 육성	168.5 (1.0)	-	-	-	-	-	4	4	12	-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168.5 (1.0)	-	-	-	-	-	4	4	5	-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	-	-	-	-	-	-	-	5	-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	-	-	-	-	-	2	-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나. 과제별 예산

(1) 저출산 분야

□ 2013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은 총 8.9조원으로 저출산 분야 총예산 중 64.4% 차지

○ 다음으로 양육수당 지원 1.65조원(11.9%), 육아휴직제도 확대개선 0.67조원(4.8%),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0.62조원(4.5%),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고등학교 수업료) 0.47조원(3.4%),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난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0.30조원(2.1%) 등으로 나타남

○ 상위 5개 과제의 예산이 총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89%로 예산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표 2-102〉 2013년도 저출산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단위: 억원, %)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저출산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
1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89,128	64.41	64.41
2	양육수당 지원 확대	16,519	11.94	76.35
3	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6,672	4.82	81.17
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등)	6,187	4.47	85.64
5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고등학교 수업료)	4,657	3.37	89.00
6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난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2,954	2.13	91.14
7	수요자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시간연장형, 유치원 종일반 등)	1,549	1.12	92.26
8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1,501	1.08	93.34
9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1,131	0.82	94.16
10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취약계층 아동 인적 네트워크 형성	1,094.6	0.79	94.95
11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1,092	0.79	95.74
1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775.5	0.56	96.30
13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평가인증, 공공형 등)	744	0.54	96.84
14	가족친화 직장 사회환경 조성(직장보육시설, 가족친화)	701.2	0.51	97.34
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594	0.43	97.77
16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478.8	0.35	98.12
17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451	0.33	98.45
18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407.9	0.29	98.74
1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87	0.28	99.02
20	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382	0.28	99.30
21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315.6	0.23	99.52
22	임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187	0.14	99.66
23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제공)	178.9	0.13	99.79
24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149.7	0.11	99.90
25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43	0.10	100.00
	계	138,380.5	100.0	-

(2) 고령사회 분야

□ 2013년도 예산 기준으로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기초노령연금)에 총 4.3조원이 투입되어 고령사회 분야 총예산 중 59.6% 차지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0.54조원(7.6%),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0.54조원(7.5%),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0.47조원(6.5%),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0.22조원(3.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0.21조원(2.9%),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0.20조원(2.7%),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0.18조원(2.5%) 등

○ 상위 5개 과제의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84.3%로 저출산 분야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예산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표 2-103〉 2013년도 고령사회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단위 : 억원, %)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고령사회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무연금 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42,810.0	59.60	59.60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5,447.0	7.58	67.18
3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5,416.6	7.54	74.72
4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4,698.0	6.54	81.26
5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2,192.2	3.05	84.31
6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2,056.5	2.86	87.17
7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1,968.4	2.74	89.91
8	중고령자적합형일자리창출및창업지원	1,792.8	2.50	92.41
9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1,210.9	1.69	94.90
10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861.0	1.20	96.10
11	고령자고용연장	724.0	1.01	97.11
12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644.0	0.90	98.00
1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602.2	0.84	98.84
14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580.0	0.81	93.22
15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348.0	0.48	99.33
16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218.0	0.30	99.63
17	일자리 사업 체계화	93.0	0.13	99.76
18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55.2	0.08	99.84
19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46.0	0.06	99.90
20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30.7	0.04	99.94
21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	15.5	0.02	99.96
22	고용상연령차별금지제도의조기정착	5.6	0.01	99.97
23	노후설계 기반조성 및 서비스 지원 활성화	5.5	0.01	99.98
24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5.0	0.01	99.99
25	의료비지출 적정화	2.7	0.00	100.00
	계	71,828.2	100.0	-

(3) 성장동력 분야

- 2013년도 예산 기준으로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에 1.03조원이 투입되어 성장동력 분야 총예산 중 60.2% 차지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2,483억원(14.5%),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1,129억원(6.6%), 외국적동포·외국인력 활용 972억원(5.7%),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611억원(3.6%) 등으로 나타남
- 상위 5개 과제의 예산이 총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90%로 예산집행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04〉 2013년도 성장동력 분야 주요 과제별 예산

순위	과제(세부영역 또는 소영역)	예산(억원)	성장동력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
1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10,334.3	60.17	60.17
2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483.0	14.46	74.63
3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1,128.5	6.57	81.20
4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 활용	971.6	5.66	86.86
5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611.9	3.56	90.42
6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532.3	3.10	93.52
7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542.0	3.16	96.68
8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216.4	1.26	97.94
9	적극적 여성고용정책강화	186.1	1.08	99.02
10	고령친화산업 육성	168.5	0.98	100.00
	계	17,174.6	100.0	-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

-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3

핵심성과지표 평가(심층평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총 230여 과제들 중 일부 중요 과제들을 선정하여 '핵심과제'로 관리하고 있음
- 핵심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변동 이유를 분석하고 있음
- 핵심성과지표는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및 성장동력 분야의 중분류 및 소분류 별로 설정함
 - 각 핵심성과지표는 1개 이상의 세부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측정되고 있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 총 45개 핵심성과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저출산 분야 18개, 고령사회 분야 17개, 성장동력 분야 10개로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로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2013년 추진성과를 분석함

제1절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의 경우 3개 소영역에 대한 5개 핵심과제 포함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육아휴직제도 개선(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간주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여건 조성,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간주할 수 있음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유연근로제 확산(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워크'도입 및 확산,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간주 가능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에 2개 핵심과제 포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고용부,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간주 가능
- 가족친화 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적용
- 동 핵심성과지표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등의 정책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간주 가능

〈표 3-1〉 저출산 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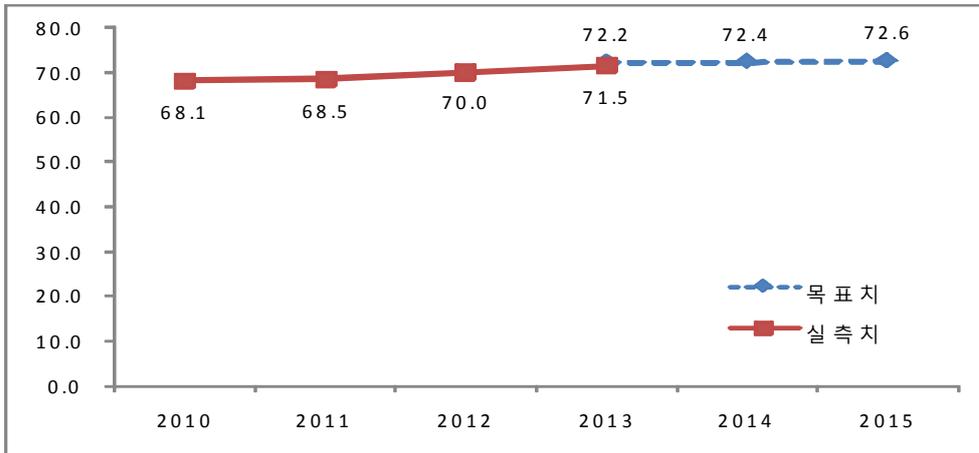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 성과지표	관련 과제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사용후1년 이상 고용유지율	-육아휴직급여정률제 및 육아휴직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여건 조성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	-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가족돌봄 휴직제 활성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강화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율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시간제 근무 활성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지원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스마트워크’도입 및 확산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	-	-노사정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추진 -공무원 정상근무 관행 확산-초과근무 관리 강화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소영역)

□ 육아휴직제도 개선(핵심과제)

-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70.0%에서 ’13년 71.5%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72.2%)를 거의 달성(99.0%)
 - 관련 세부과제로 육아휴직급여 정률제(40%)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 강화로 인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인원 증가(22.0%)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2015년도 목표치를 이미 98.5% 도달하여 제2차 기본계획의 동 부분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평가 가능

[그림 3-1] 육아휴직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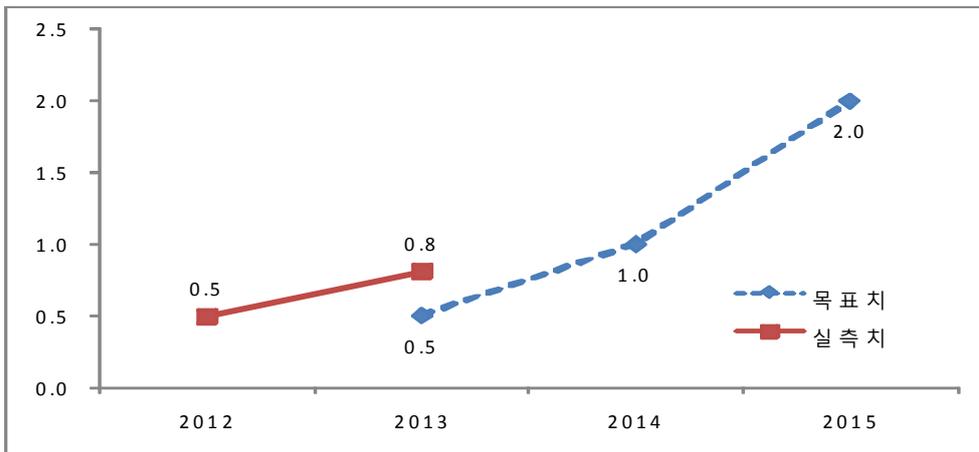


주: 산식: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수 ÷ 휴직급여 수급근로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핵심과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핵심성과지표)’이 ‘12년 0.5%에서 ’13년 0.8%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0.5%) 초과 달성
 -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여건 조성,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과제들이 수행된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주: 산식: 이용자 수 ÷ 산전후휴가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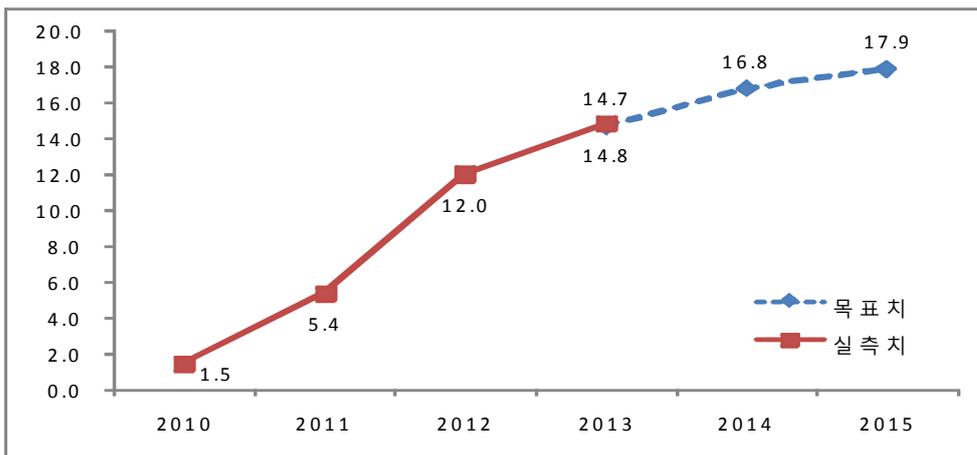
- 그러나 '15년도 목표치의 40% 정도만 달성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의 장점을 홍보하고 동 제도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정책들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 유연근로제 확산(핵심과제)

-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12.0%에서 '13년 14.8%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14.7%)를 초과달성(100.7%)
- 이는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및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홍보를 추진하며, 스마트 워크를 확산하는 등의 세부정책들이 수행된 결과로 평가 가능
 - 예로 스마트 워크센터 이용률이 '12년 51.6%에서 '13년 61.9%로 증가
- 현재 '15년도 목표치의 82.7%를 달성하고 있어 향후 홍보 강화 및 행정기관의 무적 적용 등 고려 필요

[그림 3-3] 유연근로제 확산 핵심성과지표: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주: 산식: 행정기관 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 수 ÷ 대상인원 × 100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1-3.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소영역)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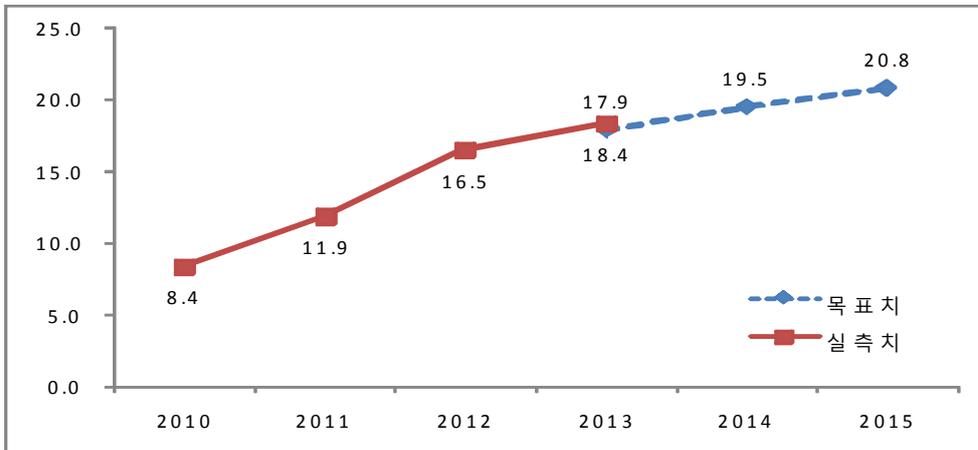
○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16.5%에서 ’13년 18.4%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17.9%)를 초과달성(102.6%)

-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설치를 독려하는 등 과제들이 수행한 결과로 평가 가능

- 구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이 ‘12년 62개소에서 ’13년 80개소로, 융자지원 사업장이 ‘12년 4개소에서 ’13년 11개소로, 인건비지원 사업장이 ‘12년 246개소에서 ’13년 299개소로, 운영비지원 사업장이 ‘12년 56개소에서 ’13년 75개소로 각각 증가

- 현재 ‘15년도 목표치의 88.5%를 달성하고 있어 향후 부지 마련, 운영비 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을 보다 늘리고 홍보 강화 필요

[그림 3-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증가율(%)



주: 산식: (당해년도 설치 개소수 ÷ 전년도 총 개소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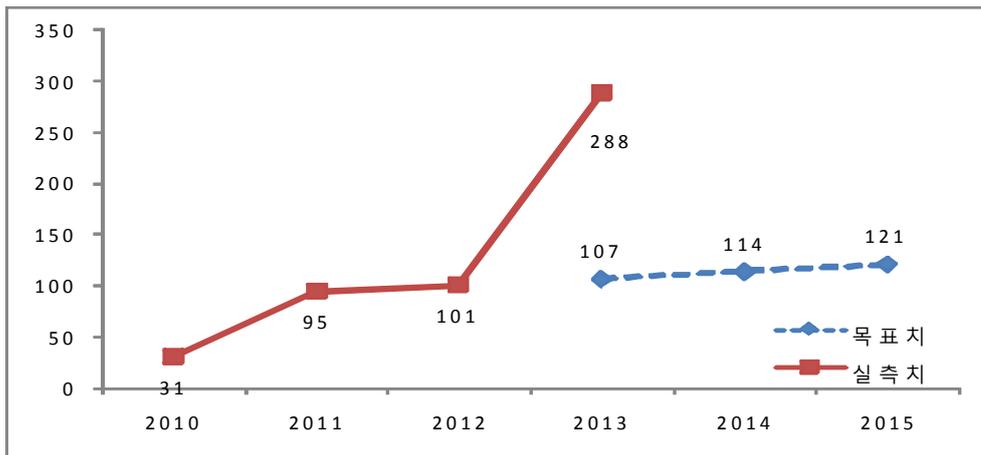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육통계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핵심과제)

○ ‘가족친화인증 기업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 101개소에서 ’13년 288개소로 급증하여 당해년도 목표치(107개소)를 초과달성(269.2%)

- 이는 세부과제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한 성과로 평가 가능
- 구체적으로 가족친화 포럼 활동이 '12년 5회에서 '13년 8회로 증가하였고, 가족친화인증 신청기업이 '11년 123개소에서 '13년 402개소로 크게 증가
- 이미 '15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238.0%)하고 있어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그림 3-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 부문(중영역)의 경우 4개 소영역에 대해 9개 핵심과제 포함
-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적용
 -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적용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 적용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적용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에 1개 핵심과제 포함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보육·교육비 지원율’ 적용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의 경우 4개 핵심과제 포함
 -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 적용
 -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 적용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적용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방과후돌봄 서비스 수혜율’ 적용

〈표 3-2〉 저출산 분야: 결혼, 출산 및 양육 부담경감 부문(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과제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속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지원
	-	-	-유자녀 현역병에게 상근예비역 편입 혜택 부여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부여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신생아 집중치료실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표 3-2〉 계속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과제
자녀양육 비용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3~4세 확대 시행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농업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	-	-양육수당 지원 확대 -돌짜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돌짜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사립 유치원 평가 내실화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 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내실화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실수요자 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2-1.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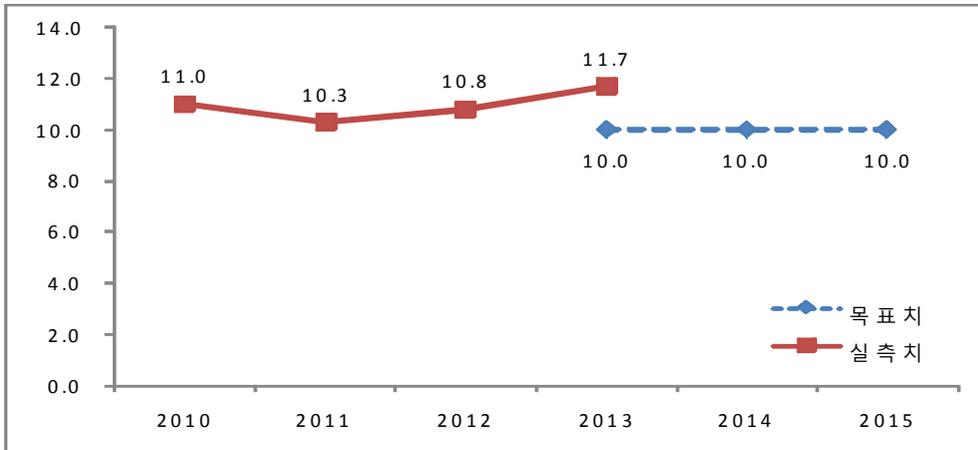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핵심과제)

○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10.8%에서’13년 11.7%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10.0%)를 초과달성(117%)

- 이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세부 정책을 실시한 결과로 평가 가능

- 단, 이미 '15년도 목표치를 초과달성(117%)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 고려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그림 3-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주: 산식: (특별공급+임대주택+전세임대) ÷ 연간초혼건수 × 10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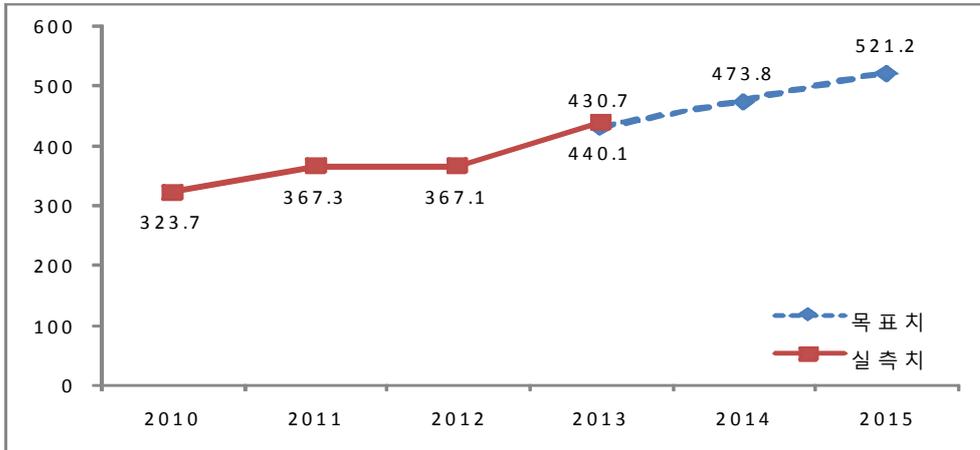
○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핵심성과지표)'이 '12년 367천명에서 '13년 440천명으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430천명)를 초과달성(102.2%)

- 이는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를 내실화한 세부과제의 성과로 평가 가능

- 예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1년 138개소에서 '13년 151개소로 확대, 이용자 수도 '11년 129만명에서 '13년 183만명으로 증가

- 현재 '15년도 목표치의 84.4%를 달성하고 있어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그림 3-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핵심성과지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소영역)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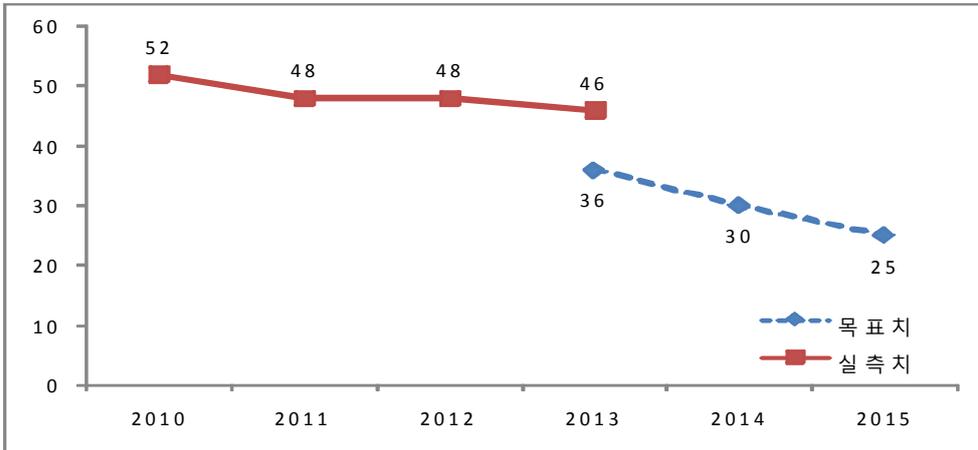
○ ‘임신·분만 취약 지역수(핵심성과지표)’가 ‘12년 48개소에서 ’13년 46개소로 감소 하였으나 당해년도 목표치(36개소)에는 78.3%만 달성

–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만산부인과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으나(’12년 누적 5개소, ’13년 누적 9개소), 해마다 새로운 분만취약지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하여 분만취약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25개소)의 54.3%만이 달성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예로, 기존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개선을 통해 수요 발생 시마다 산부인과 의료인력 방문, 산모의 분만산부인과로의 이동에 교통편의 제공 등

[그림 3-8]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핵심성과지표: 임신·분만 취약 지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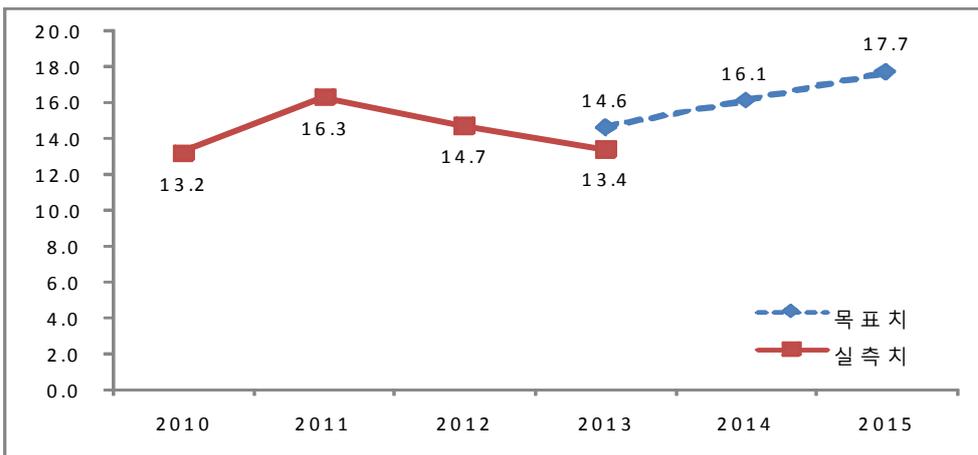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핵심과제)

-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14.7%에서 ’13년 13.4%로 감소하여 당해년도 목표치(14.6%)의 91.8% 달성

[그림 3-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핵심성과지표: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주: 산식: 연간수혜자수÷연간 출생아 수×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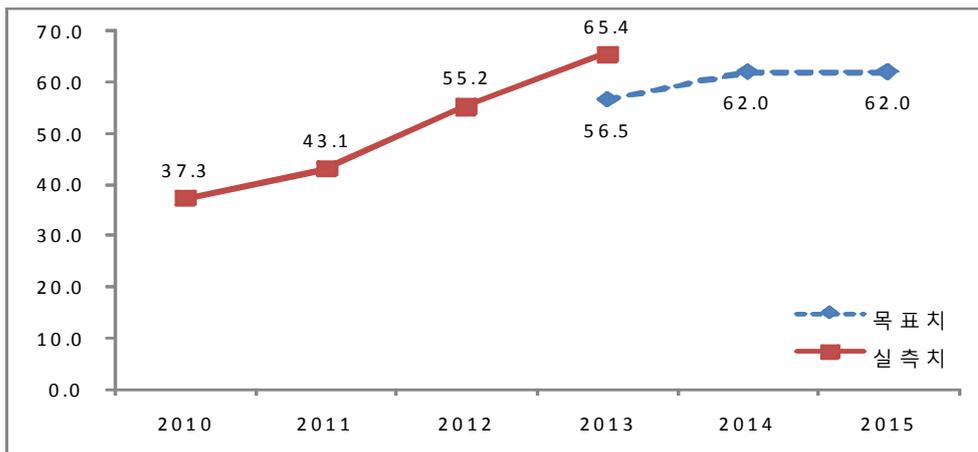
- 현재 '15년도 목표치의 75.7%를 달성하고 있어 제2차 기본계획 완료 이전에 추가적인 강도 높은 노력 필요
- 예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상위 소득계층 제외), 상위 소득계층도 유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확충 등 고려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소영역)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핵심과제)

- '보육·교육비 지원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55.2%에서 '13년 65.4%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56.5%)를 초과달성(115.8%)
- 이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른 성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62.0%)를 이미 초과달성(105.5%)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 고려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그림 3-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보육·교육비 지원율(%)



주: 산식: 영유아보육비·교육비수혜자÷0~5세 아동수×100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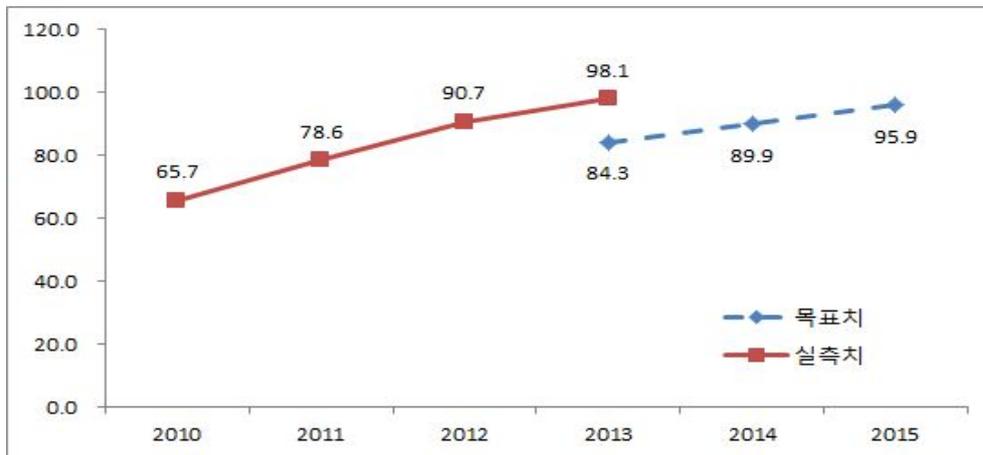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핵심과제)

○ ‘보육시설 평가인증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90.7%에서 ’13년 98.1%로 상승하여 당해년도 목표치(84.3%)를 초과달성(116.4%)

- 현재 ‘15년도 목표치(95.9%)를 이미 초과달성(102.3%)하였으나, 이는 전체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한 번이라도 통과한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임. 인증유지율 등과 같은 현실적인 지표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11]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핵심성과지표: 보육시설 평가인증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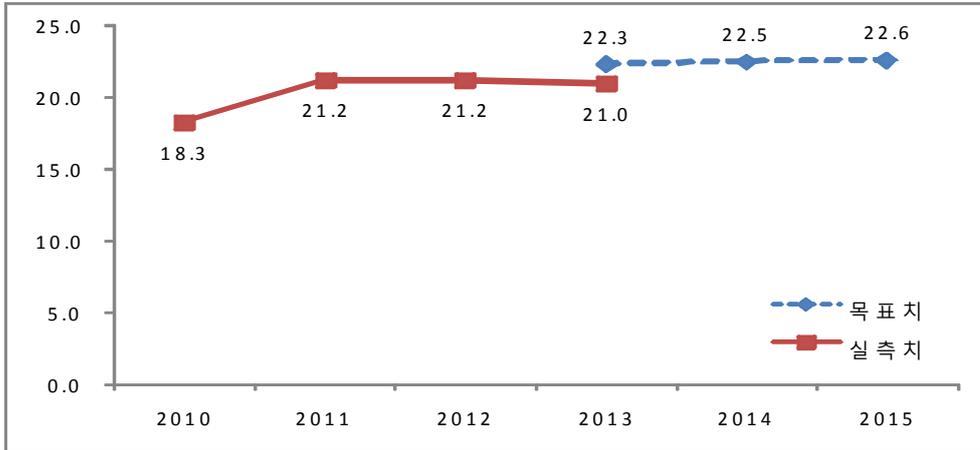
주: 산식: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육통계

□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핵심과제)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21.2%에서 ’13년 21.0%로 다소 감소하여 당해년도 목표치(22.3%)의 94.2% 달성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등을 실시하여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비율이 ‘12년 98.1%에서 ’13년 99%로 증가하였으나,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률은 ‘11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으로 인한 결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22.6%)의 92.9%를 달성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림 3-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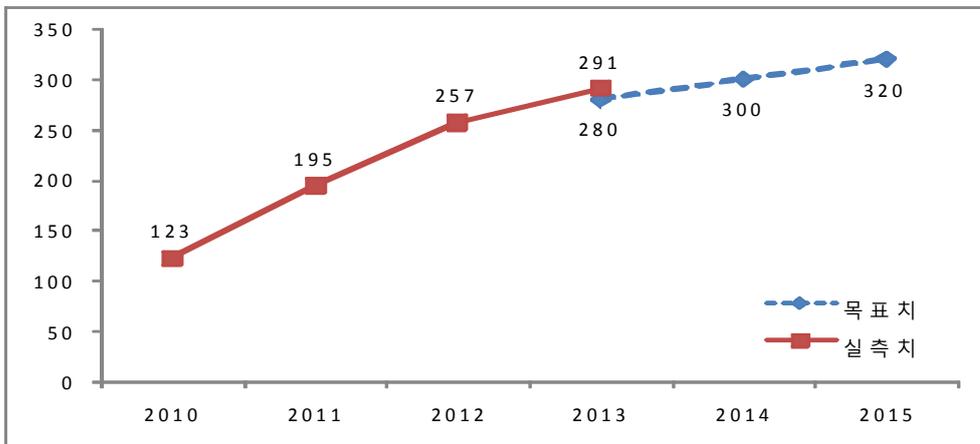
주: 산식: (돌봄 유치원 수+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수) ÷ (유치원 수+어린이집 수) × 100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부자료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핵심과제)

○ ‘아이돌보미 연계건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 257만건에서 ’13년 291만건으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280만건)를 초과달성(103.9%)

-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12년 89.3점 → ’13년 90점) 등 부모의 근로형태 등에 따른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증가가 가져온 성과로 평가 가능

[그림 3-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핵심성과지표: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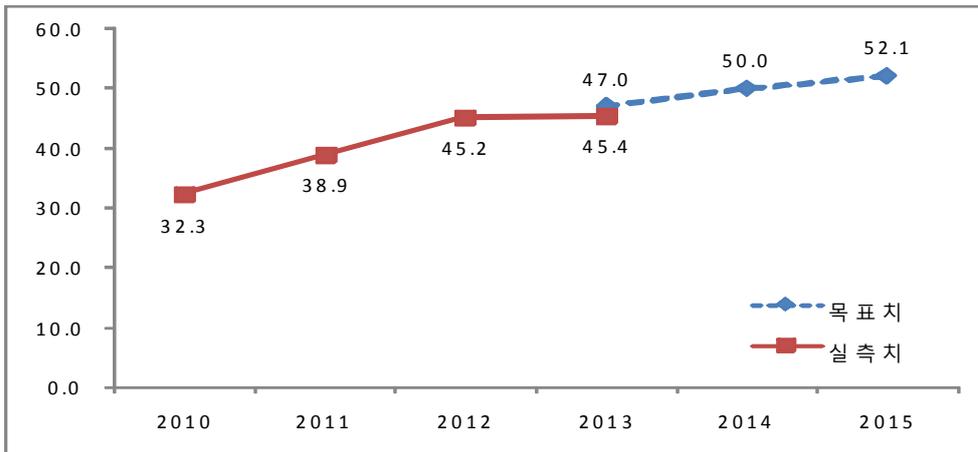
- 현재 '15년도 목표치(320만건)의 90.9%를 달성하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지역, 요구 시간 등 특성별 수급 불균형 해소, 서비스 공급 체계화, 질적 수준 제고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추가적인 노력 필요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핵심과제)

○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45.2%에서 '13년 45.4%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47.0%)의 96.6% 달성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중일돌봄교실 등 확대 및 내실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만족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및 학부모 만족도 증가, 초등돌봄교실이 '12년 7,086실에서 '13년 7,439실로 증가 등
 - 반면,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가 '12년 60만개에서 '13년 57만개로 감소하고,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만족도가 다소 감소 등
 -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함에 따라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이 전년 에 비해 다소 증가한데 그쳐 목표치 달성에 미흡
- 현재 '15년도 목표치(52.1%)의 87.1%를 달성하고 있어 정책 강화 필요
 - 예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등

[그림 3-14]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핵심성과지표: 방과후돌봄서비스 수혜율(%)



주: 산식: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수(초등 돌봄 + 지역 아동 센터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수×100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부문(중영역)의 경우 3개 소영역에 대해 4개 핵심과제 포함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적용

○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 수’ 적용

〈표 3-3〉 저출산 분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자립지원사업 체계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보급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 인지도력 향상 서비스 실시
	-	-	-휴먼네트워크 확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활동인프라 확충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확대(여성부/고용부)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행안부/교과부)
	-	-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및 지원 시설의 확충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아동안전지킴이)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 -흡연·음주등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여성부/복지부) -음주 유해행태 예방사업 지속추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 안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소영역)에 2개 핵심과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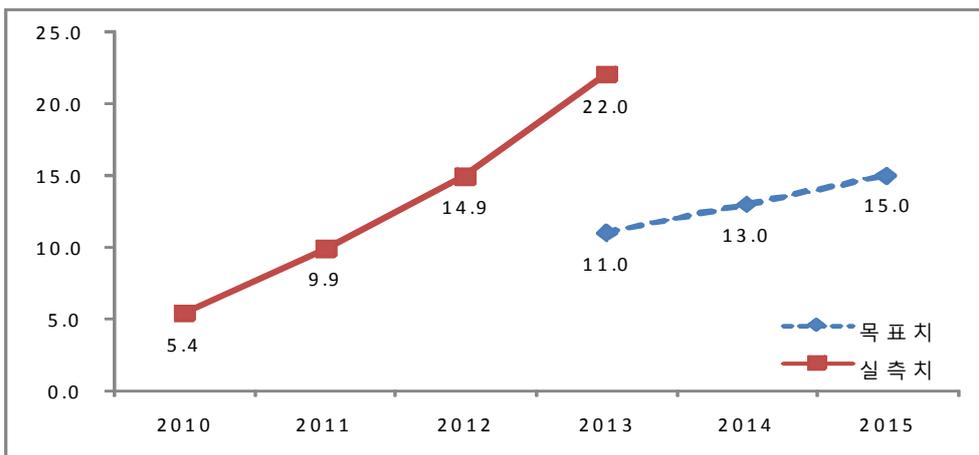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적용
-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적용

3-1.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소영역)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핵심과제)

-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14.9%에서 ’13년 22.0%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11.0%)를 초과달성(200.0%)
- 현재 ‘15년도 목표치(15.0%)를 이미 초과달성(146.7%)하고 있어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 다만, 분모가 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규모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어 실제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율의 변동 정도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 확보 노력 필요

[그림 3-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주: 산식: 드림스타트 수혜아동수 ÷ 취약계층 아동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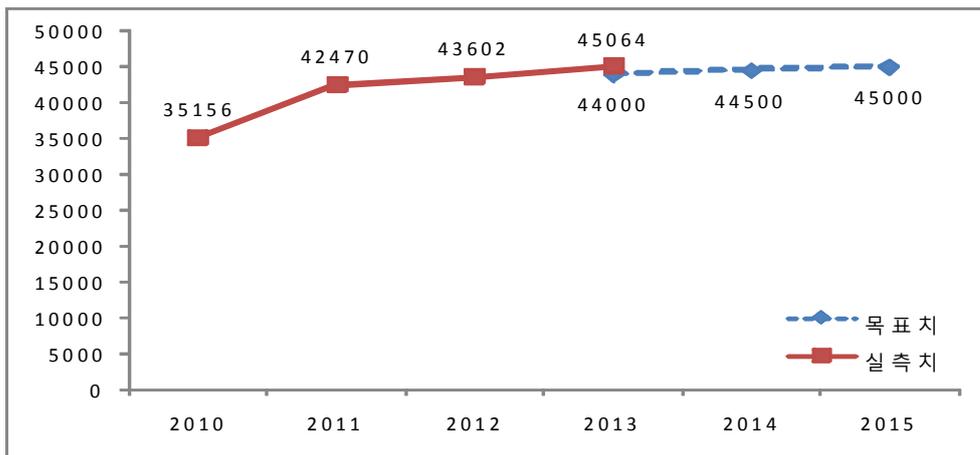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핵심과제)

-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 43,602천명에서 ’13년 45,064천명으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44,000천명)를 초과달성(102.4%)
- 현재 ‘15년도 목표(45,000천명)를 이미 초과달성(100.1%)하고 있어 목표치 상향 조정 고려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그림 3-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핵심성과지표: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주: 산식:연간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3-3. 안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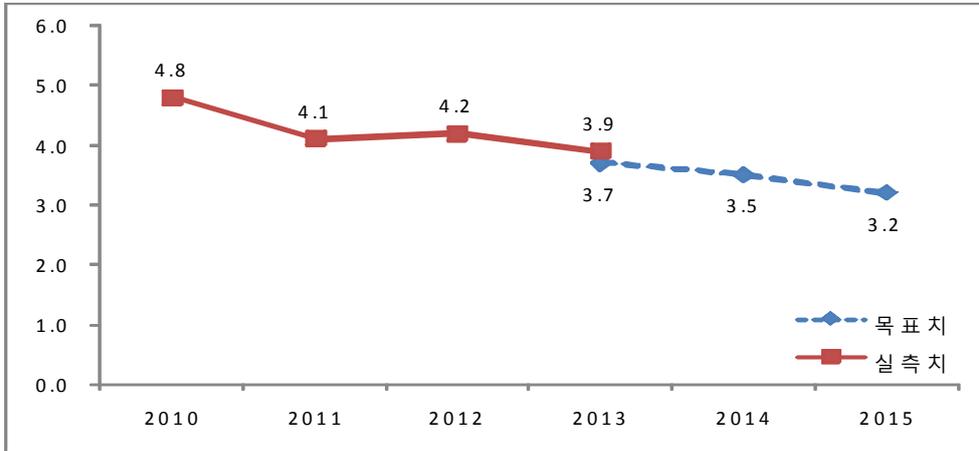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핵심과제)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아동 10만명 당 4.2명에서 ’13년 3.9명으로 감소하여 당해년도 목표치(3.7명)의 94.9% 달성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과 같은 세부 정책을 추진
- 그러나 안전사고예방교육 참여자 수가 ‘12년 32,050명에서 ’13년 32,368명으로

다소 증가하는 등 목표치 달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3.2%)의 82.1%를 달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노력 필요
- 예로, 관련 부처(조직)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일원화, 안전사고 예방 장비 등 인프라 양적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 안전사고 수칙 등 국민 실천운동 전개 등

[그림 3-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핵심성과지표: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주: 산식: (0~14세 아동 사망자 수 ÷ 0~14세 아동수) × 100,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e-나라지표

□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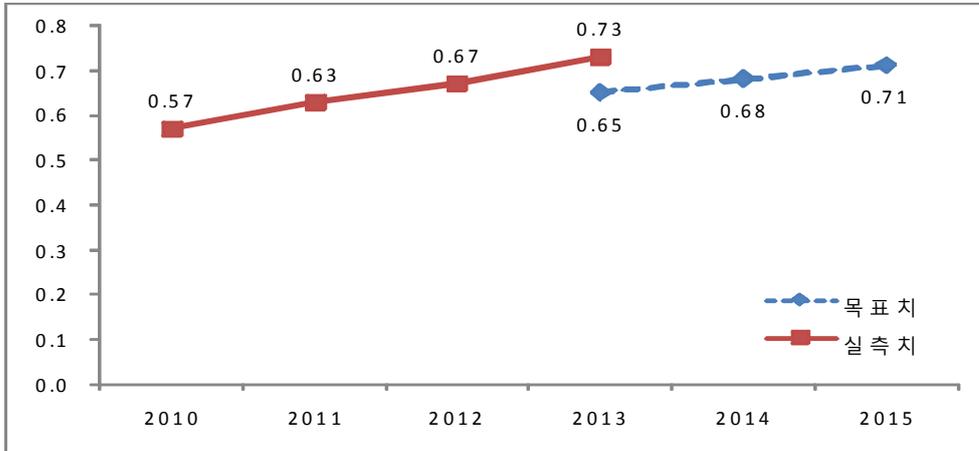
○ '학대피해아동 보호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0.67%에서 '13년 0.73%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0.65%)를 초과달성(112.3%)

-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가 '11년 6,058건에서 '13년 6,796건으로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 한편,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 즉, 아동학대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증가하여 국민 신고율이 향상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아동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간주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증가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원인 접근법적인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2015년도 목표치(0.71%)를 이미 초과달성(102.8%)하고 있어 목표치의 상향조정 고려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 목표치 조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보호율 변화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3-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주: 산식: (0~17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 0~17세 아동수)×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2절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부문(중영역)의 경우 4개 소영역에 대해 6개 핵심과제 포함
-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고령자 고용연장(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 적용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적용

〈표 3-4〉 고령사회 분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 -연령차별 금지 예외인정 및 고령자 명칭 변경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의 제공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채용 -지역공동체 활성화(마을기업 육성)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시니어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 -과학연구분야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 강화 -대기업 퇴직전문인력 활용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EDCF 컨설팅 전문인력 활용 -MDB 자문단 운영 -KSP정책자문관 개도국 진출지원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관련 시스템 정비 -장년(고령자) 고용 캠페인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	-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률	-특수고용관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적용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률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 -개인연금 활성화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U-health 서비스 기반 확충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노년기 생애 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후설계 기반조성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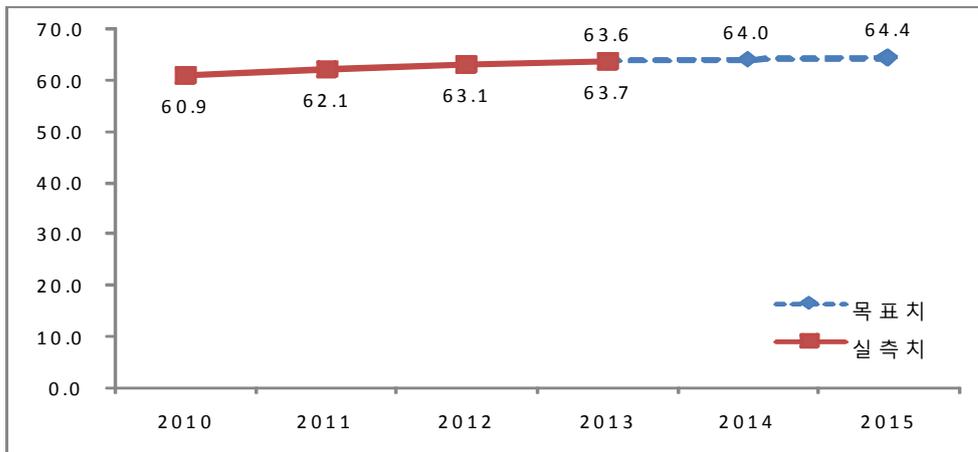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를 포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국민연금 가입률” 적용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퇴직연금 가입률” 적용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에서는 1개 핵심과제를 관리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적용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에서는 1개 핵심과제 포함
 - ‘노후설계 기반조성(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적용

1-1.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 고령자 고용연장(핵심과제)

-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63.1%에서 ’13년 63.7%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63.6%) 달성(100.2%)

[그림 3-19] 고령자 고용연장 핵심성과지표: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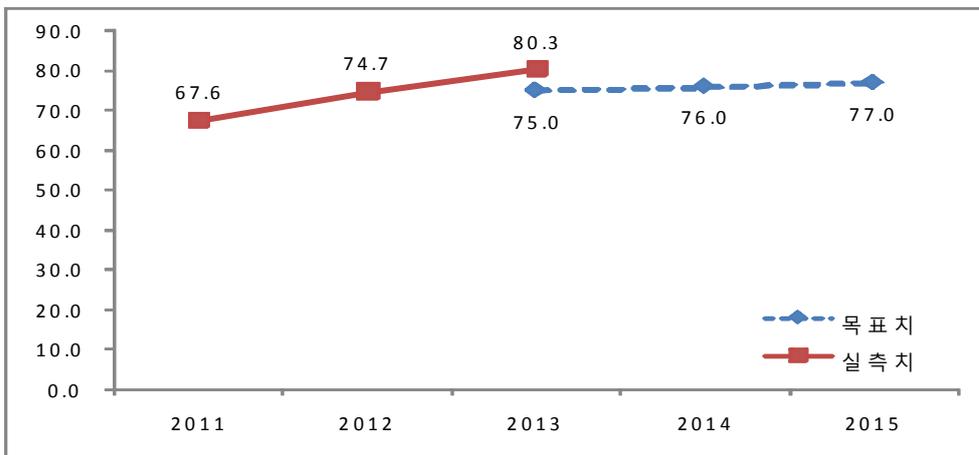
주: 산식: (55~64세 고용자수 ÷ 55~64세 인구수)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통계

- 이는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수는 '14년 2,377명에서 '13년 2,367명으로 소폭(10명) 감소하였으나, 정년연장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인원이 '12년 6,048명에서 '13년 9,814명으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64.4%)를 이미 거의 달성(98.9%)하고 있어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핵심과제)

-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74.7%에서 '13년 80.3%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75.0%) 초과달성(107.1%)
- 이는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등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12년 143,389명에서 '13년 208,787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자가 '12년 76,910명에서 '13년 120,05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종료자 중 취업자의 비율도 '12년 53.6%에서 '13년 57.5%로 증가한 성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77.0%)를 이미 초과달성(104.3%)하고 있어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그림 3-2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핵심성과지표: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주: 산식: (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자÷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자 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소영역)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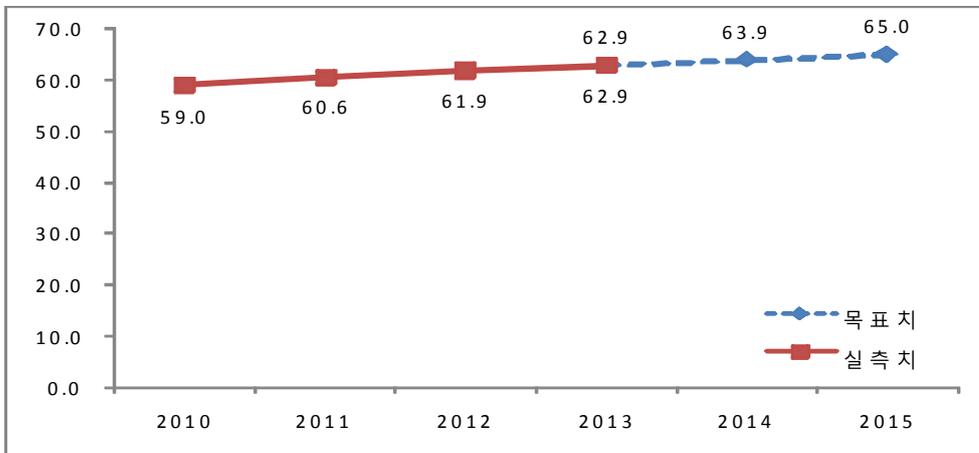
○ ‘국민연금 가입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61.9%에서 ’13년 62.9%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62.9%) 달성

- 이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 특수고용관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단,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가 ‘12년 530,900개소에서 ’13년 493,389개소로 그리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수가 ‘12년 910,000명에서 ’13년 790,000명으로 각각 감소하여 현 목표치를 달성한데 그치고 있음

- 현재 ‘15년도 목표치(65.0%)의 96.8% 수준으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평가

[그림 3-2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핵심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률(%)



주: 산식: (국민연금가입자수 ÷ 18~59세 인구)×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연보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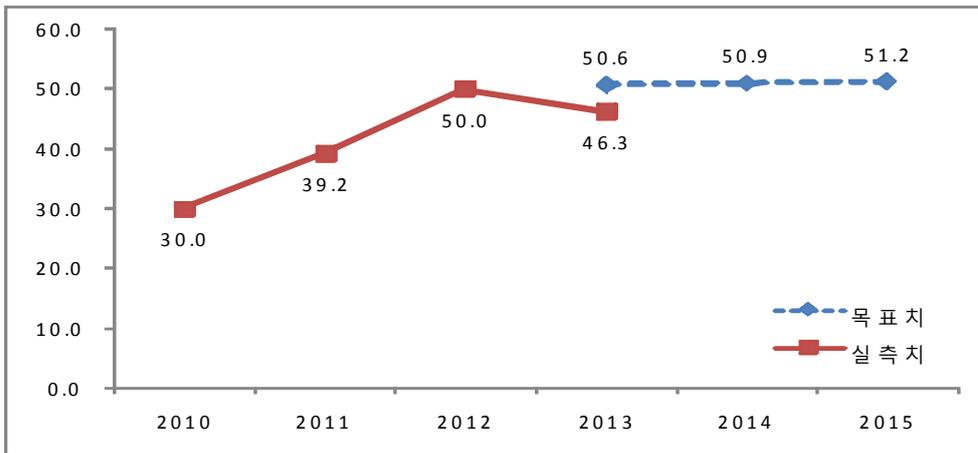
○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50.0%에서 ’13년 46.3%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50.6%)의 91.5% 달성

-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로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가입률이 ‘12년 13.4%에서 ’13년 14.7%로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 관련 교육실시횟수도

‘12년 244회에서 ’13년 341회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51.2%)의 90.4%으로 향후 5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자수 증가를 위한 공공기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민간사업장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

[그림 3-22]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핵심성과지표: 퇴직연금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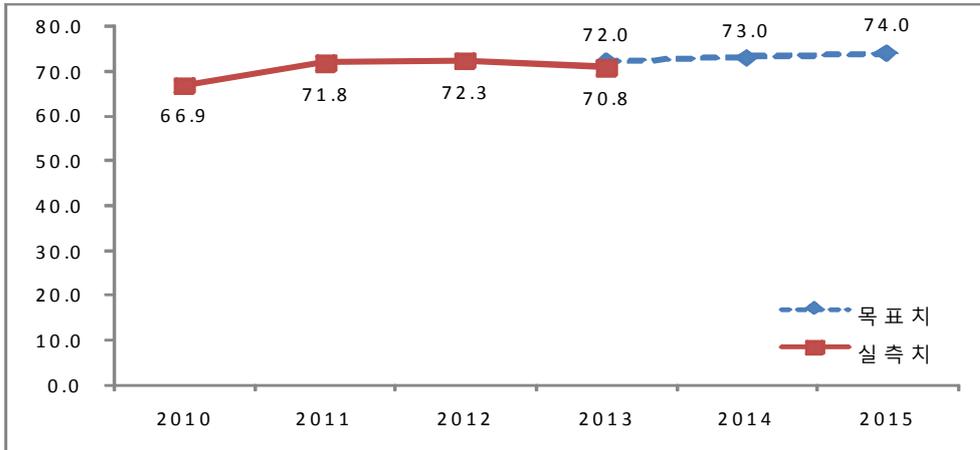
주: 산식: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자 ÷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퇴직연금통계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소영역)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핵심과제)

-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72.3%에서 ’13년 70.8%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72.0%)의 98.4% 달성
 - 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74.0%)의 95.7% 수준으로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판단

[그림 3-23]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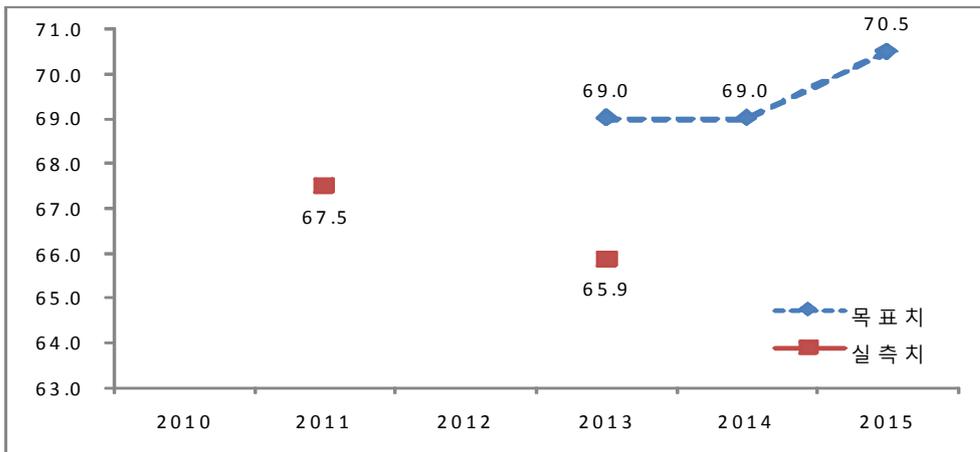
주: 산식: 건강검진 수검자 ÷ 건강검진대상자 × 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1-4.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소영역)

□ 노후설계 기반 조성(핵심과제)

-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핵심성과지표)’은 ‘11년 67.5%에서 ’13년 65.9%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69.0%)의 95.5% 달성

[그림 3-24] 노후설계 기반 조성 핵심성과지표: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주: 산식: 50대 이상 노후준비응답자 ÷ 조사대상자중 50대 이상 수 × 1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이는 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평가지표 등을 통해 71,371명에게 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제공, 21,534명에게 찾아가는 노후생애관리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70.5%)의 93.5% 수준으로 노후설계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후설계 추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야할 것으로 판단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부문(중영역)의 경우 4개 소영역에 대해 7개 핵심과제 포함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고령자 고용연장(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노인일자리 창출수' 적용
 -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공적소득보장율' 적용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에서는 3개 핵심과제 포함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적용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적용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적용
 -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소영역)에서는 2개 핵심과제 포함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 적용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적용

〈표 3-5〉 고령사회 분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수	-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	-	-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	-	-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 연기연금제도 활성화
	-	-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내실화 - 농지연금 활성화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	- 노인 질병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노인건강정책 제도기반 확충 -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 노인다빈도질환 관리체계 구축 -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제공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	-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치매환자 인식개선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	-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보험 수급절서 확립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 노인운동 활성화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	-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확대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화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기반마련 -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 문화바우처 지원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2-1.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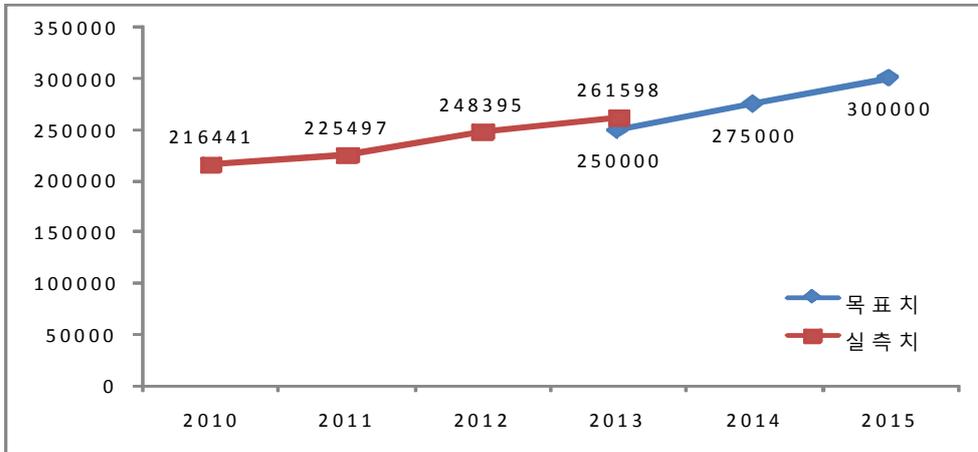
○ ‘노인일자리 창출 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 248,395건에서 ’13년 261,598건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50,000건) 초과달성(104.6%)

- 이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노인일자리 질적 고도화,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

정 및 역할 강화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30만건)의 87.2% 수준으로 향후 노인일 자리를 추가적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 노인의 만족도(현재 3.8점)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림 3-25]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수(건)



주: 산식: 노인일자리 창출 수 (공공분야+민간분야)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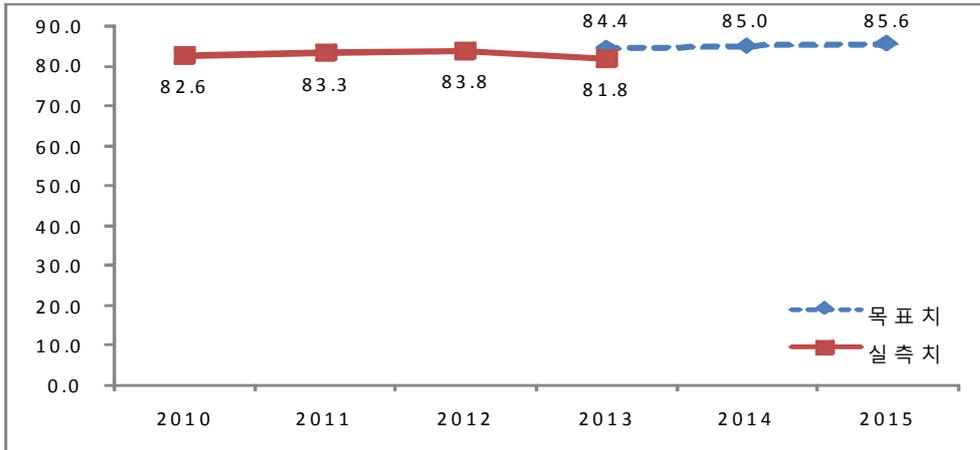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핵심과제)

○ '공적소득보장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83.8%에서 '13년 81.8%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84.4%)의 96.9% 달성

-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12년 393만명에 '13년 405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간 중복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공적소득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 가능

- 현재 '15년도 목표치(85.6%)의 95.6% 수준으로 향후 무연금·저연금 베이비붐세대 등 타깃 집단에 대한 심층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공적소득보장 체계를 보다 강화 필요

[그림 3-26]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공적소득보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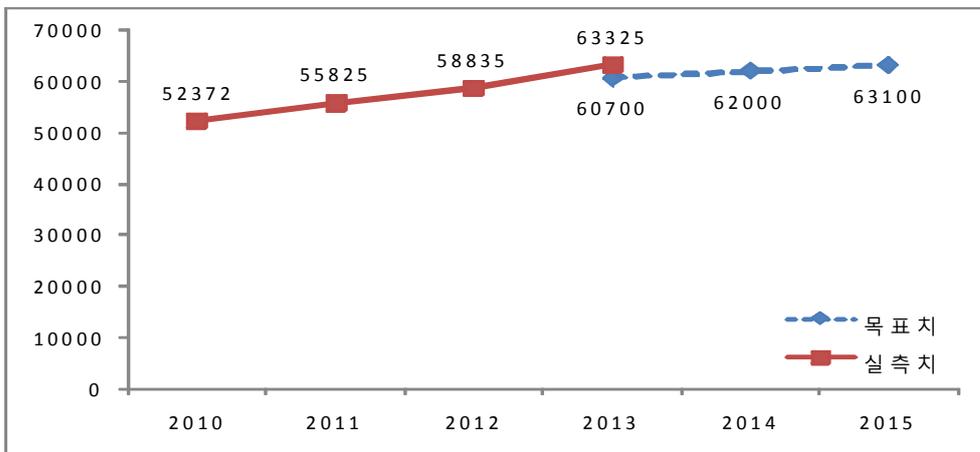
주: 산식: (기초노령연금+공적연금 수급자-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중복수급자)÷65세 이상 노인인구×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핵심과제)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 58,835명에서 ’13년 63,325명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60,700명) 초과달성(104.3%)

[그림 3-27]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핵심성과지표: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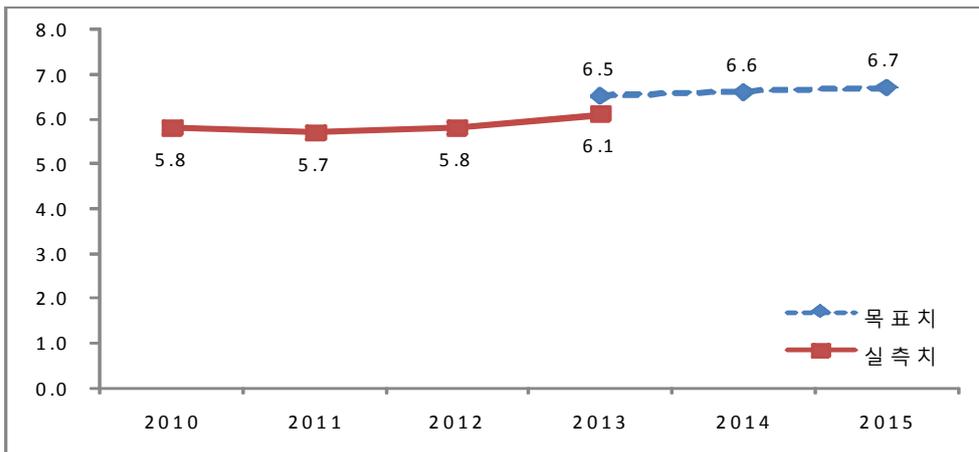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이는 체계적 치매 예방치료 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인식 개선으로 치매조기검진 이용자(1차)가 '12년 876,397명에서 '13년 1,593,598명으로 증가한 성과로서 1차 이상 발견 이용자가 이용하는 치매 조기검진(2차) 이용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이 '15년도 목표치(63,100명)를 이미 초과달성(100.4%)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핵심과제)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5.8%에서 '13년 6.1%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6.5%)의 93.8% 달성
- 이는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품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보험 수급절서 확립,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로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장기요양 등급기준 확대)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6.7%)의 91.0%로 실수요자의 누락 등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는 등의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3-28]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핵심성과지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주: 산식: 노인장기요양 등급확정자 (1-3등급)÷노인인구×1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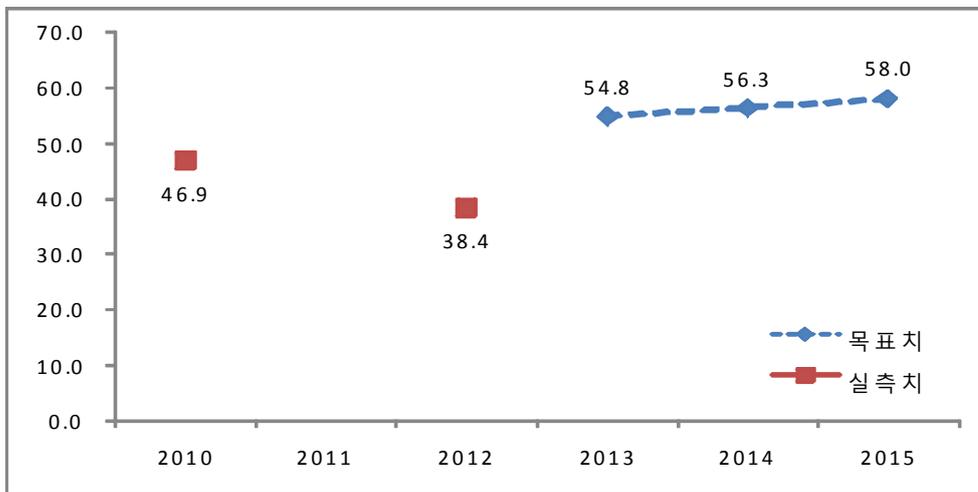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핵심과제)

○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38.4%로 ’13년도 목표치(54.8%)의 70.1% 달성

– 그간 노인 운동 활성화,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노인건강교실 강습 실시 횟수가 ‘12년 227,376회에서 ’13년 230,699회로 증가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12년 812명에서 ’13년 823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미흡,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노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가능

- 다른 한편으로 격년제로 관련 지표가 생산되고 있어 ‘13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 노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매년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그림 3-29]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핵심성과지표: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 참여율(%)



주: 산식: 생활체육참여 60세이상 인구 ÷ 60세이상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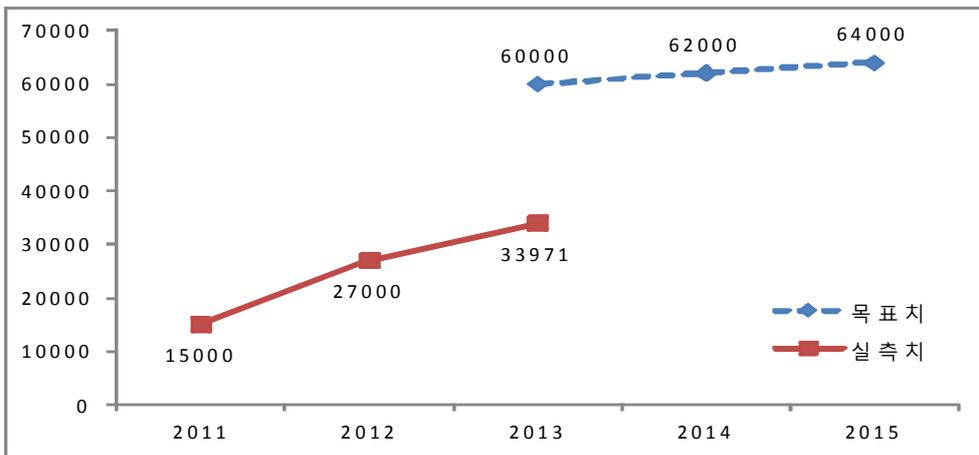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소영역)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핵심과제)

-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 27,000명에서 ’13년 33,97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당해연도 목표치(60,000명)의 56.6% 달성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다양화,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으로 노인자원봉사클럽수 확충(‘12년 1,352개에서 ’13년 1,594개로 증가),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증가(‘12년 32개에서 ’13년 38개로 증가),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참가횟수 증가(‘12년 1,298회에서 ’13년 1,485회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참여자는 목표 만큼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가능
 - ‘13년도 수준은 2015년도 목표치(64,000명)에 비해 53.1%에 불과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노년층에 적합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3-30]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명)



주: 산식: 사회복지분야 65세이상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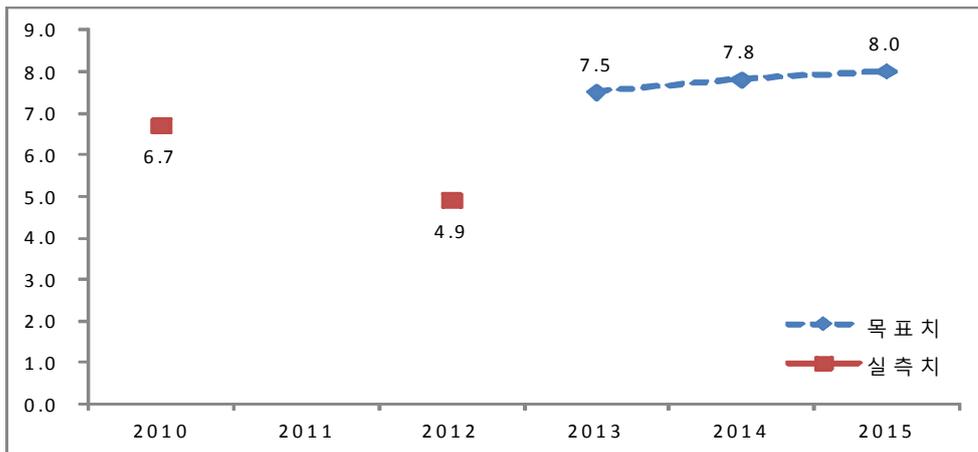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핵심과제)

-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4.9%로 ’13년도 목표치(7.5%)

의 65.3%만 달성

- 고령자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문화이용권 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고령자 여가문화 프로그램 수혜자 수 증가('12년 4,040명→'13년 6,396명), 노인복지관 증가('12년 300개소 →'13년 319개소), 문화바우처 이용자 수 증가('12년 161만명 →'13년 163만명),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증가('12년 11,804명 →'13년 13,833명) 등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은 더디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다른 한편으로 격년제로 관련 지표가 생산되고 있어 '13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운 실정.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이 매년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12년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8.0%)에 비해 61.3%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증가 속도만큼 노인의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지원 강화, 홍보 강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그림 3-3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핵심성과지표: 노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율(%)



주: 산식: 노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자수 ÷ 60세 이상 노인수 × 10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

3.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부문(중영역)의 경우 2개 소영역에 대해 4개 핵심과제를 관리하고 있음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비율(총임대주택 대비)’ 적용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노인교통사망률’ 적용
-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적용
 -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적용

〈표 3-6〉 고령사회 분야: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비율 (총임대주택 대비)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고령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노인교통사망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자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독거노인 보호 강화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 노인 보호 강화 -농어촌 가사도우미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	-	-효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노인 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우대 사회분위기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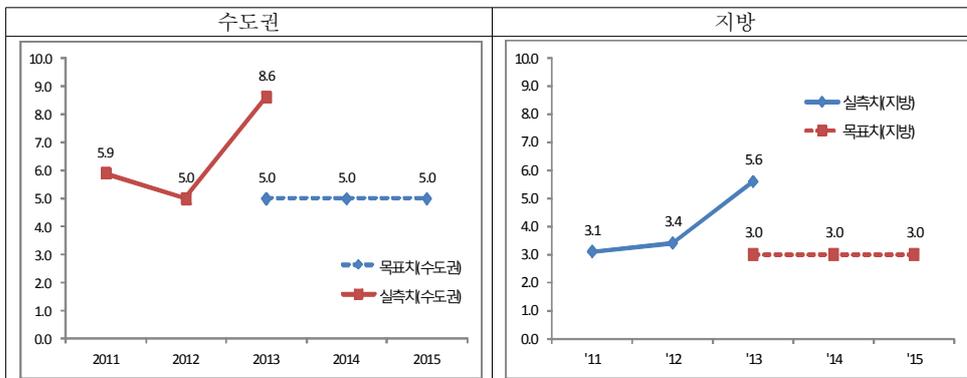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소영역)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핵심과제)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핵심성과지표)’은 수도권외의 경우 ‘12년 5.0%에서 ’13년 8.6% 그리고 지방의 경우 동기간 3.4%에서 5.6%로 각각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수도권 5.0%, 지방 3.0%)를 초과달성(수도권 172.0%, 지방 186.7%)

- 이는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고령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비의 일환으로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 지원, 농촌마을 공동생활주택 공정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2013년도 수준은 2015년도 목표치(수도권 5.0%, 지방 3.0%)의 172.0%와 112.0%로 이미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치 상향조정 고려 필요

[그림 3-3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핵심성과지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주택 대비)(%)



주: 산식: 고령자용 임대주택사업승인실적÷장기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실적×100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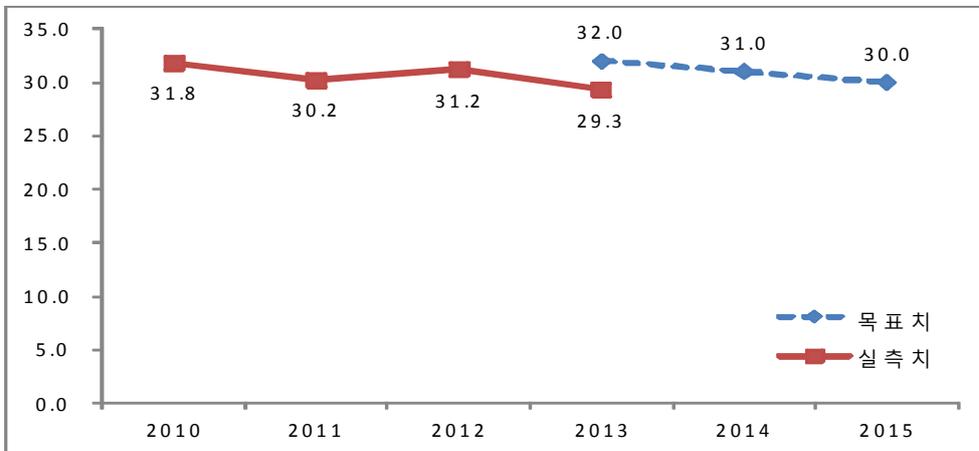
○ ‘노인교통사망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31.2명(10만명당)에서 ’13년 29.3명(10만명당)으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32명/10만명) 초과달성(109.2%)

- 이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추진으로 보차도 분리, 단절보도 연결 등의 보행환경 개선과 고령자 교통

안전 교육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30.0명/10만명)를 이미 초과달성(102.4%)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 고려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그림 3-33]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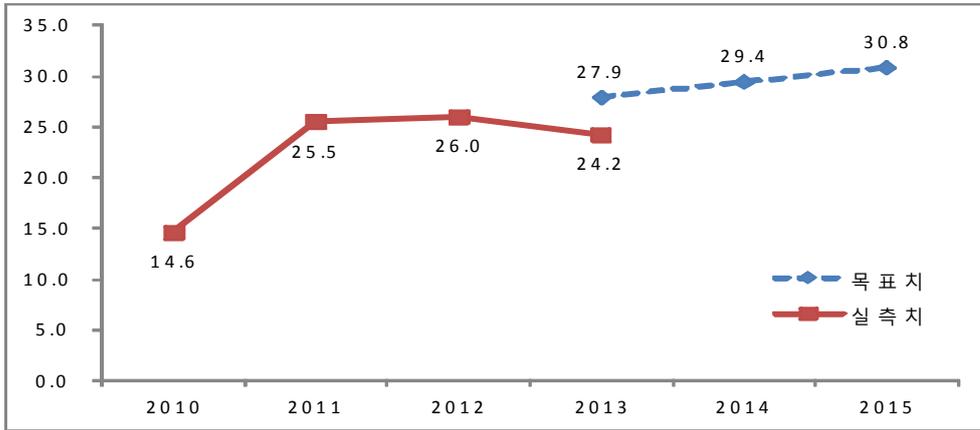
주: 산식: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 65세 이상 노인수×10만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소영역)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핵심과제)

-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핵심성과지표)’는 ‘12년 26.0만명에서 ’13년 24.2만명으로 감소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7.9만명)의 86.7% 달성
 - 독거노인 보호 강화,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 강화, 농어촌 가사도우미로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 등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수혜자가 ‘12년 237천명에서 ’13년 266천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한 수준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30.8만명)의 78.6% 수준으로 사각지대 발굴 등의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그림 3-34]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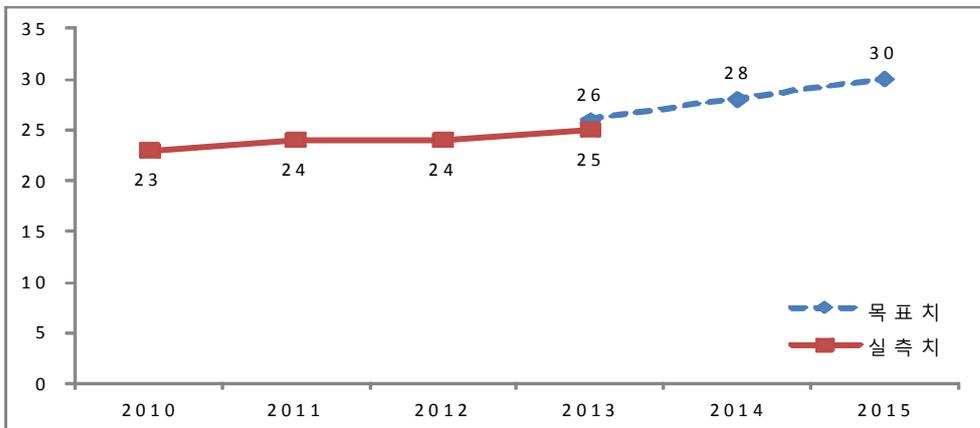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핵심과제)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 24개소에서 ’13년 25개소로 증가하여 당해연도 목표치(26개소)의 96.2% 달성
 - 이는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홍보 강화의 성과로 평가 가능(이에 따라 노인학대 연간 신고건수는 ‘12년 3,424건에서 ’13년 3,520건으로 증가 등)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30개소)의 83.3% 수준으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연차적 지원을 통한 체계적 건립 노력 필요

[그림 3-35]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핵심성과지표: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3절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평가

1.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의 경우 4개 소영역에 대해 6개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AA제도 적용 사업장 여성고용률' 적용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적용
-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7) 및 전문인력 중 거주,재외동포,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규모' 적용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의 경우 2개 핵심과제 포함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적용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평생학습참여율' 적용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산업재해율' 적용

〈표 3-7〉 성장동력 분야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제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 확대 -법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청소년, 여대생등직업진로지도강화및추진체계 확충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이주·장애인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외국국적 동포 외국 인력 활용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규모	-외국국적 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참여 확대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인력 확보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사업
	-	-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 제고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계좌제 확대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 개선 -노·사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자활치료 및 상담 강화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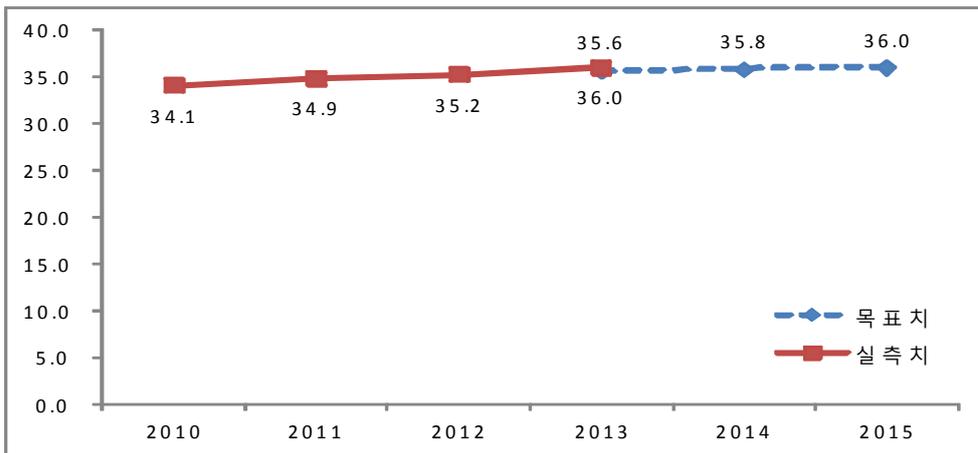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핵심성과지표)’은 ‘12년 35.2%에서 ’13년 36.0%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35.6%) 달성(101.2%)

- 이는 적극적 여성고용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제고하였으며,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과학기술분야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성과로 평가 가능

- 실제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2년 9.3%에서 ’13년 9.9%로, 5급상당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12년 9.9%에서 ’13년 10.7%로,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이 ‘12년 13.7%에서 ’13년 14.1%로, 여성 교장·교감 비율이 ‘12년 24.5%에서 ’13년 27.2%로 증가하였고,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참여 여학생이 ‘12년 172,309명에서 ’13년 174,537명으로 각각 증가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36.0%)를 이미 달성(100.0%)하여 향후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그림 3-36]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



주: 산식: 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근로자수 ÷ AA제도적용사업장 전체근로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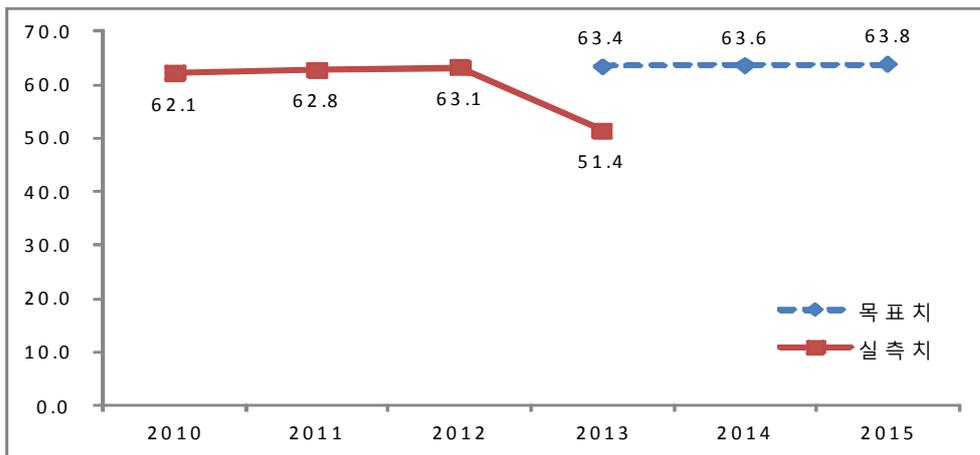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핵심과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핵심성과지표)’은 ’13년 51.4%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당해년도 목표치(63.4%)의 81.1% 달성

– 새일센터의 경우 ‘13년 워크넷과의 시스템 통합으로 중복에 대한 제외, 취업연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떨어진 결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63.8%)의 80.6%로 향후 여성새일센터의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내실화 내지 활성화가 필요

[그림 3-3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핵심성과지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주: 산식: (취업자수/구직등록인원)X100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1-2.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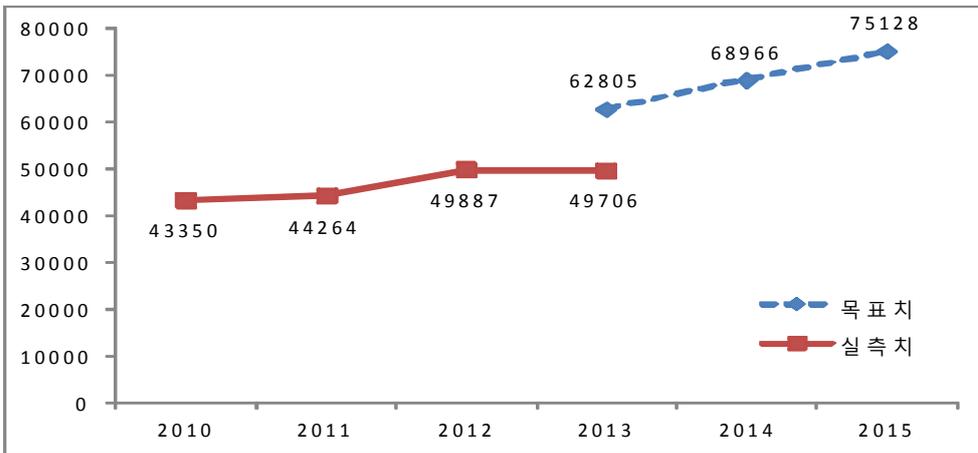
○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핵심성과지표)’는 통계치가 없어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만으로 측정된 결과 ‘12년 49,887명에서 ’13년 49,706명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

생산이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해외 전문인력 유인을 위하여 우수 외국인 정착(주거)이 용이하도록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필요가 있음

[그림 3-38]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핵심성과지표: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주: 실측치는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이며, 목표치는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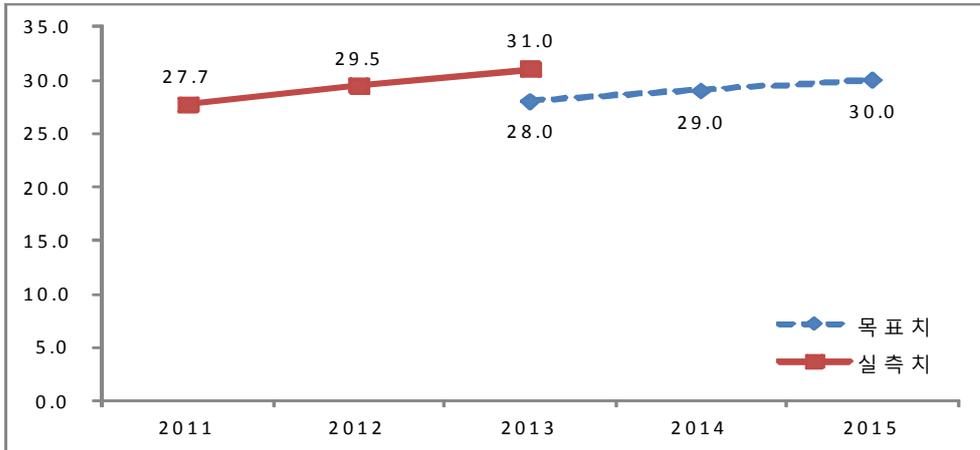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핵심과제)

-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29.5%에서 '13년 31.0%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28.0%) 초과달성(110.7%)
 - 이는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직업심리 검사 및 직업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한 성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이 2015년도 목표치(30.0%)를 이미 초과달성(103.3%)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그림 3-39]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핵심성과지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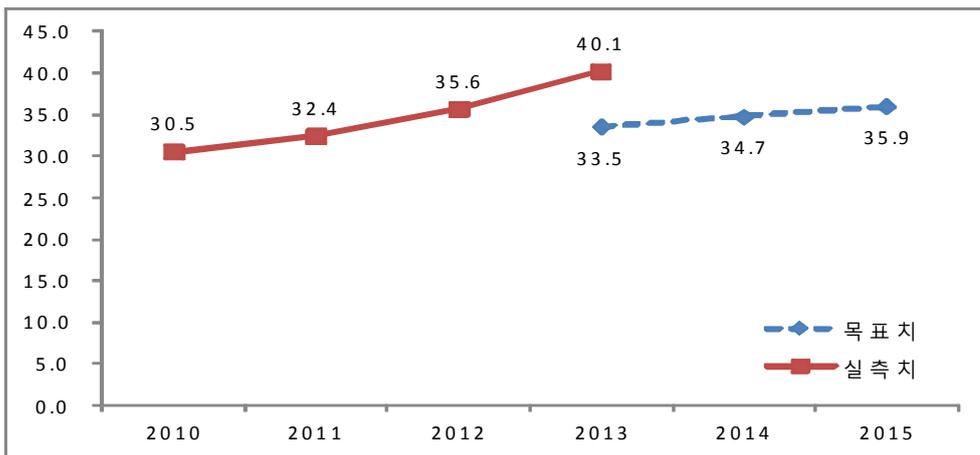
주: 산식: 프로그램 참여자수/재학생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핵심과제)

- ‘평생학습참여율(핵심성과지표)’은 ‘12년 35.6%에서 ‘13년 40.1%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33.5%)를 초과달성(119.7%)

[그림 3-4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주: 산식: 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참여자÷ 25~64세성인×100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 이는 평생학습 계좌제를 확대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평생학습과 자격제도 간 연계를 강화한 성과로 평가 가능
- 실례로 평생학습계좌 개설 인원수가 '12년 4,620명에서 '13년 15,614명으로 증가
- 현 수준이 2015년도 목표치(35.9%)를 이미 초과달성(111.7%)하여 목표치의 상향조정이 필요(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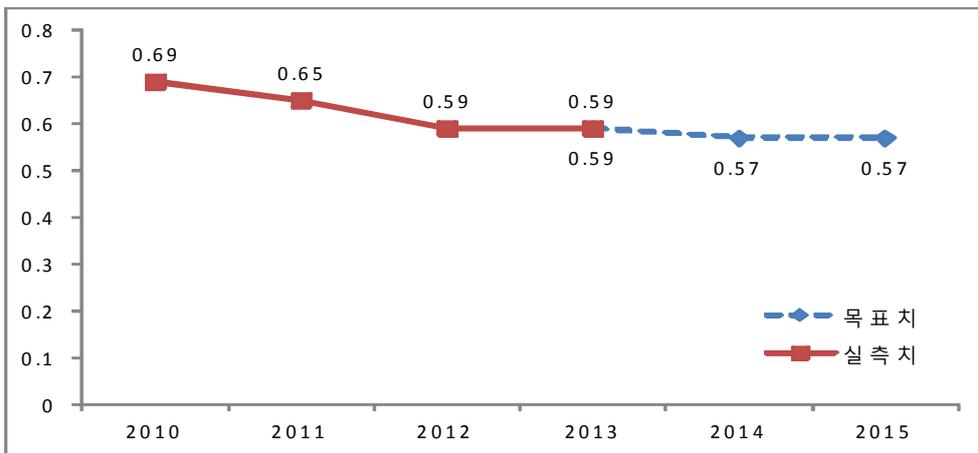
1-4.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핵심과제)

○ '산업재해율(핵심성과지표)'은 '13년 0.59% 수준이 지속되어 당해년도 목표치(0.59%)를 달성

- 이는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지원사업장의 재해감소율이 '12년 34.2%에서 '13년 35.6%로 증가하고, 산재취약부문(여성, 고령자,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12년 교육지원이 110,891명에서 '13년 138,36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장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작업환경 측정비용을 지원한 사업장이 '12년 9,633개소에서 '13년 17,117개소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이 2015년도 목표치(0.57%)의 96.6%로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

[그림 3-41]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주: 산식: 재해자수 ÷ 근로자수 × 100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중영역)의 경우 2개 소영역에 대해 2개 핵심과제를 포함
-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금융분야 제도개선(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적용
-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 개선(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적용

〈표 3-8〉 성장동력 분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 개선(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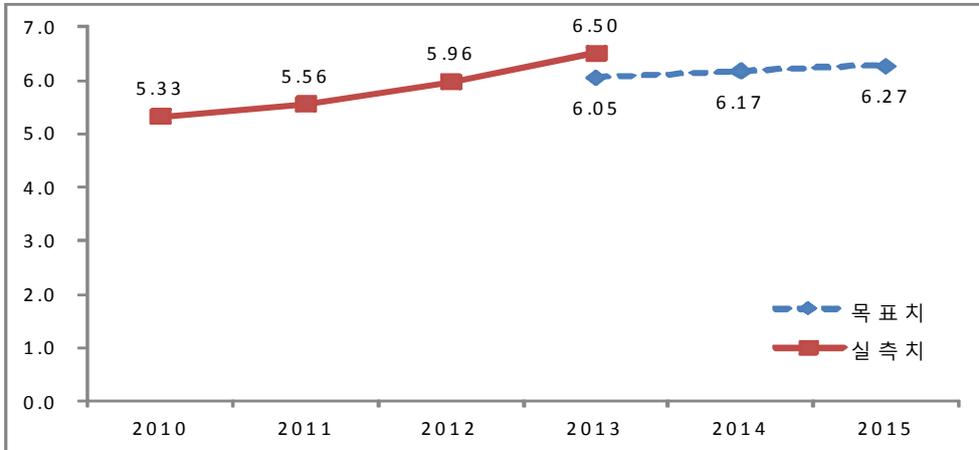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	-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 마련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방안 검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	-	-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고령층의 주택수요에 선제적 대응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수립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 검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 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재정건정성 관리시스템 개선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 금융분야 제도 개선(핵심과제)
-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핵심성과지표) 연수는 ‘12년 5.96년에서 ’13년 6.50년으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6.05년)를 초과달성(107.4)
 - 이는 자산시장 변화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이 '15년도 목표치(6.27년)를 이미 초과달성(103.7%)하여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이에 대해서는 제7장 참조)

[그림 3-42] 금융분야 제도 개선 핵심성과지표: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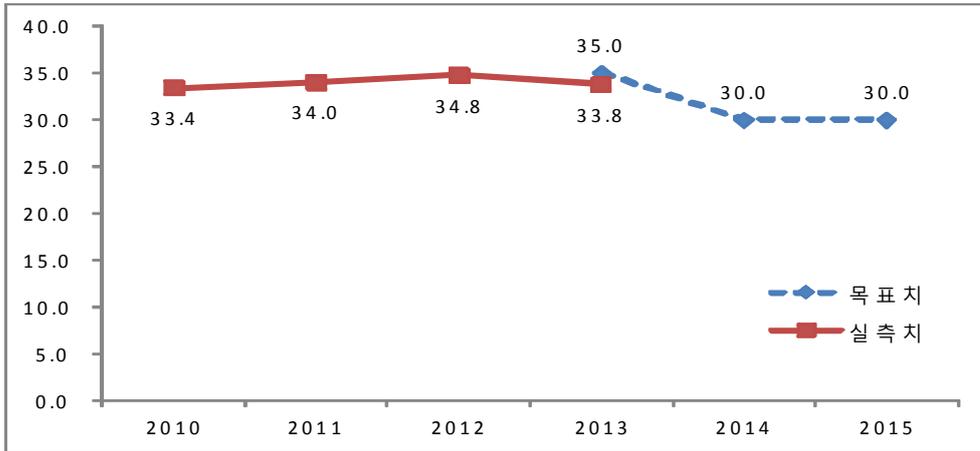
2-3.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재정분야제도 개선(소영역)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핵심과제)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핵심성과지표)'은 '12년 34.8%에서 '13년 33.8%로 증가하여 당해년도 목표치(35.0%)를 초과달성(103.6%)

- 이는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마련하는 등의 성과로 평가 가능
- 현 수준이 '15년도 목표치(30.0%)의 88.8% 수준으로 지속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3-4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핵심성과지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의 경우 2개 소영역에 대해 2개 핵심과제를 관리하고 있음

-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표 3-9> 성장동력 분야: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핵심성과지표 구성

소영역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세부과제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확대
	-	-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국내외 시장 활성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운영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등 향노화산업 육성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 지원
	-	-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 기준규격 신설 -고령자용 식품 신규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핵심과제)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지표로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적용

○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의 경우 1개 핵심과제 포함

- 국내 수요기반 확충(핵심과제) 관리를 위하여 핵심성과지표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 적용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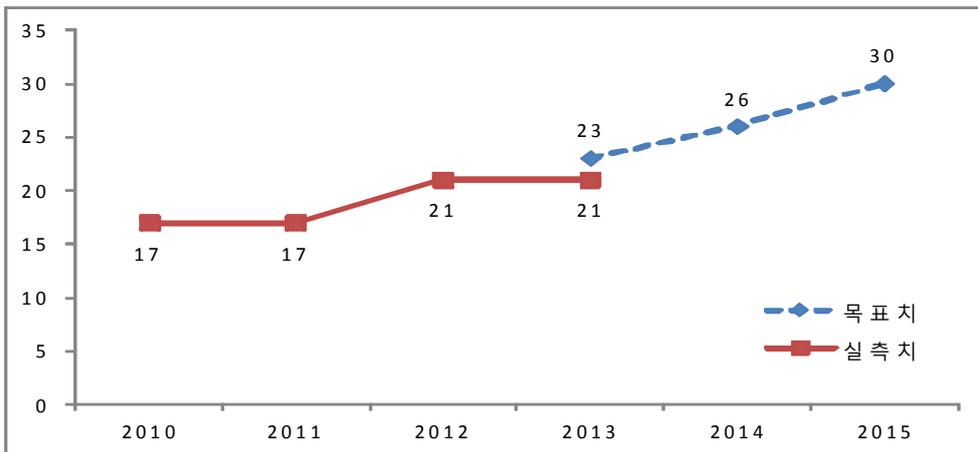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핵심과제)

○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과 '13년에 21개로 당해년도 목표치(23개)의 91.3% 달성

- 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를 확대하고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개선하며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고령친화제품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가능

- 현 수준이 '15년도 목표치(30개)의 70.0% 수준으로 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그림 3-44]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핵심성과지표: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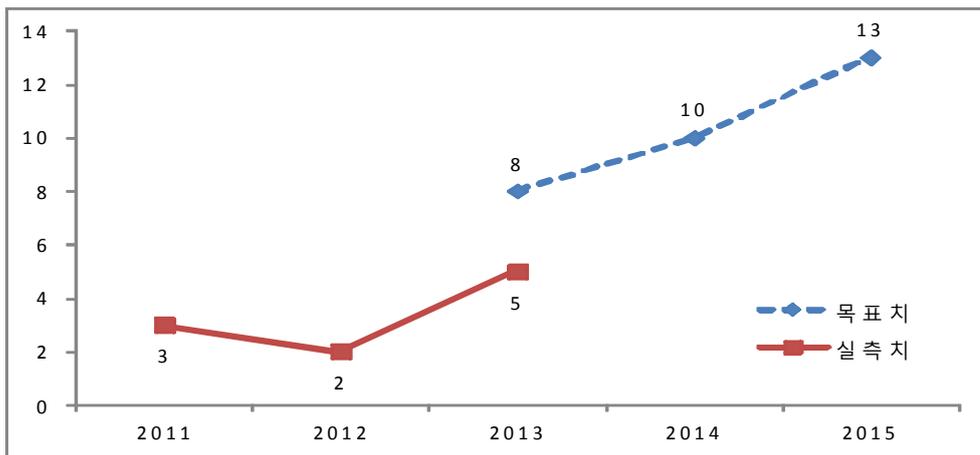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 국내 수요기반 확충(핵심과제)

-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 수(핵심성과지표)’는 ‘12년 2개소에서 ’13년에 5개소로 증가하였으나 당해년도 목표치(8개소)의 62.5% 달성
- 현 수준은 ‘15년도 목표치(13개소)의 38.5% 수준으로 수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센터를 차질없이 건립 추진 필요

[그림 3-45] 국내 수요기반 확충 핵심성과지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4절 핵심성과지표 평가 결과 종합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핵심과제 45개 중 ‘15년도 목표를 ’13년에 이미 달성한 과제는 15개, 향후 차질없이 달성이 가능한 과제는 19개,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11개로 판단
- 저출산 분야의 경우 총 18개 핵심과제 중 ‘15년도 목표 기 달성 7개, 목표 달성 가능 8개, 정책 강화 필요 3개 과제로 판단
- 고령사회 분야의 경우 총 17개 핵심과제 중 ‘15년도 목표 기 달성 4개, 목표 달성 가능 9개, 정책 강화 필요 4개 과제로 판단

○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총 10개 핵심과제 중 '15년도 목표 기 달성 4개, 목표 달성 가능 2개, 정책 강화 필요 4개 과제로 판단

〈표 3-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과제에 대한 '15년 목표 달성 가능성 진단 결과

(단위: 개)

	핵심과제수	'13년에 기 달성 핵심과제수	'15년 달성 가능 핵심과제수	정책 강화 시 '15년 달성 가능 핵심과제수
전체	45	15	19	11
저출산 분야	18	7	8	3
고령사회 분야	17	4	9	4
성장동력 분야	10	4	2	4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들 중 대부분은 '13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들로는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78.3%),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91.8%),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94.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94.9%),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확대(96.6%), 육아휴직제도 개선(99.0%) 등

〈표 3-11〉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부과제(핵심과제)	2013 실적	2013년 목표달성도 (%)	2015년 목표대비 실적(%)	'15년 목표 달성 가능성 (△곤란, ○ 가능, ◎기초과)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71.5	99.0	98.5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활성화	0.8	162.0	40.0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14.8	100.7	82.7	○
		가족친화직장·사회 환경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18.4	102.6	88.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288	269.2	238.0	◎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1.7	117.0	117.0	◎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440.1	102.2	84.4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46	78.3	54.3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3.4	91.8	75.7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65.4	115.8	105.5	◎
		민간육아시설서비스 개선*	98.1	116.4	102.3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21.0	94.2	92.9	△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291	103.9	90.9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확대	45.4	96.6	8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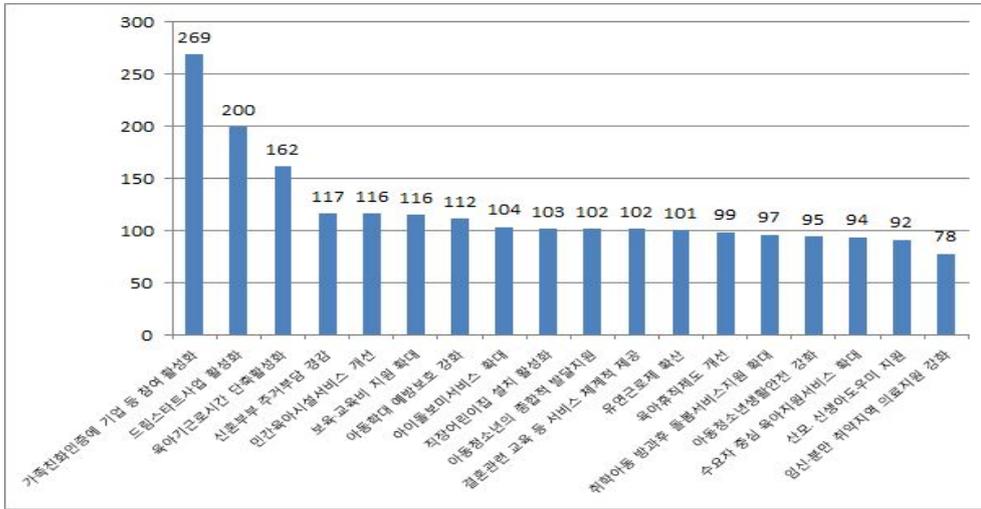
〈표 3-11〉 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부과제(핵심과제)	2013 실적	2013년 목표달성도(%)	2015년 목표대비 실적(%)	'15년 목표 달성 가능성(△곤란, ○가능, ◎기초)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22.0	200.0	146.7	◎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45,064	102.4	100.1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생활안전 강화	3.9	94.9	82.1	○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0.73	112.3	102.8	◎

주: 음영은 '13년도 목표 달성, *는 '15년도 목표 달성 과제

- '13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는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중영역) 중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소영역과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소영역에 집중
 - 특히,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78.3%)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91.8%),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94.2%),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94.9%),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확대(96.6%), 육아휴직제도 개선(99.0%)에 대해서도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13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발전 속도를 유지하여 '15년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 필요
 - 이미 '15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의 경우에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거나 지표를 현실화하는 등 업그레이드하여 가시적으로 출산율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상향조정 대상 과제들로는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임
 - 지표를 현실적인 것으로 변경해야 할 과제로는 민간육아시설서비스 개선임
 - 내실화 등으로 목표를 변경해야 할 과제들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등임

[그림 3-46] 저출산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2013년도 기준)



2. 고령사회 분야

-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들 중 대부분은 `13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들로는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56.6%),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65.3%),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70.1%),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 강화(86.7%),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91.5%), 장기요양보험 내실화(93.8%), 노후설계 기반 조성(95.5%), 학대노인 보호 강화(96.2%),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96.9%),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98.4%) 등

<표 3-12>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부과제(핵심과제)	2013년 실적	2013년 목표달성도(%)	2015년 목표대비 실적(%)	`15년 목표 달성 가능성 (△곤란, ○가능 ◎기초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63.7	100.2	98.9	○
		맞춤형 고령자 전직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80.3	107.1	104.3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62.9	100.0	96.8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46.3	91.5	90.4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70.8	98.4	95.7	○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기반 조성	65.9	95.5	93.5	△	

〈표 3-12〉 계속

중분류	소분류	세부과제(핵심과제)	2013년 실적	2013년 목표달성도(%)	2015년 목표대비 실적(%)	15년 목표 달성 가능성 (△곤란, ○가능 ◎기초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261,598	104.6	87.2	○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81.8	96.9	95.6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63.3	104.3	100.4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6.1	93.8	91.0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384('12)	70.1	66.2 ('12년 대비)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34.0	56.6	53.1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4.9('12)	65.3	61.3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86(수도권) 5.6(지방)	179.3	172.0 186.7	◎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29.3	109.2	102.4	◎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 강화	24.2	86.7	78.6	○
		학대노인 보호 강화	25.0	96.2	83.3	○

주: 음영은 '13년도 목표 달성, *는 '15년도 목표 달성 과제

□ '13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특히,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중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와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등의 소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소영역)"에서는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56.6%),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65.3%)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소영역)"에서는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70.1%)에 대해서는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중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소영역)"에서도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 강화(86.7%)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91.5%), 장기요양보험 내실화(93.8%), 노후설계 기반 조성(95.5%), 학대노인 보호 강화(96.2%),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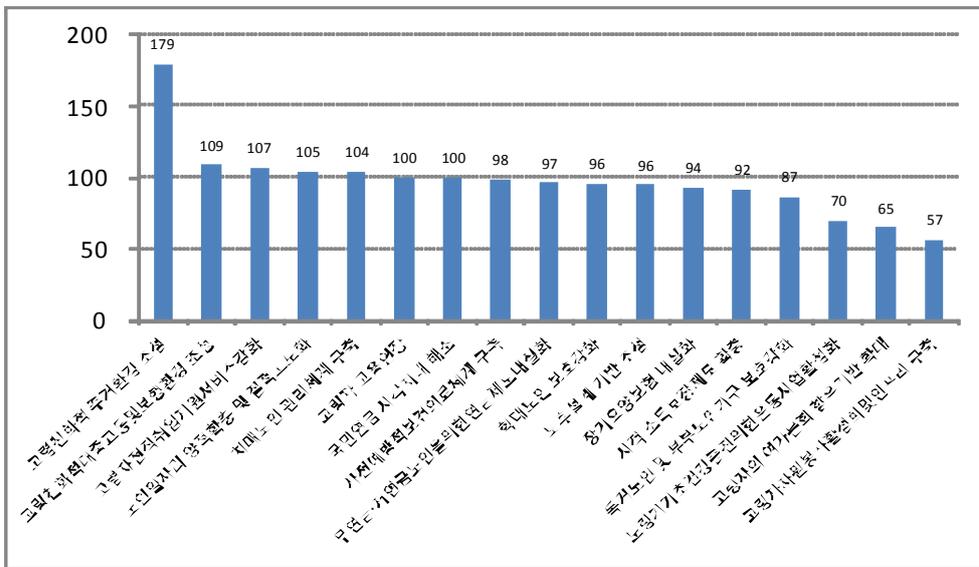
실화(96.9%),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98.4%)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13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완료 해인 `15년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함

○ 이미 `15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의 경우에는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업그레이드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상향조정 대상 과제들로는 고령자 전직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임

[그림 3-47] 고령사회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 달성도(2013년도 기준)



3.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들 중 대부분 `13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도 목표 미달성 과제들은 여성 및 외국인력 활용 분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81.1%)과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79.1%), 그리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의 국내 수요기반 확충(62.5%)과 고령친화제품 지

정·표시제도 확대(91.3%) 등

-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13〉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목표 달성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부과제(핵심과제)	2013년 실적	2013년 목표달성도(%)	2015년 목표대비 실적(%)	`15년 목표 달성 가능성 (△곤란, ○가능 ◎기초과)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36.0	101.2	100.0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51.4	81.1	80.6	△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49,706	79.1	66.2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31.0 40.1	110.7 119.7	103.3 111.7	◎ ◎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0.59	100.0	96.6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6.50	107.4	103.7	◎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33.8	103.6	88.8	○
고령친화 산업 육성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21	91.3	70.0	△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5	62.5	3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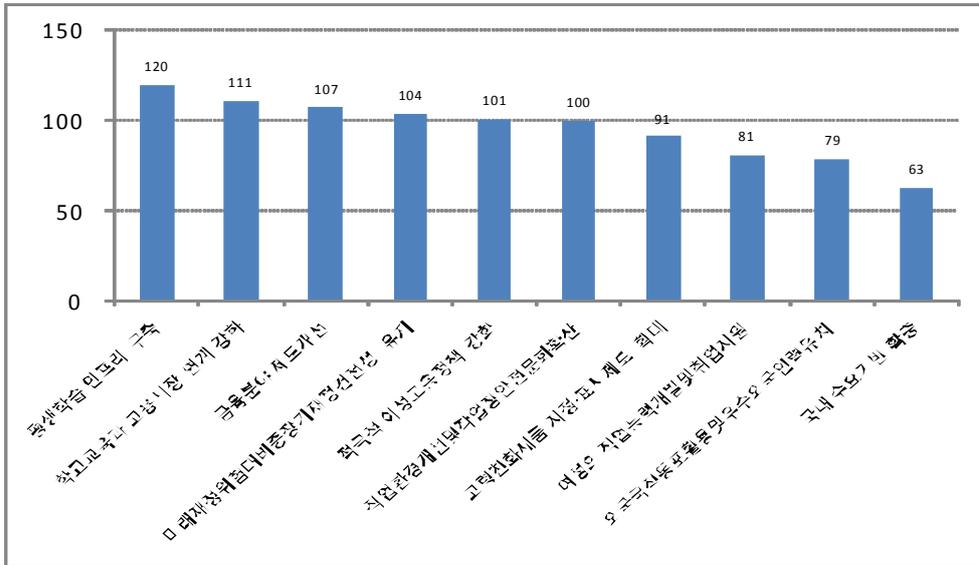
주: *는 2015년도 목표 달성과제임

□ `13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완료 해인 2015년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함.

○ 이미 `15년도 목표를 달성한 과제들의 경우에는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업그레이드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상향조정 또는 목표 변경이 필요한 과제들로는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금융분야 제도 개선임

[그림 3-48] 성장동력 분야 핵심성과지표 목표 달성도(2013년도 기준)





제4장

국민, 전문가 및 언론 평가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제2절 전문가 평가

제3절 언론 평가

4

국민, 전문가 및 언론 평가 <<

제1절 국민 참여 평가

1. 개요

□ 국민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실시

○ 조사대상 (총 1,100명)

– 미혼남녀(25~34세, 300명), 기혼남녀(20~49세, 400명), 중고령남녀(50~69세, 400명)

○ 표출방법

–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5대 권역별, 성·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조사대상 비례할당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내용(부록의 조사표 양식 참조)

– 결혼정책 관련 결혼여건 변화, 결혼 및 자녀 관련 가치관 변화 등

– 출산정책 관련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아동·청소년 성장, 일가정양립 등

– 고령사회정책 관련 노후준비, 일자리, 건강, 활발한 노후생활, 고령친화적 환경 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 실시

○ 조사대상 : 자녀양육 가임기 여성 4인, 고령자(또는 부양 가족) 7인

〈표 4-1〉 저출산 분야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연령	자녀	취업여부	거주지역
저출산-A	30대 초반	3명(11세, 10세, 20개월)	취업(민간기업 사무직)	중소도시
저출산-B	30대 중반	2명(10세, 3세)	취업(민간기업 사무직)	대도시
저출산-C	20대 중반	2명(4세, 3세)	취업(민간기업 사무직)	중소도시
저출산-D	30대 중반	2명(7세, 5세)	취업(공기업 사무직)	대도시

〈표 4-2〉 고령사회 분야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가구형태	결혼상태	경제상태
고령사회-A	여	56세	중졸	중소도시	부부동거	유배우(기혼)	중상위
고령사회-B	여	77세	중졸	대도시	독거	사별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사회-C	남	67세	대졸	대도시	자녀동거	유배우(기혼)	중상위
고령사회-D	여	74세	무학	대도시	자녀동거	사별	중하위
고령사회-E	여	77세	중졸	대도시	부부동거	유배우(기혼)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사회-F	여	80대	-	중소도시	독거	-	-
고령사회-G	여	45세	대졸	대도시	3대동거	유배우	중위

2. 정책체감도와 체감내용

가. 저출산 분야

(1) 일-가정양립 영역

□ 일가정양립 제고 관련 체감도

- 취업 중인 미혼남녀(25~34세)의 15.8%(그런편+매우 그런편)가 과거(2~3년 전)에 비해 요즘 직장일과 결혼생활 간 병행이 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체감
 - 직장이 보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함 27.0%, 직장에서 유연근무제가 더 수월해짐 18.6% 등의 순으로 체감도(긍정적인 응답 비율)가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일가정양립 용이성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아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특히,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의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평가

〈표 4-3〉 미혼남녀(25~34세)의 일가정양립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명)

정책영역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일-가정양립 일상화	직장일과 가정생활 병행 수월	33.6	24.7	25.9	13.1	2.7	100.0	259
1.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1.출퇴근시간 조정,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43.0	19.0	19.4	16.3	2.3	100.0	258
2.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2-1.직장이 가족친화적으로 변화	24.3	19.3	29.3	25.1	1.9	100.0	25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기혼남녀(20~49세)의 12%만이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일-가정 양립이 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체감
-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짐 29.5%,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짐 28.8%,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 28.2%, 직장이 보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화 26.2%, 출퇴근시간 조정,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됨 22.6% 등의 순으로 체감도(긍정적인 응답 비율)가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일가정양립 용이성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아 일-가정양립지원의 정책 체감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휴가휴직제도 확대 등의 순으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평가

〈표 4-4〉 기혼남녀(20~49세)의 일-가정양립 여건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명)

정책영역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일-가정양립일상화	직장일과 가정생활 병행 수월	37.1	22.1	28.8	11.0	1.0	100.0	399
1.휴가휴직제도 확대개선	1-1.출산휴가 자유스럽게 이용	24.9	20.2	25.4	26.4	3.1	100.0	382
	1-2.육아휴직 자유스럽게 이용	24.4	20.7	26.2	26.2	2.6	100.0	386
2.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2-1.출퇴근시간 조정,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	31.5	20.3	25.6	21.1	1.5	100.0	394
3.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3-1.직장이 가족친화적으로 변화	20.0	21.0	32.8	24.1	2.1	100.0	390
	3-2.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2.4	20.4	29.0	26.4	1.8	100.0	39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이러한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의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과 같은 것들을 선호하는데 눈치도 보이고 근무시간이 반이지만 가서 내가 일을 반만 하는 건 아니고 1인분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없이 2배 속도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D, 30대 중반 2자녀)

“큰애가 8세로 학교에 들어가서 휴직하고, 2학기에는 반시간 근무하려고 해요. 본부에서는 하는 사람 거의 없고 지사에서만 하는데 눈치 엄청 봤죠. 휴직도 눈치 엄청 봤고. 임신했으면 그게 축복받을 일인데 그걸 함부로 말할 못하는 거예요. 출산휴가내고 휴직할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잖아요. 슬픈 현실이에요” (저출산-D, 30대 중반 2자녀)

“조금 눈치는 컸었는데 그래도 그냥 과감히 갔다 와야죠. 첫째 때는 육아휴직이 없었고 그때는 정부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도 없었고 아마 제가 처음이예요 이 회사에서 결혼을 해서 계속 다니는 것도 처음, 아이를 낳고 계속 다니는 것도 처음. 거의 처음이라서. 또 본사근무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현장 근무자들은 애 낳고 복직한다는 것 자체가.. 탄력근무는 다른 직원들은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약간 좀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저출산-B, 30대 중반 2자녀)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역

□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영역

- 미혼남녀의 7.8%가 과거(2~3년 전)에 비해 결혼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체감
 - 세부적으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의향이 보다 높아짐 72.4%, 결혼관련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37.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국민행복주택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이 확대 24.5%, 결혼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줄어듦 22.9%,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정책이 개선 11.4%, 결혼비용(주택 이외) 부담이 보다 줄어듦 7.5%, 결혼 시 주택 마련이 보다 수월 2.7% 등의 순으로 체감도(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가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결혼 관련 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 다만,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의향이 높아진 것에 대한 체감도는 아주 높게 나타남

〈표 4-5〉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명)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1.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결혼할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음	41.2	29.1	22.0	6.8	1.0	100.0	296
1-1. 결혼 시 주택 마련이 쉬워졌음	62.2	15.3	19.7	1.7	1.0	100.0	294
1-2.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국민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정책이 확대되었음	24.5	30.2	20.9	22.7	1.8	100.0	278
1-3. 결혼 비용(주택 제외)에 대한 부담이 줄었음	49.0	22.4	21.1	5.1	2.4	100.0	294
1-4. 결혼생활·결혼준비 등에 대한 교육정보 잘 얻을 수 있게 되었음	17.9	18.6	26.1	32.6	4.8	100.0	291
1-5. 남성(남성인 경우 본인)의 가사육아 참여 의향이 높아졌음	4.0	6.1	17.5	57.6	14.8	100.0	297
1-6. 청년층 대상 고용 지원정책이 개선되었음	43.1	24.9	20.5	10.4	1.0	100.0	297
1-7. 결혼이 여성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줄었음	18.7	19.7	38.8	18.7	4.2	100.0	289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전반적으로 기혼남녀의 12.7%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이 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체감
 - 세부적으로 남편(또는 남성인 경우 본인)이 가사나 육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66.6%, 결혼생활과 결혼준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짐 40.9%, 결혼식비용이나 예단, 혼수 등 고비용 혼례문화가 개선 15.7%,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이 보다 용이해짐 9.1% 등의 순으로 체감도(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가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결혼 관련 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다만,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체감도는 아주 높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기혼남녀의 10.1%만이 과거 2~3년 전에 비해 자녀 양육이 보다 수월해진 것으로 체감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영역
 - 기혼남녀의 9.9%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임신과 출산(분만)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체감
 - 세부적으로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보다 줄어들음 21.8%, 출산 후 산모 산후조리나 신생아를 돌보는 부담이 보다 줄어들음 10.0% 등의 순으로 체감도(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가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대한 정책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가능
 - 이러한 임신·출산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의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몸이 안 좋은 산모는 진료를 자주 받으라고 하니깐 그런 경우에 지원이 모자라죠... 고운맘카드 쓰는 전혀 주지 않았던 것이라 만족하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늘어졌으면... 개인 산부인과가 아닌 대학병원은 비용이 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저출산-A, 3자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제가 좀 편하게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기간은 사실 좀 부족하죠. 2주는 사실 몸을 완전히 추스릴 수 있는 기간은 아니거든요. 2주라기 보다는 열흘이니까.” (저출산-A, 3자녀)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영역

○ 기혼남녀의 27.4%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보다 줄어든 것으로 체감

- 이는 보육·교육비 지원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확대된 상태에서 지속되어 체감 정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간주
- 이러한 자녀양육비용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의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막내는 저출산 때문에 정책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내는 좀 받았어요....유치원비도 조금 더 넉넉히 지원을 거의 다 받고 있으니깐. 보육비 지원받는 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나름은 정부에서 당연한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해요. 나라에서는 다 해주는 게 많은데 근데 엄마들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게 많아진 거죠. 다른 아이들이 보통 공통으로 하는데 우리 아이만 빠질 순 없어요. 부담스럽죠. 외벌이에 20만원은 굉장히 큰 거죠.” (저출산-A, 3자녀)

“한 애기당 80만원. 잘 되는 어린이집은 중소기업이라고 말해요. 한 애기당 80만원이고 정부에서 따로 추가적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돈을 준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통학버스 같은 것도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라도 절감을 해주던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통학비용도 따로 내야 되고 애들 간식비도 따로 내야 되고 특별활동도 따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8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80만원도 큰 돈인데 부모가 또 부담해야 되고...” (저출산-C, 20대 중반 2자녀)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제 옆에 직원도 애 엄마예요 제 아이와 한 달 차이거든요. 근데 아직 둘째를 생각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상보육이 계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는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에 대한 복지정책이 조금만 더 확대되면 그때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네이버에서 자꾸 올라오는 것들이 자꾸 내년에 없어진다고 해서. 제 옆에 엄마는 시어머니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보내더라고요. 무상보육이 되니까. 이게 계속 가면 자기는 둘째도 낳겠다 이거죠. 근데 아직은 자꾸 내년부터 돈 낸다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겠다고...” (저출산-B, 30대 중반 2자녀)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영역

○ 기혼남녀의 23.5%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다 안심하고 맡

길 수 있게 된 것으로 체감

- 세부적으로 자녀를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보다 쉬워짐 30.1%, 방과 후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맡기기가 과거에 비해 더 쉬워짐 15.1%, 일시적으로 자녀를 필요한 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어린이집이 아닌) 맡기는 것이 보다 쉬워짐 13.4% 등 체감

○ 전반적으로 정책체감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

-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등의 순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의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어린이집 평가인증 인증을 받았으면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프라이드도 있다고 해야 되나.. 인증 못 받으면 불안하죠. 인증을 받았는데도 사실 불안한걸요. 점심시간에 특히 일하고 있는 엄마가 점심시간에 가서 불시에 우리 아이들이 뭐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거를 줘 한 달에 한번이라도 누군가가 한번이라도 가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주고 정말 식단에 맞춰서 잘 했는지 이런 것이 정말 평가인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관에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평가인증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붙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고쳐가지고 시정해 주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다달이 어느 정도는 한번씩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진정한 평가인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출산-A, 3자녀)

“왜냐하면 10개 어린이집 중에 3군데만 있으면 정말 우수한 어린이집이다 하겠는데.. 10군데 중에 8군데 다 붙어져 있으니까. 인증 받은 그 자체가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어린이집도 평가인증 하는 기간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옷을 원복을 입고 다니거든요. 지금 유치원 원복을 잘 입혀달라고 하던가, 안전띠를 원래 항상 매긴 한데 안전띠 좌석을 더 재배치해서 2주 동안은 자리가 옮겨진다고 문자가 오고 그래요...” (저출산-C, 20대 중반 2자녀)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엄마들이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본다는 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조금 더 엄격하고,.. 아직 네 살이니까 조금 더 따뜻한 곳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출산-C, 20대 중반 2자녀)

“제가 아이돌보미를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냥 동네 같은 아파트에 언니가 있거든요 소개받아서

그 언니 한 달에 60만원 주고 현장에서 9시에 퇴근할 때까지 봐줬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다른 분들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계속 해주셨어요. 하루에 두 시간 밖에 안돼서 이분도 돈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출산-B, 30대 중반 2자녀)

〈표 4-6〉 기혼남녀(20~49세)의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명)

정책영역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0.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0. 자녀양육이 보다 수월해짐	54.1	22.3	13.5	8.6	1.5	100.0	394
1.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1. 결혼이 보다 수월해짐	39.4	33.2	14.8	10.1	2.6	100.0	386
	1-1.신혼부부 주택 마련 쉬워짐	60.3	19.7	10.9	6.3	2.8	100.0	395
	1-2.결혼생활, 결혼준비 등에 대한 교육/정보 잘 얻을 수 있게 됨	15.2	19.4	24.5	32.6	8.3	100.0	387
	1-3.결혼식비용, 예단, 혼수 등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33.8	23.8	26.7	13.6	2.1		390
	1-4.남편(본인)이 가사나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	5.8	6.5	21.1	44.7	21.9	100.0	398
2.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임신, 출산(분만) 비용 부담 줄어듦	54.7	24.2	11.2	6.6	3.3	100.0	393
	2-1.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 줄어듦	36.6	26.3	15.3	18.3	3.5	100.0	372
	2-2.출산후 산모 산후조리, 신생아 돌보는 부담 줄어듦	52.2	22.8	15.1	7.4	2.6	100.0	391
3.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3.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부담 줄어듦	32.5	20.8	19.3	21.9	5.5	100.0	379
4.다양하고 질 높은 육 아지원 인프라 확충	4.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됨	24.7	24.5	27.3	20.6	2.9	100.0	384
	4-1.필요 시 자녀를 아침일찍/저녁늦게까지 맡기기 쉬워짐	19.8	23.3	26.8	24.7	5.4	100.0	373
	4-2.일시적으로 자녀를 다른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쉬워짐(아이돌보미)	33.9	23.7	28.9	11.8	1.6	100.0	380
	4-3.방과 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맡기기 쉬워짐	37.0	22.3	25.6	13.0	2.1	100.0	38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저출산 정책 관련-」.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영역

자녀가 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체감하는 정도는 기혼남녀의 13.1%에 불과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 영역

○ 기혼남녀의 8.4%만이 과거 2~3년 전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 이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등 성장 발달이 보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감

- 아동 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정책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 영역

○ 아동과 청소년이 집에서 안전사고나 등하교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음 28.3%,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를 덜받고 있음 27.8%,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음 26.3% 등의 순으로 체감도(응답 비율)가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

〈표 4-7〉 기혼남녀(20~49세)의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명)

정책영역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0.아동·청소년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0.자녀가 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	38.3	25.2	23.4	12.1	1.0	100.0	397
1.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지원	1-1.아동·청소년 성장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짐	56.3	17.3	18.0	5.1	3.3	100.0	394
2.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2-1.아동·청소년이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음	18.9	19.7	33.1	26.5	1.8	100.0	396
	2-2.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 받음	22.2	20.2	31.3	24.0	2.3	100.0	387
	2-3.아동·청소년 학업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음	25.8	18.4	28.0	25.8	2.0	100.0	396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저출산 정책 관련-」.

나. 고령사회 분야

(1)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

□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영역

○ 고령자(50~60대)의 23.6%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본인은 은퇴 후에 계속 일을 할 수 있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보다 많아진 것으로 체감

-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관련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도의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정년이기보다는 딸이 결혼하면서 그만뒀어요. 다시 들어갈 때에는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 정직원으로 갈 수 없어서 임시직으로 재취업을 했죠. 회사에서 퇴직 전에 전직지원은 잘 몰랐어요.”
(고령사회-A, 56세)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영역

- 동 영역의 정책성과에 대한 고령자(50~69세)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 본인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짐 30.6% 체감
 - 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반적으로 보다 충분해짐 15.1% 체감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9만7천원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병원 몇 번 갔다 오면 없었죠. 20만원 나와서. 근데 다음 달에는 생계비에서 십 얼마를 빼고 주니까 지금은 9만7천원 받을 때랑 지금 받을 때랑 금액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고령사회-B, 77세)

“남편이 국민연금 조기수령했고, 저도 조기수령 신청할 예정이에요. 퇴직 후 국민연금 불입이 어렵고, 퇴직 후 국민연금 만기수령일까지 소득이 없기때문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여 받았어요. 고정적인 수입이 그래도 있으니 다행스러워요” (고령사회-A, 56세)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직장인들에게 도입된건데 지금 내가 국민연금 받는 수준은 아파트 관리비수준이라... 내 나이대들은 대부분 그 정도 받고 있지.” (고령사회-C, 67세)

“기초노령연금 대상 아닌 것에 대해 내가 아는 외국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거 차등으로 주는데 사람들이 지금같이 해도 상관없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연금을 못받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더 받는데 문제는 받는 사람들이 과연 국가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지... 세금을 내는 사람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들은 그 부분이 교육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 매스컴에서도 기초연금이 판사람에게서 나오는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고령사회-C, 67세)

“기초연금이 많이 도움되지. 그돈 없으면 안되... 그돈 느니까 그돈으로 살고있어. 참말로 좋아.”(고령사회-F, 80대)

“주택연금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 나중에 집밖에 안남으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계획은 없어.”(고령사회-C, 67세)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영역

- 동 영역의 정책의 성과에 대한 고령자(50~69세)의 체감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보다 많아짐 66.8%
 -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여건이 좋아짐 62.6%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건강보험공단 안내로 2년마다 검진 받고 있는데 많이 참고가 되요. 개인부담으로 한 번씩 추가해서 검진을 받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골다공증검사, 보건증 만들기, 건강검진 등을 받았어요.”(고령사회-A, 56세)

“어머님이 이상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의사가 그래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정신과치료를 받고.. 나중에 △△병원에서 6시간동안 검사를 했는데 그때 치매초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치매초기라기보다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더 중심이었어요. 국가에서 65세 이상 치매 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발견 못했었어요.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은 MRI찍고 검사도 했었는데, 보기에는 그냥 정상같으니까.”(고령사회-G, 45세)

“처음에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병원에서 귀찮아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확보하고,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병원들이 기계를 설치해놓고 유치를 하는 것 같아. 많이 좋아졌어. 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데 요즘에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는 것 같아. 잠실에도 있는데 거기는 좀 돈을 받고 검진 받는 분위기가 우아한 것 같아서 배우자도 거기로 하고, 나도 거기로 갈 예정이고... 같은 검진을 받아도 좀 더 좋은 곳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 심리잖아. 장모님 치매 검진 받으러 갔을 때 서비스 수준은 좋아졌던 것 같더라고. 수준 있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고객과 대화가 되는 것 같았어. 그 전에는 안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고령사회-C, 67세)

“보건소에 가서 치과선생님이 있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병원을 정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정해준 치과를 갔는데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런지 보철한게 잘 맞지 않아서 지났는데 고통이 있더라고요. 위에건 끼지도 못하고 빼놓고 있어요. 한번 받았으니까 다시 안된다고 해서...” (고령사회-E, 77세)

□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 강화 영역

- 동 영역의 정책의 성과에 대한 고령자(50~69세)의 체감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
 - 건강, 재무, 여가, 사회참여 등 전반적인 영역에 대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짐 48.7%
 - 향후(노후기)에 본인이 과거 노인들에 비해 더 활발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0.9%

〈표 4-8〉 고령자(50~69세)의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변화에 대한 체감도

(단위: %, 명)

정책영역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1.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1-1.은퇴 후 계속 일할수 있거나 재취업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많아졌음	29.7	28.3	18.4	19.9	3.7	100.0	381
2.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2.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해졌음	26.4	25.9	32.7	11.8	3.3	100.0	398
	2-1.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22.0	25.1	22.3	23.3	7.3	100.0	395
3.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3-1.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아졌음	3.3	5.3	24.6	44.7	22.1	100.0	398
	3-2.만성질환 관리 여건이 좋아졌음	4.7	10.8	21.8	44.7	17.9	100.0	380
4.노년기 생애대비 노후 생활 설계 강화	4.과거 노인들에 비해 활발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4.8	19.4	14.8	44.1	16.8	100.0	392
	4-1.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13.0	18.6	19.6	38.8	9.9	100.0	392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고령사회 정책 관련-」.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영역

-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한 고령자(50~69세)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
 - 희망한다면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짐 25.4%,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

다 많아짐 26.0%, 노인일자리 중 정부지원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짐 29.9%, 노후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41.2% 등의 순으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남

-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학교급식하러 다니고 있어요. 20만원 받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나가죠. 돈 때문이 아니라 운동도 하고, 내 손주 같고 하니까... 애들 보는게 재미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갑갑한데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밥이라도 애기들 퍼주고 하면서 옷는거 보고 장난하는거 보면 이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25만원이라도 줬음 좋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만원..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고령사회-D, 74세)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영역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관련 정책에 대한 고령자(50~69세)의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

–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이 안전하게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짐 62.9%

-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처음에는 요양원에 가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등급이 안 나왔었어요. 조사를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대답을 잘하셔서... 우리가 보기엔 이상해도 처음에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공단에서 오면 어르신들이 대답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등급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7개월 있다가 다시 신청했어요. 어머니가 증상이 심해지니까 다시 신청해서 받았던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3등급 시설 나왔는데 당시에는 요양원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등급받고 6개월 뒤에 요양원에 갔었거든요... 재활치료도 할겸... 근데 요양병원이 마이너스됐던 것 같아요. 요양병원은 어머니가 계실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양병원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워만 있게 했어요. 아버님이 힘들어하셔서 결론은 처음에는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요양병원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양원을 신청했었죠. 요양병원은 장기요양혜택을 못 받으니까 전부 내야했어요. 간병인비며 등등... 요양원은 봉사활동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재활치료도 잘 해주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에 잘 맞춰서 케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불

만이 있으신 것 같지만... 한방에 4명 계시는데 어머님만 봐줄 수는 없으니까.”(고령사회-G, 45세)

- 본인은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짐 64.3% 체감
- 향후(노후기)에 본인이 과거 노인들에 비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58.8% 체감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영역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관련 정책에 대한 고령자(50~69세)의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

- 본인은 활발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많아짐 55.4%
- 본인은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많아짐 59.2%

○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자원봉사는 친구들이 하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교육을 받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봉사를 가야하는데 내 다른 사적모임 스케줄이 많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 나 보고는 관광안내 같은 거 하라고 친구들이 하는데 내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받고 하는데 언뜻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직 자신이 없더라고... 시간도 없고. 나도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거 밖에 없는데 못하고 하는 부분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고령사회-C, 67세)

“그 전에 일다닐때는 복지관 신경 안쓰다가 내가 일 그만두고 몸이 안좋으니까 1층에서 운동하다가 보니까 사람들 만나고 프로그램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노인정에서 월, 목요일에 조끼 입고 쓰레기 줍는 것도 하고 그래요. 봉사도 하고 하니까 많이 바빠요.”(고령사회-D, 74세)

“컴퓨터교실 했었는데 복지관이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는지 선생님을 잘 못모시는거 같더라고. 한사람이 계속 진도를 나가면 좋은데 기업체에서 와서 일주일씩 봐주니까 연결되지 않아서 두서가 없어서 머리에 안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달씩 와서 하는데 그것도 한주씩 사람이 다르니까 두서가 없어서 잘 안되서... 그나마 지금은 그것도 안하고 있어...”(고령사회-E, 77세)

〈표 4-9〉 고령자(50~69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변화에 관한 체감도

(단위: %, 명)

정책영역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1.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1.희망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음	29.8	27.2	17.6	19.2	6.2	100.0	386
	1-1.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졌음	24.4	31.2	18.4	21.3	4.7	100.0	381
	1-2.노인일자리 중 정부지원 일자리가 늘고 일 자리의 질이 좋아졌음	24.1	29.6	16.3	24.9	5.0	100.0	361
	1-3.노후소득보장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	14.3	21.6	22.9	30.5	10.7	100.0	384
2.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2.과거 노인들에 비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임	7.0	15.3	18.8	43.0	15.8	100.0	398
	2-1.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이 장기요양보 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5.2	15.5	16.3	46.3	16.6	100.0	367
	2-2.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4.9	14.0	16.8	44.7	19.6	100.0	387
3.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 제공	3-1.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음	6.1	15.8	22.7	41.7	13.7	100.0	379
	3-2.여가/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음	9.4	14.0	17.3	42.2	17.0	100.0	393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고령사회 정책 관련-」.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

□ 고령자(50~69세)의 46.4%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고령자(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정책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살고 있는 주택이 노인들이 살기에 보다 안전해짐 35.9%, 보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 시에 교통여건이 보다 안전해짐 39.8% 등 체감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조성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계단에 딱 서서 에스컬레이터 없는 데는 계단이 너무 길어요. 나도 노력은 하지만 다리는 아프고... 저걸 올라가야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노랑진은 휠체어 다니는 것은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그렇게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고령사회-B, 77세)

“집 고쳐주는거 신청해도 안된다고 하던데. 우리는 통장이 와서 개인이 하면 비싸니까 풀어놓으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슬레이트를 못쓰게 됐으니 뜯어내면 공짜로 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그걸 뜯어내야하는데...”(고령사회-F, 80대)”

-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관련 36.6%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노인 홀로 또는 노인부부가 사는데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진 것으로 체감
-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지금 상태로는 돌보미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와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령사회-E, 77세)

“한번은 내가 복지관에다가 이야기 해봤거든요. 내가 이래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 누가 잠시라도 몇 시간만이라도 나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없겠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그때도 내가 눈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가야하는데 녹내장 약 넣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못가고 갈 사람 없어서 전에 다니던 회사사람을 불러가지고 갔다 왔었지. 그게 제일 힘든거지. 여기 프렌즈 모임에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탄사람들 필요하지만 우리 회원들도 독거들이라 그런 사람들 병원에 갈 때 혼자 못갈 때는 보호자를 데려가기 힘들 때는 우리끼리 누구라도 데리고 가게끔 하자고 해야지.. 남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도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었어요. 이러니까 내가 이러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불안해요.” (고령사회-B, 77세)

〈표 4-10〉 고령자(50~69세)의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변화에 관한 체감도

(단위: %, 명)

정책영역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0.고령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0.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음	13.8	22.6	17.2	36.7	9.7	100.0	390
	1-1.주택이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해졌음	9.1	20.5	34.5	28.1	7.8	100.0	385
1.고령친화적 주거 교통환경 조성	1-2.보행대중교통이용·운전 시 교통 여건이 안전해졌음	10.2	19.4	30.6	31.6	8.2	100.0	392
	2.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11.7	24.7	27.1	29.4	7.2	100.0	377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고령사회 정책 관련-」.

3. 정책체감도의 영향력 분석

가. 정책체감도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가치관이 다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미혼남녀의 22.7%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가치

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남

- 미혼남녀의 25.3%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할 의향이 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 미혼남녀의 18.0%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을 더 빨리 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1〉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가치관 변화 정도

(단위: %, 명)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1.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21.3	22.3	33.7	18.0	4.7	100.0	300
2.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할 의향이 보다 많아졌 습니까?	21.7	20.3	32.7	18.3	7.0	100.0	300
3.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을 더 빨리 할 생각이 있습니까?	31.0	22.0	29.0	13.3	4.7	100.0	300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결혼 정책 관련-」.

- 이러한 결혼가치관 변화에 결혼관련 정책체감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 간 상이한 효과(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통제 후)가 나타남
- 결혼생활·결혼준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근성과 관련한 정책 체감도와 청년층 대상 고용 지원과 관련한 정책 체감도는 결혼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결혼 의향을 높이고,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관련 교육정보 제공과 청년층 고용지원(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은 결혼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평가 가능
- 반면, 주택마련 용이성, 신혼부부대상 주거지원 확대, 결혼비용(주택 이외) 부담 경감, 결혼으로 인한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의 체감도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주택지원정책, 결혼비용경감정책, 일-가정양립지원정책(결혼관련) 등의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결혼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 가능

〈표 4-12〉 저출산 분야 정책 체감도가 결혼가치관 변화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변수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결혼 의향에 관한 가치관	결혼시기에 관한 가치관
	β	β	β
연령	-0.079	-0.121 †	-0.046
성별 - 여성 (기준:남성)	-0.118 †	-0.071	-0.041
거주지역 - 대도시 (기준:중소도시)	-0.024	0.009	-0.090
거주지역 - 농촌 (기준:중소도시)	-0.058	-0.062	-0.109
소득수준 - 저소득 (기준:중소득)	0.040	-0.109	-0.015
소득수준 - 고소득 (기준:중소득)	-0.046	0.017	0.020
취업여부 - 취업 (기준:비취업)	-0.007	-0.065	0.074
학력수준 - 고등학교 이하 (기준:대학 이상)	0.004	0.038	-0.008
주택마련 용이성 증가	0.052	0.001	0.020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확대	0.036	0.097	-0.040
결혼비용(주택 이외) 부담 경감	0.072	0.088	0.094
결혼생활 및 결혼준비 교육정보 접근성 증가	0.189 ***	0.179 **	0.142 *
청년대상 고용지원 개선	0.131 †	0.124 †	0.157 *
결혼이 여성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감소	-0.013	0.000	0.010
F	2.666**	2.616**	1.876*
R ²	.136	.133	.099
Adj R ²	.085	.082	.046
n	253	253	253

† p<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결혼 정책 관련-」.

나. 정책체감도가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 기혼남녀(20~40대)의 12.8%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희망하는 자녀수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

○ 20대와 45~49세에 비해 30~44세에서 희망자녀수가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4-13〉 기혼남녀(20~40대)의 희망자녀수 변화 정도

(단위: %, 명)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럼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희망하는 자녀수가 증가하였습니까?							
전체 (x ² =27.686*)	39.6	12.5	35.1	11.0	1.8	100.0	399
20대	50.0	12.5	29.2	8.3	-	100.0	24
30~34세	52.6	9.2	23.7	11.8	2.6	100.0	76
35~39세	36.6	7.3	42.7	8.5	4.9	100.0	82
40~44세	33.9	16.5	33.0	16.5	-	100.0	109
45~49세	36.1	14.8	40.7	7.4	0.9	100.0	108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저출산 정책 관련-」.

- 그러나 임신출산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체감도가 희망 자녀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효과)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 가능
- 다만, 임신·출산지원 관련 정책체감도는 다소나마 희망자녀수를 증가시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

〈표 4-14〉 저출산 분야 정책 체감도가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β	β	β
연령	0.072	0.071	0.032	0.061
성별 - 여성 (기준:남성)	-0.082	-0.112 †	-0.079	-0.084
거주지역 - 대도시 (기준:중소도시)	-0.082	-0.042	-0.069	-0.057
거주지역 - 농촌 (기준:중소도시)	-0.049	0.003	-0.045	-0.012
소득수준 - 저소득 (기준:중소득)	0.051	0.057	0.072	0.084
소득수준 - 고소득 (기준:중소득)	-0.024	-0.037	-0.028	-0.033
취업여부 - 취업 (기준:비취업)	-0.032	0.012	-0.024	-0.008
학력수준 - 고교이하 (기준:대학 이상)	0.006	-0.009	-0.004	0.004
자녀수	0.048	0.040	0.028	0.042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부담 경감	0.137 *			0.070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부담 경감	0.130 *			0.061
돌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비용부담 경감		0.098		0.06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증가		0.040		-0.016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증가		0.041		0.022
아이돌봄서비스 증가		0.095		0.088
방과후 자녀 돌봄부담 경감		0.055		0.011
일가정양립 지원				
출산휴가 이용여건 증가			-0.039	-0.042
육아휴직 이용여건 증가			0.141	0.050
다양한 형태의 근무 증가			-0.007	-0.026
직장의 가족친화적 변화			0.132 †	0.143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0.084	0.066
F	2.676**	2.091*	2.514**	2.063**
R ²	.081	.087	.097	.135
Adj R ²	.051	.045	.058	.070
n	344	324	344	299

† p<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저출산 정책 관련-」.

다. 정책체감도가 노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중고령자(50~69세)의 39.6%가 과거 2~3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노후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된 것으로 응답함

〈표 4-15〉 고령자(50~69세)의 노후 삶의 질 향상 정도

(단위: %, 명)

구분	변화 정도					계	사례수
	전혀 아님	별로 아님	변화 없음	그런 편임	매우 그림		
과거 2~3년 전에 비해 노후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1.2	19.3	29.9	34.0	5.6	100.0	394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고령사회 정책 관련-」.

- 고령사회 분야 대부분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노후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남
 -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져온 정책들로는 노인일자리 증가, 노인일자리 중 정부일자리 증가 및 질 향상, 노후 경제적 준비 다양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증가, 생활체육 기회 증가, 만성질환 관리 여건 향상, 봉사활동 참여기회 증가, 여가·문화생활 참여기회 증가, 노후설계 기회 증가,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 보행·교통환경 개선, 단독(부부)노인 생활환경 안전 등
 - 특히, 노후 경제적 준비 다양화, 노후설계 기회 증가,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단독(부부)노인 생활환경 안전 등은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노후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발생
 - 노후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로는 은퇴 후 계속고용·재취업 기회 증가, 노후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비중 증가,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증가 등으로 나타남

〈표 4-16〉 정책 체감도가 노후 삶의 질 향상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β	β	β	β	β
연령	0.140 *	0.069	0.071	0.049	0.062
성별 - 여성 (기준:남성)	0.057	0.024	-0.028	0.069	0.007
거주지역 - 대도시 (기준:중소도시)	0.010	0.061	0.022	0.044	0.072
거주지역 - 농촌 (기준:중소도시)	0.039	0.055	0.015	0.049	0.023
소득수준 - 저소득 (기준:중소득)	-0.062	-0.009	0.002	-0.044	0.005
소득수준 - 고소득 (기준:중소득)	0.123 *	0.156 **	0.072	0.156 **	0.082
취업여부 - 취업 (기준:비취업)	0.111 *	0.071	0.085 †	0.066	0.100 †
학력수준 - 중학이하 (기준:고교)	0.020	0.017	0.034	0.051	0.058
학력수준 - 대학이상 (기준:고교)	0.065	0.015	0.061	0.027	0.062
노후 경제적 보장					
은퇴 후 계속고용·재취업 기회 증가	0.040				-0.045
노인일자리 증가	0.182 **				0.105 †
노인일자리 중 정부일자리 증가 및 질 향상	0.138 *				0.059
노후 경제적 준비 다양화	0.190 **				0.122 *
노후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중 증가	0.065				-0.007
노후 건강 보장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증가		0.078			-0.033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증가		0.134 *			-0.015
생활체육 기회 증가		0.161 *			0.055
만성질환 관리 여건 향상		0.151 *			-0.058
활발한 노후생활 보장					
봉사활동 참여기회 증가			0.184 **		0.093
여가·문화생활 참여기회 증가			0.247 **		0.094
노후실계 기회 증가			0.296 **		0.170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0.181 **	0.126 *
고령자 보행·교통환경 개선				0.141 **	0.070
단독(부부)노인 생활환경 안전				0.368 **	0.277 **
F	8.369***	7.291***	17.853***	15.672***	12.481***
R ²	.282	.229	.386	.360	.551
Adj R ²	.248	.198	.364	.337	.507
n	313	333	354	348	269

† p<0.1, * p <0.05, ** p <0.01, *** p <0.001.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고령사회 정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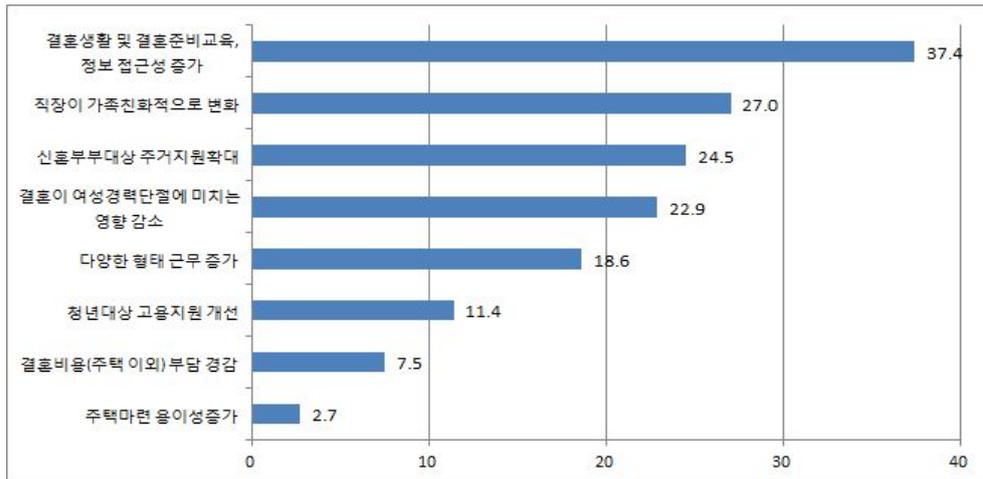
4. 국민 참여 평가 결과 종합

가. 인구집단별 정책체감도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의향이 보다 높아짐(72.4%)을 제외하면 미혼남녀(25~34세)의 정책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세부적으로 결혼관련 교육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37.4%, 직장이 보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함 27.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국민행복주택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정책이 확대 24.5%, 결혼이 여성의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줄어들음 22.9%, 직장에서 유연근무제가 더 수월해짐 18.6%,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정책이 개선 11.4%, 결혼비용(주택 이외) 부담이 보다 줄어들음 7.5%, 결혼 시 주택 마련이 보다 수월 2.7% 등의 순으로 체감도(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가 높게 나타남

[그림 4-1]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 및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체감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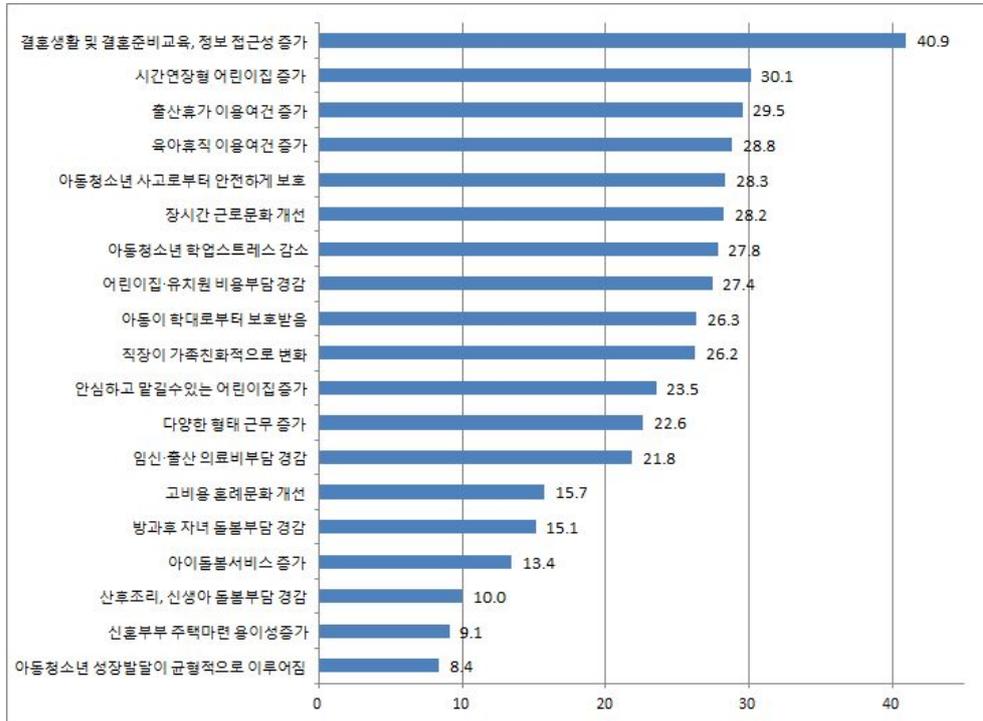


주: 체감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 정도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결혼 정책 관련-」.

- 남편(또는 남성인 경우 본인)이 가사나 육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66.6%) 등을 제외하면 기혼남녀(20~49세)의 정책체감도도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세부적으로 결혼생활과 결혼준비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짐 40.9%, 자녀를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보다 쉬워짐 30.1%,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짐 29.5%,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짐 28.8%, 아동과 청소년이 집에서 안전사고나 등하교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음 28.3%,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 28.2%,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 스트레스를 덜받고 있음 27.8%,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보다 줄어들음 27.4%, 아동들이 학대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음 26.3%, 직장이 보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화 26.2%,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됨 23.5%, 출퇴근시간 조정,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됨 22.6%,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보다 줄어들음 21.8%, 결혼식비용이나 예단, 혼수 등 고비용 혼례문화가 개선 15.7%, 방과 후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맡기기가 과거에 비해 더 쉬워짐 15.1%, 일시적으로 자녀를 필요한 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어린이집이 아닌) 맡기는 것이 보다 쉬워짐 13.4%, 출산 후 산모 산후조리나 신생아를 돌보는 부담이 보다 줄어들음 10.0%,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이 보다 용이해짐 9.1%,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등 성장 발달이 보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8.4% 등의 순으로 체감도(긍정적인 응답 비율)가 높게 나타남

[그림 4-2] 기혼남녀(20~40대)의 저출산 분야 정책체감도

(단위: %)



주: 체감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 정도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저출산 정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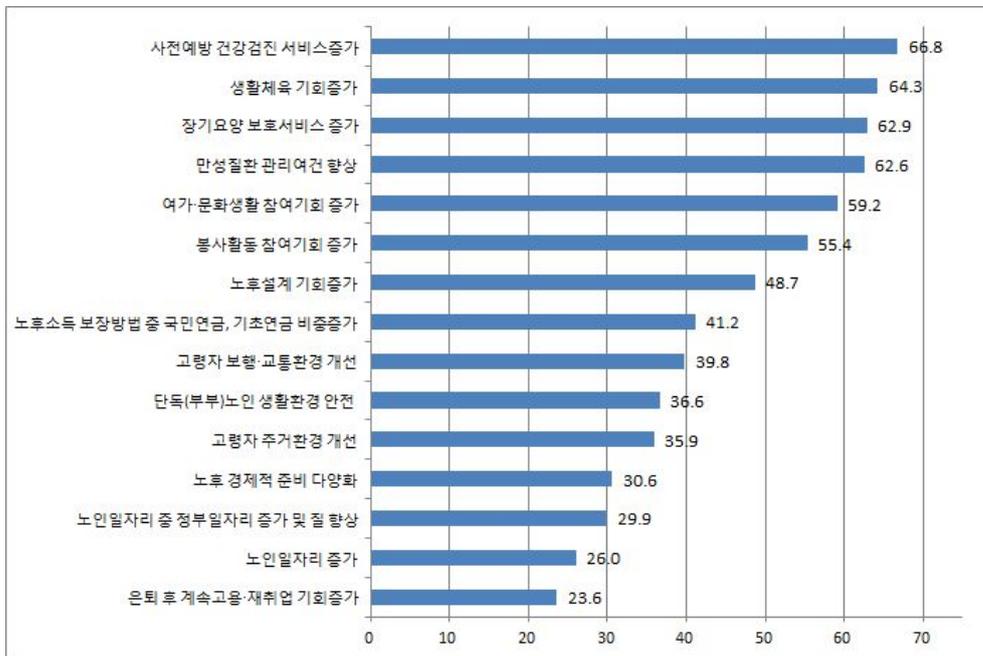
□ 중·고령자(50~69세)의 정책체감도는 영역별로 아주 상이한 것으로 평가

- 세부적으로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보다 많아짐 66.8%, 본인은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짐 64.3%,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이 안전하게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짐 62.9%,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여건이 좋아짐 62.6%, 본인은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많아짐 59.2%, 본인은 활발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많아짐 55.4% 등은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높게 나타남
- 반면, 건강, 재무, 여가, 사회참여 등 전반적인 영역에 대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짐 48.7%, 노후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41.2%, 보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 시에 교통여건이 보다 안전해짐 39.8%, 노인 홀로 또는 노인부부가 사는데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짐 36.6%, 살고 있는 주택이 노인들이 살기에 보다 안전해짐 35.9%, 본인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짐 30.6%, 노인일자리 중 정부지원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짐 29.9%,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다 많아짐 26.0%, 은퇴 후 계속 일할수 있거나 재취업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많아졌음 23.6% 등은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남

[그림 4-3] 고령자(50~69세)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체감도

(단위: %)



주: 체감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 정도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한 값임.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고령사회 정책 관련-」.

나.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 및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
- 이에 따라 결혼 의향, 결혼시기,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들이 결혼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확대, 지원 수준의 현실화, 내실화 등이 중요함
- 다만, 결혼생활 및 결혼준비 교육·정보 접근성 증가와 청년대상 고용지원 개선은 정책체감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의향, 결혼시기,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결혼 준비와 더불어 청년고용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결혼을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평가 가능

〈표 4-17〉 미혼남녀(25~34세)의 결혼 및 일가정양립 관련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구분		체감도			
		30% 이상	20%~30% 미만	10%~20% 미만	10% 미만
효과성 (결혼 의향, 결혼시기,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	-결혼생활 및 결혼준비 교육·정보 접근성 증가			
	+			-청년대상 고용지원 개선	
	효과없음		-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 확대 -결혼이 여성 경력단절 에 미치는 영향 감소		-주택마련 용이성 증가 -결혼비용(주택 이외) 부담 경감
효과성 미분석			-직장이 가족친화적 으로 변화	-다양한 형태 근무 증가	

주: 1) 체감도: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 정도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한 값임.
 2) 효과성: †p<0.1, + p <0.05, ++ p <0.01, +++ p <0.001는 통계적 유의성으로, 모형 중 가장 큰 값을 표시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결혼 정책 관련-」.

- 기혼남녀(20~40대)의 저출산 분야 정책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
- 이에 따라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 정책들이 자녀수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 확대, 인프라 확충, 지원 수준의 현실화, 질적 수준 제고,

접근성 제고 등이 중요함

○ 다만, 임신·출산 의료비부담 경감, 산후조리·신생아 돌봄부담 경감, 직장의 가족친화적 변화는 정책체감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녀수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임신·출산 의료비, 산후조리·신생아 돌봄 등의 지원이 늘어나고, 직장이 가족친화적으로 조성된다면 출산 증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평가 가능

〈표 4-18〉 기혼남녀(20~40대)의 저출산 분야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구분	체감도			
	30% 이상	20%~30% 미만	10%~20% 미만	10% 미만
효과성 (희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		-임신·출산 의료비부담 경감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부담 경감	
	(+)		-직장이 가족친화적으로 변화	
효과없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증가	-어린이집·유치원 비용부담 경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증가 -출산휴가 이용여건 증가 -육아휴직 이용여건 증가 -다양한 형태의 근무 증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증가 -방과후 자녀 돌봄 부담 경감
	효과성 미분석	-결혼생활 및 결혼준비교육, 정보 접근성 증가	-아동청소년 학업스트레스 감소 -아동청소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음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주: 1) 체감도: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 정도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한 값임.
 2) 효과성: †p<0.1, + p <0.05, ++ p <0.01, +++ p <0.001는 통계적 유의성으로, 모형 증가장 큰 값을 표시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저출산 정책 관련-」.

□ 중·고령자(50~60대)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체감도는 영역별로 넓게 분포

○ 건강과 여가문화 영역의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건강영역에는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증가, 생활체육 기회 증가, 만성질환 관리 여건 향상,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증가 등 포함

- 여가문화 영역에는 봉사활동 참여기회 증가, 여가·문화생활 참여기회 등 포함

○ 소득보장, 고령친화 환경 등의 영역의 정책들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소득보장 영역에는 노후설계 기회 증가, 노후 경제적 준비 다양화, 고령자 보행·교

통환경 개선, 노인일자리 증가, 노인일자리 중 정부일자리 증가 및 질 향상, 노후 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중 증가, 은퇴 후 계속고용·재취업 기회 증가 등

- 고령친화 환경 영역에는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단독(부부)노인 생활환경 안전, 고령자 보행·교통환경 개선 등

○ 대체적으로 체감도 수준과 상관없이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높을수록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는 효과가 나타남

- 그만큼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투입은 노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단,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증가, 노후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비중 증가, 은퇴 후 계속고용·재취업 기회 증가 등에 대한 체감도는 노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후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기초연금 비중 증가, 은퇴 후 계속고용·재취업 기회 증가 등은 체감도도 낮고 노후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 4-19〉 중·고령자(50~69세)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체감도와 효과성 종합분석

구분		체감도				
		60% 이상	50%~60% 미만	40%~50% 미만	30%~40% 미만	30% 미만
효과성 (노후 삶의 질 향상 인식 변화)	+++		-봉사활동 참여 기회 증가 -여가·문화생활 참여기회 증가	-노후설계 기회 증가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 -단독(부부)노인 생활환경 안전	
	++				-노후 경제적 준비 다양화 -고령자 보행·교통환경 개선	-노인일자리 증가
	+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증가 -생활체육 기회 증가 -만성질환 관리 여건 향상				-노인일자리 중 정부일자리 증가 및 질 향상
	효과없음	-사전예방 건강검진서비스 증가		-노후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비중 증가		-은퇴 후 계속고용·재취업 기회 증가

주: 1) 체감도: 해당 정책에 대한 변화 정도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합한 값임.
 2) 효과성: †p<0.1, + p <0.05, ++ p <0.01, +++ p <0.001는 통계적 유의성으로, 모형 중 가장 큰 값을 표시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고령사회 정책 관련-」.

제2절 전문가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
 - 조사대상(총 77명): 저출산 분야 27명, 고령사회 분야 25명, 성장동력 분야 25명
 - 조사방법: 이메일조사
 - 조사내용: 분야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정책성과에 대한 의견

1. 저출산 분야

- 저출산 분야 핵심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2.92점(18개 과제의 평균점수의 단순평균)으로 중간값(3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
 - 중영역별로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중영역)이 3.68점으로 중간값(3.0점)이상으로 평가된 반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중영역)은 2.93점 그리고 일·가정양립일상화(중영역)가 2.6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정책과제별로는 최대 3.89점~최소 2.18점(5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값(3점) 이상으로 평가된 핵심정책들이 8개, 중간값(3.0점) 미만으로 평가된 정책들이 9개
 -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3.89점)’로 나타남
 - 다음으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정책들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3.38점)’, ‘육아휴직제도 개선(3.32점)’,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3.32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3.29점)’,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3.25점)’,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3.07점)’,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3.00점)’ 등의 순
 - 반면,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가장 낮다고 평가한 정책은 ‘유연근로제 확산(2.18점)’으로 나타남
 - 중간값(3.0점) 미만으로 평가된 정책들 중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2.26점)’,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2.38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2.46점)’,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2.59점)’, ‘아동학대 예방보

호 강화(2.72점),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2.77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2.79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2.91점)’,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 지원 강화(2.96점)’ 등이 포함됨

〈표 4-20〉 저출산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단위: %, 점)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¹⁾	중영역별 평균 점수(단순평균)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n			
전체											2.92	
일가정 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 휴식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7.1	10.7	35.7	35.7	10.7	100.0	28	3.32	2.6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2.2	40.7	29.6	3.7	3.7	100.0	27	2.26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17.9	50.0	28.6	3.6	0.0	100.0	28	2.18		
		가족친화직장 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10.7	17.9	53.6	17.9	0.0	100.0	28		2.79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7.4	33.3	51.9	7.4	0.0	100.0	27		2.59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0.7	46.4	28.6	14.3	0.0	100.0	28	2.46	3.68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15.4	42.3	30.8	11.5	0.0	100.0	26	2.38		
	임산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0.0	25.9	51.9	22.2	0.0	100.0	27	2.96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0.0	15.4	34.6	46.2	3.8	100.0	26	3.38		
	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0.0	14.8	11.1	44.4	29.6	100.0	27		3.89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14.3	7.1	39.3	17.9	21.4	100.0	28		3.25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7.1	14.3	42.9	35.7	0.0	100.0	28		3.07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3.6	21.4	32.1	28.6	14.3	100.0	28		3.29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3.6	25.0	42.9	25.0	3.6	100.0	28		3.00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0.0	9.1	54.5	31.8	4.5	100.0	22		3.32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4.3	13.0	69.6	13.0	0.0	100.0	23	2.91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9.1	31.8	31.8	27.3	0.0	100.0	22	2.77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4.0	32.0	52.0	12.0	0.0	100.0	25	2.72		

주: ‘전혀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점수는 ‘안되고있음(1점)~매우잘되고 있음(5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저출산 부문)」.

2. 고령사회 분야

- 고령사회 분야 핵심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2.92점(17개 과제의 평균점수의 단순평균)으로 중간값(3.0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 중영역별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이 3.25점으로 중간값(3.0점) 이상으로 평가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은 2.70점 그리고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이 2.6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정책과제별로는 최대 3.71점~최소 2.04점(5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값(3.0점) 이상으로 평가된 핵심정책들이 8개, 중간값(3.0점) 미만으로 평가된 정책들은 9개로 각각 나타남
-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은 ‘장기요양보험 내실화(3.71점)’로 나타남
 - 다음으로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정책들은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3.63점)’,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3.60점)’,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3.48점)’,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3.21점)’,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3.18점)’, ‘학대노인 보호강화(3.10점)’,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 강화(3.0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가장 낮다고 평가한 정책은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2.04점)’으로 나타남
 - 중간값(3.0점) 미만으로 평가된 정책들 중에는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2.17점)’, ‘고령자 고용연장(2.24점)’,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2.38점)’, ‘노후설계 기반 조성(2.42점)’,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2.76점)’,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2.78점)’,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2.92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2.96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4-21〉 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단위: %, 점)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¹⁾	중영역별 평균점수 (단순평균)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n		
전체											2.92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연장	16.0	52.0	24.0	8.0	0.0	100.0	25	2.24	2.7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 업지원 서비스 강화	12.0	72.0	16.0	0.0	0.0	100.0	25	2.04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0.0	24.0	56.0	20.0	0.0	100.0	25	2.96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4.0	28.0	44.0	20.0	4.0	100.0	25	2.92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0.0	16.0	24.0	44.0	16.0	100.0	25	3.60	
노후생활 설계 강화	노후설계 기반 조성	8.3	50.0	33.3	8.3	0.0	100.0	24	2.4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4.0	44.0	24.0	28.0	0.0	100.0	25	2.76	3.25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4.0	12.0	28.0	44.0	12.0	100.0	25	3.48	
	건강한 노후생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0.0	8.3	29.2	54.2	8.3	100.0	24	3.63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0.0	18.2	45.5	36.4	0.0	100.0	22	3.18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8.7	30.4	34.8	26.1	0.0	100.0	23	2.78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 반 확대	0.0	20.8	50.0	16.7	12.5	100.0	24	3.21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조성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20.8	54.2	16.7	4.2	4.2	100.0	24	2.17	2.67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12.5	37.5	50.0	0.0	0.0	100.0	24	2.38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0.0	33.3	29.2	37.5	0.0	100.0	24	3.04	
		학대노인 보호강화	4.8	9.5	57.1	28.6	0.0	100.0	21	3.10	

주: '전혀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점수는 '안되고있음(1점)~매우잘되고 있음(5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고령사회 부문)」.

3. 성장동력 분야

- 성장동력 분야 핵심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 2.84점(10개 과제의 평균점수의 단순평균)으로 중간값(3.0점)보다 낮게 나타남
- 세 중영역 모두 중간값(3.0점)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가 2.98점,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이 2.81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은 2.78점 순으로 낮게 평가됨

- 정책과제별로는 최대 3.05점~최소 2.43점(5점 만점 기준)으로 중간값(3.0점) 이상으로 평가된 핵심정책들이 3개, 중간값(3.0점) 미만으로 평가된 정책들은 7개로 각각 나타남
 -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들은 ‘국내 수요기반 확충(3.05점)’,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3.00점)’, ‘금융분야 제도개선(3.0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가장 낮다고 평가한 정책은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2.43점)’,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2.57점)’,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2.78점)’,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2.83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2.87점)’,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 제도 확대(2.91점)’,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2.92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4-22〉 성장동력정책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단위: %, 점)

중영역	소영역	핵심과제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정책별 평균 점수	중영역별 평균 점수 (단순평균)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계		
전체										2.84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4.2	33.3	29.2	33.3	0.0	100.0	24	2.92
	외국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8.7	43.5	43.5	4.3	0.0	100.0	23	2.4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12.0	20.0	28.0	36.0	4.0	100.0	25	3.00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8.3	25.0	41.7	25.0	0.0	100.0	24	2.83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4.3	39.1	30.4	26.1	0.0	100.0	23	2.78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5.0	25.0	35.0	35.0	0.0	100.0	20	3.00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9.5	33.3	47.6	9.5	0.0	100.0	21	2.57
고령친화 산업 육성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품질 향상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 제도 확대	4.3	30.4	39.1	21.7	4.3	100.0	23	2.91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국내 수요기반 확충	4.5	22.7	36.4	36.4	0.0	100.0	22	3.05

주: ‘전혀 모르겠음’을 제외한 결과임, 점수는 ‘안되고있음(1점)~매우잘되고 있음(5점)’
 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성장동력 부문)」.

제3절 언론 평가

- 언론에 의한 평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및 성장동력 분야 정책 관련 사설을 검색하여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통해 실시
- 내용분석 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 내용분석 대상 사설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미디어가온 사이트 및 각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 사설
- 내용분석 대상 주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1. 저출산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 일가정양립 영역
 - 시간제 일자리 확충 관련 질 수준 제고 필요
 -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시간제 일자리 수요 파악 후 정책 시행 필요(경향신문)
 -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확충 사업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질 나쁜 일자리 양산 우려
 - 결과적으로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일들을 잠식하여 고졸자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에 악영향(정규직 일자리 감소) 우려
 - 가족친화 경영 강화 필요
 - 가족친화 경영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주장(동아일보)
 - 저출산대책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활용문제 해결 필요
 -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등을 지출하는 것은 편법적이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 주장(국민일보)
-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영역
 - 무상보육 효과성 의문으로 선별적 지원 전환 및 중앙정부 재정 책임 필요
 -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 강조를 통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촉구

- 지자체의 보육재정 부담 완화 위해 국비 비율 증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주장 등(한겨레신문)
-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일 뿐 아니라 출산을 제고, 여성 사회진출 장려 등 국가경쟁력과 맞물린 중요하므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 풀어가야 함(한국일보)
- 저출산 대책으로서 보육정책의 실효성 확보 곤란에 따른 선별적 접근 필요
- 무상보육 대안과 관련 선별 복지로 전환하고,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및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임금이나 승진 등 차별 금지 문화 조성 강조(국민일보)
- 재원 확보 대책 없는 전면 무상보육의 지속가능성과 무상보육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고려하여 선별적 무상보육으로의 전환 주장(동아일보)
- 어린이집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처벌 및 대책 강화 필요
 - 어린이집 비리 등 부조리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감독과 일벌백계 처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재정과 운영 투명 공개,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주장(문화일보)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영역
- 아동·청소년 건전한 성장 관련 교육 변화 필요
 - 아이들의 자살 등 비극을 막기 위해 과도한 입시교육에서 아이들의 끼와 소질을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 주장(한겨레신문)
- 기타
- 거시적 접근 필요
 - 2012년 출산율 증가는 정책의 성과라기 보다는 20대 전반 가임여성 증가에 기인하며, 젊은이들은 물가 상승, 가계소득 정체, 젊은층 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전셋값 증가 등으로 결혼 연기(경향신문)
 - 3포세대 관련 취업, 결혼 및 출산 포기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자리 확충(동아일보)

2. 고령사회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영역

○ 안정된 노후준비 필요

- 100세시대 은퇴자금 지원책 마련 필요(한국)
- 부실한 사회안전망,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은퇴 후 빈곤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개인이 안정적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노력 필요(동아)

○ 정년연장과 더불어 추가적인 보완대책 필요

- 60세 정년연장은 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사정의 화합이 중요(중앙일보)
- 정년연장 의무화와 함께 인생 이모작 설계 추가 지원 필요(조선일보)
- 정년연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추가 보완대책과 함께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대안 필요(조선일보)
- 정년이라는 숫자 늘리기보다는 기업부담이나 세대간 갈등을 줄고 풀어주는 윈윈식 접근 필요(중앙일보)
- 정년연장은 고령화사회에서 의미있는 결정이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경제주체들의 인식전환, 정년연장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금이나 세제지원 및 사회적 타협 필요(한겨레신문)
-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길이며, 복잡한 구조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정년연장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노사정이 힘을 모은 세심한 준비 필요(경향신문)
-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간의 간극 축소를 위해서도 정년연장은 필요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 임금제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 필요(동아일보)
- 정년연장을 통해 노후빈곤완화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의 발전을 위해 임금 유연성 확보 필요(국민일보)
- 정년연장은 국가의 성장동력 및 복지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필요(한국일보)
- 정년연장은 필요하지만 정년연장이 임금삭감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한겨레신문)

-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보완적 관계가 될 것임(동아일보)
- 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며, 그 단계로 정년연장을 위한 고용유연성 필요(동아일보)
- 고령자 취업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땀질식 고령자 취업 처방보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와 같은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한국일보)
- 공적연금 개혁과 그에 따른 보완책 필요
 - 특수직역 연금 근본 개혁 필요(중앙일보)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임(국민일보)
 -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연금지출을 걱정하기 보다는 낮은 급여율에 따른 노인빈곤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노후소득보장성 강화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경향신문)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
 - 의료비 급증 대응 필요
 -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담보할 대응 방안 마련 필요(문화일보)
 -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에 대한 대비 필요(조선일보)
 - 고액연금수령자 건강보험 징수 필요(한국일보 2개, 국민일보 1개)
 - 만성질환 예방 강화
 -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접근 필요(경향신문)
 -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정부-개인-사회차원에서의 노력 필요(국민일보)
 - 치매 증가 대처 필요
 - 치매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부재에 따른 케어체계문제 및 가족의 고통분담문제 해결 필요(중앙일보)
 - 현재 치매정책의 방향은 긍정적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치매대상자 포괄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노력 필요(경향신문)
 - 치매진료센터만 확대하기 보다는 조기진단 및 조기진료가 우선적 대책(조선일보)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영역

○ 고독사 등 취약 노년층 관련 안전망 구축 필요

- 고독사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과 시민사회의 매뉴얼 마련 필요(중앙일보)
- 소외된 홀몸노인에 대한 심리적 안전망 필요(서울신문)
- 저소득층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경향신문)
-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촘촘히 할 필요(한국일보)
- 노인안전망 좀 더 탄실히 짜야할 필요(중앙일보)

○ 손주돌보미 사업방안 마련

- 손주돌보미 수당 전체 '보육복지'수준에서 효과적 방안 마련 필요(조선일보)

○ 교통환경 조성 관련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축소를 지하철 경영 혁신과 함께 추진 필요(조선일보)

3. 성장동력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영역

○ 여성인력 관련

- 저출산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조건으로 여성활용정책 필요(국민일보)
- ('엄마 가산점' 도입 방안 국회 심의 관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가산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훈련 및 교육 강화,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무상보육의 질 향상이 필요(동아일보)

○ 외국인력 관련

-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민·외국인에 대한 정책 전환 필요(동아일보, 2개)
 -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회 만들어야 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영역

○ 대학구조조정 관련

-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 지적, 정책방안 제시(국민일보)
- 산업구조 등 관련
 - 청년실업으로 인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 결혼 연기 등 해결 위한 청년실업 완화 필요(한국일보)
 -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졸인력 공급 조절과 산업구조에 부응한 인력 육성, 산업구조 혁신 등 필요
- 국민연금 자산운용 관련
 -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독립성 필요(동아일보)



제5장 국제비교 평가

-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 제2절 고령사회 분야 국제비교 평가
- 제3절 성장동력 분야 국제비교 평가

5

국제비교 평가

제1절 저출산 분야 성과 국제비교

□ 저출산 분야의 경우 총 18개 핵심성과지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중영역에 속한 1개(아동안전사고 사망률)에 불과

〈표 5-1〉 저출산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영역	핵심성과지표	국제비교 지표	비고
1.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률	-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행정기관유연근무제 이용률	-	
가족친화 직장·사회환경 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연간근로시간	
2.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수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보육시설 평가 인증률 -시간연장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한국의 핵심성과지표와 OECD 지표간 산식 상이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아동 지원강화	-취약계층아동 트립스타트 수혜율	-	
아동 청소년 역량개발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사고사망률(10만명 당 명)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사망자 WHO자료, 아동수 OECD자료로 연구진이 직접계산

○ 핵심성과지표가 아니나 국제비교가 가능한 간접적인 지표로 4개가 있음

- 연간근로시간(일-가정양립 중영역)

-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중영역)

• 이 중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한국 핵심성과지표와 OECD 지표간 산식 상이

○ 여기에서는 위 지표들을 이용하여 국제비교 실시

1. 일-가정양립 일상화(중영역)

□ 연간근로시간(핵심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대응)

○ 국제 비교 결과, 연간근로시간은 우리나라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이 여전히 일-가정 양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 초저출산율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2〉 연간근로시간 국제비교

(단위: 시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출산율('12)
한국	2,346	2,306	2,246	2,232	2,187	2,090	2,163	2,071	1.19('13)
미국	1,800	1,797	1,791	1,767	1,777	1,786	1,789	1,788	1.88
영국	1,669	1,677	1,659	1,651	1,652	1,625	1,654	1,669	1.92
호주	1,723	1,719	1,723	1,696	1,695	1,700	1,686	1,676	1.93
독일	1,424	1,422	1,422	1,382	1,405	1,405	1,393	1,388	1.38
프랑스	1,484	1,500	1,507	1,489	1,494	1,496	1,489	1,489	2.00
일본	1,784	1,785	1,771	1,714	1,733	1,728	1,745	1,735	1.41
스웨덴	1,599	1,612	1,617	1,609	1,635	1,632	1,618	1,607	1.91
덴마크	1,464	1,439	1,431	1,434	1,417	1,433	1,431	1,411	1.73
스페인	1,673	1,658	1,663	1,670	1,673	1,679	1,666	1,665	1.32
이탈리아	1,815	1,816	1,803	1,771	1,772	1,772	1,752	1,752	1.42
OECD 평균	1,805	1,799	1,790	1,766	1,774	1,771	1,773	1,770	1.66

자료: 1) 연간근로시간: OECD.stat 2014년 12월 자료 추출. 단, 한국 2013년 자료는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제출자료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2월 검색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출생아 천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핵심성과지표 임신·분만 취약지역수 대응)

○ 국제비교 결과,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우리나라가 11.79명(2012년

기준)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는 약 절반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한국의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보다 지리적 분포의 불균형(예로 분만취약지)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3〉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국제비교

(단위: 명)

구분	산부인과 전문의 수('12)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12)	합계출산율('12)
한국	5,712	11.79	1.19('13)
미국	41,899('11)	10.45('11)	1.88
영국	7,587	9.33	1.92
독일	16,357	24.28	1.38
프랑스	8,090	10.22	2.00
일본	12,369('10)	11.53('10)	1.41
스웨덴	1,345('11)	12.03('11)	1.91
이탈리아	12,189	22.82	1.42

자료: 1) 산부인과 전문의 수와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 OECD Health Care Resources 2014년 12월 검색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2월 검색

□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핵심성과지표 보육·교육비 지원을 대응)

- OECD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원을 보다는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이나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공적 지출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 지출'을 통해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에 대한 국제비교를 실시
 - OECD 지표는 0-5세에 대한 보육·교육 공적지출은 3세 미만의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이 있는 가정과 3-5세의 어린이집과 유치원(pre-school, day-care, kindergarten)에 등록된 아동이 있는 가정 대한 현금, 현물, 조세를 통한 지원 포함
- 국제 비교 결과,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은 GDP대비 0-5세 아동의 보육·교육비에 대한 공적지출이 0.8%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세 미만에 대한 지출이 3~5세에 대한 지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한국에서 0~2세아가 가정양육보다 지나치게 시설보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이는 실제적으로 보육교육비 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표 5-4〉 GDP대비 보육·교육비 공적지출(2011) 국제비교

(단위:%)

구분	3세 미만 대상	3-5세 대상	총 공적지출	합계출산율('12)
한국	0.7	0.1	0.8	1.19('13)
미국	0.1	0.3	0.4	1.88
영국	0.4	0.7	1.1	1.92
호주	0.3	0.3	0.6	1.93
독일	0.1	0.4	0.5	1.38
프랑스	0.6	0.7	1.2	2.00
일본	0.3	0.1	0.4	1.41
스웨덴	1.1	0.5	1.6	1.91
덴마크	0.7	1.3	2.0	1.73
스페인	0.6	-	0.6	1.32
이탈리아	0.2	0.4	0.6	1.42
OECD 평균(30개국)	0.4	0.5	0.8	1.66

자료: 1) GDP 대비 보육·교육비 공적지출: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2월 검색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2월 검색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산식 상이)

○ OECD에서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지표를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그 기준이 다름

- 우리나라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수(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과후돌봄 필요아동수로 나눈 값인 반면, OECD에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록 아동을 전체 학교 학생수로 나눔

- 구체적으로 OECD의 지표를 살펴보면, 방과후돌봄서비스(Out-Of-School-Hours Care service)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시작전, 방과후, 공휴일에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의미함

•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학교와 청소년 센터 등을 이용하여 숙제 보조,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포함함

○ 국제비교 결과, 국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연령이 상이하지만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이 낮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낮은 질적 수준, 방과후 높은 사설학원 이용 등

으로 인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능

- 이는 사교육 부담 증가로 이어져 초저출현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표 5-5〉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국제비교

(단위: %)

구분	대상연령	수혜율	연도	합계출산율('12)
한국	6-8	2.6	2009	1.19('13)
	9-11	2.1		
영국	0-14	22.3	2011	1.92
호주	5-8	16.0	2009-10	1.93
	9-12	18.5		
독일	5-8	7.4	2010	1.38
	9-11	4.9		
프랑스	3-6	20.8	2010	2.00
	7-11	-		
일본	6-11	11.2	2011	1.41
스웨덴	6-8	84.2	2011	1.91
	9-11	34.8		
덴마크	6-8	87.8	2011	1.73
	9-11	54.4		
스페인	3-5	7.4	2011	1.32
	6-11	3.7		
이탈리아	6-10	3.8	2010	1.42
	11-13	10.0		
	14-17	22.1		

자료: 1)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2월 검색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2월 검색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만0세-14세 아동의 질병이나 자살 및 타살을 제외한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률로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냄

- 다른 국가들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에 대한 지표값이 나와있지 않아 연구진이 사망자수와 아동수를 기초로 직접 계산을 하였으며, 이는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비교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사고 사망자 수(교통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기타)는 WHO의 Mortalit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였고, 아동수는 OECD.stat의 인구 자료를 활용함

- 한국은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태임
 - 이를 통해 그간 아동안전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6〉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국제비교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구분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합계출산율 ('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6.2	6.0	5.4	4.9	4.2	4.3	3.9	1.19('13)
미국	6.21	5.39	5.32	4.99	-	-	-	1.88
영국	2.07	1.67	1.46	1.38	-	-	-	1.92
호주	3.78	3.49	3.7	3.31	3.57	-	-	1.93
독일	2.09	2.07	2.02	2.02	1.75	1.81	-	1.38
프랑스	2.89	2.66	2.56	2.39	-	-	-	2.00
일본	2.82	2.54	2.28	2.51	2.21	-	-	1.41
스웨덴	1.42	1.56	2.52	1.16	-	-	-	1.91
덴마크	3.06	2.58	1.29	1.6	1.31	-	-	1.73
스페인	3.01	2.77	1.94	2.01	1.24	-	-	1.32
이탈리아	2.15	1.91	1.69	1.54	-	-	-	1.42

자료: 1)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한국 자료는 e-나라지표 “아동 안전사고 현황”이며, 한국 이외의 국가는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Mortality Database와 OECD.stat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산출하였음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2014년 12월 검색

제2절 고령사회 분야 국제비교

- 고령사회 분야의 경우 총 17개 핵심성과지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2개(고령자 고용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에 불과
- 핵심성과지표가 아니나 국제비교가 가능한 간접적인 지표로 6개가 있음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중영역)
 - 노인빈곤율, 65세 이상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비율: 요양시설이용 및 재가 서비스 이용률(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영역)
 -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영역)
- 여기에서는 위 지표들을 이용하여 국제비교 실시

〈표 5-7〉 고령사회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영역	핵심성과지표	국제비교 지표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고령자 고용률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국민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가입률	-연금 급여의 소득 대체율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
노후생활 설계강화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노인일자리 창출수	-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 보장 방안 마련	-공적소득보장률	-노인빈곤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65세 이상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비율: 요양시설이용 및 재가 서비스 이용률
다양한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 제공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	-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노인교통사고사망률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	-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중고령자(55~64세) 고용률(핵심성과지표 고령자 고용률 대응)

○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13년 기준 56.4%로 전년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05년 51.7%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09년 잠시 하락하였으나 이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05년 58.7%에서 '08년 60.6%로 상승하였으나 '09년 60.4%로 약간 감소하였음. 이후 지속적으로 반등하여 '13년 64.3%로 전년대비 1.2%p 상승하였음

-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13년 기준 64.3%로 OECD 평균보다 7.9%p 높음

- 스웨덴(73.7%)과 일본(66.8%)보다 낮은 반면, 이탈리아(42.7%), 스페인(43.2%), 프랑스(45.6%)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고용률은 OECD 국가의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이 낮은데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 일의 질적 수준이 낮을 수 있음

〈표 5-8〉 중고령자 고용률(55-64세) 추이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비율('13)
한국	58.7	59.3	60.6	60.6	60.4	60.9	62.1	63.1	64.3	12.2
미국	60.8	61.8	61.8	62.1	60.6	60.3	60.0	60.7	60.9	14.1
영국	56.7	57.3	57.3	58.1	57.5	56.9	56.8	58.1	59.7	17.0
호주	53.5	55.5	56.6	57.4	59.0	60.6	61.1	61.4	61.5	14.4
독일	45.5	48.1	51.3	53.8	56.1	57.7	59.9	61.5	63.5	21.3
프랑스	38.5	38.1	38.2	38.2	39.0	39.8	41.5	44.5	45.6	17.5('12)
일본	63.9	64.7	66.1	66.3	65.5	65.2	65.1	65.4	66.8	25.1
스웨덴	69.6	69.8	70.1	70.3	70.1	70.6	72.2	73.1	73.7	19.0('12)
덴마크	59.5	60.7	58.9	58.4	58.2	58.4	59.5	60.8	61.7	17.6('12)
스페인	43.1	44.1	44.6	45.6	44.1	43.6	44.5	43.9	43.2	17.9
이탈리아	31.4	32.5	33.8	34.4	35.7	36.6	37.9	40.4	42.7	20.8
OECD 평균 (41 개국)	51.7	52.7	53.5	54.1	53.6	54.0	54.4	55.6	56.4	18.8 ¹⁾

주: 1) EU17개국 노인인구비율 : 18.8

자료: 1) 고령자 고용률: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all persons) and age(55-64) indicators

2) 노인인구 비율: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FS Summary tables

□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13년 기준 OECD 평균은 13.1%로 '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30.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러한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노인인구비율이 2배가량 높은 일본(20.1%)보다도 높은 등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
-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이 낮은데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 일의 질적 수준이 낮을 수 있음

〈표 5-9〉 고령자 고용률(65세 이상) 추이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비율('13)
한국	29.8	30.3	31.1	30.3	29.7	28.7	28.9	30.1	30.9	12.2
미국	14.5	14.9	15.5	16.1	16.1	16.2	16.7	17.3	17.7	14.1
영국	6.3	6.7	6.7	7.4	7.6	8.4	8.8	9.1	9.5	17.0
호주	7.3	7.7	8.7	9.3	10.1	10.6	11.0	11.8	11.9	14.4
독일	3.4	3.4	3.7	3.9	4.0	4.0	4.6	4.9	5.4	21.3
프랑스	1.1	1.0	1.3	1.4	1.3	1.5	1.9	2.2	2.2	17.5('12)
일본	19.4	19.4	19.7	19.7	19.5	21.2	19.3	19.5	20.1	25.1
스웨덴	9.9	10.1	11.1	12.1	12.5	13.3	13.4	14.9	14.6	19.0('12)
덴마크	5.5	5.1	5.3	5.3	5.2	5.6	6.2	6.8	6.4	17.6('12)
스페인	2.0	2.1	2.0	2.1	2.0	2.0	1.9	2.0	1.7	17.9
이탈리아	3.1	3.2	3.2	3.3	3.1	3.1	3.2	3.4	3.4	20.8
OECD 평균 (41 개국)	11.1	11.3	11.6	11.9	11.9	12.4	12.3	12.8	13.1	18.8 ¹⁾

주: 1) EU17개국 노인인구비율 : 18.8

자료: 1) 고령자 고용률: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bour Force Statistics by sex(all persons) and age(55-64) indicators

2) 노인인구 비율: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FS Summary tables

-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의 차이(핵심성과지표 고령자 고용률 대응)
- 한국의 경우 남성은 실제은퇴연령이 71.1세로 공식은퇴연령 60세보다 11.1세 늦으며, 여성은 9.8세 늦게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0〉 실제은퇴연령과 공식은퇴연령 차이 국제 비교(2012년 기준)

(단위: 세)

구분	남			여			공적연금 수급연령
	실제은퇴 연령(A)	공식은퇴 연령(B)	A-B	실제은퇴 연령(A)	공식은퇴 연령(B)	A-B	
한국	71.1	60	11.1	69.8	60	9.8	65
미국	65.0	66	-1.0	65.0	66	-1.0	67
영국	63.7	65	-1.3	63.2	61.2	2.0	68
호주	64.9	65	-0.1	62.9	64.5	-1.6	67
독일	62.1	65.1	-3.0	61.6	65.1	-3.5	67
프랑스	59.7	65	-5.3	60.0	65	-5.0	67
일본	69.1	65	4.1	67.2	67	0.2	65
스웨덴	66.1	65	1.1	64.2	65	-0.8	65
덴마크	63.4	65	-1.6	61.9	65	-3.1	67
스페인	62.3	65	-2.7	63.2	65	-1.8	67
이탈리아	61.1	66	-4.9	60.5	62	-1.5	67
OECD 평균(41개국)	64.2	64.7	-0.5	63.1	63.5	-0.4	-

자료: 1) 은퇴연령: OECD estimates derived from the European and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OECD Pensions at a Glance (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 - indicator 3.8.

- OECD 국가 남성의 평균 실제은퇴연령은 64.2세로 공식은퇴연령 64.7세보다 0.5세 빠름
- 한국과 같이 실제은퇴연령이 공식은퇴연령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국가는 일본(남,녀), 스웨덴(남), 영국(여)이지만 이들의 차이에 비해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한국은 정년연령이 빠른 반면 사회보장수준이 낮아 이후 오랜기간 동안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 가능
 - 공식은퇴 후 질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
-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핵심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률 대응)
 - OECD국가의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평균은 54.0%이며, 이탈리아가 71.2%로 가장 높은 대체율을 보임
 - 한국의 연금급여 소득대체율은 39.6%로 이탈리아(71.2%), 프랑스(58.8%), 호주(52.3%), 독일(42.0%)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미국(38.3%) 영국(32.6%), 일본(35.6%)보다는 높음
 - 한국의 경우 낮은 소득대체율도 문제이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이 62.9%로 사각지대가 크다는 문제점이 중첩되어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11〉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노인인구 비율('13)
한국	39.6	12.2
미국	38.3	14.1
영국	32.6	17.0
호주	52.3	14.4
독일	42.0	21.3
프랑스	58.8	17.5('12)
일본	35.6	25.1
이탈리아	71.2	20.8
OECD평균 (34 개국)	54.0	18.8 ¹⁾

주: 1) EU17개국 노인인구비율 : 18.8

자료: 1)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2) 노인인구 비율: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FS Summary tables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노인빈곤율(핵심성과지표 공적소득보장률 대응)

-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 OECD 평균은 13.5%였으며, 한국은 45.1%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한국 외에도 미국(22.4%), 호주(26.9%), 스페인(22.8%), 일본(22.0%) 등이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나, 30% 미만으로 한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201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10.8%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하여 2.7%p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48.6%로 오히려 3.5%p가 증가하였고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았음. 한국 외에도 호주의 노인빈곤율이 33.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외 국가들은 대부분 20% 미만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가 전체 빈곤율은 한국이 14.6%로 OECD 평균 11.5%에 근접한 수준이며, 이는 한국사회 내에서 노인들의 경제수준이 매우 낮고 세대간 차이가 큼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음
- 한국의 공적소득보장률은 81.8%로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공적소득보장률 못지않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12〉 노인빈곤율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전체빈곤율(2011)	65세이상 노인빈곤율		노인인구비율('13)
		2000년대 중반	2011년	
한국	14.6	45.1	48.6	12.2
미국	17.4	22.4	18.8	14.1
영국	9.5	10.3	10.5	17.0
호주	13.8	26.9	33.4	14.4
독일	8.7	8.4	8.9	21.3
프랑스	8.0	8.8	4.5	17.5('12)
일본	16.0	22.0	19.4('09)	25.1
스웨덴	9.7	6.2	10.1	19.0('12)
덴마크	6.0	10.0	7.1	17.6('12)
스페인	15.1	22.8	7.0	17.9
이탈리아	12.6	12.8	10.6	20.8
OECD 평균(34개국)	11.5	13.5(30개국)	10.8	18.8 ¹⁾

주: 1) EU 17개국 노인인구비율 : 18.8

자료: 1) 노인빈곤율: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OECD (2014), "Income Inequality Update - June 2014",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els/soc/OECD2014-Income-Inequality-Update.pdf.

2) 노인인구 비율: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FS Summary tables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 등급 확정자 비율)’은 2013년 기준 6.1%로, 사회보험형태로 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2010년 13.5%)과 일본(17.9%)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이 동 제도를 도입한 시기(2008)가 독일(1995)과 일본(20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간주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각지대 존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13〉 노인인구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국가	1995년	2000년	2008	2010 ¹⁾	2013
독일	8.4	13.5	12.7	13.5	-
일본	-	9.9	16.1	16.6	17.9 ²⁾
한국	-	-	4.2	5.8	6.1 ³⁾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 일본 후생노동성(2014). 개호급부비 실태 조사 월보(헤세이 12월 심사분)

3)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3 장기요양통계연보.

□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핵심성과지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율 대응)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6.3%(2012년 기준)로 요양시설은 2.4%, 재가서비스는 3.9%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국가인 스웨덴(15.8%)과 덴마크(15.8%)는 재가서비스의 비중이 타 국가에 비해 높음.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전체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우리나라 역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시설서비스보다 높게 나타남
- 한국과 유사한 사회보험형태인 독일과 일본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경우는 2007년 이후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보고되지 않아 비교가 어려움
- 독일은 2005년 10.5%에서 2012년 12.1%로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재가서비스 이용률이 요양시설 이용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각 국가별 장기요양대상자 선정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순 비율만으로 대상자 포괄성 정도에 대해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14〉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65세 이상 인구 중 이용자 비율										노인인구 비율('1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요양시설	-	-	-	1.1	1.1	2.0	2.2	2.4	-	12.2
	재가서비스	-	-	-	1.7	2.1	4.5	4.2	3.9	-	
	이용률 합계 ¹⁾	-	-	-	2.8	3.2	6.5	6.4	6.3	-	
미국	요양시설	3.8	3.8	3.7	3.5	3.4	3.3	3.3	-	-	14.1
	재가서비스	-	-	2.7	-	-	-	-	-	-	
	이용률 합계 ¹⁾	3.8	3.8	6.4	3.5	3.4	3.3	3.3	-	-	
호주	요양시설	5.4	5.4	7.1	7.0	7.0	7.0	7.2	6.7	-	14.4
	재가서비스	5.7	6.0	6.7	6.8	7.0	7.1	7.3	8.4	-	
	이용률 합계 ¹⁾	11.1	11.4	13.8	13.8	14	14.1	14.5	15.1	-	
독일	요양시설	3.7	3.7	3.7	3.7	3.8	3.8	3.9	4.0	-	21.3
	재가서비스	6.8	6.6	6.8	7.0	7.5	7.6	7.8	8.1	-	
	이용률 합계 ¹⁾	10.5	10.3	10.5	10.7	11.3	11.4	11.7	12.1	-	
스웨덴	요양시설	6.5	6.3	6	6	5.8	5.4	5.2	4.9	-	19.0('12)
	재가서비스	10.2	10.4	11.5	11.4	-	12.2	12.0	11.7	-	
	이용률 합계 ¹⁾	16.7	16.7	17.5	17.4	5.8	17.6	17.2	16.6	-	
덴마크	요양시설	-	5.4	5.1	4.9	4.7	4.6	4.4	4.2	4.0	17.6('12)
	재가서비스	12.8	13.0	9.6	14.1	13.7	13.0	12.1	11.6	-	
	이용률 합계 ¹⁾	12.8	18.4	14.7	19	18.4	17.6	16.5	15.8	4.0 ²⁾	
스페인	요양시설	-	-	-	-	1.3	1.5	1.7	1.7	1.8	17.9
	재가서비스	-	-	-	-	3.8	5.3	5.3	5.3	5.0	
	이용률 합계 ¹⁾	-	-	-	-	5.1	6.8	7	7	6.8	
프랑스	요양시설	3.8	3.9	4.1	4.2	4.3	4.4	-	-	-	17.5('12)
	재가서비스	5.3	5.9	6.4	6.7	6.8	6.9	-	-	-	
	이용률 합계 ¹⁾	9.1	9.8	10.5	10.9	11.1	11.3	-	-	-	
일본	요양시설	3.0	3.0	3.0	2.9	2.9	2.8	2.8	2.8	2.8	25.1
	재가서비스	9.5	9.8	-	-	-	-	-	-	-	
	이용률 합계 ¹⁾	12.5	12.8	3	2.9	2.9	2.8	2.8	2.8	2.8	
이탈리아	재가서비스	3.0	3.0	3.3	3.4	3.7	4.1	4.1	4.3	-	20.8

주: 1) 이용률 합계는 요양시설 이용률과 재가서비스 이용률을 합산하여 연구자가 계산한 수치임. 이 때 자료가 개인 단위가 아닌 기관 단위로 집계된 경우 한 사람이 두 가지 서비스를 다 받았을 때에는 이용률 합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용률 합계가 늘어나서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2) 재가서비스에 대한 정보 미제공으로 시설서비스 이용률만 적용된 값

자료: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 OECD (2014), "OECD Health Data: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Data extracted on 23 Dec 2014 08:02 UTC (GMT) from OECD iLibrary

2) 노인인구 비율: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FS Summary tables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대응)
 - OECD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는 22.6%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는 33.0%로 일본(50.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순위는 2005년부터 유지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16.7%)이며 한국은 미국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를 보임
 - 이러한 국제비교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고령자에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정책 추진 성과의 절대적인 수준이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15〉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국제비교

(단위: %)

구분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노인인구 비율('13)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26.7	27.4	29.0	29.6	31.3	31.8	33.0	12.2
미국	15.0	14.1	14.5	14.8	15.6	16.7	16.7	14.1
영국	18.5	17.3	18.8	18.9	18.5	20.2	22.4	17.0
호주	16.3	14.2	15.3	16.2	15.0	16.1	18.1	14.4
독일	21.7	22.7	23.3	23.8	26.6	24.9	26.0	21.3
프랑스	18.7	19.1	19.1	19.0	18.6	19.1	19.1	17.5('12)
일본	43.3	45.0	48.4	49.0	51.2	51.7	50.3	25.1
스웨덴	23.6	21.3	22.3	25.7	25.7	24.1	28.5	19.0('12)
덴마크	21.1	23.5	23.4	23.9	20.1	26.3	28.6	17.6('12)
스페인	16.1	16.3	15.7	17.8	18.5	21.3	21.3	17.9
이탈리아	20.7	-	-	-	26.2	25.9	26.9	20.8
OECD 평균	20.1 (27개국)	19.3 (26개국)	19.7 (26개국)	20.2 (26개국)	21.5 (29개국)	22.3% (29개국)	22.6% (29개국)	18.8 ¹⁾

주: 1) EU 17개국 노인인구비율 : 18.8%

자료: 1)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구성비: 도로교통공단(2013). 2013년판(2011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Retrieved from www.mltm.go.kr Accessed on 2013년 7월 16일

2) 노인인구 비율: Data extracted on 22 Dec 2014 07:31 UTC (GMT) from OECD.Stat. Data Theme: LAFS Summary tables

제3절 성장동력 분야 국제비교

- 성장동력 분야의 경우 총 10개 핵심성과지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2개(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에 불과
- 핵심성과지표가 아니나 국제비교가 가능한 간접적인 지표로 3개가 있음
- 여성고용률,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 업무성사고 사망만인율(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중영역)
- 여기에서는 위 지표들을 이용하여 국제비교 실시

〈표 5-16〉 성장동력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지표

영역	한국 핵심 성과지표	국제비교 지표	비고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여성고용률	
외국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	-채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	-	
순환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평생학습참여율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산업재해율	-업무성 사고 사망만인율	-국가별로 통계 산출방법, 용어 정의 등이 다름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	-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여성고용률(핵심성과지표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대응)

-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2013년 53.9%로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는 높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모두 60%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음
- 고령사회에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중요하나 일-가정 양립 곤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지속 인하여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17〉 여성고용률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여성고용률					전체 고용률				합계출산율('12)	노인인구 비율('13)
	2009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한국	52.2	52.6	53.1	53.5	53.9	63.3	63.9	64.2	64.4	1.19('13)	12.2
미국	63.4	62.4	62.0	62.2	62.3	66.7	66.6	67.1	67.4	1.88	14.1
영국	65.6	65.3	65.3	65.7	66.6	70.3	70.4	70.9	71.3	1.92	17.0
호주	66.3	66.1	66.7	66.6	66.4	72.4	72.7	72.4	72.0	1.93	14.4
독일	65.2	66.1	67.7	68.0	68.8	71.2	72.6	72.8	73.3	1.38	21.1
프랑스	59.8	59.7	59.7	59.9	60.4	63.9	63.8	63.9	64.1	2.00	18.0
일본	59.8	60.1	60.3	60.7	62.5	70.1	70.3	70.6	71.7	1.41	25.1
스웨덴	70.2	69.7	71.3	71.8	72.5	72.1	73.6	73.8	74.4	1.91	19.9
덴마크	72.7	71.1	70.4	70.0	70.0	73.3	73.1	72.6	72.5	1.73	17.8
스페인	54.0	53.5	53.3	51.8	51.0	59.7	58.8	56.5	55.6	1.32	17.9
이탈리아	47.0	46.8	47.2	47.8	47.2	57.7	57.8	57.6	56.4	1.42	20.9
OECD 평균 (34개국)	56.7	56.6	56.8	57.2	57.5	64.6	64.8	65.1	65.3	1.66 (30개국)	15.6

자료: 1) 여성의 고용률, 전체 고용률, 노인인구 비율: OECD.stat 2014년 12월 자료 추출, 노인인구 비율은 추계자료임
 2) 합계출산율: 한국은 KOSIS, 그외 국가는 OECD Family database '13.10.22. 기준

□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핵심성과지표 평생학습참여율 대응)

- 우리나라의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이 50%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스웨덴이나 덴마크, 미국 등

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한국사회는 대체적으로 25세 이전에 교육을 마친 후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관해이 지속되고 있어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정책적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 가능

〈표 5-18〉 국가별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 현황 (2012)

(단위: %)

구분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
한국	50
미국	59
영국	56
호주	56
독일	53
스웨덴	66
덴마크	66
스페인	47
이탈리아	25
OECD 평균	51

자료: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ag-2014-en>

□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핵심성과지표 산업재해율 대응)

- 국가별로 통계 산출방법, 용어 정의 등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 미국, 영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9〉 사고성 사망만인율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0.96	0.91	0.87	0.82	0.78	0.79	0.73	0.71
일본	-	-	-	-	0.22	-	-	-
독일	-	-	-	-	0.18	-	-	-
미국	-	-	-	-	0.38	-	-	-
영국	-	-	-	-	0.05	-	-	-

주: 1)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frac{\text{업무상사고 사망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00$

2)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 곤란
 자료: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c_cd=1514)

- 고령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인력 상실을 줄여야 하나 여전히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여전히 높아 관련 정책의 성과가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 가능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 우리나라는 '13년 6.50년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임
 - 우리나라보다 짧은 국가는 미국이 있으며, 영국은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가 약 14.5년으로 매우 긴 상황임

〈표 5-20〉 국가별 국고채 평균잔존만기 연수

(단위: 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4.68	4.85	4.96	5.33	5.56	5.96	6.50
미국				4.4			5.47
호주				4.8			
영국				12.8			14.48
독일				6.0			6.52
프랑스				6.4			6.75
일본				5.2			6.38
스웨덴				6.0			
스페인				6.7			
이탈리아				6.7			

자료: 1) 한국: 기획재정부(2014). 2013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평가

2) 그 밖의 국가: 2010년 자료는: 황세운 외(2010). 장기국고채 발행 및 유통 확대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3년 자료는 기획재정부(2014), 국채 2013.

□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13년 33.8%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임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가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 가능

〈표 5-21〉 국가별 GDP 대비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비중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29.3	28.7	28.0	31.2	31.0	31.6	32.2	33.8
미국	63.9	64.3	78.1	92.5	101.8	107.7	110.5	109.2
호주	12.1	12.3	14.0	19.3	23.3	28.0	31.8	33.0
영국	44.2	45.3	55.2	69.0	77.9	92.3	95.7	93.3
독일	68.0	63.9	67.9	75.3	84.0	83.4	86.1	81.4
프랑스	76.8	75.6	81.6	93.2	96.9	100.8	110.5	110.4
일본	166.8	162.4	171.1	188.7	193.3	209.5	216.5	224.2
스웨덴	50.9	45.8	45.8	47.5	44.2	44.7	44.5	44.7
덴마크	40.5	34.6	42.0	49.5	53.8	60.6	60.3	57.3
스페인	50.9	46.9	53.0	69.3	75.2	86.8	105.2	126.2
이탈리아	116.4	111.8	114.6	127.2	125.9	119.4	137.0	144.0
OECD 평균	75.0	73.3	81.6	93.3	99.5	104.4	110.1	110.9

자료: 한국 자료는 e-나라지표,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자료는 OECD(2014).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4 Issue 2.



제6장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 제1절 총괄
- 제2절 저출산 분야
- 제3절 고령사회 분야
- 제4절 성장동력 분야

6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종합평가

제1절 총괄

-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가능
 - 전체 평가대상 과제(226개, 완료 및 성과지표 없는 과제 19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188개(83.2%) 또는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212개(93.8%)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14개(6.2%)에 불과
 - (저출산 분야) 84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81개(96.4%)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3개(3.6%)에 불과
 - (고령사회 분야) 86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77개(89.5%)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9개(10.5%)
 - (성장동력 분야) 56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54개(96.4%)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2개(3.6%)에 불과
- 그러나 핵심성과지표에 의거하면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일부 정책의 경우 추진실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는 낮게 나타남
 - 전체 핵심성과지표(45개) 중 100% 이상 목표 달성 지표가 25개(55.6%) 또는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37개(82.2%)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8개(17.8%)로 낮음
 - (저출산 분야) 18개 지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지표가 17개(94.4%)이며, 90% 미만 달성 지표는 1개(5.6%)로 매우 적음
 - (고령사회 분야) 17개 지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지표가 13개(76.5%)이며, 90% 미만 달성 지표는 4개(23.5%)로 1/4 정도로 나타남
 - (성장동력 분야) 10개 지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지표가 7개(70.0%)이며, 90% 미만 달성 지표는 3개(30.0%)로 가장 많음
- 더욱이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추진실적의 목표달성도,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등이 높으나 국민이나 전문가 및 언론의 평가는 낮게 나타남

- 정부에서 설정한 목표도 중요하나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정도, 전문가의 판단, 여론 추이 등이 실제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민 욕구, 전문가의 판단 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이하에서는 정책 혹은 정책영역별로 추진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 평가, 전문가 평가, 여론 평가, 국제비교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함

〈표 6-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 목표달성도 및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수, 지표수, %)

분야	세부과제 추진실적(목표달성도)				핵심성과지표 목표달성도			
	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14 (6.2)	24 (10.6)	188 (83.2)	226 (100.0)	8 (17.8)	12 (26.7)	25 (55.6)	45 (100.0)
저출산 분야	3 (3.6)	11 (13.1)	70 (83.3)	84 (100.0)	1 (5.6)	5 (27.8)	12 (66.7)	18 (100.0)
고령사회 분야	9 (10.5)	10 (11.6)	67 (77.9)	86 (100.0)	4 (23.5)	6 (35.3)	7 (41.2)	17 (100.0)
성장동력 분야	2 (3.6)	3 (5.4)	51 (91.1)	56 (100.0)	3 (30.0)	1 (10.0)	6 (60.0)	10 (100.0)

주: 기 종료 등 과제 14, 성과지표 없는 과제 5 제외

주: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나 성과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100% 이상은 100%로 하여 평균 산출

제2절 저출산 분야

1. 일가정양립영역(중영역)

-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소수의 정책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추진실적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0.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인원 인원 80.6%)

- 한편, 추진실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으로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보건의료인프라 지원강화(분만산부인과 누적 설치개소 100.0% 달성 vs. 임신·분만취약지역수 78.3%)가 있음
- 그러나 정책의 효과로 최근 일-가정 양립 여건의 변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매우+대체로)는 12.0%만이 응답하여 아주 낮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 보면, 출산휴가 자유 이용 29.5%, 육아휴직 자유 이용 28.8%, 다양한 형태로 근무 22.6%, 직장이 가족친화적 변화 26.2%,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8.2% 등임
 - 실제 국제비교 평가 결과도 연간 근로시간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도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육아휴직제도 개선(46.4%)만이 비교적 높을 뿐, 다른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낮게 나타남
 - 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7.4%, 유연근로제 확산 3.6%,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17.9%,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7.4% 등
- 언론에서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취약점을 제시하면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이나 전문가들에 의한 낮은 평가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로 휴가휴직 급여 등 일반회계 지출(고용보험 지출은 편법, 도덕적 문제), 시간제 일자리 확충 관련 질 제고 필요, 가족친화 경영 확대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등

〈표 6-2〉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가정양립(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일가정양립(중영역)					일-가정 병행 수월 12.0			
휴가휴직제도 확대 개선(소영역)					출산휴가 자유 이용 29.5 육아휴직 자유 이용 28.8	육아휴직제도 개선 46.4	휴가휴직 급여 등 일반회계 지출(고용보험 지출은 편법, 도덕적 문제)	

〈표 6-2〉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육아휴직정률제 및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사용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99.0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사용 후1년이상고용 유지율99.0				
육아휴직제도 대체 인력 지원체계 개발	출산육아기 대 체 인력 지원금 지원 인원	106.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여건 조성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115.7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단축제 이용 률 162.0		육아기근로시 간 단축 활성 화 7.4		
근로시간 자축휴가제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	0.0						
산전후 휴가 등 제도 개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출산육아기 고 용안정 지원금 지원 인원	80.6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소영역)					다양한 형태로 근무 22.6	유연근로제 확산 3.6		
유연근로제 확산								
공공부문 선도모델 발굴·확산	행정기관 유연 근무제 이용률	296.0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이 용률 100.7				
시간제근무 활성화	시간제근무 운 영성과 만족도	112.6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확산·지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 원대상 사업장	247.0				시간제 일자리 확충 관련 질 제고 필요		
유연근로형태 도입 여건 조성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간담회·워크숍, 컨설팅 지원 사 업장 수	94.3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확산	이용자만족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률	100.1 112.5						
유연근무제 국민공 감대 확산 홍보 등 가족친화직장사회 환경조성	컨설팅 기업수	268.0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설치용자인건비,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장수	133.3 183.3 106.0 108.7	직장 어린이 집 설치 활 성화	직장 어린이 집 설치 증가 율 102.6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17.9		

〈표 6-2〉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미이행 사업장 설치 독려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100.0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지원기반 마련	가족친화 포럼 활동, 인증 설명회	200.0 100.0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센티브 추가 제공	450.0						
가족친화직장 조성 지원체계 운영 및 가족친화 인증 활성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251.3	가족친화인증에 기업등 참여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269.2	직장이 가족친화적 변화 26.2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7.4	가족친화 경영 확대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연간근로시간(노동부)	99.7			장시간근로문화 개선 28.2			연간근로시간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 높음
	가족사랑의 날 대국민 인지도(여가부)	102.0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소수의 정책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추진실적으로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농어촌 소규모어린이집 및 이동 놀이 버스 지원 개소수 60.0%)
 - 핵심성과지표로 임신·분만 취약지역수 78.3%
 - 한편, 추진실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으로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보건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해당연도 분만산부인과 누적 설치 개소 100.0 vs. 임신·분만취약지역수 78.3%)가 있음
- 그러나 정책의 효과로 최근 자녀양육이 수월해졌다는 변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

가(매우+대체로)는 10.1%만이 그리고 결혼 수월해졌다는 변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12.7%만이 응답하여 아주 낮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주택 마련 쉬워짐 9.1%, 결혼생활, 결혼준비 교육·정보 잘 얻을수 있게 됨 40.9%,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15.7%, 임신·출산 비용 부담 줄어듦 9.9%,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줄어듦 21.8%,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부담 줄어듦 10.0%,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부담 줄어듦 27.4%,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됨 23.5%, 필요 시 자녀를 아침일찍·저녁늦게까지 맡기기 쉬워짐 30.1%, 일시적으로 자녀를 다른사람에 맡기는 것 쉬워짐 13.4%, 방과 후 자녀를 맡기기 쉬워짐 15.1% 등임

- 보육교육비 지원의 확대에도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27.4%에 불과한 이유로는 이외의 비용으로서 특별활동비 등의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출생아 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11.79명('12년)으로 독일, 이탈리아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OECD 국가들에 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혜율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다만, 남편이 가사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66.6%로 효과가 비교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국제비교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육·교육비 정부지출 비율이 OECD 평균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다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0-2세 지출 비율이 3~5세 지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영아에 대한 시설보육이 과잉적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도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50.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74.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42.9%) 등이 비교적 높게 평가받을 뿐, 다른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낮게 나타남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4.3%,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11.5%,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22.2%,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39.3%, 수요

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35.7%,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8.6% 등

- 언론에서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취약점을 제시하면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이나 전문가들에 의한 낮은 평가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로 결혼 연기 관련 물가 상승, 가계소득 정체, 일자리 부족, 높은 집값, 전셋값 증가 등 해결, 무상보육 효과성 의문으로 선별적 지원 전환 및 중앙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비리 등 감독·처벌 강화, 재정·운영 투명 공개, 바우처 도입 등

〈표 6-3〉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자녀양육수월해짐 10.1, 결혼수월해짐 12.7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소영역)							결혼연기관련 물가상승, 가계소득정체, 일자리부족, 높은 집값, 전셋값 증가 등 해결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지속	국민주택기금 업무매뉴얼 개정	100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 117.0	신혼부부 주택마련 쉬워짐 9.1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14.3	
미임대 국민임대 주택 우선 지원	신혼부부 우선 입주 시행여부	100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시설사업 계획 고시계획 대비 실적, 협약체결, 착공계획 대비 실적	100.0						
저소득층 중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반영된 사업 수/반영 대상 사업 수	100.0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결혼준비교실 이용자수, 남성대상교실 이용자수	82.2 107.4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102.2	결혼생활, 결혼준비교육/정보 잘 얻을수 있게됨 40.9%,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15.7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11.5	

〈표 6-3〉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만 족도	114.4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 원 율 115.8	어린이집/유치 원 비용 부담 줄어듦 27.4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74.4	무상보육 효 과성 의문으 로 선별적 지 원 전환, 정 부 재정 책임	보육교육비 지출 OECD 평균 수준 (단 0-2세 3-5세)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	유이확비 보육료 지원	106.1						
'3-5세 누리과정' 도입 및 3-4세 확 대 시행	3-5세 누리과정 연수교사 이용아동 비율	107.3 102.9						
양육수당 지원확대								
양육수당 지원확대	양육수당수혜율	110.2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반영/대상 계획 수	100.0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국 민 주 택 기 금 업무메뉴얼 개정	100.0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조사결과 분석 및 발표	100.0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소영역)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수	101.0					국공립어린이 집 확충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제공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이 동 놀이버스 지 원 개소수	60.0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 개선	평가인증율	109.0	민간육아시 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 가가 인 증 116.4	어린이집에 자 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됨 23.5	민간 육아시 설 서비스 개 선 39.3	어린이집 비리 등 감독·처벌 강화, 재정운영 투명 공개, 바우처 도입 등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가능 아동 수	121.4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	시도별 및 온라인 보수교육 인원	126.3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2주기내 유치원 평가실시율	103.8						

〈표 6-3〉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수요자 중심의 육아 지원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내실화	시간연장, 휴일, 24시 어린이집 합계	106.4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 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 비스 제공률 94.2	필요시 자녀를 아침일찍/저녁 늦게까지 맡기 쉬워짐 30.1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 비스 확대 35.7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비율	100.0						
저소득층, 맞벌이 입소 우선순위 부여	입소순위 합리화 방안수립	100.0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방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	100.0						
이웃간 돌봄나눔 사업 활성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 눔터 이용자수	90.0, 205.7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 아이돌봄 서비스 만족도	145.5 102.9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 건수 103.9	일시적으로 자 녀를 다른사람 에 맡기는 것 쉬워짐 13.4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42.9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민간베이비시터 교육인원	173.8						
취학이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만족도	101.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청소년만족도, 학부모만족도, 청소년 방과후 아 카데미 이용자수	100.0 100.8 102.5						
초등 종일 돌봄교실 확대	초등 돌봄교실 운영 교실수	100.5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교과프로그램수 +특기적성프로 그램수	95.0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수혜자 만족도	111.5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초등학생 방과후 시간제돌봄 이용 아동수	137.1	취학이동 방 과후 돌봄서 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 율 96.6	방과 후 자녀 를 맡기기 쉬 워짐 15.1	취학이동 방 과후 돌봄서 비스 지원 확 대 28.6		OECD국가 들에 비해 방과후돌봄 서비스 수 혜율 낮은 수준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모두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책의 효과로 최근 자녀가 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변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매우+대체로)는 13.1%만이 응답하여 아주 낮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장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짐 8.4%,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음 28.3%, 아동이 학대로부터 보호받음 26.3%, 아동·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덜 받음 27.8% 등임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도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36.3%,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13.0%,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27.3%, 아동 학대 예방·보호 강화 12.0% 등
- 언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자살 등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과도한 입시교육에서 아이들의 끼와 소질을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함

〈표 6-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자녀가 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 13.1		자살 등 비극 막기 위해 과도한 입시교육에서 끼와 소질을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	

〈표 6-4〉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 과제	목표달성도 (%)				
취약계층 아동 지 원 강화(소영역)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취약계층 아동의 드림스타트 수혜율	129.4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200.0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36.3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확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확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보급, 작업체현 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CYS-Net 서비 스 지원대상 청 소년의 변화정 도	139.2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자립지원 사업 체계화	퇴소아동 중(취 업자+대학진학 자) 비율	99.4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소영역)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 수 102.4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이 균형적으로 이 루어짐 8.4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13.0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지원대상 아동수	180.3						
아동인간능력 향상 서비스 실시	바우처 이용자수	126.8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휴먼네트워크 확대	멘토링 시스템 협력기관 수	168.3						
소질과 적성에 근 거한 역량개발지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청소년시설 청 소년 이용자수	118.6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수혜 청소년수,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인원	200.6 105.7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참가자 만족도	102.6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프로그램 참여 자 만족도	96.2						

〈표 6-4〉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 과제	목표달성도 (%)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94.9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 받음 28.3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 화 27.3		아동안전 사고사망률 OECD 국 가중 미국 제외 가장 높은 수준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안전사고예방교 육참여자수, 예방사업 전후 인식도	104.4 130.3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국비 집행률	103.7						
성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청소년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CCTV설치율, 통합관제 센터 구축율	112.6 111.1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	성범죄자 알람e 사이트연간접속 건수	125.0						
성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및 지원 시설의 확충	통합지원 센터 수혜자수, 이용자 만족도	115.3 106.5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 방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112.3	아동이 학대로 부터 보호받음 26.3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12.0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106.8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예방교육만족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학부모 전 문지원기관 수	106.6 100.0						
	아동안전지킴이 만족도	101.4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해소지원 강화	인터넷 중독 위 험군 치유율	98.6						
흡연·음주 등 유해 행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	음주흡연 청소 년 교육 및 치료 지원 건수	103.1						
	청소년흡연율	115.5						

〈표 6-4〉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음주 유해행태 예방 사업 지속추진	월간음주율	119.6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설치·운영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 시설 서비스 만족도	102.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서비스효과율	127.7			아동·청소년 학업스트레스 덜 받음 27.8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 조성 (소영역)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계획 수립	민간위원회 구성	100.0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5차 기본계획 수립	100.0						
장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 정비								
장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100.0						

- 이상 저출산 분야의 정책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와 국민, 전문가, 언론 및 국제비교 등의 평가 결과 간 큰 괴리가 발견됨
- 구체적으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로 국민의 체감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매우+대체로)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문가의 인식이나 언론의 시각에도 투영되고 있음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분야 대책의 성과가 낮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결혼, 출산 및 양육이 행복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저출산 분야의 세부정책들이 국민의 욕구와 상관성이 낮은지 여부,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책별로 종합 점검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3절 고령사회 분야

1.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소수의 정책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추진실적으로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수 증가율) 0.0%,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88.7%,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건수) 73.6%,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수) 88.2%,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바우처사업 지원 실적) 89.5%,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해외 원격의료 실시 건수) 47.6%, 농어촌 원격 건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0.0%,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이용자 수) 23.8% 등

- 핵심성과지표에 의한 평가는 모두 매우 양호

□ 그러나 정책의 효과로 최근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 관련 변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매우+대체로)는 분야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국민의 평가가 낮게 나타난 분야로는 주로 고용 등 소득보장 관련임

- 구체적으로 은퇴 후 계속 일/재취업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많아짐 23.6%,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해졌음 15.2%,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30.6%,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48.7% 등임

- OECD 국가 간 국제비교의 결과로도 우리나라의 고령자 및 중고령자 고용률은 OECD 평균 이상이나 실제은퇴연령이 공식은퇴연령보다 아주 높은 수준이며, 연금급여 소득대체율도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독일 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국민의 평가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난 분야로는 건강과 노후설계 관련임
 - 구체적으로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아졌음 66.7%, 만성질환 관리 여건이 좋아졌음 64.6%, 과거 노인들에 비해 활발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60.9% 등임
-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도 국민의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 고용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영역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함
 - 구체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8.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0.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20.0%,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24.0%, 노후설계 기반조성 8.3% 등임
 - 건강 보장과 관련한 영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
 - 구체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60.0%임
- 언론에서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취약점을 제시하면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이나 전문가들에 의한 낮은 평가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정년연장 시행을 위해 기업규모·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추가 보완책 마련, 장기적으로 정년 폐지, 임금피크제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정년연장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금이나 세제지원 등
 -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 우선
 - 은퇴 후 빈곤화 막기위해 정부와 개인이 안정적 노후 보장 노력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근본 개혁 필요
 - 과도한 연금 지출에 대한 우려보다 낮은 급여를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개인-사회 차원 노력 필요 등임

〈표 6-5〉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소영역)					은퇴후 계속 일 /재취업할 수 있는 고용기회 많아짐 23.6			고령자 및 중고령자 고용률은 OECD 평 균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 고용 연장	고령자(55~ 64세) 고용률 100.2		8.0	정년연장 시행 위해 기업규 모·업종특성 을 감안한 추 가보완책 마 련, 장기적으 로 정년 폐지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수증가율	0.0					임금피크제 등 근본적 대 책 마련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편	정년퇴직자 재 고용 및 정년연 장인원 증가율	141.6					정년연장이 어려운 중소 기업 등에 대 한 연장이공 식 지원금 이 나 세제지원 등	OECD국가 중 한국이 실제 은퇴 연령이 공 식 은퇴연 령보다 이 수준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 추진	정부대안 보고서	100.0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맞춤형 고령 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 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 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 업후 고용보험 가입률 107.1		0.0		
원활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제공	취업자수	296.6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령자(재)은행수 수료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	98.2 99.9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종료자 중 취업률	112.7						
중고령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고령여성 맞춤 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참여인원	142.8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중고령자 일 자리 대책 먼 저 제시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내실화	4개 돌봄분야 일자리	182.7						

〈표 6-5〉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예산액 전문인력	100.0 99.6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고령자 채용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근로자(일반 (전문인력) 중 고령자 비율	(일반) 106.4 (전문) 106.6						
산학협력 증점교수 및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산학협력증점교 수 수 산업체 우수강 사 채용규모	120.7 123.8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기업 육성)	지속가능 일자 리수 창출달	113.0						
베이비붐세대 맞춤형 귀농귀촌	귀농귀촌 가구 증가율	140.0						
시니어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시니어 창업교육 수료인원 대비 창·취업 비율	244.0						
중고령 인력 전문성 활용 제고								
과학연구분야 퇴직 인력 활용도 제고	과학기술 정보 분석물 활용 다 운로드 수, 과학관 심층해설 이용자 수, 산학연 교류 횟수	132.2 119.7 101.2						
	중고령자를 활용한 취업 상담서비스 제공	명예상담원 채용 인원수 (커리어코치)전 국 선발인원수	100.0 1151.3					
	퇴직인력 활용 상인 조직 역량강화	추진 실적/목표 치×100	88.7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활용	대기업 퇴직 전문 인력 채용자 수	91.7						
중고령 여성의 전문성을 활용한 멘토링 확대	50대 이상 여성 멘토	103.3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사회 참여 지원	연계자수 비율	109.5						
은퇴인력 활용 교육기부 활성화	지역별 교육기부 추진체제 운영	100.0						
ODA 등 글로벌 사회공헌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파견목표인원	100.4						
퇴직공무원 종합포털 사회공헌 관련 시스템 정비	일자리 수집 확 대율	100.0						

〈표 6-5〉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조기정착								
장년(고령자) 고용캠페인	고령자고용강조 주간 운영	100.0						
	주요매체홍보건수	100.0						
	장년고용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100.0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건수	73.6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소영역)					경제적 노후준 비가 충분해졌 음 15.2		은퇴 후 빈곤 화 막기위해 정부와 개인 이 안정적 노 후 보장 노력	
국민연금의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 는 기회가 많 아졌음 30.6		국민연금 보험 료율 인상에 앞서 공무원 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 근 본 개혁 필요	연금 급여 소득대체 율이 이탈 리아, 프랑 스, 호주, 독일보다 낮고 미국, 영국, 일본 보다 높음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제3차 재정계산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 획」 수립	100.0					과도한 연금 지출보다 낮은 급여를 고려 하여 노후소득 보장 위한 국 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제도 대국민 신뢰제고	홍보효과도 조사	99.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사 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 입률 100.0%		20.0		
특수고용관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적용 확대	과세자료 보유 지수 대비 국민 연금 소득신고 지수 비율	104.5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연금보험료 지 원사업 수혜대 상자 수	88.2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액 증가율	146.0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24.0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퇴직연금가입률, 교육 횟수	113.1 227.3	사적 소득보 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 입률 91.5				
개인연금 활성화	사업비 체계개편 방안 마련, 위험 율통제제공 여부	100.0, 100.0						

〈표 6-5〉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공사연금 연계 종합 포털 구축	공단의 노후설계 서비스 상담자 중 노후준비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 된 사람의 비율	109.8						
사전 예방적 건강관 리체계 구축(소영역)						60.0		
사전 예방적 보건 의료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정보이용자 의 콘텐츠평가 값의 평균	115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특성 을 고려한 건강 검진제도 개선	100.0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 계 구축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 검률 98.4	건강검진서비 스 받을 기회 많아졌음 66.7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바우처 수혜자 대상 만족도, 바우처사업지원 실적	101.3 89.5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65세이상고혈 압·당뇨환자 등 특관리를	117.2			만성질환 관리 여건이 좋아졌 음 64.6		만성질환 예 방 및 조기발 견위한 정부- 개인-사회차 원 노력 필요	
U-Health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해외 원격의료 실시 건수, 농어촌 원격 건 강관리 이용자 만족도 조사	47.6 0.0						
건강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100.0						
노년기 생애대미 노후생활 설계 강화 (소영역)					과거 노인들에 비해 활발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함 60.9			
노후설계 기반조성			노후설계 기 반조성	50대 이상 고 령자 노후준 비율 95.5		8.3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적정 노후준비 수준 세부판단 기준 추가개발, 노후준비 지원 평가지표 개발	100.0 100.0						
노후설계서비스 지 원 및 활성화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 많아졌음 48.7			

〈표 6-5〉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입법	100.0						
	고령자 복지 진흥원설립, 개정안 국회 제출	100.0						
	노후설계교육 서비스 이용자수	23.8						
	지자체 교육 기관 조성 서비스 이용자 수	101.7						
	찾아가는 노후생애관리서비스 이용자 수	107.7						
	노후설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 및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운영, 노후설계 컨퍼런스 개최	100.0 100.0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추진실적 중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수)만이 76.0%로 목표달성도가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매우+대체로)는 일자리 포함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이면, 건강보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남
- 전자의 경우, 희망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는지 변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25.4%가 응답하여 낮게 나타남,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졌음 26.0%, 노인일자리 중 정부 지원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음 29.9% 등으로 나타남
- 한편, 노후소득보장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1.2%로 상대적으로 높음
- 과거 노인들에 비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임 58.8%,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이 장기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62.9%, 생활체육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아졌음 64.3%,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음 55.4%, 여가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음 59.2% 등 건강보장 관련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임

□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도 소득보장과 건강보장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남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에 대해서는 28.0%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에 대한 평가는 56.0%로 나타남
 - 이러한 평가 결과는 국제비교 결과로서 공적소득보장률이 다소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률이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함

○ 반면,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소영역) 62.5%,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소영역) 66.7% 등 건강보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남
 - 다만,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에 대한 평가 결과는 36.4%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한편,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6.1%,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29.2% 등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정부 자체적 평가 및 성과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는 일자리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장성에 대해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렸으나, 국민과 전문가는 일자리와 소득보장,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 그리고 건강보장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높은 편으로 평가함

〈표 6-6〉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소영역)					희망한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아졌음 25.4			

〈표 6-6〉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28.0		
노인 일자리 단계 적 확대	노인일자리 창 출 수 합	113.9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 출 수 104.6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많아졌음 26.0			
노인 일자리 질적 고도화	참여노인 만족도	95.0			노인일자리 중 정부지원 일자 리가 늘고 일자 리의 질이 좋아 졌음 29.9			
일자리 사업 체계화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한국노인인력개 발원 조직 통합 및 민간분야 일자 리 기능 강화	100.0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소영역)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 제도 내실화			무연금·저연 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 도 내실화	공적소득보 장률 96.9	노후소득보장에 국민연금, 기초 연금 등이 차지 하는 비중이 높 아졌음 41.2	56.0	공적소득보 장률은 높은 수준이나 노 인빈곤률은 OECD국가 들에 비해 매 우 높은 수준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100.0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주택연금공사 법 개정	100.0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	100.0						
연가연금제도 활성화	국민연금법 개정	100.0						
농어촌 고령자 소득보장								
경영상 직접지불제 내실화	경영상직접지불제 면적 달성률	130.1						
농지연금 활성화	농지연금 농가 가입률	125.2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 정화(소영역)								
노년기 주요질환 관 리체계 구축(소영역)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5세이상 노인 부분 틀니 보험 적용 시행여부	100.0						

〈표 6-6〉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노인건강정책 제도 기반 확충	노인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100.0						
실손의료보험 개선 으로 소비자 의료 보장 강화	전체 실손가입 자 중 표준형 단독실손의료 보험 가입 비율	85.0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 및 정신건강 증진	전년대비 정신 건강증진센터 일반상담(전화, 내소) 증가율	145.5						
노인 구강증진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 만족도	110.9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소영역)						62.5	치매 종합관리 시스템 부재에 따른 케어체계 문제 및 가족 의 고통분담문 제 해결 필요	
체계적 치매 예방 치료 관리,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 환자 인식개선	지역사회 치매 조기 검진률	165.4	치매노인 관 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 진 참여자수 104.3			치매진료센 터만 확대 보 다는 조기진 단 및 조기진 료 우선 대책	
장기요양보험 내실화(소영역)						66.7		
예방적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적	100.0						
품질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재가센터관리 책임자 양성교육) 교육과정 마련	100.0						
	장기요양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100.0						
장기요양보험 수급 질서 확립	법률개정 온라인 교육시 스템구축	100.0 100.0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이용율	100.2	장기요양보 험 내실화	노인장기요 양서비스 수 혜율 93.8	치매노인, 거동 불편 노인 등이 장기요양보호 를 받을 수 있 는 기회가 많아 졌음 62.9		장기요양보 험의 치매대 상자 포괄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노 력 필요	노인장기요 양보험 이용 율이 독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사업 활성화						36.4		
노인 운동 활성화	노인건강교실 강습 실시 횟수	101.6	노령기 기초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 업 활성화	노인(60세 이상)의 생 활체육 참여 율 70.1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 64.3			

〈표 6-6〉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노인운동문화 확산 및 전문인력 확충	지도자 배치율 전국어르신생활 체육대회 개최수	99.2 100.0						
의료비 지출 적정화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당해연도 적립 금/당해연도 총 급여비) ≥ 2%	102.0					노인의료비 급 증에 따른 건 강보험 지속가 능성 담보 대 응, 고액연금 수령자건강보 험 징수	
말기암 환자 완화 의료서비스 확대	시도지정 완화 의료 병상 수	96.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 제공 (소영역)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26.1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다양화	베이비붐 봉사 단 참가자 수 자원봉사 포상 자 수	100.0 138.0	고령자 자원 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 사 등록지수 56.6	봉사활동에 참 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음 55.4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및 기반 마련	노인자원봉사 클럽 수 전문노인자원 봉사 프로그램 개발 수	113.9 76.0						
고령자 과학기술인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과학이야기 특 강, 과학관봉 사, 과학나눔봉 사 등 참가횟수	133.2						
자원봉사활동 정보망 연계구축	전문직퇴직노인 단체 DB 구축 조직화 단체수	100.0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고령자의 여 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노인 문화예 술포교육 경험 율 65.3	여가/문화생활 참여 기회가 많 아졌음 59.2	29.2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수혜자 수	142.1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13개소 신축지원	100.0						
문화이용권 (문화 바우처) 지원	연간 문화바우 처 이용자	101.9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프로그램 수 수혜자 수	123.0 115.3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추진실적 중 효문화정착을 위한 효행장려 여건마련(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수) 89.6%,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우수 프로그램 포상)이 87.5%로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정책의 효과로 최근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변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매우+대체로)는 46.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 주택이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해졌음 35.5%, 보행·대중교통이용·운전시 교통여건이 안전해졌음 39.8%, 노인홀로·노인부부가 사는데 생활환경이 안전해졌음 36.6% 등임
 - 국민참여 평가 결과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함. 즉,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0.0%,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의 보호강화 37.5%,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28.6% 등으로 낮은 수준임.
 -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로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구성비도 일본 다음으로 높고, 최저수준인 미국보다 약 2배가 높음

〈표 6-7〉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음 46.4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조성(소영역)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주택이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 해졌음 35.5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비용 지원사 업 세부지침 마련	100.0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공급	목표치(5%3%)≤ 주거약자용/전체 임대주택×100)	100.0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 대주택 공급 비율 179.3				

〈표 6-7〉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 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고령친화적 농어촌 주거환경 재정	4개소 공동생 활주택 공정률	110.0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 선	노인교통사 망률 109.2	보행·대중교통 이용·운전 시 교통 여건이 안 전해졌음 39.8	0.0		고령자 교통 사고 사망자수 구성은 일본 다음으로 높 고 최저수준 인 미국보다 약 2배 높음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수요응답형 교 통서비스 지속 추진	100.0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축 소 필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보행환경 개선 실적/계획	100.0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추진	고령자 교육인 원(실적보고)	100.0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소영역)								
독거노인 및 부부 노인가구의 보호강화						37.5		
독거노인 보호 강화	수혜노인 수(사 업실적 보고)	110.8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 구의 보호 강화	노인돌봄서 비스 수혜자 86.7	노인홀로·노인 부부가 사는데 생활환경이 안 전해졌음 36.6		저소득층 1인 가구 등 소외 노인 없도록 사회안전망 촘 촘히 할 필요	
독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 강화	조손가족지원 프로그램 참가 자 만족도	104.4					손주돌봄비 수 당 전체 '보육 복지수준에서 효과적 방안 미련 필요	
농어촌 가사도우미 취약계층 인력지 원사업(가사도우 미) 고객만족도		100.0						
학대노인의 보호강화						28.6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노인학대 종결 실적비율, 우울감 감소노인비율	105.2, 115.3	학대노인의 보호 강화	지방노인보 호전문기관 수 96.2				
노인공경 및 복지 기반 마련								
효문화정착을 위한 효행장려 여건마련	훈포장 및 표창 수여자 수	89.6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우수 프로그램 포상	87.5						

- 이상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와 국민, 전문가, 언론 및 국제비교 등의 평가 결과와 큰 괴리가 발견됨
- 구체적으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정책의 효과로 국민의 체감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매우+대체로)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전문가의 인식이나 언론의 시각, 국제비교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 정책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일자리와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교통·주거·독거노인보호 등 고령친화사회 조성의 경우 국민 및 전문가의 평가 결과가 낮으며, 건강보장과 관련한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령사회 대응이 아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민은 노후소득 보장 등에 관해 불안감 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령사회 분야의 세부정책들이 국민의 욕구와 상관성이 낮은지 여부,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책별로 종합 점검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4절 성장동력 분야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소수의 정책에 대해서만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추진실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새일센터 취업률) 87.3%
 - 추진실적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

책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률) 81.1%,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전문인력(E-1~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 인력규모) 79.1%로 나타남

- 그러나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여성인력 활용 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33.3%,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21.7% 등 낮게 평가함
 - 국제비교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대부분 60%이상)으로 나타남
 - 언론에 의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조건으로 여성활용정책 필요, 경력단절 여성 훈련 및 교육 강화 등이 지적됨
 -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등의 활용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4.3%로 아주 낮게 평가함
 - 언론들도 우수인력 유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 등을 제기함
 - 전문가들은 청년인력 활용 정책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40.0%로 평가함
 - 언론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 방지를 제기함
 -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은 25.0%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25~64세 형식/비형식 교육 참여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평가 결과는 26.1%로 낮게 나타남
 - 국제비교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6-8〉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소영역)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33.3	저출산고령사 회를 대응하기 위한최소한의 기초조건으로 여성활용정책 필요	여성고용물 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 (대부분 60%이상)
공기업·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	여성근로자 비율	101.1	적극적 여성 고용정책 강 화	AA제도 적 용사업장 여 성 고용 물 101.2				
여성공무원 대표성 제고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101.0						
	지자체 5급상 당이상 여성공 무원 비율	93.9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교감 임용 확대	여성교수비율, 여성 교장·교감 비율	101.4 105.8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 참여 여학생수 수혜자만족도	116.4 101.1						
범국민적 양성평등 교육	집합교육 수료 자수	108.1						
	사이버·원격교 육수료자	103.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21.7		
청소년, 여대생 등 직업진로지도 강화 및 추진체계 확충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100.2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 하기센터취 업률 81.1				
	프로그램 참여 자에 대한 만족 도조사	109.3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새일센터 취업률	87.3					경력단절 여 성 훈련 및 교육 강화	
아주 장애인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인턴 참여 실적	115.6						

〈표 6-8〉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외국 국적 동포·외국 인력 활용(소영역)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외국인력 유치						4.3		
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중국, CIS(구소 련)지역 재외동 포(F-4) 자격 국내 체류자수	117.8	외국 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 국인력 유치	전문인력(E- 1~7) 및 전문 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 자격으로 전환 인력규모 79.1			우수인력 유 치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온라인 사증발급 추천시스템을 통 한 사증발급신청 서 신청건수	159.4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 및 지원 강화	외국인력 수급 계획 수립	100.0						
	외국인력상담 센터 상담 실적 지도점검 사업 장 수	144.8 100.6						
고용허가제 정착 및 숙련기능인력 확보	성실근로자 재입 국 고용허가인원	104.3						
	특별한국어시험 제 실시 국가 수	100.0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자 수	105.3					다문화가정 에 대한 편 견을 없애고 사회통합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글로벌 선도화 교 수, 교원연 수 인원(온라인)	112.2 187.7						
	체류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종합안 내센터 민원상 담 처리건수	78.3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외국인과 함께하 는 문화교실사업 실시 학교수	122.9						
	유네스코협동사업 실시 학교수	124.0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소영역)								
학교교육과 고용시 장 연계 강화						40.0	청년실업으로 인한 노동생산 성과 성장잠재 력 약화 방지	

〈표 6-8〉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초중학생용 미래 의 직업세계 책자	100.0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 계 강화	진로·취업지 원 프로그램 수혜 비율 110.7				
	진로 적성검사 이용실적	112.8						
	직업심리검사 개 발 간수 및 직업 정보·직업지도 간행물 발간 간수	166.7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진로·취업프로 그램에 참여한 재학생 비율	106.9						
	지원대학 취업률	101.4						
특성화고 취업 진로지원 사업	전체학생 대비 취업희망자 비율	105.5						
수요자 중심의 직업 능력 개발 기회 확대								
실업자 훈련 계좌제 확대	계좌발급자중 내 일배움카드제 훈 련참여율	91.3						
재직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사업주 능력개 발훈련참여율	103.7						
	훈련참여자만족도	100.4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지원 훈련 참여율	106.9						
	향상지원 훈련 참여율 만족도	104.5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직업훈련 참여제고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훈련 참여자의 직무능력향상도	107.4						
	중소기업핵심직 무능력향상지원 직무능력향상도	103.6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지원 훈련 참여율	107.4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지원 훈련 참여율 등의 직 무능력향상도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	중소기업 체계 적 현장훈련 지 원기업의 모듈 개발건수 비율	103.7						
	중소기업 HRD 자문지원 기업수	306.2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25.0			25~64세 형식 /비형식교육 참여율 OECD 평균 수준

〈표 6-8〉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일과 학습을 병행 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전문 회소계열 특성화학과 구 축 준비	10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촉진	지원대학별 성 인친화형 관련 학과 수 합계	138.0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 주민 참여율	109.6	평생학습 인 프라 구축	평생학습참 여율 119.7				
평생학습 계좌제 확대	학습계좌 개설 인원수	312.3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월 평균 접속 수	610.9						
평생학습과 자격제 도간 연계 강화	NCS 개발 개수	508.0						
	NCS 활용패키 지 개발 개수	635.0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정비 종목수	131.3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소영역)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작업환경 개 선 및 작업 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100.0		26.1		업무성 사고 사망민간율이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훨 씬 높은 수준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장 재 해감소율	128.1						
산재취약부문 지원 강화	취약계층 교육 지원 실적	193.5						
사업장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체계 강화	작업환경측정비 용지원 사업장수	244.5						
	평균 특수감진비 용지원 근로자수	108.4						
	건강증진 활동 비용지원	99.5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강화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 강화	사회심리 재활 서비스 제공한 비율 측정	116.2						
직업재활급여 실효성 확보	재활서비스 이 용자 직업복귀 자 비율	117.3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 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모두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들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나 언론 등의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언론들은 대학 구조조정 정책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졸인력 공급 조절, 산업구조에 부응한 인력 육성, 산업구조 혁신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금융분야 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는 35.0%로 낮게 나타남
 - 언론은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연금 기금 운영 독립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음
- 재정분야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미래 재정위험대비 재정건정성 유지의 성과를 9.5%로 아주 낮게 평가
 - 다만, 국제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의 체감도와 괴리가 존재함

〈표 6-9〉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교육분야 제도 개선								
대학구조조정 추진 및 상시 구조조정 기반마련	대학관계자대상 만족도	103.8					대학구조조정 정책시기 늦어지고 있음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ACE 사업 선정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	96.6					청년실업 중소기업인력난 해결위한 대졸 인력 공급조절 산업구조에 부응한 인력육성 산업구조혁신 등 필요	

〈표 6-9〉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소규모학교 통합 수, 학교 수용시설 재정 투자심사 신청율	96.7, 112.7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 개선(소영역) 주택분야 제도 개선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여부	100.0						
고령층의 주택 수요에 선제적 대응	특별(우선)공급 추진 여부	100.0						
금융분야 제도 개선						35.0		
자산시장 변화대응 전략 수립	자산시장 변화 대응 전략 마련	100.0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 잔존 만기 107.4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유사수준
국민연금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금융부문 기금 투자액 중 해외 대체 투자액 비율	105.9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운영 독립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검토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 방안 발표 여부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율 축소	100.0 100.0						
중장기 재정지속 가능성유지를 위한 재정분야 제도개선(소영역)						9.5		
미래 재정위험대비 재정건정성 유지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마련여부	100.0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정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103.6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국내 수요기반 확충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지원센터 수 62.5%)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한 주관적 평가 결과(매우+대체로 잘됨)도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26.0%, 국내 수요기반 확충 36.4% 등임

〈표 6-10〉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평가 종합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전문가평가(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소영역)								
고령친화제품 기술 개발 촉진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사용성 평가 실시	100.0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 구축 및 R&D 확대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200.0						
	고령친화제품 개발 연구기관 지원	100.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표준 재개정 종수	118.8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회의참석, 국제 문건검토 등 회수	108.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26.0		
우수제품 지정·표시 제도 확대	제품·서비스 표준 확대수	100.0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91.3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평가,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발굴,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개선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100.0						
	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	100.0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100.0						
	육성 인센티브 개발	150.0						

〈표 6-10〉 계속

분야, 영역, 과제	실적		핵심성과지표		국민평가(변화 매우+있는편) (%)	전문가평가 (매우+대체로 잘됨)(%)	언론 평가	국제비교
	성과지표	목표달 성도(%)	핵심과제	목표달성도 (%)				
화장품 관련 수출지원 등 향노화 산업 육성	피부특성은행 구축 국가수 화장품 국내 외 특허건수	133.3 357.8						
국내·외 시장 활성화(소영역)								
국내 수요기반 확충						36.4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내실화	박람회 운영 지원 유공자(기업) 발굴 및 표창	100.0 137.5	국내 수요기 반 확충	지역사회밀 착형 고령친 화용품지원 센터수 62.5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체험관 설치 운영	100.0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	체험관 참관객 수	254.1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고령친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수출정보 DB 구축 건수	100.0						
고령친화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진출협의 체 운영	13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조성(소영역)								
특수용도식품 중 고령자용 식품기준 규격 신설	연구기관 등과 의 연계를 통 한 시험법 적 용성 검토	100.0						
고령자용 식품 신규 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	고령친화식품 인증기준	100.0						

- 이상 성장동력 분야 정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와 전문가, 언론 및 국제비교 등의 평가 결과와 큰 괴리가 발견됨
- 구체적으로 정부 자체 및 핵심성과지표로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 매우 양호(90% 이상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문가의 인식이나 언론의 시각, 국제비교 등에서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자체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잠재인력(여성, 고령자, 외국인, 청년) 활용의

기반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다운사이징에 대한 정부 대응은 여전히 긴장도가 낮아 지체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성장동력 분야의 세부정책들이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나 파급효과의 정도 등에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긴요함



제7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발전방안

제1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안

제2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안

제3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립 방안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관리체계 발전방안

제1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안

1.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가. 저출산 분야

①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핵심과제: 육아휴직제도 개선)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
 - 평균점수는 3.9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육아휴직 이용률을 대표하지 못함
 - 지나치게 고용자 관점에서 본 지표로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이후 사직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이용대상자 가운데 실제 이용률을 반영하지 못함
 - 육아휴직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휴직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이외 많은 요소들이 있어 이것 하나만으로 평가 곤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핵심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극히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4.2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③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율(핵심과제: 유연근로제 확산)

-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유사
 - 평균점수는 3.2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일정 규모 이상) 포함해야 목적 달성 가능
- 유연근무제 확산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여성고용불안을 가중시켜 출산율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

④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핵심과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
 - 평균점수는 3.5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데 부적절하므로 설치대상 기업 중 설치 비율 반영 필요
 - 예를 들어, 종업원 300인(또는 500인)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의 설치율, 의무행률 등으로 대체 필요
 - 대체 보육수당 지급율도 고려 필요

⑤ 가족친화인증 기업수(핵심과제: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
 - 평균점수는 3.3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전체 기업 수 대비 현재 인증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기업수가 다소 늘어난다고 하여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곤란
 - 전체 기업수 고려 필요(가족친화인증 총기업수÷총기업수×100 등)
 -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기준이 적절한지 의문

⑥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핵심과제: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극히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7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실제 정책 대상이 신혼(신규)부부가 아닌 기혼부부 대상이므로 수년간으로 확대된 누적비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또는 주택지원 수혜자수÷지원(자격자) 수×100 고려 필요

- ㉗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핵심과제: 결혼관련 교육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유사(보통이라는 판단이 우세)
 - 평균점수는 3.0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단순한 실적 지표로 목표대비 성과를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등 고려
 - 프로그램 교육 후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 등 효과성 반영 필요
- ㉘ 임신·분만 취약지역수(핵심과제: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
 - 평균점수는 3.5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단순 수에 대한 파악으로 지표 측정의 의도가 불분명
 - 따라서 취약지역의 산모 중 거주지에서 분만한 산모의 비율 고려
 - 또한, 지역의 단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역수준이 드러나도록 개선 필요
- ㉙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핵심과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극히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4.0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일인당 이용 정도, 분모에 대한 적절한 정의 등 고려 필요
- ㉚ 보육·교육비 지원율(핵심과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9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수혜율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사료
 - 무상보육, 무상교육, 양육수당 지원으로 의미가 없는 성과지표로 사료
 - 따라서 일인당 지원액 반영 필요(보육교육비 지원 금액÷0~5세 아동 수×100)

Ⅱ 보육시설 평가인증률(핵심과제: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극히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4.1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평가인증률이 너무 높아 갈수록 실효성이 떨어짐

- 평가인증 유지율이 더 적절

- 부모의 만족도 수준도 조사할 필요

Ⅲ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율(핵심과제: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

- 평균점수는 3.7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시간연장형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의 대표성 있는 항목인지 의문(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

-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원하는 부모 중 실제 서비스를 받는 비율도 조사할 필요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파악이 선행될 필요

Ⅳ 아이돌보미 연계건수(핵심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보통이라는 판단도 높은 수준

- 평균점수는 3.5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단순히 건수만으로 지표를 설정할 경우 목표대비 성과가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아이돌보미신청자수 대비 연계건수로 수정 필요

- '건'보다는 '아동'이나 '가구' 기준이 더 적절

- 아동 또는 가구의 수혜율, 연계 아동 수 ÷ 전체 아동 수 × 100 등 고려 필요

Ⅴ 방과후돌봄 서비스 수혜율(핵심과제: 취약아동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

- 평균점수는 3.9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전체 모집단 파악 필요
- 15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핵심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 의견 없음)
 - 평균점수는 4.0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일인당 지원액 반영 필요
 - 저출산대책의 핵심성과지표로 간주 곤란
- 16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핵심과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 적절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미세하며 보통이라는 평가가 아주 우세
 - 평균점수는 3.0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저출산대책의 핵심성과지표로 간주 곤란
 - 단순히 건수만으로 지표를 설정할 경우 목표대비 성과가 반영되기 곤란하므로 중
고등학생수 대비 이용율로 변경 고려
 -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 지표도 조사 필요
- 17 아동안전사고 사망률(핵심과제: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
 - 평균점수는 3.7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저출산대책의 핵심성과지표로 간주 곤란
 - 사망 이외의 사고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적 지표로서 생활안전 실천에 대
한 지표 개발 필요
 - 0~14세 아동 사망자수를 모두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 곤란

18 학대피해아동 보호율(핵심과제: 아동학대 예방보호 강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우세

– 평균점수는 3.6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저출산대책의 핵심성과지표로 간주 곤란

– ‘보호’의 수준이 모호하므로 보호기간 등 보호의 질적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 성과 지표 산출 고려

〈표 7-1〉 저출산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핵심과제	성과지표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잘모르 겠음	계	평균 ¹⁾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10.7	7.1	7.1	32.1	42.9	-	100.0(28)	3.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	7.1	14.3	32.1	46.4	-	100.0(28)	4.2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로제 이용율(%)	3.6	32.1	21.4	17.9	17.9	7.1	100.0(28)	3.2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7.1	10.7	25.0	35.7	21.4	-	100.0(28)	3.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소)	3.6	21.4	28.6	25.0	17.9	3.6	100.0(28)	3.3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	3.7	40.7	33.3	22.2	-	100.0(27)	3.7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7.1	17.9	46.4	21.4	7.1	-	100.0(28)	3.0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수(개소)	3.6	17.9	21.4	32.1	21.4	3.6	100.0(28)	3.5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	3.6	25.0	35.7	32.1	3.6	100.0(28)	4.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3.6	7.1	17.9	42.9	28.6	-	100.0(28)	3.9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3.6	14.3	42.9	35.7	3.6	100.0(28)	4.1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 공율(%)	3.6	10.7	17.9	50.0	17.9	-	100.0(28)	3.7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	10.7	39.3	39.3	10.7	-	100.0(28)	3.5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	3.6	14.3	67.9	14.3	-	100.0(28)	3.9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	-	21.4	53.6	21.4	3.6	100.0(28)	4.0
아동 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3.6	14.3	60.7	17.9	-	3.6	100.0(28)	3.0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	21.4	17.9	25.0	32.1	3.6	100.0(28)	3.7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3.6	14.3	21.4	39.3	21.4	-	100.0(28)	3.6

주: 평균은 ‘잘모르겠음’을 ‘제외한 매우부적절(1점)~매우적절(5점)’에 대한 결과임

나. 고령사회 분야

①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핵심과제: 고령자 고용연장)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
 - 평균점수는 3.5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단순히 고용률을 적용하면 고용연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한계 존재
 - 따라서 조사대상의 연령을 상향 조종하거나 재고용률 파악 필요
 - 59~64세, 65~70세 등
 - 단순히 전체인구대비 고용인원으로 산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노동인구대비 고용인원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도 고용률은 낮지 않게 나타나며 문제가 되는 열악한 고용의 질 이라는 면이 반영되어야 함

②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율(핵심과제: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6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취업은 임시 일용직의 형태가 높고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높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50세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빠름.
 - 전직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유효성인 측면에서는 적절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③ 국민연금 가입률(핵심과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8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국민연금사각지대는 미가입자와 가입자 중에 적용제외자와 미납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입률은 사각지대를 과소평가해 할 가능성이 있음
- 소득보장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될 정도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연금 수급예상금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수직역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수에서 제외되어야 함(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되지 않음)

④ 퇴직연금 가입률(핵심과제: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9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2010년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어 5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면 과다 추정
 - 퇴직연금 의무화 및 확대정책과 연관해서 목표치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연금 가입도 고려 필요

⑤ 45~80세미만 건강검진 수검률(핵심과제: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4.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생애전환기 연령인 4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 필요

⑥ 50대 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핵심과제: 노후설계 기반 조성)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
 - 평균점수는 3.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노후 준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노후 준비를 재무적인 측면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고려 필요)
 - 노후준비를 50대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 생애에 걸쳐 지표화는 것이 필요

- 노후준비율은 단순히 ‘되어있다’와 ‘아니다’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준비 정도를 척도화하여 평균값으로 제시할 것을 고려 필요

㉗ 노인일자리 창출 수(핵심과제: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유사(보통이라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
 - 평균점수는 3.1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양적 확충 이외에 질적 고도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속기간, 고용의 질(단순노동, 전문기술 등), 일자리 보상이나 복지 정도 등을 고려 필요
 - 최근 3만 여에 달하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임의로 노인일자리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일자리 수가 성과포장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곤 하여 실제 정책의 충실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㉘ 공적소득보장률(핵심과제: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9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공적소득보장률에는 무연금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저연금자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급여수준별 연금 수급자 분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 필요

㉙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핵심과제: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9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조기 검진 참여자수로 전체 관리체계 구축을 평가하기 곤란
 - 따라서 참여자수보다 치매상담센터 등록자수, 치매 유병율 등의 지표가 산출될 필요가 있음

Ⅹ 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노인인구대비 인정률)(핵심과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4.1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보험방식이므로 수혜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노인장기요양 인정률, 수급률, 이용률 등의 표현이 타당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도 대상자로 포함하고, 5등급으로 확대한 것을 고려하여 '65세이상 장기요양등급인정자(1~5등급)÷노인인구×100'로 산출 고려
 - 장기노인요양서비스 수혜자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수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었기에 내실화를 충분히 측정하고 있지는 못함
 - 등급외자에 대한 처우개선 정도를 내실화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Ⅺ 노인(60세 이상)의 생활체육참여율(핵심과제: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8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일부에 불과한 것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문제가 있음
 - 은퇴시점을 고려해서 55세 이상부터 참여율을 산출하는 것을 고려

Ⅻ 노인자원봉사 등록자 수(핵심과제: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우세
 - 평균점수는 3.3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실질적인 참여(활동건수, 활동시간 등)를 측정하는 지표(자원봉사경험률 등) 검토 필요
 - 고령자란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므로 핵심과제와 성가지표 간 즉, '노인자원봉사'와 '고령자 자원봉사'를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

- 등록자의 경우 vms이외에도 안행부의 1365나 다른 부처의 등록시스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13 노인문화예술교육 경험률(핵심과제: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5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기반 확대와 경험률은 일치하는 변수가 아님
 - 고령자는 노인과는 다른 의미로 핵심과제와 성과지표 간 통일 필요

14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비율(총임대주택대비)(핵심과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우세
 - 평균점수는 3.2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분모에 따라 공급 비율이 달라지는 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비율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파악이 불가능
 - 임대용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어 공공임대주택만 집계 가능하므로 전체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성 존재
 - 따라서 임대주택 대비가 아니라 노인인구나 노인가구 등 욕구대비로 바뀌어야 함 (예로 고령자 중 임대주택 이용자의 비율)
 - 다른 한편으로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주거환경이 고령친화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배제됨

15 노인교통사망률(핵심과제: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우세
 - 평균점수는 3.5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사망률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사고율로 대체 필요

16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핵심과제: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7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1인 혹은 2인 노인가구 대비 돌봄서비스 수혜율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구분이 필요하며, 서비스가 필요한 전체 노인들을 모수로 하여 수혜노인들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17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핵심과제: 학대노인 보호강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비해 우세

- 평균점수는 3.1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기관수 증가는 실질적인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데 변별력이 없으므로 상담 건수, 학대 조치 건수, 학대노인대비 서비스 제공율, 기관 이용률 등으로 변경 필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기관수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학대노인쉼터의 보호노인수, 학대노인대응실적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실제 운영실적에 대한 지표 선정이 필요

〈표 7-2〉 고령사회 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핵심과제	핵심성과지표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잘모르 겠음	계	평균 ¹⁾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수) 고용률(%)	-	20.0	20.0	52.0	8.0	-	100.0(25)	3.5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율(%)	-	8.0	28.0	56.0	4.0	4.0	100.0(25)	3.6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가입율(%)	-	16.0	12.0	52.0	20.0	-	100.0(25)	3.8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율(%)	-	4.0	24.0	44.0	24.0	4.0	100.0(25)	3.9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	4.0	12.0	60.0	16.0	8.0	100.0(25)	4.0
노후설계 기반 조성	5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4.0	20.0	36.0	24.0	16.0	-	100.0(25)	3.3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 수	4.2	25.0	33.3	29.2	8.3	-	100.0(24)	3.1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	4.2	20.8	54.2	16.7	4.2	100.0(24)	3.9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	4.0	16.0	60.0	16.0	4.0	100.0(25)	3.9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노인인구대비 인정률)(%)	-	4.0	8.0	56.0	24.0	8.0	100.0(25)	4.1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	4.0	20.0	56.0	12.0	8.0	100.0(25)	3.8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자원봉사 등록자 수	4.0	20.0	16.0	52.0	4.0	4.0	100.0(25)	3.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인문화예술교육 경험율(%)	-	8.0	32.0	52.0	4.0	4.0	100.0(25)	3.5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비율(총임대주택대비)(%)	4.0	28.0	12.0	40.0	8.0	8.0	100.0(25)	3.2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노인교통사망률(노인10만명 당)	4.0	16.0	24.0	36.0	16.0	4.0	100.0(25)	3.5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수	-	4.0	32.0	48.0	12.0	4.0	100.0(25)	3.7
학대노인 보호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수	4.0	20.0	32.0	32.0	4.0	8.0	100.0(25)	3.1

주: 평균은 '잘모르겠음'을 제외한 매우부적절(1점)~매우적절(5점)에 대한 결과임

다. 성장동력 분야

- ①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고용률(핵심과제: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8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AA 미적용 사업장도 고려 필요

- 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률(핵심과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보통이라는 편도 우세)
 - 평균점수는 3.5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능력개발에 대한 지표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단순히 취업지원만을 측정 가능
 - 새일센터 참여자수가 제한적이고 일자리의 질 문제가 있음
 - 재직여성근로자의 능력개발 참여정도 포함 필요(새일센터는 경단여성의 경우에만 해당)

- ③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 인력규모(핵심과제: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보통이라는 의견이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
 - 평균점수는 3.3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E7에는 비전문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해야하며, 국적동포 중 F4나 F5비자로의 전환은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 전문인력 규모와 전문인력 중 정주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가지고 있는 규모만으로 인력의 활용정도를 가늠하기 곤란
 - 유치 활동(노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검토

- ④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수혜비율(핵심과제: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보통이라는 의견이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

- 평균점수는 3.4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프로그램이 학교교육과 고용시장의 연계를 얼마나 반영했는가를 측정해야하며, 단순 참석으로 측정하는 것은 부적절
- 교육-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는데 진로취업 지원 수혜비율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협소

⑤ 평생학습참여율(핵심과제: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6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인프라와 참여율은 다른 측정 도구

⑥ 산업재해율(핵심과제: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

- 평균점수는 3.3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작업장 내에서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교육포함) 포함 고려 필요
- 산업재해율이 재해포착비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재사망율이 더 정확한 지표로 간주

⑦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핵심과제: 금융분야 제도개선)

○ 보통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높음

- 평균점수는 2.9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고령화와 관련된 지표가 적절
- 국고채의 목적이 다양하여 국고채 잔존만기와 금융 분야에서의 고령화 대비와 상관성이 낮음
-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에 대한 지표가 적절

㉘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핵심과제: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적절하다는 의견이 아주 우세(보통이라는 의견도 많음)
 - 평균점수는 3.6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각년도의 국가 채무비중이 아니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라면 5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채무비중으로 보는 것이 적절
 - 국가채무 외에 지방정부, 공기업 채무를 보조지표로 활용
 - 채무 범위에 대한 확대된 기준 필요
 -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나, 국가부채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점 반영 모색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함께 고려 필요

㉙ 우수제품 지정품목 개수(핵심과제: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보통이라는 의견이 우세(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보다 우세)
 - 평균점수는 3.4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품목수보다 신청품목 대비 지정품목 비율과 일본 등 해외사례와 비교 필요
 - 전체 고령친화제품 중 우수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적절
 -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지표 필요

㉚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핵심과제: 국내 수요기반 확충)

- 보통이라는 의견이 우세(부적절과 적절하다는 의견은 유사)
 - 평균점수는 3.0점/5점만점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센터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어려우므로 센터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타 지역 확산을 판단하여야 함
 - 센터의 접근성 측면에서는 고령인구 대비 개수 등 인구규모 반영
 - 단순 제품 홍보만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곤란
 - 시장 활성화 지표의 다양화 필요

〈표 7-3〉 성장동력 분야 정책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핵심과제	성과지표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잘모르 겠음	계	평균 ¹⁾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	4.0	16.0	64.0	8.0	8.0	100.0(25)	3.8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	12.0	40.0	32.0	12.0	4.0	100.0(25)	3.5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 인력규모	-	12.0	48.0	24.0	8.0	8.0	100.0(25)	3.3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4.0	8.0	40.0	32.0	12.0	4.0	100.0(25)	3.4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4.0	-	32.0	56.0	4.0	4.0	100.0(25)	3.6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	8.0	8.0	52.0	28.0	4.0	100.0(25)	4.0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12.5	8.3	29.2	25.0	-	25.0	100.0(24)	2.9
미래재정위험 대비 증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	-	4.0	36.0	40.0	8.0	12.0	100.0(25)	3.6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품목 개수	-	12.0	48.0	24.0	12.0	4.0	100.0(25)	3.4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	4.0	20.0	44.0	12.0	8.0	12.0	100.0(25)	3.0

주: 평균은 '잘모르겠음'을 제외한 매우부적절(1점)~매우적절(5점)에 대한 결과임

2.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변경 검토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핵심과제 45개 중 14개 과제는 2015년도 목표를 2013년에 이미 달성하여 목표치 변경 고려 필요
 - 분야별로 목표를 기 달성한 과제는 저출산 분야 6개, 고령사회 분야 4개, 성장동력 분야 4개
 - 2015년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과제는 20개, 목표 달성이 곤란한 과제는 11개로 진단
- 저출산 분야에서 2015년도 목표가 이미 달성된 6개 과제는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등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소)는 2015년 목표치 121개소이나 2013년에 288개소로 이미 목표 달성

-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정착 등을 통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수를 빠르게 증가시켜야 하므로, 향후 매년 200개소씩 증가할 것으로 목표치를 수정 필요
 - 2014년 488개소, 2015년 688개소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고려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이 2013년 11.7%로 2015년 목표치 10.0%를 상회하여 달성
 - 향후 '11~'12년과 '12~'13년 증가율의 평균치인 6.6%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 2014년 12.5%, 2015년 13.3%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 고려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율이 2013년 65.4%로 2015년도 목표치 62.0%를 상회하여 달성
 - 2013년 전 소득계층 대상 무상보육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높아졌으나 일정한 가정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65.4%를 유지할 것으로 목표로 설정 고려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이 2013년 22.0%로 2015년도 목표치 15.0%를 상회하여 달성
 - '10년 이래 연평균 약 5%p씩 증가한 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 27.0%, 2015년 32.0%로 목표 설정 고려
-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가 2013년 45,064천명으로 2015년도 목표치 45,000천명을 초과 달성
 - '11~'12년, '12~'13년 증가율의 평균치인 3%씩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 이 경우 2014년 46,416천명, 2015년 47,808천명으로 목표 설정 고려
-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 확대피해아동 보호율이 2013년 0.73%로 2015년도 목표치 0.71%를 상회하여 달성
- '10년 이래 연평균 약 0.05%p씩 증가한 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 0.78%, 2015년 0.83%로 목표 설정 고려

〈표 7-4〉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2013 실적 치	2015 목표 치	'15 목표 대비 실적 (%)	향후 달성도 판단△ 가능○ 초과●	목표치 변경안		근거
						'14	'15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71.5	72.6	98.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0.8	2.0	40.0	○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14.8	17.9	82.7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18.4	20.8	88.5	○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개소)	288	121	238.0	●	488	688	매년 200개소씩 증가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	11.7	10.0	117.0	●	12.5	13.3	'11~'12년, '12~'13년 증가율의 평균 6.6% 적용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440	521	84.4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수(개소)	46	25	54.3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13.4	17.7	75.7	△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65.4	62.0	105.5	●	65.4	65.4	가정보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65.4% 유지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98.1	95.9	102.3	●			평가인증 유지율로 지표 변경 고려 필요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육아지원서비스 제공율(%)	21.0	22.6	92.9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연계건수 (만건)	291	320	90.9	○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45.4	52.1	87.1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22.0	15	146.7	●	27.0	32.0	'10년 이래 연평균 약 5%p씩 증가 적용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45,064	45,000	100.1	●	46,416	47,808	'11~'12년, '12~'13년 증가율의 평균 3% 적용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0만명당명)	3.9	3.2	82.1	○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0.73	0.71	102.8	●	0.78	0.83	'10년 이래 연평균 약 0.05%p씩 증가 적용

□ 고령사회 분야에서 2015년도 목표가 기 달성된 과제는 4개로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등이 포함됨.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50세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이 2013년 80.3%로 2015년도 목표치 77.0%를 상회하여 달성
- '11년 이래 (전년 증가분-1.5%)p씩 증가한 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 84.4%, 2015년 87.0%로 목표 설정 고려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가 2013년 63,325명으로 2015년도 목표치 63,100명을 상회하여 달성
- '10년 이래 연평균 3,651명씩 증가한 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 66,976명, 2015년 70,627명으로 목표 설정 고려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임대주택 대비)이 2013년 수도권 8.6%, 지방 5.6%로 2015년도 목표치 수도권 5.0%, 지방 3.0%를 상회하여 달성
- '10~'13년 평균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과 2015년 목표치를 수도권 6.5%, 지방 4.0%로 설정 고려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 노인교통사고사망률(10만명당명)이 2013년 29.3으로 2015년도 목표치 30을 상회하여 달성
- '10~'13년간 연평균 감소율(-0.83p)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 28.5, 2015년 27.6로 목표 설정 고려

〈표 7-5〉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핵심과제	핵심과제 성과지표	2013 실적 치	2015 목표 치	'15 목표 대비 실적 (%)	향후 달성도 곤란△ 가능○ 초과●	목표치 변경안		근거
						'14	'15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취업자수)고용률 (%)	63.7	64.4	98.9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률(%)	80.3	77.0	104.3	●	84.4	87.0	(전년 증기분 -1.5%p씩 증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가입률(%)	62.9	65.0	96.8	○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률(%)	46.3	51.2	90.4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 체계 구축	45세~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	70.8	74	95.7	○			
노후설계 기반 조성	5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65.9	70.5	93.5	△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수	261, 598	30만	87.2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81.8	85.6	95.6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	63.3 25	63.1 00	100.4	●	66.9 76	70.6 27	'10년이래 연평균 증가 유지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6.1	6.7	91.0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의 생활체육참여율(60세이상)(%)	38.4 (12)	58.0	66.2 (12년 대비)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천명)	34.0	64	53.1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	4.9 (12)	8.0	61.3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임대주택 대비)(%)	수도권 5.6 지방 3.0	8.6 3.0	172.0 186.7	●	6.5 4.0	6.5 4.0	'10~'13년 평균치 유지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노인교통사고사망률(10만명당명)	29.3	30	102.4	●	28.5	27.6	'10~'13년 평균 감소율 적용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 가구 보호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24.2	30.8	78.6	○			
학대노인 보호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	25	30	83.3	○			

- 성장동력 분야에서 2015년도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한 과제는 4개로 적극적 여성 고용정책 강화,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금융분야 제도개선 등이 포함
-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이 2013년 36.0%로 2015년도 목표치 36.0%를 달성
 - '10~'13년간 평균 증가(0.64%p)한 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 36.7%, 2015년 37.3% 목표 설정 고려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이 2013년 31.0%로 2015년도 목표치 30.0%를 상회하여 달성
 - '11~'13년간 평균 증가(1.65%p)한 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 32.7%, 2015년 34.3%로 목표 설정 고려
-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참여율이 2013년 40.1%로 2015년도 목표치 35.9%를 상회하여 달성
 - '08년 이래 변화식 $y=23.897 \times \exp(0.082 \times \text{년도})$ 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 이 경우 2014년 42.4%, 2015년 46.1%로 목표 설정 고려
- 금융분야 제도개선
 - 국고채평균잔존만기가 2013년 6.50년으로 2015년도 목표치 6.27년을 상회하여 달성
 - 적어도 2013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2015년도 목표치 수정 고려

〈표 7-6〉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 성과지표의 목표치 변경안

핵심과제	성과지표	2013 실적치	2015 목표치	'15 목표 대비 실적 (%)	향후 달성도 판단△ 가능○ 초과●	목표치 변경안		근거
						'14	'15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36.0	36.0	100.0	●	36.7	37.3	'10~'13년간 평균 증가 적용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률(%)	51.4	63.8	80.6	△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 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49,706	75,128	66.2	△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비율(%)	31.0	30.0	103.3	●	32.7	34.3	'11~'13년간 평균 증가 적용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40.1	35.9	111.7	●	42.4	46.1	$y=23.897*exp(0.082*년도)$ 적용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0.59	0.57	96.6	○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평균잔존만기(년)	6.50	6.27	103.7	●			6.50 유지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	33.8	30이하	88.8	○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 제도 확대	우수제품지정품목개수(개)	21	30	70.0	△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5	13	38.5	△			

제2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광역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실시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를 동시에 평가함
- 그러나 2009년부터 각종 평가 준비로 인한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합동평가에서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극히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가 어려운 실정임
 - 현재 합동평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매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저출산대책 3개와 고령사회대책 3개씩을 제출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정성평가를 실시
- 이 절에서는 현행 합동평가를 통한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행 지자체 합동평가체제와 독립적으로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함
 - 평가의 필요성, 평가방법 등에 관해 일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노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

2.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방법

가. 평가대상

- 평가단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실시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와 도(道)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 내용은 관할 기초지자체(시·군·구)의 정책을 포괄

- 전국의 특별시·광역시별 그리고 전국의 도(道)별로 점수에 따라 각각 서열화
 - 특별시·광역시와 도(道) 간에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시설기반, 지리적 근접성, 인구 구성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함
- 기초자치단체는 구, 시, 군으로 구분하여 평가
 -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내용을 기초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제출(첨부)
 - 전국의 구별, 전국의 시별 그리고 전국의 군별로 점수에 따라 각각 서열화
 - 구, 시 및 군 간에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인프라, 지리적 근접성, 인구 구성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함

나. 평가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각급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한 정책에 한정(중앙부처 위임사업, 매칭사업 등은 제외)
 - 정책의 종류, 내용, 근거, 주민욕구 반영 정도 등
- 정책 수립부터 결과까지 포괄
 - 정책수립 : 광역자치단체 시행계획
 - 자료 : 매년 초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시행계획 중 정책내용
 - 정책집행 : 예산
 - 근거 : 예산 투입이 많을수록 저출산고령사회에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정책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시행계획에 포함된 예산), 지자체 전체 예산(지자체 추가 제출)
 - 정책기반 : 인프라
 - 근거 : 일회성의 전시적, 단기적인 정책보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적, 체계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
 -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행을 위한 인프라(지자체 추가 제출)
 - 정책효과 : 합계출산율

-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출산율 제고임을 전제
- 자료 : 지자체별 합계출산율(통계청에서 매년 3월 중에 발표하는 잠정치)

다. 평가방법

- 지자체 중에는 정성평가가 유리한 곳과 정량평가가 유리한 곳이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성적 평가방법과 정량적 평가방법을 혼합한 방법 적용
- 정책수립단계 평가는 매년 수립하는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지자체 고유사업에 한정)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 시행계획 평가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만 적용
 - 항목별 가중치 부여 등 고려(50점 만점)
-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정성적 평가 실시
 - 심사기준을 설계하여 사전적으로 제시

〈표 7-7〉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 심사표(양식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지자체 고유사업에 한정)	저출산관련	고령사회관련
		배점(각 1~5점)	배점(각 1~5점)
필요성	지자체 정책들이 출산율 제고,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을 위해 필요한지를 평가(* 수립 근거 포함)		
충분성	지자체 정책들의 종류가 출산율 제고,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을 위해 충분한지를 평가		
현실성	지자체 정책들의 지원수준 등이 출산율 제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현실적인지를 평가		
효율성	지자체 정책들이 출산율 제고,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을 위해 예산 대비 효과적인지를 평가		
대상 크기	지자체 정책들이 보다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		
총점	계 <u> </u> 점		

- 정책집행단계 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을 정량적으로 평가
- 예산평가를 위해 지자체 총예산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측정
 -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관할 기초자치단체들의 예산의 합으로 하며, 전체 예산은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한정

$$\text{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비율} = \frac{\sum_{i=1}^n \text{저출산고령사회정책예산}}{\sum_{i=1}^n \text{총예산}} \times 100(\%)$$

(i는 기초지자체)

- 예산 평가는 광역자치단체 평가(30점 만점)와 기초자치단체 평가(50점 만점) 모두에 적용(각각 최저점은 10점 부여)
 - (1안) 중간 비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점수 부여
 - 광역자치단체 : (특정지자체비율-최저비율)/(최고비율-최저비율)×20점+10점
 - 기초자치단체 : (특정지자체비율-최저비율)/(최고비율-최저비율)×20점+10점
 - (2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비율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등도 고려(예산비율을 10분위로 나눠 점수 부여하는 방식 등)
- 정책기반조성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인프라에 대해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명시된 인프라(사전적으로 인정 인프라 목록 제시)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1개소 당 0.5점 부여(20점 초과시 20점 부여)
 - 기존에 설치된 인프라도 매년 평가에 반복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설치된 인프라는 평가에서 제외
 - 인프라 평가는 기초자치단체 평가에만 적용
- 정책효과성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목표로 하는 합계출산율 수준으로 평가
 - 정책효과성 평가는 광역자치단체 평가(20점 만점)와 기초자치단체 평가(30점 만점) 모두에 적용
 - 평가항목 선정을 위하여 연구진이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구구조(연령별 미혼인구 비율 등) 등으로 인하여 일부 지자체는 항상 합계 출산율이 높고 다른 일부 지자체는 항상 합계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유배우합계출산율 등 다른 출산력 지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들 지표의 생산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합계출산율 지표를 그대로 이용하되 배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반영

○ 매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합계출산율을 만점 그리고 최저 합계출산율을 5점으로 책정

- (1안) 중간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 비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

• 광역자치단체 : (특정지자체TFR-최저TFR)/(최고TFR-최저TFR)×15점+5점

• 기초자치단체 : (특정지자체TFR-최저TFR)/(최고TFR-최저TFR)×25점+5점

- (2안) 합계출산율을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등 고려(합계출산율을 10분위로 나뉘 점수 부여하는 방식 등)

〈표 7-8〉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방법 및 배점

	정책수립(A)	정책집행(B)	기반구축(C)	정책효과성(D)
광역자치단체 (100점)	시행계획수립 평가 (50점)	예산 (30점)	-	합계출산율 (20점)
기초자치단체 (100점)	-	예산 (50점)	인프라 (20점)	합계출산율 (30점)

라. 평가주체

□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간사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 매년 지자체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위탁기관(또는 용역 수행기관)이 담당

□ 성과평가 위탁기관(용역수행기관)은 매년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

○ 매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실시

- 심사위원은 관련 전문가(대학, 연구기관 등) 5~10인으로 구성하여 운영
- 심사위원은 매년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탁기관(용역수행기관) 책임자로 임명
- 예산과 인프라 평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위탁기관(용역수행기관)에서 정량화 작업(점수 산정)을 추진
-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발표자료(3월경에 발표되는 잠정치)를 이용하여 위탁기관(용역수행기관)에서 점수를 산정
- 위탁기관(용역수행기관)은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간사기관 보건복지부)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구, 시, 군)별 최종 점수 및 근거자료 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간사기관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

마. 평가 및 결과발표 시기

- 평가는 매 익년 4월말까지 완료
- 평가결과는 ‘인구의 날(7월 11일)’에 발표

3.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집행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인센티브 제공의 기준 등으로 활용
- 연구진이 일부 지자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을 제기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과 관련한 홍보자료로 활용

제3절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립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이 국가아젠더로 채택되어 범정부적, 전사회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230여개로 방대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 투입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적 및 사회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가장 일선에 위치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
 - 그 원인으로는 중앙정부-지자체간 역할 정립 미흡, 지자체의 예산, 인프라 등 한계 요인 존재 등을 들 수 있으며,
 - 여기에다가 지자체 독자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 능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지역의 특수성, 지역주민의 욕구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집행,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를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인프라가 부재하거나 비체계적인 실정
 - 지자체에서 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수립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 결과 평가 등을 연구용역에 의뢰하는데 시간적, 예산상 일정한 한계성 존재
- 이와 관련, 이 절에서는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의견 제시가 가능한 상시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 집행 및 평가·환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지속적, 연속적으로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가 가능하여 지자체 공무원의 작은 인사이동 등을 보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2. 구축 방법

가. 설치 대상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기관 설치

나. 역할 및 기능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정책 수립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컨설팅
 -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뢰 시 컨설팅 실시
 -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및 환류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근거 마련 지원
 - 주민욕구조사 등 실시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지역 통계 및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 중앙정부 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정책 간 연계 지원
 - 중앙정부 정책을 지자체에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자체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관련 지자체 활동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관련 인구교육,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관련 관계자 교육 지원 등

다. 설립 방법

- 설치형식에 대한 검토
 - (1안)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경우하여 모니터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예산을 보조(matching fund)하여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
- (2안)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모니터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 순수하게 국고보조 방식(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운영

〈표 7-9〉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치 방법별 장·단점

	장점	단점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기관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 등에 효과적 - 지자체 정책관련 자료 수집 등이 용이하여 연구 수행 유리 - 예산 확대가 가능하여 인력 등 충원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예측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모니터링 기능 수행 곤란 - 지자체에 대한 보고 등 의무 발생으로 비효율성 발생 가능 - 지자체의 지시에 의해 불필요한 부문까지 수행 가능
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정책수립 등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가능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집중적인 역할 수행 가능 - 전국 모니터링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수요 파악 곤란, 관련 자료 수집 곤란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역할 수행 곤란 가능 - 예산 한계로 인하여 영세성 발생 가능

□ 수탁기관에 대한 검토

- 신설기관(시도 내 독립적인 센터 설치)
 - 시도 내에 독립적인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가족여성연구원, 발전연구원 등)
 -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센터 설치)을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 기존 대학연구기관
 - 기존 대학 연구기관(센터 설치)을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표 7-10〉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의 형태별 장·단점

	장점	단점
시도 내 독립적 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기관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 등에 효과적 - 지자체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이 용이하여 연구 수행 유리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집중적(전문적)인 역할 수행 가능 - 시도의 관리, 감독 등이 가능해 도덕적 해이 등 방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인프라 활용이 곤란하여 예산 부족 시 영세성을 피할 수 없음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기관이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정책 수립 등에 효과적 - 지자체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이 용이하여 연구 수행 유리 - 기존 연구기관의 건물, 장비, 조사체계 등 시스템, 인력, 네트워크 등의 활용이 가능 - 기존연구기관의 관리, 감독 등이 가능해 도덕적 해이 등 방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인력 부족(부재) - 기존 연구기관 등에 예측되어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능 수행 곤란 가능 - 보고 등 의무 발생으로 비효율성 발생 가능
기존 대학연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정책수립 등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가능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집중적인 역할 수행 가능 - 기존 연구기관의 건물, 장비, 조사체계 등 시스템, 인력, 네트워크 등의 활용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수요 파악 곤란, 관련 자료 수집 곤란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역할 수행 곤란 가능 - 관리, 감독 등이 부재하여 도덕적 해이 등 우려

□ 설치방법(검토결과 종합)

-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시도에서 산하에 센터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경유하여 해당 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예산을 제공하고, 시도에서 매칭방식으로 지원
 - 지자체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
 - 예산은 시도를 경유하여 시도와 중앙정부가 50:50으로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
 - 단, 센터 개소까지는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을 높이고, 센터가 안정기가 되면 50:50으로 지원
- 한편, 보건복지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도별 상황에 적합한 모니터링 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연구진이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도 내에 새로운 독립적인 센터 설치를 제시함. 즉, 기존 지자체 연구기관의 성격, 지자체와

의 연관성 등에 따라 선호도가 상이하게 나타남.²⁾

- 대학연구기관 등에의 독립적인 설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표 7-11〉 지자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기관 설치방법 종합(안)

	저출산고령사회모니터링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운영위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하되, 지자체 직영방식과 민간기관 위탁운영방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하되, 지자체 직영방식과 민간기관 위탁운영방식	(지정)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위탁기간	3년 이내	3년 이내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3년간
수탁대상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지정대상)국공립연구기관, 국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소속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지정현황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총 152개소(직영 9개소, 위탁 143개소)건강가정지원센터	<17개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대구여성가족재단 인천발전연구원 광주여성재단 대전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북여성발전센터 전북발전연구원 전남여성플라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2) 예를 들어, 경기도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상시모니터링기구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라. 인력 및 운영

□ 조직 및 인력

- 센터장과 저출산모니터링팀 및 고령사회모니터링팀을 설치
- 상시인력으로 박사급 5~10인, 석사급 3~5인으로 구성
 - 이외 자문위원으로 지역 내 전문가풀 이용



제8장 결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추진실적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함
 - 기초적으로 모든 세부정책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와 예산집행률을 평가하고, 핵심과제에 대해 객관적인 핵심성과지표에 의거하여 목표달성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설정한 목표치 대비)를 평가함
 - 정부 자체에 의한 평가 이외에도 국민 참여 평가, 전문가 주관적 평가, 언론 사설, 국제비교 등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함
- 이와 같은 평가들에 입각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 자체적인 평가 결과는 대부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저출산 분야) 84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81개(96.4%)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3개(3.6%)에 불과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가 해당
 - (고령사회 분야) 86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77개(89.5%)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9개(10.5%)
 -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속적 연령차별 모니터링 실시, 저소득층 및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U-health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실손의료보험 개선으로 소비자 의료보장 강화, 문화 정착을 위한 효행장려여건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우수사례 개발 등이 해당
 - (성장동력 분야) 56개 과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54개(96.4%)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2개(3.6%)에 불과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여건 개선,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이 해당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한 핵심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결과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핵심성과지표(45개) 중 100% 이상 목표 달성 지표가 25개(55.6%) 또는 90% 이상 목표 달성 과제가 37개(82.3%)이며, 90% 미만 달성 과제는 8개(17.8%)로 낮음
 - (저출산 분야) 18개 지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지표가 17개(94.5%)이며, 90% 미만 달성 지표는 1개(5.6%)로 낮음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 (고령사회 분야) 17개 지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지표가 13개(76.5%)이며, 90% 미만 달성 지표는 4개(23.5%)로 낮음
 -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 강화 등
 - (성장동력 분야) 10개 지표 중 90% 이상 목표 달성 지표가 7개(70.0%)이며, 90% 미만 달성 지표는 3개(10.0%)로 낮음
 - 여성 및 외국인력 활용 분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의 국내 수요기반 확충 등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체감도)는 낮게 나타남
 - (저출산 분야) 최근 일-가정 양립 여건의 변화 여부, 자녀양육이 수월해졌다는 변화 여부, 자녀가 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변화 여부 등에서 공통적으로 낮게 평가됨
 - (고령사회 분야)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 관련 변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건강과 노후설계에 비해 소득보장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으며, 최근 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변화 여부에 한 평가는 비교적 높으나 여전히 그 수준은 높지 않음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남
 - 대체적으로 국민의 평가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저출산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 결과가 나타남

-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건강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노후소득 보장, 고령친화사회조성 등과 관련한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낮게 나타남
-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낮게 나타남
- 언론의 지적이나 국제비교 분석에 의한 평가 결과도 국민의 평가나 전문가의 평가가 낮을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남
-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의 달성도나 핵심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결혼, 출산 및 양육, 노후 준비 등에 많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초저출산율과 노후 빈곤화, 자살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종합해볼 수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국민의 욕구와 상관성이 낮은지 여부,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책별로 종합 점검하여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관련,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핵심성과지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지표 종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핵심성과지표의 목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해 중앙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개선(feedback)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인프라(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국민건강보험공단(2014). 2013 장기요양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2012).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 기획재정부(2014). 2013년 국고채 시장 동향 및 평가.
- 기획재정부(2014). 국채 2013.
- 도로교통공단(2013). 2013년판(2011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일본 후생노동성(2014). 개호급부비 실태 조사 월보(헤세이 12월 심사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각 년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황세운 외(2010). 장기국고채 발행 및 유통 확대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 OECD (2014). "OECD Health Data: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2014).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4 Issue 2.
-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 e-나라지표 “아동 안전사고 현황”.
- 국민연금연구원(각 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각 년도). 건강검진통계연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각 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통계.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각 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 OECD Health Care Resources

<인터넷 사이트>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

e-나라지표 (<http://index.go.kr>)

OECD.stat (<http://stats.oecd.org>)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OECD2014-Income-Inequality-Update.pdf>)

OECD Pensions at a Glance (<http://www.oecd.org/pensions/pensionsataglance.htm>)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Mortality Database (<http://who.int/gho/en/>)

<신문사설>

경향신문(2013.1.30). “출산을 높여진 진짜 이유는 가임여성 증가 때문”.

경향신문(2013.2.2). “만성질환 관리에 건강보험이 적극 나서야”.

경향신문(2013.2.20). “늘어나는 ‘고독사’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경향신문(2013.3.29).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노후보장성 강화다”.

경향신문(2013.4.23). “‘노인 치매’ 국가 재앙되지 않도록 대책 세워야”.

경향신문(2013.4.24). “‘정년 60세 의무화’ 세심한 준비 필요하다”.

경향신문(2013.11.27). “시간제 일자리도 작전하듯 몰아붙일 텐가”.

국민일보(2013.2.8). “의료복지 확대 이상으로 질병예방 절실하다”.

국민일보(2013.3.7). “저출산·고령사회 여성활용정책 절실하다”.

국민일보(2013.4.18). “예고됐던 무상보육대란 이제라도 바로잡아라”.

국민일보(2013.4.24).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 유연성 확보가 관건”.

국민일보(2013.6.6). “고액연금 수령자 건보료 원안대로 부과해라”.

국민일보(2013.6.12). “고용보험기금은 정부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일보(2013.7.10).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해야 할 일”.

국민일보(2013.10.19). “부실 대학 퇴출 공정성 확보해 밀어붙여라”.

동아일보(2013.1.3). “2030년엔 이민자가 300만 명이나 필요하다는데...”.

동아일보(2013.1.15). “취업 결혼 출산 포기한 세대, 해결책은 일자리뿐”.

동아일보(2013.2.28). “세계 3위 400조 국민연금, 간섭 안 해야 더 크다”.

동아일보(2013.4.3). “일본의 65세 정년을 따라가기 위한 조건”.

동아일보(2013.4.18). “출산 후 재취업 때 가산점 주는 것은 파잉이다”.

- 동아일보(2013.4.24). “60세 정년 안착하려면 연공서열 임금 손봐야”.
- 동아일보(2013.5.17). “34개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들”.
- 동아일보(2013.5.27). “가족친화경영 公示, 출산장려 넘어 경쟁력으로”.
- 동아일보(2013.6.1).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 동아일보(2013.6.11). “외국인 150만 명 시대, 우수 인재 모여드는 나라로”.
- 동아일보(2013.9.7). “빚더미 전면 무상보육보다 꼭 필요한 계층부터”.
- 문화일보(2013.5.28). “‘非理 요지경’ 어린이집, 특단 대책 시급하다”.
- 문화일보(2013.11.22.). “노인 의료비 급증 경고하는 OECD 보건의료 통계”.
- 서울신문(2013.1.19). “잇따르는 고독사...사회안전망 절실하다”.
- 조선일보(2013.1.31.). “일본 건보조합, 초고령 사회에 걸려 파산다하”.
- 조선일보(2013.3.20). “손주돌보이 수당, 전체 ‘보육 복지’틀에서 검토를”.
- 조선일보(2013.3.31). “정년 연장 의무화, ‘인생 2毛作설계’지원 덧붙여야”.
- 조선일보(2013.4.23). “정년연장, 임금피크제·성과급 확대와 함께 시행해야”.
- 조선일보(2013.6.18). “치매도 조기진단·조기치료가 최선 대책이다”.
- 조선일보(2013.11.9). “노인 무임승차 축소, 지하철 경영 혁신과 함께 추진하라”.
- 중앙일보(2013.1.12). “특수지역 연금 근본 개혁 서둘러야”.
- 중앙일보(2013.1.17). “노인안전망 좀 더 튼실하게 짜야”.
- 중앙일보(2013.1.19). “고독사 시대에 대처할 매뉴얼이 시급하다”.
- 중앙일보(2013.4.3). “일본의 65세 정년 남의 일이 아니다”.
- 중앙일보(2013.4.24). “정년 연장의 부담은 누가 떠맡나”.
- 중앙일보(2013.5.16). “치매환자가족,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 한겨레신문(2013.3.8). “14번째 희생, 대구 아이들 비극은 언제 끝날까”.
- 한겨레신문(2013.5.2). “정년연장, 사회적 타협으로 안착되도록”.
- 한겨레신문(2013.5.21).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 한겨레신문(2013.6.6). “보육대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 한겨레신문(2013.8.24). “무상보육은 박원순이 아니라 박근혜 공약이었다”.
- 한국일보(2013.3.27). “고액연금 받으면서 건보료를 안 내겠다니”.
- 한국일보(2013.4.24). “‘60세 정년’ 정착되게 급여체계 개편 검토해야”.
- 한국일보(2013.6.5). “고액연금자 건보료 회피, 더 이상은 안된다”.
- 한국일보(2013.7.2). “청년 실업, 창조경제적 해법 없나”.
- 한국일보(2013.8.13). “땀질처방보다 근본대책 필요한 고령자 취업”.
- 한국일보(2013.8.28). “정부가 앞장서 풀어 가야할 '무상급식 대란'”.

한국일보(2013.9.2). “100세 시대 은퇴자금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돼야”.

한국일보(2013.10.3). “소의 노인 없는지 복지사각지대 잘 살피도록”.

부 록 <<

부록 1.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조사표

<결혼정책 관련>

2014. 12.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결혼 정책 관련 (Type-A) -		ID			
<p>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 면접원 000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결혼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p> <p>※ 조사의뢰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 02-380-3264) 이지혜 전문연구원</p>					
SQL 지역1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2 지역2	1) 동 2) 읍/면				
SQ3 성	1) 남성 2) 여성				
SQ4 연령	실제지만, 올해 나이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SQ5 결혼여부	(만20세 ~ 만49세) 실제지만,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1) 기혼(이혼, 별거, 사별 등 포함) 2) 미혼				
SQ6 취업 여부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1) 일하고 있음(생일) 2)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3) 일하고 있지 않음				
전화번호	() - () - ()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면접원 성명	
에디팅		코딩		검증	

※ 과거 2~3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요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여건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할 때 주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국민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정책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할 때 주책을 제외한 결혼 비용에 대하여 부담이 보다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가치관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4.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5.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할 의향이 보다 많아졌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6.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을 더 빨리 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7.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희망하는 자녀수가 증가하였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일반사항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재학 중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중 ⑥ 대학원 졸업

DQ2. 귀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결혼정책 설문지(Type-A)에서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묻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응답합니다.)

- ① 소득 없음 ② 1~99만원 ③ 100~199만원
④ 200~299만원 ⑤ 300~399만원 ⑥ 400~499만원
⑦ 500~599만원 ⑧ 6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출산정책 관련>

2014. 12.		2013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ID		
		- 저출산 정책 관련 (Type-B)-					
<p>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 면접원 000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 르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 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 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p> <p>※ 조사의뢰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 02-380-8264) 이지혜 전문연구원</p>							
SQL 지역1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2 지역2	1) 동 2) 읍/면						
SQ3 성	1) 남성 2) 여성						
SQ4 연령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세)						
SQ5 결혼여부	(만20세 ~ 만49세) 실례지만,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1) 기혼(이혼, 별거, 사별 등 포함) 2) 미혼						
전화번호	() - () - ()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면접원 성명			
에디팅		코딩		검증			

※ 과거 2~3년 전 본인이나 가족 및 주위의 상황과 비교하여 요즘 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결혼이 보다 수월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2.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과거 2~3년 전에 비해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과거 2~3년 전에 비해 결혼생활(부부관계 등), 결혼준비 등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더 잘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과거 2~3년 전에 비해 결혼식비용, 예단, 혼수 등과 관련된 고비용 혼례문화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임신과 출산(분만) 관련 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2-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 부담이 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출산 후 산모 산후조리나 신생아를 돌보는 부담이 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자녀양육이 보다 수월해졌다고(자녀양육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보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과거 2~3년 전에 비해 필요 시 자녀를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4)과거 2~3년 전에 비해 일시적으로 자녀를 필요한 시간만큼 다른 사람에게(어린이집이 아닌) 맡기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아이돌보미)					
5)과거 2~3년 전에 비해 방과 후에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맡기기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자녀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4-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문화 활동 여건 등이 개선되어 신체·정서적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3)과거 2~3년 전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이 집에서 안전사고나 등교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아동들이 학대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직장일과 가정생활(육아, 가사)을 병행하기가 보다 수월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5-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출산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육아휴직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과거 2~3년 전에 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거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과거 2~3년 전에 비해 직장이 보다 가족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과거 2~3년 전에 비해 장시간 근로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의 남편(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본인)은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가사나 육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7.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희망하는 자녀수가 증가하였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일반사항

DQ1. 귀하는 언제 결혼했습니까? _____년

DQ2.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_____명)

- ① 미취학 자녀 : _____명
② 초·중·고등학생 자녀 : _____명
③ 고등학교 졸업 이상 : _____명

DQ3.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하고 있음(생업) 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③ 일하고 있지 않음

DQ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재학 중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중 ⑥ 대학원 졸업

DQ5.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저출산정책(Type-B)에서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묻습니다.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금액이며, 월평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응답합니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소득 없음 | <input type="checkbox"/> ② 1~99만원 | <input type="checkbox"/> ③ 100~199만원 |
| <input type="checkbox"/> ④ 200~299만원 | <input type="checkbox"/> ⑤ 300~399만원 | <input type="checkbox"/> ⑥ 400~499만원 |
| <input type="checkbox"/> ⑦ 500~599만원 | <input type="checkbox"/> ⑧ 600만원 이상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령사회정책 관련>

2014. 12	2013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관련 국민체감도 조사 - 고령사회 정책 관련 (Type-Q)-			ID		
<p>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 면접원 000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파악하고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저희 연구와 향후 관련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p> <p>※ 조사의뢰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 02-380-8264) 이지혜 전문연구원</p>						
SQ1. 지역1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SQ2. 지역2	1) 동 2) 읍/면					
SQ3. 성	1) 남성 2) 여성					
SQ4. 연령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단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단 ____세)					
SQ5. 결혼여부	(단20세 ~ 단40세) 실례지만,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1) 기혼(이혼, 별거, 사별 등 포함) 2) 미혼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면접원 성명		
에디팅		코딩		검증		

※ 과거 2~3년 전 본인이나 가족 및 주위의 상황과 비교하여 요즘 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경제적 노후준비가 보다 충분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1-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방법을 통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노후소득보장 방법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희망한다면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2-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은퇴 후에 계속 일을 할 수 있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과거 2~3년 전에 비해 노인일자리 중 정부지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는 향후(노후기)에 본인이 과거 노인들에 비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요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3-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치매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이 안전하게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과거 2~3년 전에 비해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4)과거 2~3년 전에 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향후(노후기)에 본인이 과거 노인들에 비해 더 활발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요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4-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활발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과거 2~3년 전에 비해 건강, 재무, 여가, 사회참여 등 전반적인 영역에 대하여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과거 2~3년 전에 비해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노인)들이 살기에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5-1.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에 비해)

세부 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과거 2~3년 전에 비해 살고 있는 주택이 노인들이 살기에 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2)과거 2~3년 전에 비해 보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 시에 교통여건이 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과거 2~3년 전에 비해 노인 홀로 또는 노인부부가 사는데 생활환경이 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귀하는 노후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2~3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변화가 없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자 일반사항

DQ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_____명)

DQ2.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하고 있음(생업) 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③ 일하고 있지 않음

DQ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퇴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간주함. 재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함.)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 재학 중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중 ⑥ 대학원 졸업

DQ4. 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고령사회정책(Type-C)에서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묻습니다.

(모든 가구원의 수입을 합한 금액이며, 월평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지난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응답합니다)

- ① 소득 없음 ② 1~99만원 ③ 100~199만원
 ④ 200~299만원 ⑤ 300~399만원 ⑥ 400~499만원
 ⑦ 500~599만원 ⑧ 600만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표

<저출산 부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저출산 부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 부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와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응답 결과를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

문의 : 이지혜 전문연구원(☎ 02-380-8264)

김세진 연구원(☎ 02-380-8385)

작성해주실 설문지는 「I.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견」, 「II.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작성하셔서 아래의 이메일로 2014년 11월 30일까지 회신요청드립니다.

회신처(E-mail) : soopiasj@kihasa.re.kr (김세진 연구원)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3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_____ 소속: _____

계좌번호(은행명): _____

개인정보 제공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연구원은 계좌이체를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이체를 위하여 수집하는 기본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견

선생님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어느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정책	정책 내용	정책 인지도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해당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도 주변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						
		잘 알고 있음	잘 모름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전혀 모르겠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1)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3) 유연근로제 확산	- 시간제 근무/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 유연근로제 확산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 도입									
5)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및 인증제 확산을 위한 홍보									
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임주 시행									
7)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8)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9)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 보육·교육비 지원 -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									
11)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운영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 확대 - 실·수요계층을 위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 - 일시보육 등 어린이집 이용시간 다양화 - 가족돌봄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실시									

주요정책	정책 내용	정책 인지도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해당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도 주변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						
		잘 알고 있음	보통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견해 모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13)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14) 취약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및 내실화 - 초등 중일 돌봄교실 확대 -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 아동 독서지도, 도서대여, 도서관연 - 부모교육 등 방문서비스 실시									
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 응급처리 방법 등 교육 -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및 보행안전지도 - 확대									
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학대 - 예방사업 추진 - 학대피해아동 전담 치유 보호시설 확대 - 설치									

II.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매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대표성,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또는 산식의 정확성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산식은 마지막 페이지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지표의 적절성						(①, ②로 응답한 경우) 부적절 이유 / 대안지표 / 개선 의견 등 제시 (③~⑤로 응답한 경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잘모르 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A. 육아를 위한 유아유치제도 개선	1) 육아유치제도 개선	- 육아유치 사용후 1 년 이상 고용유지 율(%)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활 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B.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3) 유연근로제 확산	- 행정기관 유연근무 제 이용률(%)							
C. 가족친화직 장 사회환 영 조성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5) 가족친화인증 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개소)							
D.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 건 조성	6) 신혼부부 주 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7) 결혼 관련 보 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E.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8) 임신·분만 취 약지역 의료 지원 강화	- 임신·분만 취약지 역수(개소)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지표의 적절성						(①, ②로 응답한 경우) 부적격 이유 / 대안지표 / 개선의견 등 제시 (③~⑥로 응답한 경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
			매우 부적격	부적격	보통	적격	매우 적격	절대적	
			①	②	③	④	⑤	⑥	
	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F. 자차양육비용 지원 확대	10)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 교육비 지원율(%)							
G. 다양한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1)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12) 수요자 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							
	13)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연계건수(만건)							
	14) 취학이동 병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H.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16)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I.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J.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III. 참고자료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산식	소관부처
A.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1) 육아휴직제도 개선	- 육아휴직 사용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1년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수 ÷ 휴직급여 수급근로자수×100	고용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이용자수÷산전후휴가자수×100	고용부
B. 유연근로제 확대	3) 유연근로제 확산	- 행정기관 유연근로제 이용률(%)	행정기관 연간 유연근로제 이용자 수 ÷ 대상인원 × 100	인행부
C. 가족친화직장 실현환경 조성	4)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가율(%)	(당해년도 설치 개수 - 전년도 총 개수) × 100(%)	복지부 고용부
	5)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 기업수(개소)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여가부
D.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6)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특별공급+임대주택+전세임대+연간초혼간수 × 100	국토부
	7) 결혼 관련 교육 등 서비스 체계적 제공	-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천명)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 인원	여가부
E.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8) 임신 분만 취약지역 의도지원 강화	- 임신 분만 취약지역수(개소)	임신 분만 취약지역수	복지부
	9)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수혜율(%)	연간수혜자수÷연간 출생아 수×100	복지부
F. 자커양육비용 지원확대	10)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 교육비 지원율(%)	영유아보육비 교육비수혜자÷0~5세 아동수×100	복지부 교과부
G. 다양한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1)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보육시설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100	복지부
	12) 수요자 중심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	(돌봄 유치원 수+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수) ÷ (유치원 수+어린이집 수) × 100	복지부 교과부
	13)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연계기관수(만명)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건수	여가부
	14) 학과후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수혜율(%)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아동수(초등 돌봄 + 지역 아동 센터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수×100	교과부 복지부 여가부
H.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15)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드림스타트 수혜아동수 ÷ 취약계층 아동수 × 100(%)	복지부
I. 아동청소년 역량 개발 지원	16)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천명)	연간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 수	여가부
J. 안전한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17)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10만명 당 명)	(0~14세 아동 사망자 수÷0~14세 아동수)×100,000	복지부 행안부 교과부
	18) 아동학대 예방 보호 강화	- 학대피해아동 보호율(%)	(0~17세 학대피해아동 보호감수 ÷ 0~17세 아동수)×1000	복지부

<고령사회 부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고령사회 부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사회 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와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응답 결과를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

문의 : 이지혜 전문연구원(☎ 02-380-8264)

김세진 연구원(☎ 02-380-8385)

작성해주실 설문지는 「Ⅰ.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견」, 「Ⅱ.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작성하셔서 아래의 이메일로 회신요청드립니다.

회신처(E-mail) : soopiasj@kihasa.re.kr (김세진 연구원)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3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_____ 소속: _____

계좌번호(은행명): _____

개인정보 제공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연구원은 계좌이체를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이체를 위하여 수집하는 기본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견

선생님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어느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정책	정책 내용	정책 인지도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해당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도 주변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						
		잘 알고 있음	잘 모름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전혀 모르겠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1) 고령자 고용연장	-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2)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전직지원서비스, 고령자 특화형 직업훈련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 전문직 중고령자 활용 정책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 저소득층 및 여성 국민연금 지원									
4)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퇴직연금제도 - 개인연금제도									
5) 사전 예방적 보건 의료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6) 노후설계 기반 조성	- 노후준비교육 참여									
7)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노인일자리사업									
8)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기초노령연금 - 주택연금									
9)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치매조기검진									
10)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장기요양서비스 수혜									
11)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노인건강교실 참여									
12)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자원봉사활동 참여									
1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 노인복지관 이용 - 문화바우처									

주요정책	정책 내용	정책 인지도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해당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도 주관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					
		잘 알고 있음	모름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전혀 모르 겠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1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15)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 저상버스 이용								
16)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 독거노인보호강화서비스 - 손자녀 양육노인 보호강화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17) 학대노인 보호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								

II.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매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대표성,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또는 산식의 정확성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산식은 마지막 페이지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체계의 적절성						(①, ②로 응답한 경우) 부적절 이유 / 대안지표 / 개선의견 등 제시 (③~⑤로 응답한 경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알모르 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A.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 고령자 고용연장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2)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50세 이상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율(%)							
B.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3) 국민연금 시간지대 해소	국민연금가입율(%)							
	4)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퇴직연금 가입율(%)							
O.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6)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45세 ~ 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D. 노후생활 실제강화	6) 노후실제 기반 조성	6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E.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7)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노인일자리 창출수							
F.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8) 무연금 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체계의 과점상						(①, ②로 응답한 경우) 부과 이유 / 대안지표 / 개선 의견 등 제시 (③~⑤로 응답한 경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
			매우 부과됨	부과됨	보통	과점	매우 과점	합모름 것음	
			①	②	③	④	⑤	⑥	
G.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9)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치매 조기검진 참여 지수(명)							
	10)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							
	11)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H.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12)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노인 자원봉사 등록 지수(천명)							
	1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노인 문화예술교육경 향율							
I. 고령친화적 주 거 교통 환경 조성	1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총 임대 주택 대비) (%)							
	15)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노인교통사망률(명)							
J. 노인권의 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보편	16)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수 혜지(만명)							
	17) 확대노인 보호강화	지방노인보호전문 기 관수(개)							

III. 참고자료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산출식	소관부처
A.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1) 고령자 고용연장	-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고용률(%))	55~64세 고용자수÷55~64세 인구수×100	고용부
	2)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50세 이상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합 가입률(%)	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 후 고용보합 가입자÷50세 이상 참여자 중 취업자 수×100	고용부
B.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가입률(%)	(국민연금가입자수÷ 18~59세 인구)×100	복지부
	4)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퇴직연금 가입률(%)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자 ÷ 상용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100	고용부
C.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5) 사전 예방적 보건의로	- 46세 ~ 80세 미만 건강검진 수검률(%)	건강검진 수검자÷ 건강검진대상자× 100	복지부
D. 노후생활 설계강화	6) 노후설계 기반 조성	- 50대이상 고령자 노후준비율(%)	50대이상 노후준비응답자 ÷ 조사대상자중 50대 이상 수×100	복지부
E.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7) 노인일자리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 노인일자리 창출수	노인일자리 창출 수 (공공분야+민간분야)	복지부
F.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8) 무연급 저연급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 공적소득보장률(%)	기초노령연금+공적연금 수급자÷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중복수급자÷65세 이상 노인 인구×100	복지부
G. 건강간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9)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수(명)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복지부
	10)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 노인장기요양비수혜율(%)	노인장기요양 등급확정자 (1-3등급)÷노인인구×100	복지부
	11)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율(60세 이상)(%)	생활체육참여 60세이상 인구 ÷ 60세이상 인구×100	문화부
H.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12) 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천명)	사회복지분야 65세이상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 수	복지부
	13)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 노인 문화예술교육경험률(%)	노인 문화예술교육참여자수÷65세 이상 노인 수×100	문화부
I.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교통 환경 조성	1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총 임대주택 대비) (%)	고령자용 임대주택사업승인실적÷장기공공(국민, 영구)임대주택 사업승인실적×100	국토부
	15)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	- 노인교통사망률(명)	65세 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 65세 이상 노인수×10만	국토부 경찰청
J. 노인권익 증진 및 노인복지기본보장	16)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가구 보호강화	-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만명)	노인돌봄 서비스 수혜자	복지부
	17) 확대노인 보호강화	-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개)	지방노인보호전문 기관수	복지부

<성장동력 부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성장동력 부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장동력 부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와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응답해주시면 응답 결과를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

문의 : 이지혜 전문연구원(☎ 02-380-8264)

김세진 연구원(☎ 02-380-8385)

작성해주실 설문지는 「I.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견」, 「II.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작성하셔서 아래의 이메일로 2014년 11월 30일까지 회신요청드립니다.

회신처(E-mail) : soopiasj@kihasa.re.kr (김세진 연구원)

설문에 응답해주시는 경우 소정의 사례금(3만원)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_____ 소속: _____

계좌번호(은행명): _____

개인정보 제공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연구원은 계좌이체를 위한 개인정보(계좌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좌이체를 위하여 수집하는 기본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에 대한 의견

선생님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어느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와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정책	정책 내용	정책 인지도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해당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도 주변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					
		잘 알고 있음	잘 모름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전혀 모르겠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5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대상 여성고용수준 평가 및 교육, 홍보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 국공립대 및 초·중등학교 여성교원 임용확대 -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 확대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대학 내 여대생 경력개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여대생 등에게 직장체험 등 취업진로지원 프로그램 기획 제공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제공								
3)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 외국 국적 동포 등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4)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초·중등학생 진로정보 및 진로 심리검사 제공 - 청·장년층 등 대상 직업 심리검사 제공, 직업진로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 보급 - 대학생 대상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지원								
5)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계좌제 - 대학내 평생교육원 지원 - 평생학습도시 조성								

주요정책	정책 내용	정책 인지도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 (해당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도 주변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						
		잘 알고 있음	잘 모름	매우 안되고 있음	대체로 안되고 있음	보통	대체로 잘되고 있음	매우 잘되고 있음	전혀 모르 는 것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⑥	
6)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치료 및 상담강화 -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산재 취약인력(여성, 고령)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									
7) 금융분야 제도개선	- 자산시장 변화 대응 전략 수립 - 국민연금 해외·대체 투자비중 확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규제 완화									
8)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9)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 고령친화 우수제품, 우수사업자 지정 및 인센티브 발굴, 제도 개선									
10)국내 수요기반 확충	- 산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운영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									

II.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매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대표성,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또는 산식의 정확성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유를 간단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산식은 마지막 페이지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지표의 적절성						(①, ②로 응답한 경우) 부적절 이유 / 대안지표 / 개선 의견 등 제시 (③~⑤로 응답한 경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참모르 것음	
			①	②	③	④	⑤	⑥	
A.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B.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3)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우수 외국인력 유치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C.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4)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비율(%)							
	6)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참여율(%)							
D.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6)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산업재해율(%)							
E.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7) 금융분야 제도 개선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지표의 적절성						(①, ②로 응답한 경우) 부적격 이유 / 대안지표 / 개선요건 등 제시 (③~⑤로 응답한 경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검토 필요	
			①	②	③	④	⑤	⑥	
F.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 지를 위한 제도개선	8)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 지	GDP 대비 국가 채 무 비중(%)							
G. 고령친화제 품 및 서비 스품질 향 상	9) 고령친화제품 지정·표시제도 확대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개)							
H. 고령친화산 업 국내외 시장 활성 화	10) 국내 수요기반 확충	지역사회일각형 고령 친화용품 지원센터 수(개)							

III. 참고자료

영역	영역을 대표하는 정책	성과지표(단위)	산식	소관부처
A.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AA제도 적용사업장 여성 고용률(%)	$\frac{\text{AA제도적용사업장 여성근로자수}}{\text{AA제도적용사업장 전체근로자수}} \times 100$	고용부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률(%)	$\frac{\text{취업자수}}{\text{구직등록인원}} \times 100$	여가부
B. 외국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3) 외국국적 동포 활용 및 추수 외국인력 유치	-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E-1, E-7) 및 전문인력 중 거주자의동포, 영주자격으로 전환된 인력 규모(명)	-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 (E-1, E-7) 또는 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	법무부
C.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체계 확립	4) 학교교육과 고용시장 연계 강화	-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개) 비율(%)	$\frac{\text{프로그램 참여자수}}{\text{재학생수}} \times 100$	고용부
	5)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 평생학습참여율(%)	$\frac{\text{25-64세 성인 중 평생학습(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참여자수}}{\text{25-64세성인}} \times 100$	교육부
D.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고용력 손실 방지	6)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문화 확산	- 산업재해율(%)	$\frac{\text{재해자수}}{\text{근로자수}} \times 100$	고용부
E.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7) 금융분야 제도개선	-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년)	국고채 평균잔존 만기	기재부
F. 재정지출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8) 미래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기재부
G.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품질 향상	9) 고령친화제품 지정 표시제도 확대	-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개)	대상품목 수	복지부
H. 고령친화산업 국내외 시장 활성화	10) 국내 수요 기반 확충	-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개)	지역사회밀착형 고령친화용품 지원센터수	복지부